www.mpb.go.kr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6. 9.

I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

목 차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10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14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 15
2.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15
3.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16
4. 2026년 평가단 구성 ····· 19
5. 평가 절차 ····· 24
6. 평가 기준 ····· 25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31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31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32
2. 부처 세부사업별 판정결과 및 2027년 예산안 ····· 37

제3부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 6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5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79
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5
5. 재정경제부 ····· 9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5
7. 교육부 ····· 137
8. 외교부 ····· 219
9. 통일부 ····· 233
10. 법무부 ····· 259
11. 국방부 ····· 287
12. 행정안전부 ····· 295
13. 국가보훈부 ····· 375
14. 문화체육관광부 ····· 409
15. 농림축산식품부 ·····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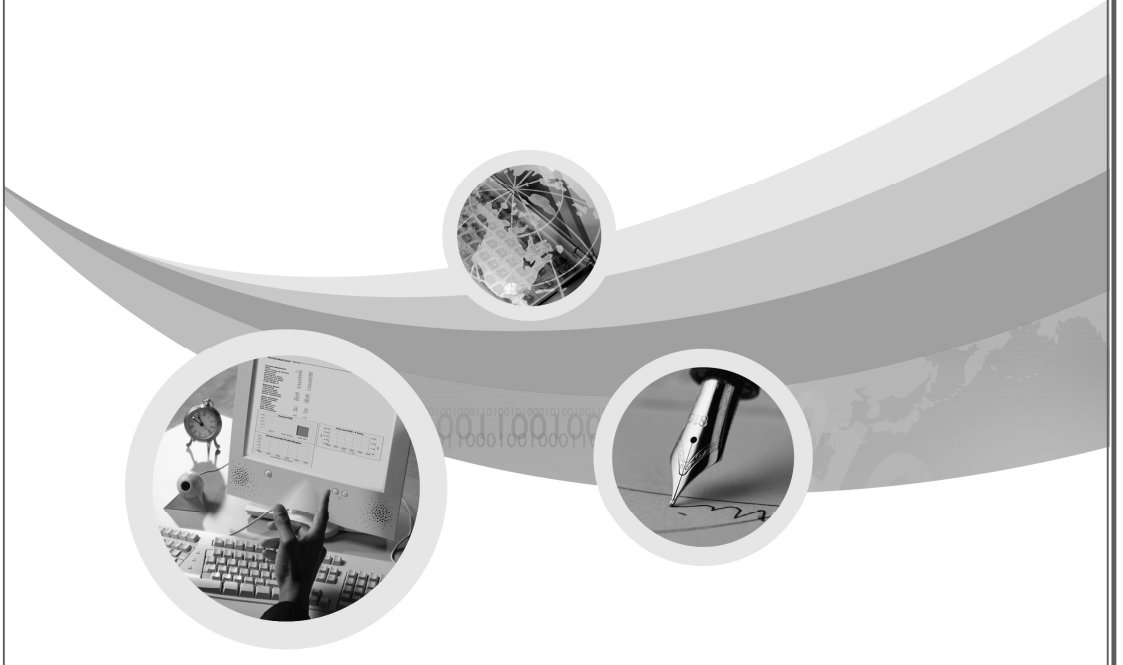
16. 산업통상부 ····· 925
17. 보건복지부 ····· 1053
18. 기후에너지환경부 ····· 1325
19. 고용노동부 ····· 1551
20. 성평등가족부 ····· 1603
21. 국토교통부 ····· 1655
22. 해양수산부 ····· 1747
23. 중소벤처기업부 ····· 1887
24. 식품의약품안전처 ····· 1969
25. 지식재산처 ····· 1995
26. 국가인권위원회 ····· 2013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19
28. 공정거래위원회 ····· 2103
29. 금융위원회 ····· 2107
30. 국민권익위원회 ····· 2117
31. 조달청 ····· 2121
32. 우주항공청 ····· 2125
33. 재외동포청 ····· 2129
34. 방위사업청 ····· 2141
35. 경찰청 ····· 2151
36. 소방청 ····· 2155
37. 국가유산청 ····· 2165
38. 농촌진흥청 ····· 2207
39. 산림청 ····· 2235
40. 질병관리청 ····· 2299
41. 새만금개발청 ····· 2339
42. 해양경찰청 ····· 2345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목적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②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전자의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존재 이유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 국고보조금 제도

- 국가와 지방 간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사업)를 실시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 지방교부세 제도

-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표 1-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구 분	국 고 보 조 금	지 방 교 부 세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 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 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함

- ㅇ 특정 공공재에 대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함
- ㅇ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함
- ㅇ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함

□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중앙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ㅇ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ㅇ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를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 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를 권장하여 조장하고자 하는 사무·사업의 보급향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ㅇ 국가가 실시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고 통제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ㅇ 국고보조금의 지출대상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ㅇ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ㅇ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가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이와 같은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로 인해 지방재정이 필요이상으로 팽창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킬 수 있음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② 보조금 지출 상 일정의 지방비부담(Matching Fund) 방식의 차이, ③ 보조금 규모의 제한성 여부, ④ 법적 근거와 경비부담 기준 ⑤ 보조율의 차등 여부, ⑥ 보조금의 교부조건, ⑦ 보조금 시행주체, ⑧ 보조금의 신청 여부, 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함

-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을 의미함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함

(2)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임

-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개의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과 폐쇄형보조금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중앙정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임

-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폐쇄형 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해서 과잉공급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폐쇄형 보조금은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

(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임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임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임

-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서 장려적 보조금이라고도 함

(5) 보조율의 차등 기준 :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임

-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하여 인상·인하 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차등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재정적 격차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균등화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조금을 통한 재정균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6)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임

-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서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임

-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7)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함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함

(8)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임

-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필요성, 지방비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무신청보조금 :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중앙정부가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임

(9)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 이밖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신청주의 도입(동법 제4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함

- 이러한 신청주의는 보조금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지방비부담 협의 및 의무(동법 제7조, 제13조)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지방비협의의 필요성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자의적으로 편성 운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설정(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보조금은 그 지급의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최근 2026년 8월말 기준, 102개 사업유형별로 정해져 있음

-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적정화를 위해 설정된 것임

- 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차등보조율제도 도입(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가산하는 인상보조율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차감하는 인하보조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은 적용대상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임
-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동법 제14조) :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외의 모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조금의 교부조건(동법 제1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영세·유사보조금의 통합운영(동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유사한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의 유사한 영세보조금의 통합은 영세보조금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재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보조금의 용도제한 및 반환(동법 제22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①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②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③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④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임
- 여기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동일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함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2026년의 경우,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125.7조원이 지원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6년의 경우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약 16.5%(20.7조원), 자치단체보조는 83.5%(105.0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22~2026)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 보조금 규모(조원)	102.3	102.3	109.1	112.3	125.7
· 자치단체보조	79.4	83.1	89.3	93.6	105.0
· 민간보조	22.9	19.2	19.8	18.7	20.7
○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56.6	673.3	727.8
○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6.8%	16.0%	16.6%	16.7%	17.3%

자료 : e나라도움·보탬ⓔ 보조금통합포털

□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이 국가재정의 탄력적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음

○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102개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가 마련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들 국고보조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 근거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보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운용함

○ 평가체계 및 과정을 통합하여 평가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을 보조사업 전체의 1/3에서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존속기간의 설정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음

□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과정의 적절성 및 사업성과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①재정사업 필요성, ②사업계획의 적정성, ③집행 효율성, ④성과달성도·우수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또한, 사업 담당 평가위원 외에 분과장 및 기획예산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동평가(쟁점사업평가)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수용성을 제고하였음

3.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관리하면서 진행함

□ 서면평가는 설정된 평가방향에 따라 미진했던 자료보충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후 심층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함

□ 서면평가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사업 담당자들과 1단계에 걸쳐 대면평가를 진행함

○ 서면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의 소명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실시함

□ 대면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사업 담당자들의 소명의견을 바탕으로 평가결과의 오류 및 부처의 심각한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쟁점사업평가를 실시함

○ 대면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의 소명의견을 해당 사업 평가위원과 타 평가위원(분과장 등) 그리고 기획예산처 담당자가 공동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함

□ 각 단계별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이 제기한 논의가 필요한 사업,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별 회의와 총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장 주재로 분과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검토, 주요 논의사항 조정을 위해 분과별 각 3차례 진행함

○ 평가단장, 간사, 각 분과별 분과장, 분과별 조정위원들 그리고 기획예산처 담당자가 참석하는 조정위원회 회의를 3차례 진행함

-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장, 간사, 분과장, 분과장 추천 평가위원. 기획예산처 담당자, 전문기관 담당자로 구성함

<그림 1-1>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1월중순	평가대상 확정 및 평가지침 통보(기획처→각 부처)
1.23(금)	**부처별 기초조사보고서 제출완료** o 제출처: 기획예산처 및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6일(월) ~ 2.19일(목)	**서면평가** o 전문기관: 자료 양식 및 충실성 점검 o 평가위원: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결과보고서 분과장 및 전문기관에 송부(2월 19일(목))
2.23일(월) ~ 2.26일(목)	**제1차 분과회의** o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2.23일(월) ~ 2.25일(수)) o 평가위원: 서면평가 결과 제출 (제출처 및 기한: 기획처 및 전문기관, 2.26일(목)) - 산출자료: 서면평가 결과보고서
3.9일(월) ~ 3.11일(수)	**제1차 조정위원회 개최** o 서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o 평가위원: 수정 서면평가 결과 제출 (제출처 및 기한: 기획처 및 전문기관, 3.12일(목))
3.16일(월) ~ 3.17일(화)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소명의견서 제출** o 제출처: 기획예산처 및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8일(수) ~ 3.31일(화)	**대면평가** o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
4.2일(목) ~ 4.6일(월)	**제2차 분과회의** o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4.2일(목) ~ 4.6일(월)) o 평가위원: 대면평가 결과 제출 (제출처 및 기한: 기획처 및 전문기관, 4.7일(화)) - 산출자료: 대면평가 결과보고서

일 정	추 진 내 용
4.9일(목) ~ 4.10일(금)	**대면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소명의견서 제출** o 제출처: 기획예산처 및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16일(목) ~ 4.17일(금)	**제2차 조정위원회 개최** o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o 쟁점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논의
4.20일(월) ~ 4.28일(화)	**쟁점사업평가 & 추가 대면평가** o 평가단: 담당 평가위원 및 분과장, 분과장이 추천하는 분과위원 1인 o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관련 직원 * 행안부, 지방위는 재난안전, 지역균형 분과 쟁점사업평가시 참여 o 부처: 사업 담당자(부처 공무원) 등
4.30일(목) ~ 5.7일(목)	**제3차 분과회의** o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4.30일(목) ~ 5.6일(수)) o 평가위원: 쟁점사업평가 및 추가 대면평가 결과 제출 (제출처 및 기한: 기획처 및 전문기관, 5.7일(목)) - 산출자료: 쟁점사업평가 및 추가 대면평가 결과보고서
5.13일(수) ~ 5.15일(금)	**제3차 조정위원회 개최** o 쟁점사업평가 및 추가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최종결과 확정
5.18일(월) ~ 5.19일(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o 총괄팀 : 종합보고서 작성 o 평가위원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5.21일(목)	**평가 결과 부처 통보** o 각 부처는 5.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평가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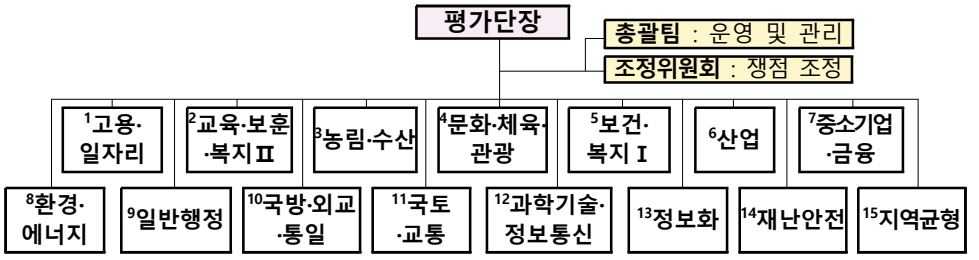
4. 2026년 평가단 구성

□ 금년도에는 평가단장 1인, 간사 2인, 분과장 17인 등을 포함하여 총 153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함

○ 교차검토 역할을 1차로는 해당 분과장이 그리고 평가결과 조정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함

□ 평가단장, 간사, 분과장이 평가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예산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 1-2> 2026년 평가단 구성 조직도



<표 1-3> 2026년도 평가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단장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간사 (2)	정장훈	한성대 창업트랙 교수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분과장(17)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재훈	서울과기대 행정학부 교수
	김종호(5. 20.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기획본부장
	임성묵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정창수(~ 5. 19)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위원 (133)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지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태우	한국뇌연구원 책임행정원
	강혜진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고경일	백석대 경영학과 교수
	고 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고창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건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행정원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중소기업혁신팀 연구위원
	김성준	광주대 AI-X 융합학과 교수
	김세훈	숙명여대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노인복지요양학과 교수
	김애진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성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지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김은희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학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김준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지영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김진영1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장
	김효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민주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남수진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류성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략기술분석실장
	문한나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
	박소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박은실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박정윤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박종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
	박지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빌리티항법연구실 책임연구원
	배광빈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변세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병기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손종민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송석현	경국대 디지털ICT공학과 교수
	송중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송화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심형섭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안병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엄상민	경희대 정경대학 교수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세희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유가영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혜정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교수
	이경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전략기획단장
	이규진	아주대 TOD연구센터 교수
	이동형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정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성윤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슬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이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장
	이애리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정미	충북대 교양교육본부 교수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하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행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현안해결플랫폼연구센터장
	이혁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장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장영순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정엠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유한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정지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정해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조명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조 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조인수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조재열	서울대 토목학과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산업분석팀 연구위원
	최상철	백석문화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부 교수
	최성호	경기대 자유교양대학 교수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우영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최유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위원
	최지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최 충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추호정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탁현우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 연구위원
	하태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재필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안정상	'26.2월.해촉

5. 평가 절차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정상추진'

- 평가위원(1차 평가), 분과회의(2차 검증), 조정위원회(3차 재검증)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쟁점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쳐 최종결과 도출

□ 1단계 심사(서면평가)

○ 부처가 작성한「기초조사보고서」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결과 도출

- 평가위원이 1차 평가하고, 분과회의 검증 및 조정위원회 재검증을 거쳐 결과 도출

- 평가단은 서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게 통보
  · ① 정상추진, ② 사업개선, ③ 감액, ④ 폐지·통합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1차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심사(대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 및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사업별 대면평가 실시

- 평가단은 대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
  · ① 정상추진, ② 사업개선, ③ 감액, ④ 폐지·통합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면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차 소명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나 자료는 제외하고 작성

□ 3단계 심사(쟁점사업평가)

○ 대면평가 결과에 대한 중앙관서의 소명의견서를 검토하여 평가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관서의 이견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을 선별하여 실시

- 평가단 및 기획예산처는 대면평가 결과보고서 및 「최종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쟁점사업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개별위원, 분과장 및 분과장이 추천하는 분과위원 1인, 연장평가 관련 기획예산처 직원이 공동으로 실시

- 쟁점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최종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팀에 제출하고 최종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6. 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여부 -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목적이 명확·타당한지 고려

1-2. 재정지원 필요성

▪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등 고려 - 사업목표가 달성되어 국가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 ▪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민간·지자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 (재정지원 외 정책수단) 조세지출, 규제, 정책금융 등 예산 외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하고, 현행 지원방식에 비해 효과적인지 고려 - (민간·지자체 추진) 사업성격, 지원규모, 효과 등 고려 시 민간 및 지자체가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고려

1-3. 유사중복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업목적, 지원대상 등이 타 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려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국가정책과제 등 핵심정책 및 부문별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었는지 고려

※ 균형발전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內 국정과제와 내용,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종합계획(5개년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 정책목표·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이 구체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등 고려

2-2. 지원규모 적정성

▪ 직·간접 수혜자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 수혜자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고려
-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가 충분한지 고려
- (보조/출연/위탁) 유사한 성격·목적을 가진 사업과 비교하여 보조율 및 자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유사사업 보조율 비교,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지자체 재정자립도, 민간보조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고려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최근 3년 실집행률, 연도별 이월규모 등 고려

※ 집행이 부진하다면, 부진사유가 해소되거나 개선되는 중인지 여부 고려
- 사업내용 및 성격상 집행이 부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나 실질적 해소가 전망되는 경우 감축 평가 예외 가능

※ (예시)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SOC 등)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별 적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연도 대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통일부 남북경협 등 현재 집행환경 상 집행이 어렵거나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추진·전달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지 등 고려

3-3. 부정수급 등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수행, 실적보고, 공시, 감사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4. 환류 및 개선노력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과거 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제도개선(컨설팅 포함)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려
- 소관부처 감사,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려

4.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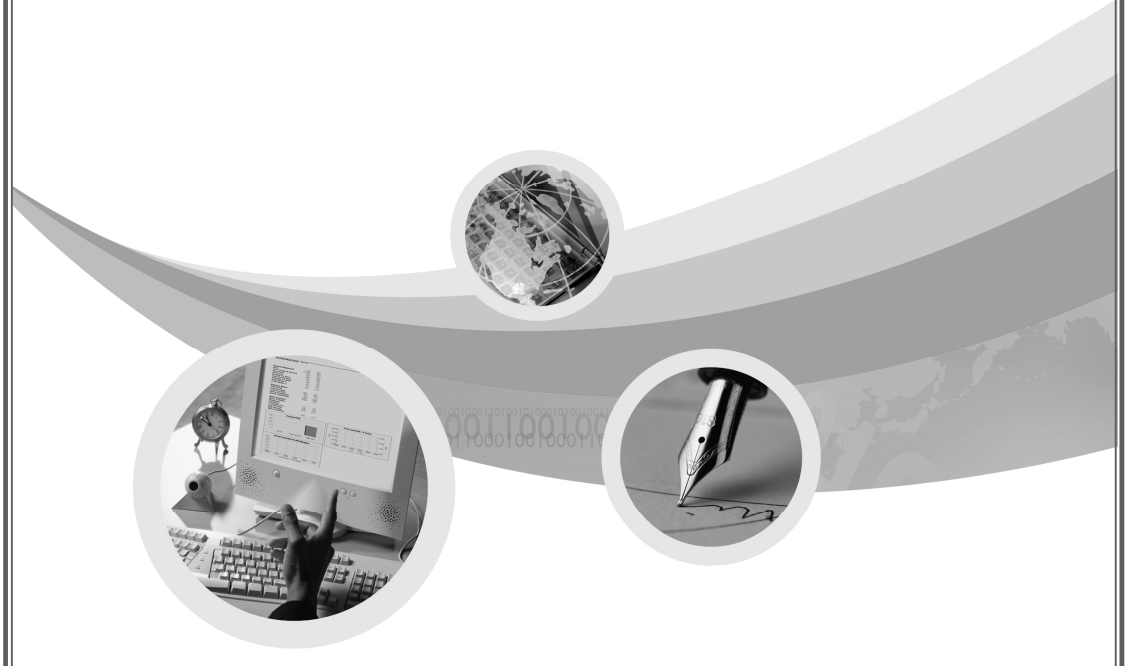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적절한 성과지표*의 달성도 등 종합 고려
  * 성과지표가 핵심사업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이고, 목표 설정 수준이 합리적인 경우
- 사업이 프로그램 등 상위목표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고려
▪ 그 외 사회경제적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여, 국민 체감도·만족도 높은 사업 등 성과의 우수성이 관련 통계를 포함해 근거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
▪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실적 및 성과
- (재난안전사업)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 (균형발전사업) 비수도권의 사업비 비중
-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평가 정량지표
-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정책성과지표, 특성화지표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2026년도에는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 사업을 기존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에서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1,014개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정상추진 34개 사업(3.35%)’, ‘사업개선 588개 사업(57.99%)’, ‘감액 372개 사업(36.69%)’, ‘통합 18개 사업(1.78%)’, ‘폐지 2개 사업(0.20%)’ 임

<표 2-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합계
사업수(개)	34	588	372	18	2	1,014
비율(%)	3.35	57.99	36.69	1.78	0.20	100.00

2. 예산규모[1]별 최종 판정 결과

□ 2026년에는 1,014개 평가대상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약 42조 7,661억 원 임

○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2조 9,302억 원(6.85%),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28조 3,076억 원(66.19%),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 66억 원(25.74%), ‘통합’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144억 원(1.20%),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73억 원(0.02%) 임

<표 2-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합계
예산(억원)	29,302	283,076	110,066	5,144	73	427,661
비율(%)	6.85	66.19	25.74	1.20	0.02	100.00

1) 이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평가결과 예산규모는 2026년 종료사업 예산을 제외한 예산규모임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2026년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기준, 42개 부처 1,014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약 42조 7,661억 원이며, 보건복지가 약 7조 3,316억 원으로 가장 많음

□ 국고보조금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2개 부처, 2개 사업이며 폐지하여야 할 규모는 약 73억 원임

○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개 사업에 대해서 '폐지' 판정을 받았으며, 각 부처별 폐지사업 예산규모는 국토교통부는 약 64억 원, 중소벤처기업무는 약 9억 원임

□ '통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개 부처, 18개 사업이며, 통합해야 할 예산규모는 약 5,144억 원임

○ 국토교통부가 4개 사업, 약 3,040억원으로 대상 사업 수 및 예산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 수는 산업통상부가 3개 사업으로 많았고, 예산규모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1,500억 원으로 컸음

□ 전체 평가대상 중 32개 부처, 372개 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았으며, 사업 개수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55개, 보건복지부 46개, 문화체육관광부 42개 순으로 사업의 개수가 많았으며, 예산 규모로 볼 때 보건복지부 약 2조 306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약 1조 4,30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약 1조 3,169억 원 순으로 감축 대상이 되는 예산규모가 컸음

□ 전체 평가대상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은 15개 부처, 34개 사업이 받았으며, 사업 수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각각 5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규모로는 행정안전부 약 1조 1,494억 원, 국토교통부 약 6,865억 원으로 대상 예산규모가 컸음

<표 2-3>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사업 수)

(단위 : 개, %)

소관	사업수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04]대법원	2	0	0.0%	2	100.0%	0	0.0%	0	0.0%	0	0.0%
[06]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0	0.0%	2	100.0%	0	0.0%	0	0.0%	0	0.0%
[10]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11]재정경제부	4	0	0.0%	2	50.0%	2	50.0%	0	0.0%	0	0.0%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1	7.1%	11	78.6%	2	14.3%	0	0.0%	0	0.0%
[13]교육부	35	0	0.0%	22	62.9%	11	31.4%	2	5.7%	0	0.0%
[14]외교부	6	0	0.0%	5	83.3%	1	16.7%	0	0.0%	0	0.0%
[15]통일부	12	0	0.0%	9	75.0%	3	25.0%	0	0.0%	0	0.0%
[16]법무부	11	0	0.0%	11	100.0%	0	0.0%	0	0.0%	0	0.0%
[17]국방부	2	0	0.0%	0	0.0%	2	100.0%	0	0.0%	0	0.0%
[18]행정안전부	38	1	2.6%	18	47.4%	19	50.0%	0	0.0%	0	0.0%
[19]국가보훈부	15	0	0.0%	9	60.0%	6	40.0%	0	0.0%	0	0.0%
[20]문화체육관광부	129	0	0.0%	87	67.4%	42	32.6%	0	0.0%	0	0.0%
[21]농림축산식품부	112	3	2.7%	73	65.2%	35	31.3%	1	0.9%	0	0.0%
[22]산업통상부	54	2	3.7%	33	61.1%	16	29.6%	3	5.6%	0	0.0%
[23]보건복지부	125	5	4.0%	72	57.6%	46	36.8%	2	1.6%	0	0.0%
[24]기후에너지환경부	106	2	1.9%	48	45.3%	55	51.9%	1	0.9%	0	0.0%
[25]고용노동부	20	2	10.0%	11	55.0%	7	35.0%	0	0.0%	0	0.0%
[26]성평등가족부	20	0	0.0%	18	90.0%	2	10.0%	0	0.0%	0	0.0%
[27]국토교통부	42	4	9.5%	14	33.3%	19	45.2%	4	9.5%	1	2.4%
[28]해양수산부	66	2	3.0%	36	54.5%	28	42.4%	0	0.0%	0	0.0%
[29]중소벤처기업부	39	1	2.6%	23	59.0%	13	33.3%	1	2.6%	1	2.6%
[32]식품의약품안전처	10	1	10.0%	6	60.0%	3	30.0%	0	0.0%	0	0.0%
[34]지식재산처	7	0	0.0%	4	57.1%	2	28.6%	1	14.3%	0	0.0%
[36]국가인권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39]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6	3	8.3%	16	44.4%	15	41.7%	2	5.6%	0	0.0%
[40]공정거래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41]금융위원회	3	0	0.0%	2	66.7%	1	33.3%	0	0.0%	0	0.0%
[42]국민권익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소관	사업수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47]조달청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48]우주항공청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49]재외동포청	4	1	25.0%	0	0.0%	2	50.0%	1	25.0%	0	0.0%
[51]방위사업청	3	0	0.0%	2	66.7%	1	33.3%	0	0.0%	0	0.0%
[52]경찰청	1	0	0.0%	1	100.0%	0	0.00%	0	0.00%	0	0.0%
[53]소방청	4	0	0.0%	3	75.0%	1	25.0%	0	0.0%	0	0.0%
[54]국가유산청	20	1	5.0%	11	55.0%	8	40.0%	0	0.00%	0	0.0%
[55]농촌진흥청	13	0	0.0%	7	53.8%	6	46.2%	0	0.0%	0	0.0%
[56]산림청	29	0	0.0%	11	37.9%	18	62.1%	0	0.0%	0	0.0%
[57]질병관리청	19	5	26.3%	11	57.9%	3	15.8%	0	0.0%	0	0.0%
[60]새만금개발청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61]해양경찰청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총계(전체)	**1,014**	**34**	**3.4%**	**588**	**58.0%**	**372**	**36.7%**	**18**	**1.8%**	**2**	**0.2%**

<표 2-4>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소관	예산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04]대법원	41	0	0.0%	41	100.0%	0	0.0%	0	0.0%	0	0.0%
[06]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0	0.0%	6	100.0%	0	0.0%	0	0.0%	0	0.0%
[0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6	0	0.0%	56	100.0%	0	0.0%	0	0.0%	0	0.0%
[10]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7	0	0.0%	2	11.8%	15	88.2%	0	0.0%	0	0.0%
[11]재정경제부	49	0	0.0%	35	71.0%	14	29.0%	0	0.0%	0	0.0%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3	2	0.5%	172	54.8%	140	44.8%	0	0.0%	0	0.0%
[13]교육부	25,081	0	0.0%	23,017	91.8%	2,019	8.0%	46	0.2%	0	0.0%
[14]외교부	3,229	0	0.0%	41	1.3%	3,188	98.7%	0	0.0%	0	0.0%
[15]통일부	6,902	0	0.0%	430	6.2%	6,473	93.8%	0	0.0%	0	0.0%
[16]법무부	1,578	0	0.0%	1,578	100.0%	0	0.0%	0	0.0%	0	0.0%
[17]국방부	371	0	0.0%	0	0.0%	371	100.0%	0	0.0%	0	0.0%
[18]행정안전부	25,205	11,494	45.6%	11,695	0.0%	2,016	8.0%	0	0.0%	0	0.0%
[19]국가보훈부	1,090	0	0.0%	432	39.6%	658	60.4%	0	0.0%	0	0.0%
[20]문화체육관광부	38,393	0	0.0%	29,546	77.0%	8,847	23.0%	0	0.0%	0	0.0%
[21]농림축산식품부	50,369	1,153	2.3%	36,044	71.6%	13,169	26.1%	3	0.01%	0	0.0%
[22]산업통상부	15,221	47	0.3%	8,050	52.9%	7,078	46.5%	47	0.3%	0	0.0%
[23]보건복지부	73,316	1,666	2.3%	51,329	70.0%	20,306	27.7%	15	0.02%	0	0.0%
[24]기후에너지환경부	66,533	750	1.1%	51,447	77.3%	14,309	21.5%	27	0.04%	0	0.0%
[25]고용노동부	8,103	690	8.5%	4,875	60.2%	2,538	31.3%	0	0.0%	0	0.0%
[26]성평등가족부	11,597	0	0.0%	11,579	99.8%	18	0.2%	0	0.0%	0	0.0%
[27]국토교통부	34,565	6,865	19.9%	15,216	44.0%	9,380	27.1%	3,040	8.8%	64	0.2%
[28]해양수산부	10,469	87	0.8%	6,400	61.1%	3,982	38.0%	0	0.0%	0	0.0%
[29]중소벤처기업부	27,029	33	0.1%	21,303	78.8%	4,183	15.5%	1,501	5.6%	9	0.03%
[32]식품의약품안전처	771	3	0.4%	744	96.4%	25	3.2%	0	0.0%	0	0.0%
[34]지식재산처	818	0	0.0%	576	70.5%	192	23.5%	50	6.1%	0	0.0%
[36]국가인권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39]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893	66	3.5%	953	50.3%	460	24.3%	414	21.9%	0	0.0%
[40]공정거래위원회	2	0	0.0%	2	100.0%	0	0.0%	0	0.0%	0	0.0%
[41]금융위원회	141	0	0.0%	22	15.6%	119	84.4%	0	0.0%	0	0.0%
[42]국민권익위원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소관	예산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47]조달청	18	0	0.0%	0	0.0%	18	100.0%	0	0.0%	0	0.0%
[48]우주항공청	3	0	0.0%	3	100.0%	0	0.0%	0	0.0%	0	0.0%
[49]재외동포청	28	16	56.2%	0	0.0%	11	39.2%	1	4.6%	0	0.0%
[51]방위사업청	50	0	0.0%	13	25.4%	37	74.6%	0	0.0%	0	0.0%
[52]경찰청	33	0	0.0%	33	100.0%	0	0.0%	0	0.0%	0	0.0%
[53]소방청	489	0	0.0%	423	86.4%	66	13.6%	0	0.0%	0	0.0%
[54]국가유산청	7,013	25	0.4%	1,520	21.7%	5,468	78.0%	0	0.0%	0	0.0%
[55]농촌진흥청	1,403	0	0.0%	602	42.9%	801	57.1%	0	0.0%	0	0.0%
[56]산림청	7,938	0	0.0%	4,273	53.8%	3,665	46.2%	0	0.0%	0	0.0%
[57]질병관리청	7,431	6,405	86.2%	568	7.6%	458	6.2%	0	0.0%	0	0.0%
[60]새만금개발청	78	0	0.0%	34	43.6%	44	56.4%	0	0.0%	0	0.0%
[61]해양경찰청	16	0	0.0%	16	100.0%	0	0.0%	0	0.0%	0	0.0%
총계(전체)	**427,661**	**29,302**	**6.9%**	**283,076**	**66.2%**	**110,066**	**25.7%**	**5,144**	**1.2%**	**73**	**0.02%**

2. 부처 세부사업별 판정결과 및 2027년 예산안

□ 각 부처 세부사업별 판정결과 및 2027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표 2-5> 부처 사업별 최종 평가결과

(단위 : 억 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대법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7.5	사업개선	49.1
대법원	사법서비스 향상	3.5	사업개선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교류협력	5.9	사업개선	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량강화	1.7	사업개선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4.5	사업개선	59.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공기관 갈등관리	2.0	사업개선	2.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15.0	감액	15.0
재정경제부	소비자물가관리	7.5	감액	5.3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센터보조	21.5	사업개선	21.5
재정경제부	통상연계형경협사업	6.6	감액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13.2	사업개선	1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9.0	사업개선	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1.5	정상추진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역량강화교육	5.6	사업개선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49.1	감액	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제주)	1.5	사업개선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세종)	1.5	사업개선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3.5	사업개선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IT지원센터운영	31.0	사업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10.4	사업개선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	93.5	사업개선	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3.8	사업개선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1.0	사업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정보화)	11.0	사업개선	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91.2	감액	69.8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48.8	사업개선	-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강화	10.5	사업개선	10.5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교육부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4.0	사업개선	3.6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2.0	사업개선	2.0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2.0	사업개선	-
교육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31.1	사업개선	38.3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53.6	감액	244.4
교육부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5.6	사업개선	5.5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5.1	사업개선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97.8	사업개선	98.8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82.4	사업개선	95.4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111.7	감액	102.3
교육부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45.9	사업개선	47.7
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18.5	감액	15.6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025.3	감액	870.2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8.0	통합	16.2
교육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89.4	감액	160.2
교육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7.5	통합	30.0
교육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75.4	사업개선	75.4
교육부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26.9	감액	11.2
교육부	어린이집 확충	224.5	감액	186.6
교육부	지역인재육성지원	17.2	감액	-
교육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2.2	감액	2.0
교육부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15.9	사업개선	17.6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9.4	감액	91.8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1.1	사업개선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지원	15.7	사업개선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1,353.4	사업개선	11,773.4
교육부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7.0	사업개선	7.0
교육부	대입전형 운영 지원	595.7	사업개선	595.7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40.0	감액	-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350.0	사업개선	315.0
교육부	보육사업관리	22.8	사업개선	22.2
교육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21.1	사업개선	19.5
교육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23.9	사업개선	207.8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외교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9	사업개선	4.6
외교부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6.1	사업개선	6.1
외교부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7	사업개선	2.7
외교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0.9	사업개선	10.9
외교부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12.7	사업개선	5.2
외교부	인도적지원(ODA)	3,187.6	감액	2,701.4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35.1	사업개선	47.1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0.8	사업개선	0.6
통일부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0	사업개선	1.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25.1	사업개선	131.5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	21.6	사업개선	35.6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15.1	사업개선	11.9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지원	103.7	사업개선	123.2
통일부	이산가족교류지원	92.2	사업개선	84.2
통일부	구호지원	1,122.3	감액	954.0
통일부	민생협력지원	3,204.8	감액	2,499.6
통일부	경협기반(무상)	2,145.8	감액	1,804.2
통일부	개성공단 기반조성	34.9	사업개선	34.9
법무부	기업환경지수 개선	24.0	사업개선	24.0
법무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6.3	사업개선	28.7
법무부	변호사제도의선진화	2.2	사업개선	-
법무부	법률구조	663.6	사업개선	710.4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운영	37.9	사업개선	39.0
법무부	외국인사회통합지원	57.1	사업개선	65.0
법무부	소년원생수용	29.6	사업개선	31.0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484.7	사업개선	480.7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178.7	사업개선	232.6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8.5	사업개선	8.9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5.5	사업개선	66.6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241.3	감액	212.1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129.8	감액	106.7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지자체경쟁력지원	20.0	감액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3.0	감액	25.1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지원	37.1	감액	38.1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6.1	사업개선	49.2
행정안전부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0.8	감액	0.6
행정안전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7	감액	1.4
행정안전부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4.5	감액	2.3
행정안전부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5.1	사업개선	25.4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0.9	사업개선	0.9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74.3	감액	74.3
행정안전부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70.1	감액	12.7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42.1	사업개선	39.4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18.5	사업개선	18.5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82.1	사업개선	96.9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40.9	감액	270.0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16.1	감액	4.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4	감액	2.1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7	사업개선	3.7
행정안전부	지역안전개선컨설팅	5.5	사업개선	73.4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0.6	사업개선	0.6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55.5	감액	38.4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8.9	감액	15.4
행정안전부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0.7	감액	15.7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8	사업개선	9.8
행정안전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60.0	사업개선	57.0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지원	12.0	사업개선	13.0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485.8	감액	393.4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8.9	사업개선	8.4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28.0	감액	23.8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78.2	사업개선	125.7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839.4	감액	571.4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117.6	사업개선	6.5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494.0	정상추진	14,494.0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10,625.9	사업개선	11,530.0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399.7	사업개선	429.0
행정안전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20.0	감액	102.0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46.5	감액	39.5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58.0	사업개선	48.7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72.8	감액	398.7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건립	37.5	감액	22.5
국가보훈부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93.3	감액	79.3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305.0	사업개선	318.2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조성	33.0	감액	30.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	31.1	감액	34.7
국가보훈부	기념관관리운영	86.1	사업개선	83.3
국가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7.2	사업개선	7.2
국가보훈부	보훈기념행사	8.9	사업개선	6.5
국가보훈부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0.3	사업개선	10.2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2.1	사업개선	1.2
국가보훈부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2.4	사업개선	2.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89.8	감액	70.8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3.0	사업개선	3.0
국가보훈부	참전기념사업지원	7.2	사업개선	6.9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	222.7	감액	422.0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21.8	사업개선	300.8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건립	407.0	감액	306.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33.1	사업개선	3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44.9	사업개선	52.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31.4	감액	554.3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893.1	사업개선	631.2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843.3	사업개선	850.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748.9	사업개선	802.3
문화체육관광부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436.9	감액	148.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40.2	감액	423.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52.6	사업개선	155.4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63.0	사업개선	45.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54.3	감액	149.8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산업활성화	23.2	사업개선	23.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62.9	사업개선	189.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58.1	사업개선	59.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267.5	사업개선	255.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0.0	감액	8.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68.8	사업개선	64.1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10.1	사업개선	9.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7.8	사업개선	15.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7.6	감액	13.9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916.1	감액	736.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 지원	365.0	사업개선	370.2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 활성화	17.6	사업개선	13.0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산업 활성화	544.2	사업개선	56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24.6	사업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21.6	사업개선	234.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99.0	사업개선	984.1
문화체육관광부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17.0	사업개선	69.4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38.6	감액	79.6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01.0	사업개선	88.5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99.4	사업개선	256.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50.7	사업개선	1,005.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ODA)	10.5	감액	8.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83.4	감액	966.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지원	174.7	사업개선	431.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42.7	감액	48.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389.4	사업개선	3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986.9	사업개선	1,029.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활동 지원	57.8	감액	192.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37.9	사업개선	1,107.4
문화체육관광부	함께누리 지원	322.2	사업개선	333.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	285.6	사업개선	3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249.5	사업개선	34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46.5	감액	49.4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기반구축	343.0	사업개선	171.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1.2	사업개선	3.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12.2	사업개선	18.7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86.6	사업개선	216.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3.2	감액	11.2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문화재단지원	70.2	사업개선	84.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이미지 홍보	78.4	감액	156.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927.3	사업개선	833.1
문화체육관광부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339.7	사업개선	45.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지원	136.0	사업개선	162.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41.3	사업개선	51.1
문화체육관광부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0.8	사업개선	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7	사업개선	1.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152.7	감액	129.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7.0	감액	7.0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22.4	감액	19.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22.1	감액	15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7.9	사업개선	179.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516.2	감액	424.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활동지원	186.1	감액	272.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4.0	감액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기반조성	72.2	감액	141.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체험 지원	344.9	감액	293.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의료관광활성화지원	27.0	감액	21.6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5.2	감액	10.0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345.8	사업개선	1,3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인증	157.4	사업개선	171.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649.0	사업개선	895.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56.5	사업개선	93.3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57.7	사업개선	57.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종목 보급	91.8	감액	84.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25.5	감액	689.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952.8	사업개선	2,557.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64.5	감액	233.6
문화체육관광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321.9	사업개선	327.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선수양성지원	1,485.3	사업개선	1,761.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5.8	사업개선	75.3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단체지원	1,684.0	사업개선	1,620.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9.0	사업개선	93.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소년)체전 지원	492.4	사업개선	417.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복지사업	235.7	사업개선	214.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과학 지원	50.1	사업개선	48.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452.8	감액	413.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교류 지원	214.0	감액	170.7
문화체육관광부	도핑방지활동지원	102.8	사업개선	140.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622.8	사업개선	482.1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167.9	감액	143.5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00.4	사업개선	220.5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55.4	감액	45.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85.8	사업개선	470.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494.9	사업개선	482.2
문화체육관광부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225.0	사업개선	223.5
문화체육관광부	한스타일 육성지원	80.3	사업개선	85.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해외교류	8.2	감액	7.0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육성	42.2	감액	38.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 지원	460.9	사업개선	635.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178.2	사업개선	304.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7.8	사업개선	10.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관광자원화	45.2	감액	39.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80.7	사업개선	37.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향유 지원	2,878.0	사업개선	3,184.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 지원	77.0	사업개선	78.5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정보 유통활성화	6.7	감액	2.7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29.0	사업개선	29.0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13.9	사업개선	12.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201.4	사업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1.9	감액	5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102.9	사업개선	87.3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 역량 강화	608.7	사업개선	879.8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 활성화	269.1	사업개선	225.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2.6	사업개선	6.4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70.5	사업개선	536.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해외광고	345.3	사업개선	419.3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366.5	사업개선	409.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09.4	감액	10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56.2	사업개선	162.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314.7	감액	242.5
문화체육관광부	MICE산업육성지원	257.6	사업개선	241.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324.7	사업개선	225.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창제작 지원	370.1	사업개선	535.8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 지원	102.8	사업개선	153.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정책지원	14.0	사업개선	17.5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9.1	사업개선	16.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404.2	정상추진	293.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상대응	9.5	사업개선	18.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8,870.9	사업개선	9,490.7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990.9	사업개선	1,297.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03.5	감액	257.5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산업화	563.6	사업개선	421.3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87.3	사업개선	205.6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48.3	사업개선	111.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12.4	사업개선	128.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32.8	사업개선	32.8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91.6	감액	77.9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80.1	사업개선	114.2
농림축산식품부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170.7	감액	228.5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54.2	사업개선	46.0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실태조사	15.8	사업개선	15.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9.0	감액	7.0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활성화	9.2	사업개선	9.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활성화	114.1	사업개선	122.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121.1	사업개선	125.7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육성	27.0	사업개선	63.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91.0	사업개선	44.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체처리지원	50.5	감액	42.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백신지원	525.8	사업개선	558.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17.7	사업개선	19.7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	110.8	감액	93.8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765.4	감액	625.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132.5	사업개선	188.0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1,560.8	사업개선	1,675.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관리	492.7	감액	435.8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7,569.0	사업개선	6,657.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개발	2,134.5	사업개선	1,847.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45.8	사업개선	46.8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원산지관리	3.4	사업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5	감액	1.3
농림축산식품부	원원종및원종생산	63.3	사업개선	63.3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활성화지원	63.9	감액	55.8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	30.8	감액	25.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1.7	감액	27.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3.7	사업개선	4.3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	65.4	사업개선	94.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38.8	사업개선	38.3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1.2	감액	36.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79.9	감액	147.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144.8	감액	121.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636.0	사업개선	932.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시장 개척	46.9	감액	39.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119.4	감액	100.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	사업개선	1,345.4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37.5	감액	115.6
농림축산식품부	푸드서비스 선진화	24.9	사업개선	2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56.4	사업개선	1,227.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04.9	감액	257.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407.9	사업개선	437.8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72.3	감액	47.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739.8	정상추진	866.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259.3	사업개선	230.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1,635.1	사업개선	1,31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45.6	사업개선	56.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68.4	사업개선	277.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1.5	사업개선	116.5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19.4	사업개선	19.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20.0	사업개선	20.0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지원)	30.0	감액	22.5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	2.9	통합	-
농림축산식품부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11.5	감액	9.0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6,436.2	감액	5,470.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활성화지원(지원)	118.4	사업개선	120.3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지원)	31.7	사업개선	31.7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81.7	감액	69.4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아카데미	159.0	사업개선	166.8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27.7	사업개선	27.7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비기반구축	136.1	사업개선	137.1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농지지원(융자)	36.5	사업개선	27.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392.8	사업개선	439.1
농림축산식품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90.0	사업개선	833.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	사업개선	302.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7.1	사업개선	28.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	226.0	사업개선	208.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	891.6	사업개선	1,180.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8.0	사업개선	8.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483.4	사업개선	519.4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	9.0	정상추진	1,514.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	155.4	사업개선	153.2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84.3	사업개선	997.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	391.4	감액	329.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관리	336.3	사업개선	280.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06.7	사업개선	211.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HACCP지원	25.2	감액	18.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	681.1	사업개선	689.7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81.2	감액	69.0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생산유통지원	634.7	감액	493.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	51.7	감액	43.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78.7	감액	15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358.9	사업개선	380.5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이행점검	38.7	사업개선	148.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관리비	106.4	사업개선	106.4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비축지원	550.1	사업개선	560.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42.5	사업개선	43.1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지원	160.5	사업개선	160.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	14.5	사업개선	20.1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5.4	사업개선	18.4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20.4	감액	67.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471.8	감액	397.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3.9	사업개선	505.4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10.0	감액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58.8	감액	216.6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349.9	사업개선	451.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55.0	사업개선	48.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7.2	감액	1,083.9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50.6	사업개선	49.6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수매.공급	16.6	사업개선	16.6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산업부)	71.5	사업개선	71.5
산업통상부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18.3	사업개선	130.3
산업통상부	대한상사중재원지원	6.7	사업개선	6.7
산업통상부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9.7	사업개선	117.3
산업통상부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14.0	감액	499.2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	1,810.7	사업개선	2,213.0
산업통상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40.5	사업개선	166.7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반구축	7.5	사업개선	37.2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14.3	사업개선	3,446.3
산업통상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2.0	감액	69.2
산업통상부	양자산업협력	56.5	사업개선	53.8
산업통상부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98.9	감액	78.5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	27.0	사업개선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관리	28.5	정상추진	22.8
산업통상부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6.0	사업개선	6.0
산업통상부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19.7	사업개선	19.7
산업통상부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	13.2	감액	10.6
산업통상부	해외인재유치사업	34.5	통합	24.7
산업통상부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20.0	사업개선	22.7
산업통상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0.4	사업개선	20.4
산업통상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230.5	사업개선	275.2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산업통상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12.7	사업개선	12.7
산업통상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350.4	사업개선	731.2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147.9	사업개선	133.3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18.0	정상추진	23.9
산업통상부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8.3	사업개선	8.3
산업통상부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14.0	사업개선	17.0
산업통상부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0	사업개선	3.0
산업통상부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9.0	통합	6.6
산업통상부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5.6	감액	4.7
산업통상부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3.6	통합	2.9
산업통상부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6.7	사업개선	7.1
산업통상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6.4	사업개선	6.4
산업통상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76.5	사업개선	86.5
산업통상부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28.1	사업개선	47.1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기반조성	15.3	감액	11.4
산업통상부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34.7	사업개선	34.7
산업통상부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63.1	사업개선	203.8
산업통상부	석유유통구조개선	7.6	사업개선	13.2
산업통상부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57.0	사업개선	55.5
산업통상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7.9	사업개선	17.9
산업통상부	일반광업육성지원	229.8	감액	190.8
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조사	31.1	감액	26.4
산업통상부	지역균형발전지원	15.5	감액	13.2
산업통상부	지역투자촉진	2,513.5	감액	2,959.5
산업통상부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7.0	사업개선	10.0
산업통상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45.0	감액	29.5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기반조성	3,260.9	감액	3,117.8
산업통상부	구역청투자유치지원	31.0	사업개선	31.0
산업통상부	기타 기반시설 지원	271.6	감액	125.1
산업통상부	지역투자촉진(세종)	50.3	감액	-
산업통상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2.9	감액	18.3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48.8	사업개선	47.6
산업통상부	몬트리올의정서대응	8.1	감액	6.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23.7	사업개선	23.3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57.7	사업개선	975.6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6	정상추진	178.9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8	사업개선	42.5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4,050.2	사업개선	4,322.6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8,407.5	사업개선	8,929.4
보건복지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535.3	감액	2,298.7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차상위 등)	596.5	감액	474.6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12.3	사업개선	14.6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570.6	사업개선	377.5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2.3	감액	34.9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관리	6.1	사업개선	5.3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2,532.7	감액	2,798.8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6.4	감액	26.9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4,878.2	사업개선	5,976.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8.0	감액	169.9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354.9	사업개선	7,848.7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29.6	사업개선	162.7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68.4	사업개선	71.9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2,534.5	감액	2,780.6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22.4	감액	112.4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4.0	감액	44.2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31.7	사업개선	157.8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7.6	사업개선	7.8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14.4	사업개선	237.1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30.3	감액	22.5
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34.5	사업개선	34.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관리	0.3	사업개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34.3	사업개선	27.4
보건복지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47.9	사업개선	43.5
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143.8	감액	151.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9.5	사업개선	3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69.1	사업개선	72.7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838.4	사업개선	1,497.8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1.8	감액	12.2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69.0	사업개선	69.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84.3	사업개선	287.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739.0	사업개선	788.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333.4	사업개선	341.7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10.4	감액	7.1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40.7	감액	289.6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2.2	사업개선	163.7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지원·운영	66.7	사업개선	66.2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14.8	사업개선	16.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566.2	감액	602.9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52.6	감액	1,376.7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5.0	통합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313.3	사업개선	326.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516.9	사업개선	760.7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36.0	감액	31.8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21.6	사업개선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50.6	감액	338.8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22.4	사업개선	123.1
보건복지부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115.8	감액	110.8
보건복지부	공공조직은행 운영	55.3	사업개선	54.4
보건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5.8	사업개선	4.7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31.4	사업개선	-
보건복지부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6.1	감액	5.3
보건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0	사업개선	43.8
보건복지부	긴급치료병상 운영보조	15.9	감액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43.1	사업개선	24.5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21.4	사업개선	222.0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및안전관리	121.7	사업개선	164.3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69.7	감액	59.3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57.9	사업개선	43.9
보건복지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88.6	감액	75.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17.5	감액	14.5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38.6	감액	32.1
보건복지부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7.5	사업개선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1,531.3	감액	1,435.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159.3	사업개선	266.0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99.1	감액	168.7
보건복지부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192.1	감액	163.0
보건복지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10.1	감액	9.2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육성	37.3	사업개선	37.9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44.2	사업개선	146.2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69.1	감액	58.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81.4	감액	55.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203.9	감액	99.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1,155.2	정상추진	1,197.5
보건복지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4.5	정상추진	5.1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97.8	사업개선	297.8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610.6	사업개선	1,428.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119.1	감액	120.7
보건복지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57.2	사업개선	63.9
보건복지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정보화)	0.3	통합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4	사업개선	92.5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04.6	사업개선	116.1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45.2	감액	22.3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5.5	감액	392.0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758.6	감액	1,804.2
보건복지부	노인단체 지원(지원)	75.1	감액	72.2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848.5	사업개선	6,358.0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지원)	1,964.9	사업개선	2,186.9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	460.0	감액	345.5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243.3	감액	206.3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9.0	사업개선	9.0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3,408.8	사업개선	2,306.9
보건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83.7	사업개선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21.1	사업개선	353.6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지원	5.6	사업개선	5.6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35.2	사업개선	32.8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331.3	감액	347.4
보건복지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09.2	정상추진	115.6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구축	1,770.4	사업개선	1,884.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관리	75.8	감액	71.1
보건복지부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56.8	사업개선	61.6
보건복지부	혈액안전관리	102.6	사업개선	101.5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3.9	감액	17.2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	1,069.3	사업개선	725.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관리	475.5	사업개선	405.9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112.5	사업개선	102.3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545.6	감액	450.6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203.5	정상추진	203.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증진사업	1,373.7	감액	1,347.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671.1	사업개선	866.6
보건복지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36.1	사업개선	30.5
보건복지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45.3	감액	26.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59.3	사업개선	289.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670.2	감액	520.5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12.0	사업개선	221.2
보건복지부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1.9	사업개선	737.2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3.1	사업개선	306.0
보건복지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47.5	사업개선	127.6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6.2	사업개선	15.9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86.1	감액	27.8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	2,016.2	감액	1,696.1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환경부)	27.0	통합	27.0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15.0	감액	7.5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그린도시	214.1	감액	182.2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환경부)	60.0	감액	58.0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56.5	사업개선	12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333.2	감액	240.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293.6	사업개선	315.5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234.6	감액	190.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199.5	사업개선	163.7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117.2	사업개선	81.3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85.8	사업개선	1,269.4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10.3	감액	8.3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25.8	사업개선	25.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하천유지보수	1,380.6	감액	1,086.6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4.4	감액	72.5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21,963.3	사업개선	29,227.9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6,605.7	사업개선	3,804.7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52.7	감액	42.4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48.5	감액	41.5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399.1	사업개선	1,108.3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601.5	사업개선	1,159.0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944.6	사업개선	1,423.7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449.1	사업개선	1,851.7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13.2	사업개선	11.5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102.1	감액	5.0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6.0	사업개선	6.0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0.0	감액	17.0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49.7	감액	252.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102.4	사업개선	102.4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45.0	사업개선	40.0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15.2	감액	9.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41.0	사업개선	36.0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169.5	감액	1,850.0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4.0	사업개선	4.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238.0	감액	202.0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842.5	감액	653.2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강화	34.5	사업개선	36.3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67.5	감액	343.0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1,777.3	감액	1,141.9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52.1	사업개선	152.1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1.5	정상추진	1.5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21.8	감액	18.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22.3	감액	19.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기반 강화협력	50.0	감액	42.5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1.5	사업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45.9	사업개선	71.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2.0	사업개선	8.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강화사업(ODA)	10.4	사업개선	15.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7.4	감액	23.2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02.9	사업개선	102.9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10.3	감액	70.7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	11.3	사업개선	13.6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1.6	감액	1.4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2.8	사업개선	2.8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17.9	사업개선	129.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8,338.3	사업개선	6,236.6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55.1	사업개선	30.4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촉진지원(지원)	43.8	감액	50.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58.7	사업개선	58.7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14.7	사업개선	12.2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청별주민지원(한강)	868.6	사업개선	819.7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	705.5	감액	600.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운영(한강)	1,563.4	사업개선	1,538.6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한강)	107.0	감액	88.9
기후에너지환경부	퇴적물준설(한강)	12.0	감액	10.2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한강)	30.1	감액	25.6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한강)	38.5	감액	32.7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수비용지원(한강)	8.0	감액	6.8
기후에너지환경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한강)	82.0	감액	69.7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한강)	8.1	사업개선	7.0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염총량관리사업(한강)	33.1	감액	28.1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한강)	149.7	감액	127.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효율향상	1,259.2	사업개선	1,236.2
기후에너지환경부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7.0	감액	14.5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05.1	사업개선	2,827.9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활성화지원사업	17.0	사업개선	17.0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164.3	사업개선	131.4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529.0	감액	449.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41.4	감액	35.2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	사업개선	1,247.7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홍보	0.5	감액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2.0	사업개선	16.7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청별주민지원(금강)	230.1	감액	195.4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금강)	251.1	감액	212.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운영(금강)	337.0	감액	283.9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금강)	21.4	감액	18.5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금강)	29.9	감액	25.3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금강)	8.5	감액	7.3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염총량관리사업(금강)	24.6	감액	20.7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청별 주민지원(낙동강)	229.2	사업개선	229.2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낙동강)	560.4	감액	374.5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운영(낙동강)	748.9	정상추진	904.4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낙동강)	22.1	사업개선	20.8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수비용지원(낙동강)	39.0	감액	29.2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낙동강)	30.4	감액	20.7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낙동강)	12.6	사업개선	12.6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염총량관리(낙동강)	27.9	사업개선	25.6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청별 주민지원(영산강·섬진강)	200.0	사업개선	199.5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영산강·섬진강)	194.7	감액	149.6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운영(영산강·섬진강)	43.9	감액	37.3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영산강·섬진강)	31.1	감액	26.4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영산강·섬진강)	2.7	사업개선	3.6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염총량관리사업(영산강·섬진강)	18.2	감액	15.5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건강영향조사(영산강·섬진강)	4.3	사업개선	4.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1,024.8	감액	870.9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38.8	감액	33.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670.9	사업개선	3,155.9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115.4	사업개선	13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4.6	사업개선	6.7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214.3	사업개선	192.1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확산지원	20.6	사업개선	75.4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195.4	감액	92.4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지원	252.6	사업개선	269.2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5.0	정상추진	5.0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65.8	사업개선	81.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384.1	사업개선	1,145.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129.2	감액	90.3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2.3	사업개선	77.0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948.9	감액	926.4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685.2	정상추진	748.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49.8	감액	37.7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30.0	사업개선	29.5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74.5	사업개선	5.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151.2	감액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402.2	사업개선	388.9
성평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3.6	감액	19.7
성평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10.6	사업개선	6.0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8.4	사업개선	8.5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11.2	사업개선	12.0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2.6	사업개선	3.5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13.8	사업개선	14.2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422.3	사업개선	404.7
성평등가족부	가족역량강화 지원	14.6	감액	11.0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5,963.0	사업개선	4,990.6
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983.5	사업개선	980.5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24.7	사업개선	306.8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51.0	사업개선	58.7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13.8	사업개선	702.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67.5	사업개선	396.7
성평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9.8	사업개선	164.7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3.3	사업개선	437.8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6.0	사업개선	67.8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46.7	사업개선	55.3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98.8	사업개선	665.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1,299.5	정상추진	2,318.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9.8	감액	167.8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58.5	감액	6,340.1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15.3	감액	-
국토교통부	PSO보상	3,995.9	감액	4,192.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지원	4.5	정상추진	6.6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52.0	감액	27.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0.9	사업개선	0.9
국토교통부	건설및지하안전관리	43.6	사업개선	50.0
국토교통부	교통사고예방지원	3.0	통합	2.5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32.0	사업개선	32.0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37.4	감액	31.4
국토교통부	건축문화진흥	17.3	사업개선	18.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	0.9	사업개선	0.9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29.7	감액	28.3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교통체계	55.0	감액	-
국토교통부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64.1	폐지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64.5	감액	161.6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460.4	감액	635.2
국토교통부	택시산업지원	36.4	감액	121.9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2.7	사업개선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2,096.1	사업개선	2,453.0
국토교통부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94.0	사업개선	85.5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556.5	정상추진	8,651.5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337.1	감액	2,423.4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대책	73.6	사업개선	322.0
국토교통부	항공산업발전지원	5.0	정상추진	14.2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10.0	감액	69.0
국토교통부	친환경물류지원	7.3	사업개선	9.7
국토교통부	전환교통지원사업	35.1	감액	29.9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사업지원	38.3	감액	32.6
국토교통부	환승센터구축지원	28.4	감액	13.0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663.2	사업개선	555.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185.0	감액	155.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983.3	감액	398.0
국토교통부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277.6	감액	236.0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7,155.5	사업개선	8,045.9
국토교통부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2,606.6	통합	3,390.5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출자	332.7	통합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출자	97.8	통합	-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자	4,652.9	사업개선	4,693.9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376.3	사업개선	396.2
해양수산부	해양해운목표관리제	24.8	사업개선	19.5
해양수산부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234.0	감액	70.8
해양수산부	어업협정이행	67.9	사업개선	67.9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3.0	사업개선	23.2
해양수산부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33.2	사업개선	33.2
해양수산부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82.8	사업개선	86.2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60.0	정상추진	51.2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80.3	사업개선	83.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91.3	감액	641.5
해양수산부	전환교통지원	27.0	정상추진	27.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5.4	사업개선	16.2
해양수산부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3.7	사업개선	2.5
해양수산부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44.5	사업개선	111.5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36.6	사업개선	31.1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해양수산부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16.9	감액	14.1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125.3	사업개선	411.8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35.0	사업개선	145.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및문화육성	8.6	감액	5.7
해양수산부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39.4	사업개선	49.2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4.5	사업개선	4.5
해양수산부	천일염산업육성	34.2	감액	24.2
해양수산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85.8	사업개선	880.1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관리	3.5	사업개선	-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관리	53.0	사업개선	12.5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	29.5	감액	22.3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114.6	감액	-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62.4	감액	136.9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육성	73.9	감액	34.7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89.4	감액	600.7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8.0	감액	-
해양수산부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9	사업개선	5.3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6.3	감액	55.9
해양수산부	어업인삶의질향상	55.7	감액	40.6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활성화	80.4	사업개선	93.1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40.7	감액	34.5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019.6	사업개선	3,445.8
해양수산부	어선청년임대	20.5	사업개선	20.5
해양수산부	양식장임대	68.3	사업개선	33.3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직불제	1,167.7	사업개선	1,172.2
해양수산부	기타항만 재개발	59.3	감액	50.4
해양수산부	여객터미널 운영	5.1	사업개선	-
해양수산부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9.0	감액	9.0
해양수산부	물류기업유치지원	82.0	사업개선	124.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13.4	사업개선	17.1
해양수산부	표지시설	12.4	사업개선	6.0
해양수산부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390.0	사업개선	477.0
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에특)	186.6	사업개선	-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20.0	사업개선	60.0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7.3	감액	139.8
해양수산부	산지유통시설지원	63.9	감액	41.4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해양수산부	내수면자원조성(지원)	107.5	사업개선	8.7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346.6	감액	93.0
해양수산부	어촌소멸대응지원	37.7	감액	37.7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80.6	감액	67.5
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255.0	사업개선	204.2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69.9	사업개선	166.1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지원)	40.4	감액	33.2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212.2	사업개선	240.3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20.2	감액	12.4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육성	109.6	감액	164.6
해양수산부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21.6	감액	7.5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9.3	사업개선	-
해양수산부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1,015.0	감액	850.0
해양수산부	수산물자조금지원	41.0	감액	37.9
해양수산부	수산관측	4.2	감액	4.2
해양수산부	피해보전직불금	17.8	사업개선	17.8
중소벤처기업부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중기부)	28.9	사업개선	30.0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1,500.5	통합	3,135.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182.8	사업개선	200.8
중소벤처기업부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68.8	사업개선	98.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237.1	감액	176.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1,456.2	사업개선	1,563.2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	600.0	사업개선	6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7	감액	1,398.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359.0	사업개선	545.1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225.0	감액	35.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49.2	감액	32.3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6.2	사업개선	8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	361.8	사업개선	555.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제도 운영	166.1	사업개선	150.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	164.3	사업개선	162.4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114.9	감액	112.5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138.0	사업개선	14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650.3	사업개선	565.4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248.2	사업개선	415.1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운영	9.0	폐지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75.1	사업개선	178.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7.1	사업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120.5	사업개선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	520.9	감액	442.8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00.4	사업개선	66.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70.8	사업개선	4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33.2	정상추진	33.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84.9	감액	7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제주)	1.0	감액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세종)	0.5	감액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0.0	사업개선	30.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310.2	감액	1,427.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6,113.2	사업개선	4,417.7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1,352.6	감액	661.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5	사업개선	4,089.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116.1	감액	129.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133.0	사업개선	1,192.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21.1	감액	17.9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5,506.0	사업개선	5,397.3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 활성화	33.0	사업개선	28.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3.3	정상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0.6	감액	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3.6	감액	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0.4	감액	8.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7	사업개선	5.9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6.7	사업개선	19.4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74.7	사업개선	80.1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82.0	사업개선	118.2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520.5	사업개선	527.0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창출지원	241.7	사업개선	250.4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43.9	사업개선	45.0
지식재산처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81.7	감액	-
지식재산처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10.2	감액	99.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18.2	사업개선	177.0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49.6	통합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72.2	사업개선	72.2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교류협력	1.5	사업개선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	167.9	감액	12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BS프로그램제작지원	303.8	사업개선	33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59.2	정상추진	5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54.6	감액	69.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M라디오송출지원	1.0	감액	0.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증진	21.6	감액	1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4.6	사업개선	4.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200.8	통합	215.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지원	148.2	사업개선	15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347.5	사업개선	413.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16.9	사업개선	17.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4.0	정상추진	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2.7	정상추진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	10.6	감액	10.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8.9	감액	7.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213.6	통합	260.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기반조성	1.4	사업개선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15.5	감액	7.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9.4	사업개선	9.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4.1	사업개선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14.4	감액	1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OTT산업경쟁력강화	6.0	사업개선	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1.9	사업개선	8.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운영지원	32.9	감액	2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2.0	사업개선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화)	12.5	감액	10.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1.4	감액	9.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44.3	감액	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9.7	사업개선	8.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2.8	사업개선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6	감액	28.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1.3	감액	1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18.2	사업개선	18.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1.3	감액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대외방송송출지원	54.8	사업개선	39.5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BS방송인프라개선	11.4	사업개선	5.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9	사업개선	1.8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	118.8	감액	87.9
금융위원회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2.8	사업개선	2.8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9.1	사업개선	22.7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권익민간협력	0.8	사업개선	0.8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8.0	감액	11.0
우주항공청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3.4	사업개선	4.4
재외동포청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1.3	통합	1.3
재외동포청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15.8	정상추진	24.6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9.5	감액	6.9
재외동포청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1.5	감액	0.5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수출지원	3.7	사업개선	-
방위사업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37.1	감액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8.9	사업개선	8.1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33.0	사업개선	33.0
소방청	119구급대 지원	295.4	사업개선	314.4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66.5	감액	66.5
소방청	실화재훈련시설구축	32.8	사업개선	25.5
소방청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94.7	사업개선	85.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585.7	사업개선	600.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5.5	사업개선	5.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212.8	사업개선	116.7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지원	90.0	사업개선	71.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3.6	감액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1.8	감액	1.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국제교류협력	2.0	감액	1.7
국가유산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33.7	감액	29.3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274.5	감액	246.7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86.2	감액	74.1
국가유산청	사적관리	72.0	감액	40.7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22.0	사업개선	6.8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49.3	사업개선	-
국가유산청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24.3	사업개선	20.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24.8	정상추진	-
국가유산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6.8	사업개선	34.6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4,994.6	감액	5,196.6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2.9	사업개선	2.9
국가유산청	무형유산보호	193.1	사업개선	125.3
국가유산청	고도 보존 및 육성	308.0	사업개선	136.1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18.4	감액	60.8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69.5	감액	23.6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54.5	사업개선	83.5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536.0	감액	396.9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6.4	사업개선	5.8
농촌진흥청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34.6	사업개선	50.1
농촌진흥청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31.2	감액	48.7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48.8	사업개선	69.4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27.7	감액	24.1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377.8	사업개선	370.3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18.5	감액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지역지원)	16.2	사업개선	6.2
농촌진흥청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63.7	사업개선	69.8
산림청	탄소중립도시숲조성	715.1	사업개선	-
산림청	국제산림개발협력(ODA)	30.3	감액	24.2
산림청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12.8	사업개선	8.3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42.8	사업개선	263.7
산림청	산지관리	8.8	감액	7.5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441.7	사업개선	442.0
산림청	산림휴양등산증진	6.1	감액	0.4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67.4	감액	78.0
산림청	산림복원	111.6	사업개선	29.6
산림청	백두대간보전	76.4	감액	46.6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증진	39.5	감액	39.0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570.7	사업개선	802.9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1,003.2	사업개선	1,058.7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165.7	감액	140.4
산림청	사방사업	2,437.1	감액	2,035.9
산림청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50.6	감액	43.0
산림청	임산물수출촉진	46.7	감액	36.8
산림청	묘목생산	11.6	사업개선	-
산림청	목재생산관리	22.6	감액	0.6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6년 예산	결과	'27년 예산안
산림청	청정임산물이용증진	96.8	감액	77.7
산림청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18.6	감액	337.8
산림청	목재산업육성	144.3	감액	18.3
산림청	목재이용증진	28.7	감액	1.5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1.3	감액	0.2
산림청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14.3	사업개선	14.6
산림청	임업기능인양성	23.0	감액	14.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1,141.6	사업개선	1,449.1
산림청	조림(지원)	1.0	감액	5.9
산림청	정원 조성관리(지원)	7.7	사업개선	4.2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111.7	사업개선	92.5
질병관리청	에이즈 및 성병예방	143.7	감액	118.6
질병관리청	국가결핵예방	311.4	감액	306.4
질병관리청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2.5	감액	2.1
질병관리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48.0	정상추진	47.3
질병관리청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14.2	정상추진	26.4
질병관리청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7.4	사업개선	9.5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실시	6,111.3	정상추진	6,781.7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122.4	사업개선	83.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93.7	사업개선	92.4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지원	221.5	정상추진	212.1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7.1	사업개선	-
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22.8	사업개선	109.8
질병관리청	질병 연구 기반 조성	10.0	정상추진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6	사업개선	7.1
질병관리청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7.7	사업개선	22.1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	27.2	사업개선	27.2
질병관리청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관리	6.0	사업개선	6.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정보화 기반운영(정보화)	6.9	사업개선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34.0	사업개선	118.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44.0	감액	37.4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15.7	사업개선	11.6

제3부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대법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법서비스 향상

평가요약표

부 처	대법원
사 업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을 감액 하였으며, 전체적인 세부사업 예산으로 살펴보면 2025년도에 비해 감액됨 - 성과지표를 1개만 설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포용금융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등)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을 민간 법률구조단체에서 자체수입이나 기부금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의 영속성 및 지원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서비스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 및 중복 사업의 문제는 없음

○ 본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사업 모두 보조금 지원 사업임

-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4년 3,006백만 원에서 2025년 3,879백만 원으로 약 29%가 증액되었으며, 2026년에도 동일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예산집행률이 모두 100%이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외부 적발이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점검결과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현황 점검결과 적발이력이 없으며, 외부적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제출,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액 현황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없음

○ 본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는 '법률보호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수)' 로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성과가 24,839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 22,979건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2023년 성과는 23,149건으로 2025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성과목표는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2개 이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대법원**
사 업	**사법서비스 향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한국법학원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외부평가에 있어 본 사업은 추후 감액 후 '폐지'의 지적이 있었음 - 성과목표 대비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하며, 추가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의 운영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법학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체 수익이 거의 없고, 민사·상사 법률연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본 사업은 보조금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고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과 성과관리와의 관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내용과 성과와의 연계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예산 463백만원에서 2026년 350백만원으로 24.4% 감액됨. 이는 인건비 347.1백만원을 제외하면 운영지원를 대폭 삭감한 결과임. 운영지원비 삭감에 따른 보고서 결과의 질적 문제 해소 및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모두 100%이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등 관리의 적절성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외부 적발이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점검결과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현황 점검결과 적발이력이 없으며, 외부적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제출,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액 현황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없음(정산 후 반납액의 경우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납 예정)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보고서 작성 건수’ 1개만 설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5년 모두 10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성과가 모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상승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성과지표로서 ‘연구보고서 작성 건수’만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연구보고서 만족도’, ‘연구보고서 활용도’ 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교류협력

평가요약표

부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업	국제교류협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회 지적 사항에 따른 연례적 감축 계획을 이행 중이며, 보조금 예산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성과지표 달성 등 사업 운영은 안정적이나, 외부 지적에 따른 예산 규모 적정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사업개선 조치가 적절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세계 선거기관 간 협력 증진 및 사무처 운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그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무처 소재국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할 국제적·법적 의무가 있으며, 민간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 특성상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함

- 성과지표(A-WEB 운영활성화) 목표치(10.4) 대비 실적(10.6)을 상회 달성하고 있으며, 98%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관리 역량을 보임

○ 다만, 국회 지적 사항에 따른 재무 자립도 향상 및 예산 규모의 적정화 조치가 필요함

-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감축 요구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 감축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며,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다만, A-WEB 보조금 예산은 A-WEB 사무처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향후 전년도 예산액만을 기준으로 A-WEB 운영지원 보조금을 감액하게 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의 삭감은 물론이며, A-WEB 사업비 미편성으로 보조사업 실적 자체가 사라져 사업효과 측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예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와 최소한의 운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재고하는 등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함

- A-WEB 자체 재원 비율이 '22년 13.4%에서 '25년 33.5%로 상승하여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개선된 점은 인정되나,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보조금 지원 없이도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평가요약표

부 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 조사 범위를 국내외 청년 및 여성위원으로 확대하고, 자문위원의 전문적 활동 역량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외에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통일인식 제고도' 지표도 사업 추진 전후 응답 결과 비교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헌법과 법령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117번)와의 높은 정합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본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23~'25년 사업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98.0%에 달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우수하고, 사업추진과 전달체계가 효율적이며 행정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 조직에 대한 관리 체계의 상대적 취약성과 성과지표의 측정 범위 및 산출 방식의 기술적 한계는 보완이 필요함

○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전문적 활동 역량 개선도를 반영한 지표 개발하여야 하며, 사전·사후 비교 방식의 정밀한 성과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사업의 목적이 자문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성과지표를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통일정책 자문과 실질적 활동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함

- 성과지표와 별개로 조사하고 있는 인식 제고도 조사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발성 사후 설문을 지양하고, 사전·사후 비교가 가능한 설문 문항 재설계 및 2회 조사 체계를 도입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 명칭을 성과지표 측정 방법·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26년 예정된 '인식 제고도' 중심의 지표 개편 시, 지표의 명칭과 실제 설문 대상이 일치하도록 설문 조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표 명칭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헌법과 법령에 근거한 법정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 역할 강화'를 수행하는 과제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117번)와의 높은 정합성을 바탕으로 자문위원과 지역조직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공감·국민통합의 평화통일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본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23~'25년 사업예산의 평균 집행률도 99.5%로 예산 집행 효율성이 우수하고, 사업추진과 전달체계가 효율적이며 행정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적절히 이행되는 등 환류 개선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지표 명칭을 성과지표 측정 방법·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26년 예정된 '인식 제고도' 중심의 성과지표 개편 시, 지표의 명칭과 실제 설문 대상(모집단)이 논리적으로 부합하도록 성과 측정 설계 구조를 개선해야 함

- 특히 '지역사회 인식 제고도'와 같이 지표 명칭은 포괄적이나 실제 설문은 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측정 범위를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하거나 지표명을 '사업 참여자 인식 제고도'로 구체화하여 성과 산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 업	공공기관 갈등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갈등관리 민간분야지원(보조)은 갈등관리 연구기관(대학·센터 등)을 통해 공공기관·지자체의 갈등 현안에 대해 컨설팅/자문(코칭 포함), 간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교육(기본/심화)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예방·해결 역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측면에서는 기관별 편차가 뚜렷하였으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담당 부처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금해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집행측면에서는 '23년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참여 인력의 이중수혜 문제도 담당부처에서 이미 보안책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자부담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갈등관리 민간분야지원(보조)은 갈등관리 연구기관(대학·센터 등)이 공공기관·지자체 갈등 현안을 대상으로 갈등자문·컨설팅, 갈등영향분석(간이 포함), 갈등관리 교육(기본/심화)을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갈등 예방·해결 역량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 추진지침을 통해 분할교부(70/30), 중간평가·조치(부진 시 중단·환수), 최종평가, 정산(잔액·이자 반납) 등 보조금이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성과·집행관리와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대통령령상 공공갈등 예방·해결 체계를 위한 연구기관 지정·지원 구조로 운영되나, 갈등관리 교육·컨설팅은 민간 교육/컨설팅 시장에도 존재하므로 기능적으로 유사·중복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임

○ 더불어, 본 보조사업은 성과 측면에서 기관별 편차가 뚜렷하며, 실적보고서 기준으로 갈등해결센터는 목표 초과·만족도 99점대 등 우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단국대는 컨설팅 목표(25회) 대비 실적 12회(48%) 미달, 한양대는 교육 만족도 목표(4.8) 대비 실적 4.31/5로 미달하는 등 동일한 보조사업 내에서도 성과·품질의 균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됨

- 이에 대해 부처에서는 이미 각 민간기관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우수사례·기법 공유를 위한 연구기관 연찬회를 신규 추진(연간 1회 예정)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결과를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제출받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비스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연구기관 간 경쟁적 발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보조)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92.6% → '24년 100% → '25년 99.5%로 집행율은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자부담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

- '24년에는 갈등해결센터가 70백만원 전액 집행(반납 0)으로 개선되었고, 단국대·전북대·한양대도 전액 집행(반납 0) 구조가 확인됨

○ ’25년 수행기관 실적을 보면, 갈등해결센터는 코칭·컨설팅 목표 18건 대비 19건(106%) 완료, 간이 갈등영향분석 2건(100%), 갈등조정 1건(6회) 계획 대비 3건(7회, 116%) 수행 등 다수 항목에서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제시하고, 만족도도 98~100점(종합 99.4점) 수준으로 매우 높게 보고되어 ‘성과달성도·우수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우수 사례로 평가 가능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 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액'이 필요함 - 기존 지자체 청년 사업과의 유사·중복되어 선도적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성과 또한 착수·운영 여부 중심의 산출 성과에 그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현행 보조율 50%가 과도할 가능성이 있는바, 재정자립도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성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등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청년기본법」 및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89번) 및 상위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높음. 다만, 청년친화도시 발굴·지원을 위한 선도적 지원이라는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업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 있음

○ 지원 규모 측면에서 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50%이며, 이는 유사 청년정책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조율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음. 다만, 직접적으로 편익을 제공받는 수혜자 규모 및 성과자료 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규모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는바 보완이 요구됨

○ '25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사·프로그램 위주의 단기 집행 항목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집행 자체의 적정성은 확보되고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 있음

- 거창군의 경우 7개 세부사업 중 4개 사업(청년 브릿지 프로젝트, 거창 청년 기억저장소, 청년Team-up 프로젝트, 청년공간이룸터 조성)이 4분기에 추진되고 있어 중간 점검 및 성과 환류, 사업의 단계적 추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성과는 대부분 사업 착수·운영 여부 중심의 산출 성과에 그쳐 유사 청년정책 사업과 비교했을 때,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른 차별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음.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제도 취지에 비해 기존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성과 또한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연말 집중 집행 등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확인되는바,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액'으로 판정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재정경제부

소비자물가관리
국제금융센터보조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평가요약표

부 처	**재정경제부**
사 업	**소비자물가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물가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물가감시센터 사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사기준의 연속성 및 데이터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나,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물가감시센터 조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됨. - 특별물가 조사 건수가 매년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구조적 개선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측정 단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물가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인 물가감시센터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일부 중복하지만, 소비자가격, 출고가격, 원재료 가격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물가감시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가감시센터 사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사기준의 연속성 및 데이터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다만,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별물가조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물가조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조사대상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 2025년도에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여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음. 보조사업자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회계 관리 역량에 대한 엄정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인력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부터 성과 지표를 결과 지표인 생활물가상승률에서 투입 지표인 물가감시활동 실적으로 변경한 것은 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측정 단위로서의 '보도자료 건수'가 가진 임의성 및 자의성으로 인해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재정경제부**
사 업	**국제금융센터보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한국은행과의 법적 역할 차이 외에 최종 산출물의 내용, 활용 범위, 특성 및 대상 고객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됨 - 경직적 예산으로서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자료구독 등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 있고 물가상승에도 동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뉴욕사무실 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에서는 해당 사무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수행 과제,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만족도 점수가 정체되고 국고보조금 1억원당 보고서 제공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한국은행과의 법적 역할 차이 외에 최종 산출물의 내용, 활용 범위, 특성 및 대상 고객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됨

○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신청되었다는 점에서 경직적 예산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자료구독 등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 있고 물가상승에도 동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뉴욕사무실 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에서는 해당 사무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수행 과제,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민간경상보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 없이 국제금융센터를 법령을 근거로 유일한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한 정책 추진 체계로 판단되나, 해당 단체에서 분석, 배포하는 정보의 질이 재정 투입 규모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한국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고도화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결산 중에 국회에서 지적된 운영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요구에 대한 개선은 추가 소명 자료에 의해 현 시점 기준 조치가 완료된 것이 확인됨

○ 성과지표인 1억원당 보고서 제공 건수가 2023년 52.5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조금 증가 및 심층 보고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심층보고서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재정경제부
사 업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신흥국 내 비관세장벽 등 FTA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경제협력과 연계한다는 정책적 명분,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사업 또는 재정경제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과 별도 추진이 필요한 차이가 존재함 - 재정경제부(정책) → KOTRA(관리) → 수행사(실행)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달체계로 판단됨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지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적정 규모 및 실질 내용, 추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구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집행률의 변화가 매우 큼. 상대국의 정치경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 내용으로서 집행률 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성과지표의 경우 본 사업이 기여했거나, 명확한 산출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신흥국 내 비관세장벽 등 FTA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경제협력과 연계한다는 정책적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액 사업이나 중장기적 정책 파급력을 고려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소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책 파급력이 낮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취지와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협사업의 실체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큰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KOTRA에 민간경상보조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해당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사전에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산업통상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사업 또는 재정경제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과 별도 추진이 필요한 차이가 존재함

○ 재정경제부(정책) → KOTRA(관리) → 수행사(실행)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정부-정부 및 정부-민간 간 협업, 해외 정보 수집, 산업분야 전문 지식 등 다양한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업 특성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달체계로 판단됨

○ 2023년 실집행률 저조는 베트남측과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대체사업 발굴 등 전체적인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대거 발생하였고, 2024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집행으로 실집행률이 급증하였음

○ 상대국의 정치경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 내용으로서 집행률 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성과지표의 경우 본 사업이 기여했거나, 명확한 산출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재정경제부
사 업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대외경제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공공·민간에 산재된 정보를 연계·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자체 정보 생산·확산 기능을 수행하며, 방문자 수·연계정보·이용자 만족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유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환류 및 개선노력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 - 수혜 규모가 주로 방문자 수 중심으로 제시되어 실제 수출기업 기준의 활용 규모와 핵심 기능별 이용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운영·유지관리비 산정의 객관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지적 이후 이용자 수 목표를 상향한 점은 인정되나, 정보 활용 수준과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보완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대외경제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에 산재된 대외경제정보를 연계·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정보 생산·확산 기능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방문자 수, 연계정보, 일평균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등이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 이용 확대와 수요는 확인됨
- 유사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본 사업은 개별 기관의 정보를 대체하기보다는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유사중복 문제는 미미함

○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추진내용은 전문특화 대시보드, 무역장벽 통합정보, AI 추천정보, 연계기관 확대 등으로 제시되어 다소 도전적인 측면은 있으나, 수출기업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은 인정됨
- KOTRA를 중심으로 정보 생산·전파, 데이터 품질관리, 연계기관 관리가 수행되는 구조이며, 보조 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진·전달체계의 효율성도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높고 이월이 없으며, 정산 후 반납액도 감소 추세로 나타나 집행 적정성 측면의 중대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지원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수혜자 규모가 주로 방문자 수와 일평균 이용자 수로 제시되어, 실제 수출기업 기준의 활용 규모, 기업 유형별 이용 현황, 핵심 기능별 이용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 존재
- 운영비 증가는 무상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향후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 범위, 서비스 수준, 보안·장애 대응 수준, 클라우드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유지관리비 산정 근거를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 환류 및 개선노력 측면에서도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됨

- 외부 지적 이후 2026년 일평균 이용자 수 목표치를 상향한 점은 인정되나, 단순 이용량 지표만으로는 정보 활용 수준과 정책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움
- 향후에는 실수혜 기업 기준의 활용도, 정보탐색 비용 절감 효과, 지원사업 연계 실적, 수출기업 애로해소, 핵심 기능별 이용 성과 등 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제주)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세종)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해외IT지원센터운영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AI통합바우처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정보화)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위성주파수 관리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위성주파수 확보 및 관리 정책은 국가 정책에서 핵심 추진 과제임이 확인됨 · 우주항공청에서 실시한 국내 위성개발·발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혜자 및 규모의 확장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성과 지표가 단순 정량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우주 영토 선점을 위한 핵심 자원인 위성망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위성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우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위성망의 국제 등록 사무를 체계화하고 위성 주파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국가 우주 기술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위성통신은 AI·6G 시대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로 활용되는 기술이며, 위성망 확보 및 주파수 관리체계 구축은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임

○ 위성주파수 확보 및 관리 정책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4.10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3.9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5.11월) 등 국가 정책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됨

○ 위성망 국제등록 및 혼신조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파법 제39조에 따라 국가 주관청*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공공 업무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간 약 1,000건 이상의 국가 간 국제 위성망 조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단독 수행이 어려운 행정·외교적 성격의 업무임. 따라서 국가 차원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은 필수적임

○ 전략적 지표 재설계가 필요. 단순 협의회 운영 활용 건수보다는 실질적인 위성 주파수 수요 조사 결과 및 신규 자원 확보 실적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실질적 기여도를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지표가 단순 정량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사업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짐 - 전파법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법 시행령제88조(협회의 사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ICT·전파산업의 해외 진출 국제협력 강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 및 보조금 규모가 수혜자 대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성과지표인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건수를 목표 대비 160% 초과달성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내 ICT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해외 시험·인증 획득 비용 부담과 국가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한 구조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며 ICT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해외 시험·인증 취득 및 이에 수반되는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ICT 시험·인증 시장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인증 절차 대응 역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험·인증 비용 및 인증 절차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직접 지원받는 구조로 지원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총괄 부처로 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구조로, 정책 기획 - 사업 집행 - 성과 관리가 일관되게 연계되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 원칙과 공모 예외 규정에 근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수행계획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활동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성과지표로 제시한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건수는 본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보여지며, '25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160%)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디지털역량강화교육**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디지털 포용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나 지역보다는 지원 대상(장애인)을 특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낮음 -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계정으로의 이관 필요 · 지원대상의 성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개선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포용 실현에 기여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1차 보조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 간접 보조사업자는 각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복지관 등 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성

- 각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데 유리

- 집합 교육의 특성상 지역 접근성 중요하며, 지자체 주관 방식은 장애인 복지 인프라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인정됨

○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장애인 지역분포 등에 따라 타사업 대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임(비수도권 지원 비중 64.1%)

-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직접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회계로의 이전을 검토할 필요

○ 장애인 집합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과기정통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관리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정산 관리와 함께, 교육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본적인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집행률(99%)도 우수

○ 성과지표는 세부 내역사업 단위로 분리·관리되지 않고 전체 디지털 포용 사업 성과에 포함되어 집계되고 있음

- 다른 출연사업과 달리 장애인 집합 교육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만족도 및 역량 개선결과를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할 필요

- 지역별 교육성과를 공통 지표로 관리하여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특성을 고려해 재참여율 등 교육 지속성에 대해 평가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신규 편성된 '과학관 육성정책 지원' 내역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나, 4개 기능의 분리 계상에 따른 항목별 규모 적정성 및 정책기획비 산출 근거의 구체성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개소당 산출 단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수혜자 규모 추정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추진·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정수급 관리 등 관리 적절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감액 및 사업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80% 수준임에도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배 증액되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한국과학관협회 위탁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사업비 대비 적정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과학관 전문인력 지원' 내역사업과 '과학관 콘텐츠 제작 및 전시지원' 내역사업에서 부정징후 의심사례는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수 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 구조상 상시 검증 체계의 지속적인 유지·강화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강화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예산 증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과학문화 만족도'와 '과학관 전문인력 지원 만족도'는 모두 수혜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정성적 만족도 지표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및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7조·제22조에 근거하여, 지역 과학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과학관 콘텐츠 제작 및 전시지원’ 내역사업은 ‘국립법인과학관’ 세부사업의 자체 전시운영과는 전시 콘텐츠의 제작·활용 측면에서 기능적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콘텐츠 주제 및 운영 방식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신규 편성된 ‘과학관 육성정책 지원’ 내역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나, 각 항목별 기능 경계의 명확성 및 정책기획비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 될 필요가 있어 지원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80% 수준임에도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배 증액되었으며, 개소당 1,000백만 원으로 설정된 산출단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수혜자 규모 추정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집행 가능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한편,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추진·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정수급 관리 등 관리 적절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어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내역사업은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80% 수준임에도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배 증액되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한국과학관협회 위탁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은 다수의 보조사업 운영·관리·점검·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 규모에 맞춰 비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부정징후 의심사례는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수 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시 검증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강화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26년 편성된 예산 증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과학문화 만족도'와 '과학관 전문인력 지원 만족도'는 모두 수혜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만족도 중심의 성과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제주)**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내용은 지역 정책기획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강화 등 사업취지에 부합하며 전달체계 및 예산 집행도 적절 ·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사업개선 및 예산 차등지원 필요성 지적받았으나 구체적 개선 조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제주) 중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의 지역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공통기준에서 지역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 - 향후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과 동일하게 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고려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은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 디지털 산업진흥 전략·계획 수립, 지역별 여건 및 경쟁력 분석 등 실태조사, 지역 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에 지원

- 사업 내용은 지역의 정책기획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공공성이 강한 지역별 정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지원이 타당함

○ 본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97% 이상으로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지자체 및 지역 SW진흥기관이 주관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 발굴과 현장 집행에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었음

○ 지역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불이행 이력 존재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참여·집행의 책임성 제고하고 있음

-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 집행 예방을 위해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등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

○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사업개선 및 예산 차등지원 필요성 지적받았으나 구체적 개선 조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제주) 세부사업에서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만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조사업 자체의 성과확인이 어려움

- 특히 제주지역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은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의 지역주도지디털혁신지원과 별도로 제주 계정에서 관리됨에도 지역단위 사업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

- 동일한 성격의 내역사업(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의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이 지역지원 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향후 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고려

○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며, 제주 및 세종에 대해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일부 사업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전략 수립 여부 및 활용도, 실태조사 결과 현황 및 정책 반영 여부, 네트워크 운영 성과 측면에서 일관된 성과지표 개발을 고려(만족도 조사 등 활용)

- 보조사업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성과를 차년도 예산배분 등에 연계하는 방안 등 검토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세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내용은 지역 정책기획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강화 등 사업취지에 부합하며 전달체계 및 예산 집행도 적절 ·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사업개선 및 예산 차등지원 필요성 지적받았으나 구체적 개선 조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세종) 중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의 지역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공통기준에서 지역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 - 향후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과 동일하게 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고려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은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 디지털 산업진흥 전략·계획 수립, 지역별 여건 및 경쟁력 분석 등 실태조사, 지역 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에 예산을 지원

- 사업 내용은 지역의 정책기획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공공성이 강한 지역별 정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지원이 타당함

○ 본 내역사업의 실집행률 100%로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지자체 및 지역 SW진흥기관이 주관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 발굴과 현장 집행에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었음

○ 지역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불이행 이력 존재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참여·집행의 책임성 제고하고 있음

-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 집행 예방을 위해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등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

○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사업개선 및 예산 차등지원 필요성 지적받았으나 구체적 개선 조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세종) 세부사업에서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만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조사업 자체의 성과확인이 어려움

- 특히 세종지역의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내역사업은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의 지역주도지디털혁신지원과 별도로 세종 계정에서 관리됨에도 지역단위 사업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

- 동일한 성격의 내역사업(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의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이 지역지원 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향후 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고려

○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며, 제주 및 세종에 대해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일부 사업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전략 수립 여부 및 활용도, 실태조사 결과 현황 및 정책 반영 여부, 네트워크 운영 성과 측면에서 일관된 성과지표 개발을 고려(만족도 조사 등 활용)

- 보조사업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성과를 차년도 예산배분 등에 연계하는 방안 등 검토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5G 특화망 확산을 목표로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돕는 재정 지원의 명분이 명확하며, 3개년 평균 97%의 높은 실집행률과 전담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부정수급 없는 투명한 운영 등 집행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단순 컨설팅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주파수 이용 현황, 양도·임대 실적, 전파간섭 중재 효율성 등 실질적인 질적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또한, 2022년부터 축적된 수혜 대상의 규모와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 지원

- 본 사업은 국정과제(20, 21)에 해당하는 'AI 3대 강국 도약' 및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 밀접한 국가 전략 사업임. 기존 통신사 중심의 망 구조에서 벗어나, 비(非)통신 기업도 자체적인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이음5G) 주파수 공급, 행정·기술 컨설팅, 전파간섭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특히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필수 기반 인프라로서 그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

○ 성과 지표의 질적 고도화 필요

-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집행 효율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사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적 보완 사항이 필요함

- 2022년부터 지속된 사업이므로, 최근 3년간 특화망 지원사업 수혜대상(행정·기술 컨설팅) 증가율은 연 10% 이상 지속 증가가 확인됨

- 5G 특화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제 주파수 활용도와 관리 효율성을 측정할 지표가 필요함

○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단순 컨설팅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주파수 이용 현황, 양도·임대 실적, 전파간섭 중재 효율성 등 실질적인 질적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해외IT지원센터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ICT 산업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ICT 분야에 특화된 해외 거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내 ICT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성과 지표 개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해외IT지원센터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일원화와 해외거점기관의 유기적 연계·협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개선과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ICT 분야에 특화된 해외 거점을 운영해 국내 ICT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신흥시장의 신규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ICT 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사업수행기관임

○ 본 사업은 ICT 분야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전략적 수출 지역에 특화센터를 운영, 국내 중소·중견 ICT기업의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거점 활용 인프라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관련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해가 있으며,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예산 규모가 매년 다름

- 예산 기획 시 센터별 입주 가능 기업 수 및 실제 입주 기업의 수, 임대료를 비롯해 센터가 위치한 국가별 환경 편차 등 센터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체계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

○ 2024년 국회의 지적사항처럼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 사업의 수행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좀더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성과지표의 경우 모두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성과지표 중 하나인 '해외진출 성공기업 수'의 경우 매출 발생, 현지법인 설립, 투자금 확보의 유무를 통해 성공기준을 판별하고 있음

- 해외IT센터 입주기업의 진출국가 대상 표준화된 수출실적 등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해외IT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이 산업통상부 산하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IT지원센터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일원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거점 운영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해외IT지원센터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 사업의 수행기관 일원화와 해외거점기관의 유기적 연계·협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개선과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데이터 활용·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 내역사업) - (재정사업 필요성)「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4조(가치평가), 제20조(품질관리), 제21조(표준계약서)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20(AI 3대 강국),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집행 효율성) 최근 3년간 실집행률 92.4%~96.1%(평균 94.4%)로 양호하며, 부정수급 적발 0건으로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달성도) '25년 성과지표(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만족도) 목표 80점 대비 실적 94.9점으로 118.6%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목표치가 실적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목표의 도전성이 부족하고,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5.7% 대폭 감액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규모를 고려한 지원 및 제도확산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기 반영사항) 본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1,067백만원으로 2025년(1,965백만원) 대비 45.7% 감액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제21조(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데이터 유통·거래 제도 운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과제 20(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23.1)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내용은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 기획·운영, 데이터 품질관리 제도 기획·운영,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유통·거래 제도 운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와 연계성이 적정함

- 본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1,067백만원으로 2025년(1,965백만원) 대비 45.7%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혜건수도 '24년 157건 → '25년 115건 → '26년 37건(예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100%이며, 실집행률은 '23년 92.4%, '24년 96.1%, '25년 94.6%로 3년 평균 94.4% 수준으로 양호하며,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보조사업 정산 후 적정하게 반납 처리되고 있음

○ 본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5년 기준 행정비용은 총 예산 대비 17.8%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e나라도움 부정징후모니터링, 자체 이행점검 및 회계점검, 외부회계법인 결산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0건임

○ 성과지표인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만족도'는 '25년 목표 80점 대비 실적 94.9점으로 118.6%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목표치가 실적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목표의 도전성이 부족하고,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5.7% 대폭 감액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규모를 고려한 지원 및 제도 확산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법적 근거,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등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개선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AI통합바우처**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인공지능 확산을 인프라 컴퓨팅과 바우처를 발급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 및 예산의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방법으로 컴퓨팅, 바우처를 분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클라우드서비스 보급, 확산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 중심의 클라우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바우처 사업은 AI 바우처와 데이터 바우처를 분리하고 있으나, 부처별 데이터 구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음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 내부적인 사업개선을 통하여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인공지능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고성능컴퓨팅 지원, 바우처 지원, 클라우드 보급,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방법으로 컴퓨팅, 바우처를 분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클라우드서비스 보급, 확산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 중심의 클라우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서 구축한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을 일반 기업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초기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지원 필요성: 바우처 사업 및 컴퓨팅 사업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개별 사업의 핵심 모듈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기 기대됨. 다만,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와 데이터사업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보조금 지급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시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기존 DB 관련 지식에 한정됨)

○ 유사중복: 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중복성이 없으나, 컴퓨팅지원 사업은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과 역할과 효과측면에서 중복이 되고 있음

- 민간센터 설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적으로 컴퓨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차별화 또는 연계하는 방안으로 개선 필요

○ 집행 적정성: 예산의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데이터 바우처의 경우 380억에서 55억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적정하나, 데이터 사업의 경우 작업자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단순한 업무의 연속이라 행정비용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25년 기준 총 교부액 38,467백만원 중 행정비용은 인건비 5,536백만원, 업무추진비 43백만원, 여비 41백만원, 자산취득비 55백만원

○ 환류 및 개선노력: 바우처 사업의 경우 다양한 부정수급 또는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 관리 및 정상적인 집행에 대한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평가 방식 또는 관리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은 국가에서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세부사업인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정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평가 대상 보조사업은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사업 중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 내역사업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동향 조사 및 분석을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데이터 산업동향 조사 및 분석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예산 외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하기도 어려움

○ 본 보조사업은 적정한 내용과 체계로 추진중임

-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은 국가에서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관련된 내용으로 간접 수혜대상이 광범위하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산업동향 조사분석 사업으로서 100% 보조율 적용이 타당함

○ 본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사업 추진·전달체계,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의 실집행률은 '24년 92.0%, '25년 91.2%이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됨

○ 세부사업 성과를 정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인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와 데이터 종합 품질은 데이터산업동향분석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세부사업이 정책목표인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정량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결과지향의 새로운 정량지표는 성과지표로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은 국가에서 데이터경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세부사업인 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정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디지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사업은 법정·국가승인통계 생산을 통해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통계자료의 정책 반영, 산업·연구·규제/제도 개선 활용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사업개선으로 판단함 - 통계자료가 정책 수립, 산업 분석, 연구 활용, 규제 집행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활용성과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를 구분한 수혜 구조와 가치 전달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디지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사업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시장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기초통계 성격이 강하고, 공공영역에서의 통계 생산 및 공개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통계자료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해당 통계가 규제 집행, 제도 개선, 산업정책 수립 등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와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디지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사업은 정책연구, 전략 수립, 방송산업 분석, 공정경쟁 및 품질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직접 수혜자(정책기관·산업 관계자·연구자 등)와 간접 수혜자(일반 국민)를 구분하고, 인용 실적, 보고서 조회수, 정책 반영 사례 등 실제 활용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집행 효율성) 보조금 교부 전 심사 - 사업 점검 - 정산 및 환류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방송통신광고비조사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책 활용 목적의 국가통계 생산 사업으로, 성과지표가 통계의 품질 및 활용과 직접 연계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적인 성과 달성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통계자료가 국정과제인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산업 측면의 활용 성과, 연구 측면의 분석 기여도, 규제·제도 측면의 개선 및 집행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현재의 만족도·표본확보 중심 지표만으로는 국정과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계자료가 미디어 산업 규제·제도 개선, 정책 및 지원사업 설계 등에 활용될 가능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반영 사례가 명시적으로 관리·제시되지 않아 국정과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해당 사업은 실증지원의 필요성과 일부 성과는 인정되나, 과제 선정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개선으로 판단함 - 실증사업 신청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감소로 실제 선정 과제 수와 수혜기업 수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후속 사업화 가능성, 정책 부합성, 공공서비스 연계성,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실증사업 종료 후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계획과 최종평가 및 사후조사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성과지표가 실증 건수와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계약, KC 인증, 특허 출원, 서비스 적용 등 사업화·확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은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전 현장 실증 및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비면허 주파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기술 확산 측면에서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은 신청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감소로 실제 선정 및 지원 과제 수는 축소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수요 부족보다 제한된 재원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한정 재원은 후속 사업화 가능성, 정책효과,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집행 효율성) 해당 사업은 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서 e-나라도움 및 PIMS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전담기관 현장점검, 수행기관 자체감사, 외부위원회 평가(상·하반기), 회계법인 점검 및 회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점검 체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구축·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증사업 종료 이후 기업의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를 사업 수행계획서와 최종평가, 사업종료 후 사후조사에 반영하여 실증성과가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전파음영지역에서 안전 서비스 실증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했고, 불법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 모니터링·차단 등 이용자 보호 성과도 제시하여 국민 안전·편익 측면 성과를 나타냄

- 다만, 기존 성과지표는 실증 건수와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용화·확산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해당 지표가 실제 국내외 계약, KC 인증, 특허 출원, 서비스 적용 등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모 안내서와 평가기준에 국민 안전, 지역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 요소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공공성 판단 기준과 배점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 감액을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연계성이 낮고 유사·중복 기능이 존재하여 구조적 정비가 필요함 - 다기관 분산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음 - 성과지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 강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도입 당시에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와 민간 시장의 성장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직접 보조·운영 중심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초기 시장 형성 및 제도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예산의 지속 감액과 사업내용 조정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상대적 하락을 시사함

- 특히 기업데이터 허브 제공, API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일부 기능은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사업과 유사·중복 소지가 있어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연계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수단 역시 컨설팅·인프라 운영 및 이용 편의 제공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의 직접적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성과지표 또한 만족도, 이용건수 등 단순 투입·산출 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데이터 바우처 단가가 연도별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실집행률 또한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3개 전담기관으로 분산된 전달체계는 행정비용 증가 및 사업 간 시너지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리 주체의 일원화 검토가 필요함

- 부정징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사업 간 중복 가능성, 집행 부진, 성과지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 구조의 전면 유지보다는 감액을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학생건강지원강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어린이집 확충
지역인재육성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혁신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대입전형 운영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사업관리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장애학생교육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중 사업지원 및 관리비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 운영 사업을 통합하고 집행률이 낮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내 대학자율 및 인식개선사업에서는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함 - 두 사업 모두 대학교육협의회 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고유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관리비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에 따른 예산인데,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의 역량을 높여 이 부분의 예산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대학자율 및 인식개선사업은 현재 방식은 폐지하고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대학 현장에서 돕는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통상 장애인 교육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대학 당국이 자발적으로 이 추가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이 재정과 함께 고등교육에서 장애인 정책을 관리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을 각 대학이 수행하는 부분과 대교협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운영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2024년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개설 및 지정된 대학교육협의회 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동 조직은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관리비용 역시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행정업무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애인고등교육지원 운영과 통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관리비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각 대학의 역량을 높여 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내에 포함된 대학자율 및 인식개선사업의 경우 낮은 집행률을 고려한 현재 방식 폐지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적절히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학자율 및 인식개선사업의 경우 2023년의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후에 개선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 실집행률이 90%를 넘지 못하였음 (2024년 약 79%)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학생건강지원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학생 마음 건강과 관련한 정부 전체의 역할 중 정책 및 진단을 맡은 부분으로 이 사업만을 따로 떼어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생과 교사 정신건강 관리 역량이 높아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생 정신건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하는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역할과 책무를 평가하는 역할도 본 사업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학생 마음 건강과 관련한 정부 전체의 역할 중 정책 및 진단을 맡은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 사업만을 따로 떼어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생과 교사 정신건강 관리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 관등 련 주체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 및 교사의 정신 건강 진단과 분석, 현장의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콘텐츠 작성과 컨설팅 등 센터의 역량 제고라는 사업의 질적 고도화에 노력하되, 본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 확대는 자제하고 실제적인 학생들의 사후 관리 등에 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학생 정신건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하는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역할과 책무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지원 보조금은 전체 운영비 중 교육부 담당부분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와 교육현장 변화 사례 등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사업 중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를 위한 교육부 예산이 대상이 되고 있음

-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사업 총예산 13.8억 중 교육부가 지출하는 2.6억원이 본 보조금에 해당함

- 교육부의 예산은 홍보관 및 세미나장 임차·구축, 개막식 및 에듀텍 활용 사례 발표 운영비, 사업관리비 증을 포함함

구분	주요내용	'25년 사업예산(백만원)			
		수입		지출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사업	- 교육부 정부예산	260	-	260	-
	- 산업부 정부예산	220	-	220	-
민간사업	- 민간기업 유료부스 참가비	-	900	-	900
소계(백만원)		1,380		1,380	

구분	주요내용	총금액 (정부+민간)	정부예산		민간예산
			교육부	산업부	
정부정책관	- 교육부(15부스), 산업부(8부스) 홍보관 임차/조성/운영	153	85	68	-
아레나(세미나)	- 아레나(세미나장) 2개소 임차/조성/운영	50	15	15	20
교육부 부대행사	- 개막식, 학교-기업 상담, 에듀테크 활용 사례 발표 등	29	29		-
산업부 부대행사	- 개막식, 비즈모델 공모전, 수출상담회, 스타트업 허브 홍보관, AI활용 에듀테크 경진대회	42		42	-
홍보/인쇄/기타	- 해외기업/기관 부스 지원, 홍보(온오프라인)	9		9	
	- 미디어후원, 홍보(온오프라인-정부예산 부족분), 브로셔, 포스터, 리플렛, 홈페이지, 서포터즈 운영비 등	87			87
행사장 조성 및 운영비	- 부대행사(교육부 글로벌 아레나, 콘테스트, 에듀테크 활용 사례 발표 등), 전문가 수당, 조달 입찰/회계검증 사업 관리비 등	217	131	86	
	- 부대행사 지원(아레나 2 구축, 경진대회 운영 등), 등록시스템 운영, 현장 사무국 운영, 전기/인터넷/사인물, 영상/사진, 페어 앱 개발, 통역/운영요원/경비 인력, 수수료, 기타비용	247			247
전시장임대료	- 정부임차 제외, 코엑스 A홀 행사장 임차비 잔액	188			188
부스장치비	- 민간기업 조립부스/프리미엄부스, 비즈니스 라운지, 휴게공간, 프레스룸 등 시공비	358			358
소계(백만원)		1,380	260	220	900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 등 5개 영역의 5년간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질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수혜규모는 충분함 · 실집행률은 ('23년) 59.5%, ('24년) 85.5%, ('25) 92.7%로, '24년, '25년은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함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및 현장점검(연2회) 실시로 부정수급 등 집행점검을 내실화한 결과,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교육부 자율평가에서 ('23년) 보통, ('24년) 보통, ('25) 우수를 받고, 지적사항은 없음 · 현재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지표 설정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주기별 평가, 평가기준 수립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후 질 관리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조사업의 수행주체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비목은 적절치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 등 5개 영역의 5년간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질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수혜규모는 충분함

○ 실집행률은 ('23년) 59.5%, ('24년) 85.5%, ('25) 92.7%임. '22년의 경우, 국회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교(조건부 불인증 13교, 한시적불인증 3교) 중 2교가 재평가를 받아 배정된 예산 상당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24년, '25년은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함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및 현장점검(연2회) 실시로 부정수급 등 집행점검을 내실화한 결과,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교육부 자율평가 결과는 ('23년) 보통, ('24년) 보통, ('25) 우수를 받고,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국회에서 ´22년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교(조건부 불인증 13교, 한시적불인증 3교) 중 2교만 재평가 받아 배정된 예산 상당액의 불용을 지적받고, 평가 내실화, 후속처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

○ 현재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나,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성과지표 부재로 사업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6년 예산 규모가 2억 미만 사업(1억 9천)으로, 국가지정센터의 '진로현황조사' 비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예산 규모는 국가단위의 진로 현황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준으로 판단됨 · '진로교육 현황조사' 단일 사업인 만큼, 현황조사로부터 도출된 통계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 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며 타당성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점은 인정되나 통계자료 이용 수를 단순 현황조사 원자료 다운로드 수로 산정하고 있어 사업달성도가 명확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운로드 시 활용 목적 수집 기능 도입이나 주요 인용 및 정책 활용 사례 별도 수록 등 보완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측정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진로교육법에 따라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정 과제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정책적 지원 타당성이 있음

○ 국가 단위의 진로교육센터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 데이터 생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음

-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된 현황 데이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목적이 크므로, 민간 자본 등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공 영역으로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정책개발,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진로교육 현황조사 단일 사업으로 예산과 사업내용이 축소된 상황임(예산 35.2% 삭감)

○ 수혜자로 전국 초중등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교육 관계자가 설정되어 있는 점이 타당하며, 현재 및 예상 수혜자 규모가 높아 재정 수요 대비 지원 규모가 적절하게 산출되었으며, 후생효과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 100%로 양호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관리 절차와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국가진로교육센터에 대해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환류 및 조치사항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이 적정함

○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점은 인정되나 통계자료 이용 수를 단순 현황조사 원자료 다운로드 수로 산정하고 있어 사업달성도가 명확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운로드 시 활용 목적 수집 기능 도입이나 주요 인용 및 정책 활용 사례 별도 수록 등 보완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측정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본 사업 성과지표(도시 수, 만족도)는 단순지표로는 성과 달성이 불명확하며, 성과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장애 유형, 지역, 프로그램 유형 등 세부 변인별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 방향도 분명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일률적인 보조금 대응 투자율(50%)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를 통해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적정해 보임.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자체 예산 투입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성과 관리 개선이 필요함

-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효율성은 적정한 반면,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목표 달성치가 단순 성과지표 적용으로 인해 성과달성도가 불분명함

- 참여 도시 수, 만족도와 같은 단순 성과지표 달성률로는 성과달성도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도시유형, 프로그램 유형 등 세부유형(사업변인)별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어떤 도시유형, 어떤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업 성과 달성도가 높은지/낮은지 점검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 될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전, 후의 참여자 수 비교를 통해 사업 예산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수, 운영실적 등의 증가로 장애인 학습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공식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사업의 우수성, 성과 달성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 투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유사 사업간 연계화 계획을 구체화, 정교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 및 예산을 효율화할 것을 권고드림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국정 과제와의 높은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 전반적으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제1항,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101-4-3 고등·평생교육지원확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장애인이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정합성이 높음

○ 장애인 평생교육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민간투자 유치가 낮아 자율 공급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 교육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해, 민간 자본 유치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지원, 규제·제도 개선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지원이 필요함

○ 현행 보조율 및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율 50%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유사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이율은 50%로, 본 사업과 동일하게 보조율 성정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 투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운영 조정이 필요함

○ 최근 2년간 집행률 각각 99.2%('24), 98.8%('25)로 양호하며,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관리 절차와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환류 및 개선노력도 시의성있게 적정하게 이루어짐

-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 1차 교부후 지자체 운영 현황 점검을 강화하여 2차 교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개선이 이루어짐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회계기간 정상화 차원)에서 감액이 필요함. 이외에도 실집행률 불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임에도 일부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함 - 사업기간(25년 1월 ~ 26년 4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계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집행 소요만 산정하여 감액 편성이 필요함 - 국비 매칭 비율 변화의 사유로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2024년), 2023년부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5년의 경우 남은 사업기간(2026년 4월 종료)을 고려해 보더라도 실집행액 수준이 높지 않아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예산 추계와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가 목표이나, 지자체 선발 요건상 일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지표 또한 운영기관 수로 단순 관리 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중심 사업으로 운영이 필요하며, 선정 결과 또한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통해 확인,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의 실제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현재는 성과관리가 단순 기관 수로 카운팅되고 있어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하며, 취약 참여 유인책 설계를 중심으로 사업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비 매칭비율이 유사 사업 대비 높다는 측면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근(2025년)에 100% 국비 지원 구조에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책은 조속히 마련하되,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국비 매칭 비율 조정안 마련 등)

□ 종합평가 의견

○ 감액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회계 기간에 맞추어 예산 산정 정상화 차원)에서 감액으로 평가함. 이외에도 실집행률 불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취약계층 중심 사업임에도 일반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함

○ 사업기간(25년 1월~26년 4월)이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계 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집행 소요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감액이 필요함. 회계 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예산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정상화 차원의 감액편성이 필요함.

○ 국비 매칭비율 변화로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2024년), 2023년부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5년의 경우 남은 사업기간(2026년 4월 종료)을 고려해 보더라도 실집행액 수준이 높지 않아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예산 추계와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지자체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의 수혜자 선발 요건과 성과관리 체계로는 저소득 등 취약계층 사업 성과 달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선발 요건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정비를 통한 사업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함. 본 사업의 핵심은 '정책목표로 제시한 저소득층의 최소 5% 수준 지원(약 18만명)'을 위해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발요건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지자체별 선정 기준 및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취약계층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는 성과관리가 단순 기관 수로 카운팅되고 있어 문제시 되며, 사업의 실제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보조율은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수준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 70%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정. 유사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비율은 50%로,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과 동일하게 보조율 조정이 필요함

- 단, 100% 국비 지원 구조에서 최근에(2025년)부터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책은 조속히 마련하되, 연도별 연착륙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국비 매칭 비율 조정안 마련 등)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개선 - 소규모 사업에서 4개의 거점기관 지원을 유지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화하거나 거점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해당 예산 규모(21백만원)를 고려하여 사업 개선으로 평가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부족한 네트워크 활성화 내내역사업을 폐지한 점은 적정한 반면, 보조율 산정 근거 제시, 검정고시 수요층 변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성과관리 지표가 만족도와 같은 반응도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정고시 수료율, 합격률, 교수학습자료 활용률 등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가 미미한 상황(2025년 815명)에서 교육기관(40개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인 평생교육사업(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등)에 통합하여 지자체별 수요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개선

- 소규모 사업에서 4개의 거점기관 지원을 유지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화하거나 거점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해당 예산액(21백만원)은 총액 대비 예산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사업 개선으로 평가함

-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가 미미한 상황(2025년 815명)에서 전국 단위로 교육기관(40개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인 평생교육사업(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등)에 통합하여 지자체별 수요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을 폐지한 점은 적정한 반면, 보조율 산정 근거 제시, 검정고시 수요층 변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성과관리 지표가 만족도와 같은 반응도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정고시 수료율, 합격률, 교수학습자료 활용률 등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고령학습자들의 학력 보완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평생교육법에 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정 과제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정책적 지원 타당성이 있음

-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학력보완에 대한 국가적 책무 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됨

○ 2개 내역사업(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검정고시 제도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검정고시 운영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검정고시 제도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 상담센터 운영, 검정고시 교강사 연수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수혜자로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학습자와, (직무 연수/워크숍 참여대상인) 검정고시 관계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타당하며, 현재 및 예상 수혜자 규모 대비 지원 규모가 적절하게 산출되었으며, 후생효과는 판단됨

- 수혜자로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학습자와, (직무 연수/워크숍 참여대상인) 검정고시 관계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 후생효과는 인정되나, 소규모 사업에서 거점기관(4개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거점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 100% 설정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기준 보조율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로. 유사사업의 보조율 검토 등 보조율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9~100%로 양호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환류 및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진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 선정 시기를 제도적으로 단축하였으며,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 점이 적정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내내역사업을 24년도 폐지하여 일정 수준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사안(성과지표 개선, 기준 보조율 제시, 검정고시 수요층 변화 조사 등)에 대한 개선 실적이 확인 불가하거나 시행을 위한 준비 중으로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 규모와 비용 지원 구조,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함 - 소수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집중 투입되는 비용 지원 구조로는 국고 보조금 투입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규제 완화 등)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구조 전환이 필요함 - 프로그램 지원비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거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단일 지표인 '평생학습참여 후 사회환원활동(재능기부, 자원봉사) 참여자 수'로, 정책 목표의 직접적 성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격차 해소와 관련된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특히, 비용 지원(프로그램 비용)이 소수 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만큼, 이러한 지원책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 재정 지원 외에도 참여 유인책 설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종합평가 의견

○ 사업개선

-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 규모와 비용 지원 구조, 성과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소수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집중 투입되는 비용 지원 구조(예산설명서, 25년 12개, 26년 9개)로는 국고 보조금 투입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지원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거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단일 지표인 '평생학습참여 후 사회환원활동(재능기부, 자원봉사) 참여자수'로, 정책 목표의 직접적 성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격차 해소와 관련된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특히, 비용 지원(프로그램 비용)이 소수 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지원책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 지자체와 그 외의 지자체간의 비교 분석,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등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 외에도 참여 유인책 설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폐지될 경우에도 지자체의 평생교육 서비스는 주요 사무인만큼 계속될 것이나, 서비스 규모가 줄어들거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준보조율이 50%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정되었으나,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영역(평생교육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평생교육 활성화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성,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국비 보조율은 진흥 차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편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2026년도의 경우 9개 지자체 선발 예정)

- 아울러,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기준을 수립(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금 설정)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성과 지표 및 관리 방식 개선

- 성과지표가 단일 지표인 ‘평생학습참여 후 사회환원활동(재능기부, 자원봉사) 참여자 수’로, 정책 목표의 직접적 성과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격차 해소와 관련된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특히, 비용 지원(프로그램 비용)이 소수 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만큼, 이러한 지원책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 지자체와 그 외의 지자체간의 비교 분석,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등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 의무를 다하며 민족정체성을 갖춘 재외동포(재외국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교육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특히 지역 편차에 관해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 의무를 다하며 민족정체성을 갖춘 재외동포(재외국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교육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또한 국내 동급의 학교 교육에 비해 부실하지 않은지, 지역별 편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만족도 평균뿐 아니라 도출되는 표준 편차도 성과지표로 관리)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해외 한국어 보급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 수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질직인 성과 측면을 파악하여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어반이 개설된 국가나 대입시험 과목이 있는 경우 시험에서 한국어 선택자 수를 파악하고, 한국어 자격시험의 지원자와 합격자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성취 등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교원의 해외 파견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뚜렷한 목표를 지녔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 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함 - 현재의 2단계 대신 국립국제교육원이 보조사업자가 되거나 교육부가 직접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단일 단계 운영 방식을 선택			

□ 종합평가 의견

○ 한국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지한 인맥 네트워크를 두텁게 하려는 사업 목표는 뚜렷하며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 수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과 측면을 파악하여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어반이 개설된 국가나 대입 시험 과목이 있는 경우 시험에서 한국어 선택자 수를 파악하고, 한국어 자격시험의 지원자와 합격자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성취 등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교원의 해외 파견 사업의 경우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뚜렷한 목표를 지닌 사업이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보조사업의 사업의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조사업자로 이어지는 2단계 추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국립국제교육원이 보조사업자가 되거나 교육부가 직접 공모하는 방식 중 더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보조사업은 여러 내역 사업을 포함하며, 내역사업 내에서도 많은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사업의 체계를 성과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초보고서 상에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성과지표였던 국가간 교육협력 약정 체결 실적 건수는 성과지표로 볼 수 없음 - 교육교류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와 사업 운영이 필요함 · 학교 회계연도와 예산 회계연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예산회계연도 실집행률이 낮은 현상을 보이는 ASEAN 교육협력사업, CAMPUS Asia 사업,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여러 내역 사업을 포함하며, 내역사업 내에서도 많은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사업의 체계를 성과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초보고서 상에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성과지표였던 국가간 교육협력 약정 체결 실적 건수는 성과지표로 볼 수 없음

- 교육교류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와 사업운영이 필요함

○ 실집행률이 90% 미만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는 ASEAN 교육협력사업(2024년 84.4%, 2025년 확인 필요), CAMPUS Asia 사업(2024년 78%, 2025년 69%),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2025년 79%) 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개선이 필요함

- 이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다음해 1~2월에 집행되는 예산이 포함되면 100%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회계와 학교 회계 간 차이를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교육 협력을 통한 디지털·AI 역량 강화라는 국정 과제와 연계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연계성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교육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캠퍼스의 유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존재하지 않음

- 적지 않은 나라에서 2020년 대비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중복 이용자 등을 고려한 수치인지도 분명치 않음

- 콘텐츠의 질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학위 과정이나 타 국제교류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중단 시 국제 협력 약속 이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성과에 대한 파악을 근거로 또 다른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교류 위주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UNESCO UNITWIN 사업의 경우, ODA 사업 내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ODA 내의 유사중복은 없이 관리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사업 집행 주체인 대학 간 재정지원 규모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음 - 사업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학교 간 재정지원액에서 연간 10배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나며, 성과 평가 자료는 보고서 중심으로 확인되나,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공동연구 성과 등 다양한 성과자료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브릿지 2단계 사업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교육소외계층의 비형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학교 밖 아동·청소년, 성인 비문해자 등) 대상 교육기본권 보장 사업으로서 수혜국가 및 수혜받는 이들의 구성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인정됨			

□ 종합평가 의견

○ UNESCO UNITWIN 사업의 경우, ODA 사업 내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ODA 내의 유사중복은 없이 관리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사업 집행 주체인 대학 간 재정지원 규모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음

- 사업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학교 간 재정지원액에서 연간 10배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나며, 성과 평가 자료는 보고서 중심으로 확인되나,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공동연구 성과 등 다양한 성과자료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브릿지 2단계 사업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교육소외계층의 비형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음

- 취약계층(학교 밖 아동·청소년, 성인 비문해자 등) 대상 교육기본권 보장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인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차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책임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 - 최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도입되었으나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음 · 특수 외국어 사업으로 인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나 이들을 통한 교류 확대로 인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함 · AI 등을 활용하고 특수외국어 원어민들을 이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일반적인 수요는 많지 않으나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소수이지만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 접근을 돕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고 민간 영역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정부 재정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수외국어 학과를 많이 보유한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설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성과와 더 밀접히 연관된 사업 운영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대가 필요함

- 수강자 수나 장학금 수혜자 수 등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특수외국어 전문가들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

- 2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10% 미만으로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부담 확대가 필요함

○ 특수외국어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성과 지향적인 운영이 요구됨

- 법에 지정된 53개 모든 특수외국어에 대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진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수 외국어에 대한 수요는 여러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언어부터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 외의 전문가나 출신국의 언어 사용자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I 등의 활용을 통해 국내외의 특수외국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재설계 체계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실집행률 저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회계 기간 정상화 차원)에서 감액으로 평가함 - 제도 변경(일괄지급에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순차적 지급)에 따른 실제 수혜 대상 규모 및 지급 시점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수요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그간의 장려금 지급 데이터, 직업계고 졸업자 규모, 취업자 수 추이 등을 기반으로 적정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감액이 필요함. 아울러, 사업기간(25년 3월~26년 5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계 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집행 소요만 산정하는 방향으로 감액 편성이 필요함 - 사업운영구조 변경에 따른 실집행액 부진 측면 관련하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점검 강화 등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장려금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로 사업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 취업유지율 등을 성과 관리 지표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전체 직업계고 학생들과의 비교 관점에서 성과달성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취업연계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문제가 2024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부터 지적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종합평가 의견

○ 감액 :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회계 기간 정상화 차원)에서 감액으로 평가함

- 사업기간(25년 3월~26년 5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계 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집행 소요만 산정하는 방향으로 감액 편성이 필요함

- 사업운영구조 변경에 따라 실집행액 부진 문제 관련하여,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한 예산 산정, 예산 점검 강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장려금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로 사업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 취업유지율 등을 성과 관리 지표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전체 직업계고 학생들과의 비교 관점에서 성과 달성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장려금, 현장실습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국정 과제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내역사업 중 취업연계 장려금에 대한 재정 지원(민간경상보조)의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문제시 됨.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에게 직접적 장려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움.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이나 직업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동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훈련 촉진법에서 지원하는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취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취업연계 장려금은 국고보조율 100%, 현장실습은 국고보조율 50%(지방교부금 50%)로 이루어지며,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보조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제도 변경(일괄지급에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순차적 지급)에 따른 실제 수혜 대상 규모 및 지급 시점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수요 추계가 필요하며, 그간의 장려금 지급 데이터, 직업계고 졸업자 규모, 취업자 수 추이 등을 기반으로 적정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세부사업과의 통합을 통하여 사업 성과제고 및 운영효율화가 필요함. 두 사업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중앙과 거점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사업성과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간 통합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고용부 등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도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 성과지표가 성과달성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함
- 일자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건수를 제시한 점은 인정되나, 협약이 갖는 제한성으로 일자리 발굴, 취업 매칭 등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약을 통한 일자리 발굴, 매칭 건수와 같은 직접적 지표로 재설계가 필요함
- 고졸자 취업 연계 실적 또한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정성적 측면의 지표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서비스 지원의 목적이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 관리가 필요함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정상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통합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중앙과 거점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사업성과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간 통합이 필요함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일자리 발굴 등)가 실제 교육현장에 이식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완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고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 등 타부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성과지표가 성과달성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함

- 일자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건수를 제시한 점은 인정되나, 협약이 갖는 제한성으로 일자리 발굴, 취업 매칭 등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약을 통한 일자리 발굴, 매칭 건수와 같은 직접적 지표로 재설계가 필요함

- 고졸자 취업 연계 실적 또한 취업의 양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정성적 측면의 지표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서비스 지원의 목적이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 관리가 필요함

○ 중앙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졸 현장 실습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명확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졸 청년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의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취업현황 관리, 모니터링 등 중앙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필요성이 존재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동 사업이 고졸 취업 지원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졸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필요하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본 사업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취업 취약계층인 고졸 청년으로 명확히 타겟팅된 사업은 유일하며, 본 사업의 핵심은 지역 단위의 취업지원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있다고 볼 때 유사 중복 문제는 없음

-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고용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경쟁력 및 차별성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18개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과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지원, 현장실습 지원,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보조율 100%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조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업기간('25.3~'26.2)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당해년도 집행소요를 중심으로 예산 추계 및 집행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집행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정상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회계기간 정상화 차원)에서 감액이 필요함 - 현장실습의 안전 강화, 학습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현장교사 배치를 늘려나가 기업현장교사의 1:1 지도를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기업현장교사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아님은 인정됨. 사업기간('25.3~'26.5)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간 산정이나,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회계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집행 소요만 산정하여 감액 편성이 필요함 - 2026년도 수당 지급분 반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현장실습 운영 기간과 예산 집행 시점 간 차이로 발생한 일시적 정산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예산 추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수라는 산출 지표 성격의 지표로 사업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 발굴 수를 산업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학생들 전공 부합성, 접근성 달성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원금 지급 기업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현장실습의 안전 강화, 학습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현장교사 배치를 늘려나가 기업현장교사의 1:1 지도를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기업현장교사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아님은 인정됨. 다만, 사업기간('25.3~'26.5)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간 산정이나,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 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회계기간 정상화가 필요함. 회계 기간에 맞추어 당해연도 예산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정상화 차원의 감액편성이 필요함

- 2026년도 수당 지급분 반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현장실습 운영 기간과 예산 집행 시점 간 차이로 발생한 일시적 정산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예산 추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현장실습 기업 발굴수라는 산출 지표 성격의 지표로 사업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 발굴 수를 산업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학생들 전공 부합성, 접근성 달성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원금 지급 기업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 필요함

○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무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안전하며 전문적인 현장실습처(기업)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기업현장교사에게 지원금 지원을 통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보호·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청년특별대책이라는 국정 과제와 연계지점이 있으며 재정지원이 필요함

○ 국가 정책으로 명시한 '청년특별대책' 일환이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며 전문적인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임. 참여기업 현장교사에게 교육비 일부를 보존해 주는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현장교사의 책임성 강화가 가능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취업연계 장려금은 국고보조율 100%로 이루어지며 공익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조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문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기준수립이 이루어지며, 교부된 예산으로 심사, 지급 등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환류 및 개선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신설, 실습처 확보 등 다양한 현장실습 지원책을 시행하여 환류 및 개선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수치적으로 초과 달성한 점은 인정되나, 현장실습 기업 발굴 수는 산출 지표 성격이 강해 사업 목표 달성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정책 목표는 직업계고 재학생의 현장실무 역량 확보와 안전한 실습 교육 참여에 있는 만큼, 산업분야별 다양한 현장실습처 발굴이 필요하며, 안전 문제 발생 건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과의 통합를 통하여 사업 성과 제고 및 운영 효율화가 필요함.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중앙과 거점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사업성과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간 통합이 필요함. 이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 확보, 전달체계 완비로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부 등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도 확고해질 것임
-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지적되었던 한국장학재단 운영비 중복 지원 문제(50백만원) 관련, 2026년도 사업비로 투입하여 문제를 해소한 점은 적정함
- 성과지표가 성과달성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함. 취업실적의 경우, 취업의 양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정성적 측면의 지표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서비스 지원의 목적이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함. 아울러, 거점 학교별 취업률 상승치를 합산하여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성과지표 설계를 통해, 취업지원센터별(거점별) 책무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정상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거점학교 취업지원센터의 시행기관이 한국장학재단이며, 거점학교 취업지원센터 사업 운영과 한국장학재단에 설치된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간 관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사업운영 성과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 성과(일자리 발굴 등)가 본 사업에 이식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완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문화, 고도화, 더 나아가 고용부 등 타부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지적되었던 한국장학재단 운영비 중복 지원 문제(50백만원) 관련 2026년도 사업비로 투입하여 문제를 해소한 점은 적정함

- 성과지표가 성과달성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함. 취업실적의 경우, 취업의 양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정성적 측면의 지표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서비스 지원의 목적이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함. 아울러, 거점 학교별 취업률 상승치를 합산하는 방식의 성과지표 설계를 통해, 취업지원센터별(거점별) 책무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고졸 청년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단위로 거점학교(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개교당 1억원), 진로미결정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기 전, 청년에게 친근감 있는 출신모교나 인근 직업계고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쉬었음 청년증가가 국가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의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자체의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졸 청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큼

○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직업계고 미취업·진로미결정 졸업생들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

스를 실시하는 사업 내용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촉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여짐

○ [보조사업] 현행 보조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진로미결정 졸업생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조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법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한국장학재단'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평가 절차, 사업점검,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사업 수행 중 전체 학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포함), 사업 추진 및 점검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중앙과 거점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사업 성과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통합을 통한 사업 정비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지적되었던 한국장학재단 운영비 중복 지원 문제(50백만원) 관련 2026년도 사업비로 투입하여 문제를 해소한 점은 적정함

- 사업기간('25.3~'26.2)은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당해년도 집행소요를 중심으로 예산 추계 및 집행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분 중심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정상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수료율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이 소극적이며, 취업 성과 또한 단순 취업률만 제시하고 있어, 지표 및 목표치 재설계가 필요함.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특성상 수료율이 통산 93%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025년도 목표치(85%) 설계는 성과 달성도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균 수료율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정책 목표가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로 설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단위사업 내 현장실습 사업(현장실습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 유사 사업들과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비교적 관점의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맥락에서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함 - 동 사업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1,2학년 대상 신규 사업에서도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계고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활동들과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방식을 전문화, 체계화하는 등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 개선

- 수료율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이 소극적이며, 취업 성과 또한 단순 취업률만 관리하고 있어, 지표 및 목표치 재설계가 필요함.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특성상 수료율이 통산 93%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025년도 목표치(85%) 설계는 성과 달성도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균 수료율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정책 목표가 직업계고 청년들의 직업 정착에 있는 만큼, 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또는 취업유지율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로 설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단위사업 내 현장실습 사업(현장실습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 유사 사업들과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비교적 관점의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맥락에서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함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지원금, 사전직무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체된 직업계고 취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산업·신기술 분야 취업 촉진이라는 공익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음

○ 직업계고 청년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무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빠른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신산업, 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생 선호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컨설팅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사업은 청년고용 문제 대응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지점이 있으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위사업내 현장실습 관련 사업(현장실습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과 유사하나, 본 사업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선택하지 않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복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청년특별대책' 및 공약 중 채용연계 제도 확산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내용이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지원 서비스(컨설팅) 실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은 민간보조로 국비, 지방비 각각 5:5 정률 대응투자방식으로 보조율은 100%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조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3년도 집행부진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시도교육청과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24년도의 경우 실집행률을 91.1%로 끌어올렸으며, 25년도 역시 94.5%의 개선된 집행 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 보조금법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대한상공회의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시행계획 및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이 이루어지며, 교부된 예산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음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부정수급 관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환류 및 개선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사업관리 개선 활동을 통해 실집행률 상승과 취업연계율 상승 등의 성과를 창출한 점이 적정함. 아울러, 2024년 훈련수당 용어에 대한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지원금'으로 변경 조치한 점이 적정함

○ 본 사업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1,2학년 대상 신규 사업에서도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계고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비교과활동들과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방식을 전문화, 체계화하는 등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년 모두 100%이하임. 동일 사유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이행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최근 2년간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최근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측면에서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주요 정책과 연관성이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교육기본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러닝산업법」 등에서 교육정보화 및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범위와 국가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내용은 상위계획 등과 부합하고, 사업목표과 사업내용 간에 연계성·정합성이 있음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낙찰차액 반납에 따라 23년 99.6%, 24년 96.7%, 25년 99.5%로 모두 100% 이하이고, 매년 동일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국외출장 축소 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비용 절감하는 등 예산 집행 적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보조금 적정 교부,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설정하여 준수하는 등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등 보조금을 적정관리함. 다만, 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이행,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측면에서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최근 2년에는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함

○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와 성과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어린이집 확충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필요성은 크지만 공공보육 이용률이 이미 높고 유보통합 등 구조 변화 속에서 단순 시설 확충을 계속할 우선순위는 낮아 구조조정·질 관리 중심 전환이 요구됨 · 최근 수년간 수요 과다 추계와 집행부진, 대규모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어 의무·취약지역 중심 최소 물량만 유지하고 신축·장기임차 등 고단가 유형과 전체 예산은 추가 감액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목표를 초과하지만 이미 포화 수준에 근접하고 지역 격차 우려도 존재하므로, 단순 목표치 달성이 아닌 지역·대상 선별, 1인당·1개소당 편익 분석, 유보통합 이후 재설계를 전제로 한 일시적 축소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종합평가 의견

○ 저출생 대응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상위계획 정합성은 인정되나, 공공보육 이용률이 이미 목표에 근접한 장기 계속사업인 만큼, 추가 확충보다는 구조조정·질 관리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 최근 집행부진·과다 추계를 인정하고 감액한 점은 과거 과다편성을 시사하며, 저출생·수요 감소·공동주택 리모델링 중심 전환을 감안할 때, 국·지방비 매칭은 유지하되 개소수 축소와 단가 현실화를 통한 정밀한 재정 설계가 요구됨

○ 보육료·취약·시간제 보육 등 다른 재정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어, 국공립 확충이 이들 수단 대비 어느 정도 규모·속도가 적정한지, 정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재조정 필요성이 있음

○ 전체 보육 수요 감소와 민간·유치원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국공립 중심 확충을 지속하면 공급 과잉·중복 우려가 있어, 보육취약지역·지역 격차·수요 차이를 더 세밀히 반영한 선택·집중이 필요함

○ 2026년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여전히 최근 실집행액보다 높고, 아동 수는 정체·감소 추세인 만큼,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만을 근거로 규모를 유지하기보다 실집행·1인당 편익을 반영해 추가 감액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최근 2년 집행률이 60~70%대에 머물며 과다 추계·집행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과다편성·수요 예측 실패를 의미해, 부분적 감액이 아니라 물량·유형 자체의 축소·조정이 필요함

○ 다단계 수급·심의 체계를 운영하고도 국회의 과다 추계·집행부진 지적이 지속되는 만큼, 현 전달체계가 수요 검증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절차 유지만으로는 행정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음

○ 형식적 관리체계는 있으나 대규모 집행잔액·반납이 반복되어, 부정수급보다는 보조금 규모 산정·집행관리의 비정밀성이 문제이며 재정운용 측면에서 관리 적절성이 떨어짐

○ 자율평가 후 대폭 감액 등 일부 환류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다 추계·집행부진이 지적되고 구조개선 방안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보다 근본적인 규모·대상·유형 재설계가 필요함

○ 공공보육·국공립 이용 비율은 목표를 초과하고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아동·민간시설 감소 등 복합 요인의 결과로, 수도권 편중·지역 격차도 존재해 현 구조·규모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확대할 우수성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지역인재 육성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 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국정과제(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와 연계성이 높아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RISE 사업은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나, 본 사업은 교육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과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됨. 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는 RISE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교-지역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입학 전(前) 지역인재 역량강화 등은 지역 RISE 사업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지역별 RISE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성과지표는 지역인재육성모델 개발.운영 참여학교 수(개교)로, 정책목표인 지역인재의 발굴-교육-정주-취업 연계라는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25년 목표치가 4개교인데 반해, 달성 실적은 18개교로 450%를 달성함. 이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했거나,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따라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지역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고도화하여 지역인재육성-취·창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와 연계성이 높아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RISE 5개년 기본계획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RISE 계획의 완결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예산규모를 조정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RISE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5년 신규사업으로 25년 사업 공고 시, 총사업비(123억원, 5년)으로 연 국고 17.2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실집행률은 100%임

○ 월별점검 실시 모니터링(상시),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26년), e-나라도움 사용 교육일정 안내 등을 통해 부정수급 등 적절한 사업 사후관리를 시행함

○ 성과지표는 '지역인재육성모델 개발·운영 참여학교 수(개교)'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책목표인 지역인재의 발굴 - 교육 - 정주 - 취업 연계라는 질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25년 목표치가 4개교인데 반해, 달성 실적은 18개교로 450%를 달성함. 이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했거나, 수요예측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25년은 본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되, 향후에는 단순 참여가 아닌 실질적 인재육성 및 정주성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본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 및 내용이 RISE 사업과 유사하고 RISE와의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산규모를 조정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RISE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는 참여학교 수와 같은 투입·활동 지표가 아닌 정책목표인 지역정주 및 취·창업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의 발효('18.2월)에 따라, 국내대학 학위의 해외 이동성과 외국대학 학위의 국내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자격(제도, 기관 인가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위·자격의 상호 인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기간이 '25.5~'26.4로 설정되어, 회계연도와 불일치함. 이는 회계연도 단위 운영의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예산 집행이 사업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사업 운영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집행 시기를 분산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국내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학위·자격 상호인정 지원이라는 국가적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정보센터의 지속적 정보 축적, 국제 네트워크 유지, 공신력 있는 자격정보 제공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의 본질적 성과를 단일 계량지표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기인함.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보제공 실적(산출지표), 상호인정 협의 및 제도개선 성과(결과지표), 국내 학위의 국제 신뢰도 향상(영향지표) 등과 같은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의 발효('18.2월)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 8.3조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설립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외 고등교육 체제 및 학위인정 관련 공인된 정보 제공,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을 위한 대학 맞춤형 자료 제작·공유, 비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현장 안착 지원 등의 사업내용은 적정함

○ 사업기간이 '25.5~'26.4로 설정되어, 회계연도 단위 운영의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예산 집행이 사업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바, 사업 운영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예산의 조기 집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사업 정책 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는 국가학위정보센터(NIC)를 운영하며 국내외 고등교육 체제 및 학위인정 관련 공인된 정보 제공,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을 위한 대학 맞춤형 자료 제작·공유 비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점검(상시), 현장점검 및 사업 완료 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점검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내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학위·자격 상호인정 지원이라는 국가적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업의 특성상, 국가정보센터의 지속적 정보 축적, 국제 네트워크 유지, 공신력 있는 자격정보 제공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의 본질적 성과를 단일 계량지표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기인함.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보제공 실적(산출지표), 상호인정 협의 및 제도개선 성과(결과지표), 국내 학위의 국제 신뢰도 향상(영향지표) 등을 포함한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정기관에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가 폐지되고 민간의 평가인증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은 정책목표와 정합성이 높음. 공학교육 인증지원의 경우, 인증 졸업생을 우대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단순한 예산 지원 확대만으로는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인증–전문자격–산업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적 개편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행정부담 완화와 교육과정 유연성 제고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특정 프로그램 인증(공학, 의학)에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재정투입 규모와 성과관리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임. 다만 이러한 성과지표는 인증기관 전체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공학교육 혁신지원’으로 구성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시험 자격 등과 연계되는 학문분야별 평가인증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담보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임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정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가 폐지되고 민간의 평가인증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공학교육 혁신지원사업은 타 학문분야와 달리 워싱턴협정(WA) 기반 국제 인증체계의 유지·운영을 위한 국가 기반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인정됨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은 정책목표와 정합성이 높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학교육 인증지원의 경우, 인증 졸업생을 우대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공학교육 인증에 대한 국고 지원 축소와 더불어 공학교육인증 이수에 따른 국내 취업 및 임금 등에서의 실질적 차별적 보상이 미흡하고, 대학·학과 차원의 행정부담 및 규제 피로도 증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따라서 예산 지원 확대만으로는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인증 - 전문자격 - 산업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담 완화와 교육과정 유연성 제고를 통해 대학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23) 1,421백만원 전액 집행(100%), (’24) 1,280백만원 중 1,279백만원 집행(99.9%), (‘25) 1,730백만원 중 1,652백만원 집행(95.5%)됨

○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점검(상시), 현장점검 및 사업 완료 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프로그램 인증(공학, 의학)에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재정투입 규모와 성과관리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임. 다만 이러한 성과지표는 인증기관 전체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각 내역사업별 사업내용은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취업 경쟁력 강화의 사업 취지에 일정 부분 부합하나, 파란사다리 사업을 제외한 3개의 내역사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특히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은 한미대학생연수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아 추진 근거가 미흡하므로, 국고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는 제한적임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역사업별로 학생 자부담비율의 차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집행률이 타 세부사업 대비 낮고,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는 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기관 현장점검 결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참가자 만족도'와 '글로벌 역량진단 점수'는 각각 정성적·정량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 파란사다리, 한일대학생연수 등의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 제4항을 근거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본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각 내역사업별 사업내용은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취업 경쟁력 강화의 사업 취지에 일정 부분 부합하나, 파란사다리를 제외한 3개의 내역사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음. 특히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은 한미대학생연수 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아 추진 근거가 미흡하므로 국고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는 제한적임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역사업별로 학생 자부담비율의 차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집행률이 타 세부사업 대비 낮고,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는 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실적 및 정산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기준을 통해 참여대학 및 사업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기관 현장점검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인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와 '글로벌 역량진단 점수'는 각각 정성·정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만족도는 주관적 인식에 기반해 정책 효과와의 인과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역량진단 점수 또한 사전·사후 비교 및 취업성과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성과 측정 지표로는 보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내역사업의 국고 보조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내역사업 간 차별성 및 집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해외연수사업은 소수 수혜자에게 고액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취업성과 등 가시적 결과와 연계된 성과기반 사업으로의 고도화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대학혁신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및 제9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및 제9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기관평가인증 기관의 평가·인증의 결과를 정부 재정지원 등에 활용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차원의 전담인력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사업은 기관평가인증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의 내역사업인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과 긴밀히 연계된 내용임에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 간 기능 중복 및 관리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양 내역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며, 성과지표도 통합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25년 국회예정처, 교육위원회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27년 기관평가인증 수행기관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감사결과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리절차 강화 등과 같은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적절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및 제9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및 제9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근거하여 기관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의 결과를 정부 재정지원 등에 활용하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기관평가인증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해당 사업은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의 내역사업인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과 긴밀히 연계된 내용이므로, 사업 간 기능 중복 및 관리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양 내역사업의 통합이 필요함

○ '기관평가인증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관평가인증 대상 고등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상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되며, 미신청 대학을 제외한 대학(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정지) 수로 산정하여,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수혜자 범위 및 규모는 적절함

○ 본 사업은 '24년, '25년 전액 집행을 완료하여 집행의 적정성이 높으며, 사업 추진·전달 체계가 효율적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점검, 정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최근 2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본 사업은 '25년 국회예정처, 교육위원회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27년 기관평가인증 수행기관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감사결과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리절차 강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본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주 내용으로, 성과지표는 설정되지 않음. 현재와 같이 상호 긴밀히 연계된 내역사업이 분리 운영될 경우, 사업 간 기능 중복 및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효율적 운영과 성과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의 내역사업인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대학구조개혁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한 교원 양성규모(정원) 적정화 및 대학구조 개혁 기여의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26년 역량진단 실시 대상교 감소(143개 → 101개)에 따른 예산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7년은 2028년부터 착수되는 7주기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하는데, 기존 2년으로 운영되던 준비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한 점은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됨. 아울러 준비기간 동안 수행되는 평가모델 개발, 평가지표 고도화,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필수 기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최소한의 인력 및 예산으로 운영되는 효율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및 대학 평가체제 관련 현장과의 소통 횟수(회)'는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향후에는 임용인원 변화 대비 양성 정원 변화 등 구조적 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중심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점)'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음. 다만, 정성적 응답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조사 설계의 표준화와 객관적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양성정원 감축 및 부실기관 폐지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의 경우, ('26년) 역량진단 실시 대상교 감소(143개 → 101개)에 따른 예산 조정은 타당함. 2027년은 2028년부터 착수되는 7주기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함. 준비기간 동안 수행되는 평가모델 개발, 평가지표 고도화,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필수 기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최소한의 인력 및 예산으로 운영되는 효율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

○ '98년도부터 27년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진단 사업을 수행하여, 그간 평가자료의 누적, 진단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효율성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 운영함은 적절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분할 교부, 연 2회(상, 하반기) 보조사업 집행점검(서면, 현장) 실시 및 2차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점검결과 반영, 사업수행 상시(월1회 이상) 모니터링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 적발 내역 없음

○ '23년 국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본 사업을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비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이에,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6주기가 종료되는 2026년까지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7주기 사업 시행시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함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성과지표 중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및 대학 평가체제 관련 현장과의 소통 횟수(회)'는 성과관리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낮음. 해당 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개선이나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라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향후에는 임용인원 변화 대비 양성 정원 변화 등 구조적 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중심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체계적인 환류 구축으로 교원양성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점)'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음. 다만, 정성적 평가지표이므로, 조사 설계의 표준화와 객관적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됨. 다만, 재정당국,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국고 대비 지방비 매칭률을 모든 시·도에 20%로 설정하였으나 지역 여건과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매칭률의 차등 설정이 필요함 - 향후 지역별 여건, 사업 특성 및 성과 등을 반영한 적정 지원 규모 산출 및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최종 집행기관인 대학에서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등으로의 사업비목 변경 검토가 필요함 - '23년부터 약 2년 동안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지자체로의 고등교육 지원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졌으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험·노하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시·도와 지역 RISE센터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과 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RISE 지방비 편성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25년 지방비 편성비율은 23.3%로 나타나 116.5%의 달성도를 기록하였지만, 사업의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소멸 문제 해결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의 인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RISE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보조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확보함

○ 지방대육성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자체의 책무성 확보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국고 대비 지방비 매칭률을 모든 시·도에 20%로 설정하였으나 지역 여건과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 매칭률의 차등 설정이 필요함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제시됨. 이에 따라, RISE 체계 내 5극3특별 인재육성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경제권 단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적정함

○ 수혜대상은 (직접) 고등교육기관 재학생('25년 기준 235만명, 출처 : KEDI 고등교육기본통계), (간접) 전 국민('25년 기준 5,168만명, 출처: KOSIS 인구통계)에 이름에 따라 지원규모는 충분하고 적정함

○ RISE 사업의 총 규모 결정 과정에서 개별 지자체별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기존 사업의 예산이 단순 통합되어 17개 시·도로 배분됨.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사업 특성 및 성과 등을 반영한 적정 지원 규모 산출 및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집행률은 99.5%로 적정하나, 교육부의 RISE 예산을 교부받은 지역 RISE센터(대학)의 1차년도 집행률은 저조한 것로 나타나, 교육부는 지역 RISE센터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최종 집행기관인 대학에서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출연금 등으로의 사업비목 변경 검토가 필요함

○ 17개 시·도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축적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질적인 예산집행·관리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집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및 중앙 RISE센터에서 제공하고, 특히 사업 성과지표 설정·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RISE의 초기 정착기(1~3차년도)는 중앙 RISE센터의 전문성과 주도적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RISE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앙 RISE센터는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조정할 수 있는 전문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 자체관리 노력으로 부정수급 방지 관련 e-나라도움 교육을 실시하고, 월별 점검 모니터링(e-나라도움), 서면 점검(공문), 현장 점검(현장 방문)을 실시한 결과, 계약, 인건비, 내부거래, 기타 등 다양한 점검사항이 발생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였고, 외부 적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국회의 지적사항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시도간 배분방식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 노력(예결위), 정권이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이 급격히 변경되어 대학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 방지, RISE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예결위), 전문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재정지원사업을 보완하는 등 개선 필요(국정감사) 등이 제기되었으므로, '26년 사업 추진 시 제기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RISE 지방비 편성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25년 지방비 편성비율은 23.3%로 나타나 116.5%의 달성도를 기록함. 다만, 사업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소멸 문제 해결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의 인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초기 정착기에는 중앙 RISE센터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사업 통합·기능조정 및 지방비 매칭 확대를 전제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집행 효율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재설계(재구조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ISE 사업은 중앙 - 지자체 - 지역 RISE센터 - 대학 간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 만큼, 지자체의 사업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대학 지원 위반자 관리 등의 주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서 국가는 대교협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함 · 대입전형 모니터링단,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자문단 등 위원회 운영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자동화·전산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 및 입법사항 등을 반영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관리·점검·심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해당 업무가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파급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관리·점검·심의 업무에 대한 지원경비는 업무량과 중요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대입 자율화 방안('08)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주체를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간 협의·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학부모가 미리 대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대학 지원 위반자 관리 등의 주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국가는 대교협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

○ 대입전형 모니터링단,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자문단 등 위원회 운영 활동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동화·전산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정부정책 및 입법사항 등을 반영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관리·점검·심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사업비는 연간 변동 없이 최소경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 해당 업무가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파급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관리·점검·심의 업무에 대한 지원경비는 업무량과 중요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교부예산액은 ('23) 812백만원, ('24) 773백만원, ('25) 773백만원, 실집행률은 100%이며, 교육부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예산 교부, 사업 추진 상시 점검·관리 시행, 대교협의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체계는 적절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한 결과, 부정수급 사항은 없음

○ '대입정보 기한 내 제공률(%)' 지표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각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수립·공개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의 운영 안정성과 일정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데 적절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대입전형 운영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대학이 입학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점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내용의 일부('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강화' 중 고교학점제 지원)는 대학이 자체 예산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내용임. 따라서, 향후 이를 축소하되, 대입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원이 필수적인 그 외 사업내용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 추진 필요성, 지원 대상 대학 수 축소 및 차등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결정됨. 이에 따라 2025년 지원대학 선정 시 모든 대학에 국고지원금의 15% 이상을 인건비로 대응 투자하도록 하고, 추가 대응투자 확보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류조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함 - 이러한 환류 및 개선 노력과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감축보다는 대학의 대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사업내용 및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대입의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파급력, 대입전형 운영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전문성·사회적 책무성 등의 측면에서 대입전형 운영은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내용의 일부('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강화' 중 고교학점제 지원)는 대학이 자체 예산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운영 가능함. 따라서, 향후 이를 축소하되, 대입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원이 필요한 그 외 사업내용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은 선정된 4년제 일반대학 92교('25년 기준)이며,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지원은 전체 4년제 일반대학으로 수혜대상의 폭이 넓음. 다만, 지원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개별대학이 입학전형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영향 및 효과는 인정됨

○ 예산 집행률은 적정하고, 사업 추진·전달체계는 효율적이며, 보조사업으로서 부정수급 등 관리는 적절함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 추진 필요성, 지원대상 대학 수 축소 및 차등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결정됨. 이에 따라 2025년 지원대학 선정 시 모든 대학에 국고지원금의 15% 이상을 인건비로 대응 투자하도록 하고, 추가 대응투자 확보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류조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함

○ 이러한 환류 및 개선 노력과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감축보다는 대학의 대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사업내용 및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모집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14.4%) 및 2025년(14.1%) 실적 모두 해당 연도 목표치(각 1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국립대병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모두 100%에 미달함.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 지적이 반복됨. 집행률 제고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사업목적을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추가·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측면에서 공공임상교수제(국립대병원 지원)은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연관성이 있음

- 공공임상교수제는 공공임상교수 인건비를 지원(50%)하는 사업임
-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우수 의료진을 지역의료원 등에 파견함으로써 지역의 필수의료 의료공백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내용은 국정과제, 상위계획 등과 부합하고, 사업목표과 사업내용 간에 연계성·정합성이 있음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공공임상교수로 구체화하고, 지역 의료수요·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함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의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와 주체별 역할분담이 적절하고, 관련계획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3년 18%, 24년 67%, 25년 96%로 높아지고 있으나, 모두 100%에 미달함
-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측면에서 최근 5년간 달성도는 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성과지표(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병원 선정)은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함

- 사업목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추가·개발이 필요함

○ 사업비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추가·개발을 통한 사업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시간제보육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자격과 이용 시간에 대한 설정을 재검토 한계 - 또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과거 이용 시간 추세와 아동수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소요예산을 조정할 필요 있음 - 서울 지역에 대한 보조율은 20%로 조정			

□ 종합평가 의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자격과 이용 시간에 대한 설정을 재검토해야 함
-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이용시간 추세와 장래 아동 수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 지역의 보조율은 20%로 하향 조정을 고려해야 함

- 첫 제도 설계 이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제도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

- 기존의 홍보 시스템에 더하여 가정양육 아동의 학부모에게는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자동 고지하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보조금이 아닌 위탁금의 성격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보육사업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 감액과 함께 반복되는 불용, 이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4년 7월의 소관 부처 이동에 기인하는 집행율 부진을 극복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육사업 지원 내역사업 중 지침 제작과 같이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재정소요를 줄여나갈 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내역사업은 동일 업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예산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보육지원사업 내 보조사업은 보육행정 간소화 및 지자체·어린이집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사업임

- 이 사업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산자원 관리를 위해 2025년 현재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조금 수혜 주체임

- 보육상담센터 사용자 교육 등 운영 및 알림·인증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약 4억원을 제외하면 전산자원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음 (2025년 현재 약 17억원)

○ 동일 업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예산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출생아의 감소와 자격 취득자를 고려한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보수교육 질 관리, 보수교육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노력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출생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0세반 영아-교사 비율 개선이라는 제도 요인이 있어, 환경변화와 제도변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사업 규모 조정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보수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대한 국고보조금(48%)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자질 향상을 도움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평가에서는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 '실집행률 저조', '집행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환류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였음

- 자격증 발급 실적의 지속적 감소, 보수교육 이수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및 평가방식 개선 노력 미흡,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환류 노력 등의 미흡함이 지적됨

- 다만, 2024년 이후 실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실집행률은 2024년 113%, 2025년 96.3%를 기록함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액 (C)	집행률 (%) (C/(A+B))	실집행액 (D)	실 집행률(%) (D/(A+B))
	본예산 (A)	추경 (B)	합계 (A+B)				
'23년	1,892		1,892	1,892	**100**	1,621	**85.7**
'24년	1,314		1,314	1,634	**124.4**	1,487	**113.2**
'25년	1,308		1,308	1,308	**100**	1260	**96.3**

○ 제도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출생아의 감소와 자격 취득자를 고려한 사업규모 감축이 필요하겠지만, 0세반 영아-교사 비율 개선이라는 제도 요인도 있으므로 출생아 감소 및 자격 취득자 변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업 규모 조정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교육부**
사 업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육서비스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편차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야 함 - 만족도의 지역 편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업임

- 동 기관은 어린이집 평가 및 상시 질 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와 보수교육기관 평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관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2025년 현재 일반직 143명, 무기계약자 184명 비정규직 40명이 근무하는 기관임

- 본 보조금은 기관의 총예산 약 320억원 중 221억원으로 이 보조금을 통해 기관의 기본 사업을 운영하며, 그 외 시간제보육 사업관리가 2.41억원, 기타 수탁사업으로부터 약 80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

○ 보육서비스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편차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야 함

- 특히, 만족도의 지역 편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외교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인도적지원(ODA)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본 사업은 법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 계속사업임에도 제주포럼 중심의 행사성 지출 비중이 높고 연구·연수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성과관리 체계가 참가 인원·행사 횟수 등 활동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책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 성과지표 개선이 요구됨 - 사업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되 포럼 운영비 등 경상성 지출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선여지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주포럼 중심 예산 집중, 행사·의전·용역 중심 경상성 지출 구조, 연구·연수 기능 상대적 약화, 활동량 중심 성과관리, 유사 사업과의 기능 중첩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회의 개최, 외교정책 연구,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이나 지자체 단독 수행이 곤란하고, 정부 재정 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근 5년간 제주평화연구원이 총 14건, 617백만원 규모의 외부 수탁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연수 프로그램 역시 KOICA 등 기존 ODA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세부 기능이 동일한 수준의 국고 직접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연구 및 연수 기능은 점진적 자립 또는 기존 개발협력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6년 증액 구조는 정책 연구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대비 국제행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6년 예산안 중 제주포럼 증액분을 중심으로 부분 감액이 필요하며, 연구·연수 기능 중심의 구조 재편과 결과지표 기반 성과관리 도입을 병행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한미동맹 관리 및 북미 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 국가별 외교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의 개선 여지가 있고, 사업 활동과 실제 성과 간 직접 연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예산 규모 확대 근거 부족 - 본부와 해당 재외공관 간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 횟수 등 양적 지표에 사업 성과 제시가 치중되어 실제 외교 성과와 연계 불명확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한미동맹 관리와 북미 외교 강화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안보협력 및 SOFA 운영 등 일부 내역은 정부 고유 기능에 해당됨

○ 다만,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6.1% 급증하고, 전략동맹(116.3%), 동맹기반(50.8%) 등 주요 내역에서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성과 대비 증액의 필연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부와 해당 재외공관 간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 횟수 등 양적 지표에 사업 성과 제시가 치중되어 실제 외교 성과와 연계 불명확

- 아울러 예산 산출 방식이 주로 출장 횟수, 회의 건수, 용역 단가 등 투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성과 대비 적정 규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는 고위급 협의 횟수, 교류 실적,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량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확장억제 협의체 3회, 정책검토 협의 5회, 학계 행사 4회, 주지사·의원 방문 10회 등은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활동이 실제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인 북미지역국가의 외교 정책 변화나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지표는 제한적임

○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국제 공공외교 플랫폼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언론 평가와 별도로 본 사업 자체의 성과가 정책 결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었다는 사례는 미흡하며,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활동 수행 자체는 안정적이나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 규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행정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보조율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개선을 권고 - 「한러대화」는 보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자부담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행정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 - 아울러, 공공외교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을 통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한-러 정부간 공식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한-러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국정과제 119-4,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 본 사업은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2010.11.10.), (2013.11.13.)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간 민간 차원의 대화·교류 채널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외교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
-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 KF한-러 정경포럼 등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교류협력 분야·네트워크의 다양성, 포괄성 및 지속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됨

○ 사업 내용은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사업 수혜대상 범위도 명확하다고 판단됨

- 러측 상대기관인 「러한대화」 및 국내 주요기관 협력 하에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청년 등 6개 분야 사업 수행은 목표에 잘 부합되며, 관련 네트워크 회원, 행사 참가자 수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사업 수혜범위는 명확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러-우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필요성은 고려하더라도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한러대화」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러-우 전쟁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조율 100%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 러-우 전쟁의 영향을 제외하면 집행률 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행정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 노력이 필요

- '25년 집행률은 100%를 기록하였으나, 총 사업비 2.69억 중 행정비용은 113백만원(인건비만 고려 시, 42.0%) 혹은 153백만원(사무국 지출총액, 56.8%)로 다소 과다함

○ 성과지표는 공공외교의 성과를 충실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선을 고려할 필요

- 보조사업 참가자 만족도 및 사업 참가 대상 확대 정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측정되는 러시아의 한국 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긍정 인식도 등을 성과지표로 고려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과 더불어 사업성과 하락 요인을 파악 및 관련 조치를 실행할 필요 - 공공외교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예: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측정되는 중동 회원국의 한국 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긍정 인식도 등)를 고려할 필요 - 최근 만족도 조사 하락 요인 점검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대응 조치 마련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중동지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최근 대통령 순방 계기 대중동구상 등을 고려하면 중동국가와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개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됨

- 해당사업은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사업으로 한-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가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9.0억원 규모

- 아랍 정부 및 양측 기업은 약 1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완납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비 지원 약속 표명한바, KAS 정관 제9조(재원) 1항에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기여금” 등 지원근거 확보

○ KAS는 경제·문화·학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08년 설립 이래 한-중동 간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사업의 수혜자는 한-중동간 교류협력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있는 기업, 일반국민들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비즈니스 포럼, 논문 공모전, 학술포럼, 영화제, 문화제, 세미나 등 많은 교류행사를 수행

○ 보조사업자 선정은 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나 정부의 외교적 약속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실적,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활동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실집행률은 9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련 방지대책,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 등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되고 있음

○ 성과관리는 만족도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외교의 직접적인 성과를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

- 현재의 성과지표는 민간분야지원 보조사업 수혜자 만족도로 목표(95)를 대체로 상회하는 달성도를 보였으나, ’25년의 경우 실적은 93을 기록하여 목표를 하회

-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측정되는 22개 중동 회원국의 한국 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긍정 인식도 등을 성과지표로 고려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당외교를 통해 다자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관련, 해당 법적 근거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 쟁점은 2024년 사업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어 관련 근거의 정비 및 소명 강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ICAPP 사무국은 아시아 지역 정당 간 협의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본 사업은 다자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관련,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조정' 규정을 ICAPP 사무국 지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적인 정당외교 협조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정 국제정당협의체 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지정형 보조금 지원까지 직접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법적 근거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CAPP 사무국은 ▲ICAPP 총회 ▲상임위원회 ▲산하기구별 회의 개최·지원을 담당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외교부는 정산 및 성과 검증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됨

○ 2025년 집행률 100%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집행률을 보임

○ 2024년 사업평가 결과에서 ▲경상경비 감축 ▲성과지표 개선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 감액 및 성과지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짐

- 그러나 지원 법적 근거의 명확화에 대한 조치는 미완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동 사업은 ICAPP 사무국 활동 실적 건수를 정량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조정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 실적을 조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함

- 정성적 측면에서는 ICAP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국 정당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내 외교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ICAPP 총회 서울 개최 등 단기적으로 예정된 국제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연장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지원 목적·성과·공익성에 대한 객관적 성과관리 및 설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외교부
사 업	인도적지원(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국제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연장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 특성상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 산정은 어려우나, 재정수요 산정의 투명성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지원규모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성과 지표가 인도적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자연재해 등 인도적 위기를 겪는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어 추진체계의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만성위기 지원, 긴급재난 지원,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등의 각 사업 내용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외교부가 지원결정 및 집행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체계이며, 「외교부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최근 예산 규모는 2022년 236,641백만원, 2023년 299,367백만원에서 2024년 740,111백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5년에도 677,503백만원, 2026년 341,503백만원으로 단기간 내 재정 규모의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사업 특성상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 산정은 어려우나, 재정수요 산정의 투명성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지원규모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100%, 실집행률 95% 이상 높은 수치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표는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는 ① 인도적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②양질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도를 합산한 인도적 지원 선진화 달성도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현행 성과지표는 사업의 활동 수준 및 자원 배분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인도적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보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국제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연장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최근 재정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에 비해 성과관리 체계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 구조는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회문화교류 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구호지원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개성공단 기반조성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국내통일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는 역내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과 역할 및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통합 운영 방안,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의 이용객 수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상이함에도 균등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센터별로 성과와 지원액을 연계하여 차등화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현재 성과지표가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치중되어 있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이 높고 재정 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하며, 전반적인 집행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내역사업 간 성과지표의 불균형, 지역 센터 간 예산 배분의 효율성, 유사 기능 중복 가능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판단됨

○ 본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는 역내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과 역할 및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통합 운영 방안,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은 동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통일플러스센터와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통합할 경우 행정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예산 배분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의 성과와 연계한 차등화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의 이용객 수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상이함에도 균등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센터별 성과와 지원액을 연계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활동내역의 성과에 기반한 활동 간 재원배분 체계 구축 필요 - 세부사업을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과 세부사업의 목표에 기반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됨

○ 보조금의 규모는 '23년까지 1억원을 편성하다가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24년부터 '26년까지 연간 8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현재 보조사업자는 후계세대 아카데미, 통일안보 현장탐방, 홍보 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 뉴스레터 및 소식지 발간,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투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에 기반한 실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간 재원 재배분, 활동 구성에 대한 재설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사업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의 예산집행률(예산현액 기준)은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에 관한 내·외부 적발 사항은 없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부처차원의 자체점검 체계 지속 필요

○ 본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필요

- 본 사업이 이산가족문제해결지원을 위한 이산가족교류단체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에 기반하여 해당 사업들이 세부사업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세부사업을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과 세부사업의 목표에 기반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내에서 활동간 재원배분 체계 구축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6.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국립 6.3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인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6.25전쟁 민간인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등을 통한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4,777명의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납북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이 동 사업의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한 적정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집행률(예산현액 기준)은 95%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업 추진·전달체계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부처차원의 자체점검 체계 지속 필요

○ 본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필요

- 본 사업이 납북자가족단체 지원을 통해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자(납북자가족단체)의 사업들이 납북가족 명예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세부 활동별 실적관리와 성과 판단에 기반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총 사업비내에서 활동 간 재원의 조정 혹은 사업 재설계를 추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효과성에 기반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도록 지속 발전시킬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국 25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예산 배분이 지역별 거주 인원수와 비례하지 않아 행정비용의 비효율성이나 배분체계의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지역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 하나센터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경우 행정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거나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및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상위 정책 목표에 긴밀히 부합하며 헌법적 가치와 미래 통일 대비라는 측면에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특히 특히 ‘23~‘25년 평균 97.2%라는 높은 예산 집행률과 2025년 핵심 성과지표인 고용률(61.3%, 목표 대비 102.9%) 달성은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전국 25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예산 배분이 지역별 거주 인원수와 비례하지 않아 행정비용의 비효율성이나 배분체계의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지역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 하나센터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거나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학교 통일교육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참여자 수는 단순 산출지표로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하므로, '통일교육 참여자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도'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업별로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정책 부합성 및 법적 타당성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정과제(117-3) 및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서 미래세대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 당위성이 높음
- 또한, 남북 경제통합 및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라는 거시적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의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집행률 96.3%(3년 평균 96.0%)로 예산 운용이 매우 안정적이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점검 및 연구학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

○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참여자 수는 단순 산출지표로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하며, '통일교육 참여자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도'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업별로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참여자 수는 단순 산출지표로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하며, '통일교육 참여자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도'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업별로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사업이자 국정과제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통일교육 지원법」 및 국정과제(117-3)에 근거하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본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의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집행률 97.8%(3년 평균 96.6%)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며, 정량적 성과지표인 '통일교육 참여자 수'에서 목표 대비 232.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참여자 수는 단순 산출지표로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하며, '통일교육 참여자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도'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업별로 추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사회문화교류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2025년 집행율이 32.7%로 저조하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이 강하여 삭감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일부 내내역사업은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추진방식을 재검토하거나 홍보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문화분야 북한주민접촉신고 처리(건)'은 단순 산출 지표로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로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는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당위성이 높은 법정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저집행 기조(3년 평균 23.6%)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류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남북교류협력 전문 인력 유지 및 대외적 주도권 확보 등의 예비비 성격이 강하여 감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예산 편성에서 저집행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일부 내내역사업의 경우, 경직된 남북관계 하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용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내역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산출 지표(접촉신고 건수) 위주의 정량지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대변하기 어렵고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자료가 미비하므로 관련 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각 내역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제시하는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이산가족교류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 - 부정수급 관리계획의 구체화 제시 필요 - 세부사업에 대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예산집행 환경에 따라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재원배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산가족교류지원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민간교류경비 지원,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남북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민간의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단,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규모의 관례적 판단보다는 합리적 분석에 근거한 규모 판단이 필요함

- 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매년 신규로 등록하는 인원도 있는 반면에, 고령화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인원도 있음을 고려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도 고정비와 변동비(인원수에 의해 영향받는 비용)로 구분하여 추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의 보조사업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은 최근 3개년 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됨

○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점검주기, 점검주체 등 구체적인 예방계획 또는 지침을 기초조사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5년 보조사업 평가 시 상봉행사 수혜자의 규모와 추세,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등을 반영하여 상봉행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고, '26년 보조사업 예산을 200백만원 감축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전까지는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성과판단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교류지원 세부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성과지표 이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되, 보조사업이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고, 향후에는 재원배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구호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구호지원' 내역사업(단일 내역사업) - 과거 편성규모에 기반한 예산편성보다는 항목별 필요성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해 지원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집행 여건 개선 시 1년 차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물량에 근거하여, 예산소요 판단 필요 - 예산소요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6년 예산(1,122억)의 전년 대비 증가율 45%(+350억)는 과도했다고 판단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자연재해, 감염병, 식량난 등의 상황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쌀, 긴급구호키트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의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다만, 집행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비용 산출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더라도 지원품목의 적정성, 소요량, 단가 등에 대해 현실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단, 2010년 이후 긴급구호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예산 편성은 전체 기금운용 측면에서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여건 개선 시 1년 차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물량에 근거하여, 예산 소요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산소요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6년 예산(1,122억)의 전년 대비 증가율 45%(+350억)는 과도했다고 판단함

○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보조사업자로 지정될 기관들과 정기적인 협력으로 구체적인 지원계획 또는 지침 수립 등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한 성과지표와 함께,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한 대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필요할 시 적기에 적정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구호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안적 관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평가' 등 구호지원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민생협력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내역사업 - 예산편성 근거를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 - '26년 세부사업의 예산규모(5,554억)는 '22년 예산(5,131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내역사업의 내용 중 산림협력(351억 원 → 749억 원)과 환경협력(138억 원→ 535억 원)은 '25년 대비 '26년 예산 증가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집행환경을 고려했을 때 과도했던 증액으로 판단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의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이 본 사업의 수혜자가 되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수혜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 내역사업의 예산소요는 남북간 합의사항, 과거 지원 규모, 중장기 계획 등 가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중임. 그러나 예산소요 산출 논리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26년 세부사업의 예산규모(5,554억)는 '22년 예산(5,131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내역사업의 내용 중 산림협력(351억 원 → 749억 원)과 환경협력(138억 원→ 535억 원)은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증액되었음. 부처는 현 정부기조에 따라 지난해 대폭 감액했던 규모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설명함

○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관리적 차원에서 점검주기, 점검주체 등 보다 구체적인 예방계획 또는 지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23~'24년 사업평가 시 집행부진 예산에 대한 규모 조정, '25년 보조사업 평가 시 사업전체의 예산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추계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내역사업들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에 기인함

- 중장기적으로 예산 소요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체계 설계가 필요함

- 현 성과지표(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건))는 사업의 성과를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관점에서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내역사업 중 '북한 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내역사업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대안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준비 및 기반 구축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 지원'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병행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경협기반(무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 -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류재개 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 - 특히,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소요가 불명확하고 예산집행 여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25년 예산(약 606억 원)에 비해 '26년 예산(약 1,789억 원)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던 것은 과도한 증액이었다고 판단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남북당국이 합의한 사업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의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협기반(무상)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들은 추진 내용상으로 세부사업의 목표와 연계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남북간 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예산소요를 산출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정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소요가 불명확하고 예산집행 여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25년 예산(약 606억 원)에 비해 '26년 예산(약 1,789억 원)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관련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관리적 차원에서 부처 차원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계획 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세부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되,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전까지는 대안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준비 및 기반 구축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병행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이때 보조사업들 역시 그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세부사업의 성과평가에 포괄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통일부
사 업	개성공단 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합리적인 복구비용 산정절차 및 이에 근거한 예산 소요 판단 필요 - 세부사업을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현재 개성재단 복원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률안 통과 시 개성공단 재가동 전이라도 복원된 재단이 수행할 목적사업(입주기업 지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주요 정책과제 등에 의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으로 편성 규모를 감축 조정해 왔음

- 다만,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복원 및 기능 정상화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2016년 2월 전면 중단 이후 공단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 항목별(정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통일다리 등)로 합리적인 복구비용을 산정하고 환경 변화 시 1년 차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규모만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격년 통일부 기금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체계도 유지해야 할 것임

- 향후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관리적 차원에서 부처 차원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계획 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외부 지적 및 내부평가(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조를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이 인정됨

○ 본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할 필요가 있고, 개성재단 복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시 개성공단 재가동 전이라도 복원된 재단이 수행할 목적사업(입주기업 지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법무부

기업환경지수 개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변호사제도의선진화
법률구조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소년원생수용
갱생보호활동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기업환경지수 개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으로 국제중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 세부사업인 기업환경지수 개선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초기 단계로서 본격적인 사업성과가 확인되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관리방안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재법」에 따른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보조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제분쟁조정 역량 강화에 대한 차별적 지원 부분도 확인됨 - 다만, 현재의 재정사업 구성.운영방식이 '기업환경지수 개선'이라는 세부사업의 포괄적 내용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업개선을 통한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행정과 관련해, 국제중재·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역량강화를 위한 국재중재센터 지원에 대한 사업수행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업환경지수 개선과 연계한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중재법」 제40조에 따른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산업통상부의 '대한상사중재원 지원'에 대한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국제중재센터 운영에 한정하여 사업내용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됨

○ 국재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성이 문제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 인건비 중심의 사업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최초 편성된 사업으로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편이며, 인건비 불용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추진 최초연도의 특수성이 인정됨

○ 대한상사중재원의 단일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전달 과정에서 긴밀한 관리·감독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국재중재센터의 사업운영 성과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이 강화될 필요

○ 2025년 12월 발표된 B-Ready 2025에서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분야에 26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중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향후 국제중재 사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재정사업 구성·운영방식이 '기업환경지수 개선'이라는 세부사업의 포괄적 내용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업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 - '26년 중재산업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 104.9% 증가(1,771백만 원 → 3,629백만 원)하였으며, 특히 전자중재시스템 구축(2,000백만 원) 등 대규모 신규 소요에 대한 단계적 예산 투입 검토가 요구됨 - 국고보조율이 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원하여 국제중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아시아 중재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국제중재 사건 유치 확대라는 명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률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국정과제와 부합함

-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지표 관리 및 사후 관리 절차 또한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

○ 다만, 신규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한 예산의 증액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예산이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으로 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104.9%)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대규모 자본 투입 항목에 대한 예산이 단계적 배정된 것으로 확인됨

-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입(중재 관리비 등) 증대를 통한 국고 의존도 완화 대책이 인정됨

○ 따라서 사업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한 단계적 집행 및 철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변호사제도의선진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령에 근거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협의회 설치 후 20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법조계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의 완화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 확대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사업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로스쿨 중심 법조인 양성체계 개편 이후 건전한 법조윤리 풍토 조성을 위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으로 명시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의 적절성이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다만, 대법원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통폐합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목적에서 정부재정지원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건비 운영보조 중심의 현재 예산편성 방식은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법령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 관여와 함께 보조금 지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조윤리 확보에 대한 국가적 책무보다는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변호사법」 제89조의3 제4호에 따라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윤리협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법령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국내 변호사 규모가 4만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민간조직을 통한 자율규제의 방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성이 요구되는 윤리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내용 구성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법조윤리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특별히 정부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

- 다만, 사업단위 보조보다는 인건비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최근 3년 간 외부기관에 의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2025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협의회 자립유도를 위한 점진적인 국가보조 축소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2026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

○ 변호사 징계 등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로 측정된 사업성과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건전한 법조윤리 조성에 대해 해당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 로스쿨 중심 법조인 양성체계 개편 이후 건전한 법조윤리 풍토 조성을 위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으로 명시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의 적절성이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다만, 대법원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통폐합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목적에서 정부재정지원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건비 운영보조 중심의 현재 예산편성 방식은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법률구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국고 의존도 완화 및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법률구조 서비스 전반에 걸쳐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를 달성하고, 2024년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11.2%를 상회하는 등 성과가 우수함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자체 세입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총지출규모를 감액하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구조법」에 근거한 국가적 책무 수행 및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됨

- 전 국민 대상의 법률상담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소송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11.2%를 기록하는 등 성과지표 달성도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함

○ 다만, 국고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공단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2026회계연도 자체세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25년 자체세입 520억원 → '26년 자체세입 440억원 △80억원, △15.3%)하고, 총지출 규모를 감액('25년 총지출액 1,173억원 → '26년 1,079억원(△94억, △8.0%))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함

- 재무 건전성 강화는 장기간·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 강구 등 장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완화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이민정책연구원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연구사업비가 연구과제 증가('25년 37건 → '26년 49건)에 따라 전년 대비 대폭 증액('25년 503백만원 → 1,310백만원, +803백만원)되었으나,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27년도에 다양한 신규·확대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소 급격히 증액되었으므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 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구구조 변화 및 글로벌 인재 유치 등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함

- 2025년 성과지표 달성도가 120.8%(목표 260점 대비 314점)를 기록하고, 온라인교육센터 개설을 통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과 창출 측면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임

○ 연구사업비가 연구과제 증가('25년 37건 → '26년 49건)에 따라 전년 대비 대폭 증액('25년 503백만원 → 1,310백만원, +803백만원)된바, 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인력 증원 규모에 비해 연구과제 목표를 7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는 계획인 만큼, 가용 인력 대비 확대된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 현안 중심의 과제 우선순위 조정 및 집중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가치는 우수하나,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사업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이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원('26년 신규, 2,020백만원), 세계인의날 행사 사업비 증액(+120백만원)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사업 운영 결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년 연속 96%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편성된 예산을 준수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사업 목적에 걸맞게 더 많은 외국인에게 사회통합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체류 외국인, 난민, 입국 초기 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 필수 사업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타당성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의무화 및 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정책 수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125.3%를 기록하는 등 사업 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임

○ 다만, 2026년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사업 예산안이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원('26년 신규, 2,020백만원), 세계인의날 행사 사업비 증액(+120백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17,639백만원 → 21,579백만원)하였음. 그러나, 인구 감소의 현실에서 동포를 한국 사회에 정주화 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점, 동포체류지원센터 비용은 현재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산 감액 시 동포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는 15년째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증액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사업 운영 결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화 및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첫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내역사업의 경우 '25년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차년도 예산을 오히려 85.6%나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26년도에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 등으로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실제로 교육 이수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집행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그간 참여자 추이와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향후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전제로 한 인쇄비 등 경상비용 소요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사회통합업무지원 내역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충 및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스템 개발 단계이고 입국초기 외국인 대상 다국어(18개국 언어)로 교육하여야 하는 특성상 오프라인 교육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향후에는 종이 매체 중심의 홍보 및 교육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관련 경상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도모해야 함

○ 결론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이민자 지원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갖는 사업으로, 내역사업별 목표 설정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소년원생수용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령에 근거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최근 소년범죄 확대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출원생 자립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수행목적과 세부사업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고 다른 관련 재정사업과 연계 수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보호.수용 및 교육교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해당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성이 인정되며,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집행 효율성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출원생 자립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소년원생수용에 대한 직접적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다른 청소년자립지원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운영방식의 효율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령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용·보호 및 교정교화 활동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선도를 위한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

○ 소년원생이 아닌 출원생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밖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나, 출원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 중복 보다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출원생 자립지원(보조) 사업의 경우, 비행경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민간시설에서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되나, 일반적인 청소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원생의 효과적인 선도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 2025년에 수용규모 확대에 따라 출원생 1인당 사업예산이 11.5백만원으로 2024년의 15.5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25년 기준 소년원생 1인당 사업예산이 15.6백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등 자체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등 관리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특별한 적발사례 없음

○ 소년원 출원생의 자립지원기관 운영개선과 관련한 국회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이 확인되며, 운영개선을 통해 시설의 입주율을 개선한 실적이 인정됨

-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해, 소년원 출원생 자립지원기관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및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입주율을 2024년 말에 68%에서 2025년 말에는 88%까지 개선한 실적이 인정됨

-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수행기관이 영세하여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방식변경의 평가결과가 제기되었으며, 정원조정이나 환경개선, 홍보강화,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2025년에는 출원생 입주율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 부분이 인정됨

○ 소년범의 교정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차원에서 출원생 자립지원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 운영 성과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타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년원생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사업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갱생보호활동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령에 근거한 갱생보호사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따른 명확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사업운영과 성과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적정규모의 차별적인 갱생보호사업 수행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업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해당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의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그에 따른 사업성과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단일 내역사업으로서 공단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갱생보호대상자 규모의 합리적 추정을 통한 총량적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관련 법령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규정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을 통한 갱생보호사업의 수행 및 재원확보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갱생보호사업의 직접수행이 아닌 육성에 대한 책무를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갱생보호 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강조될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 복지지원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갱생보호사업의 특수한 사업대상자와 사업목적에 따른 보충적·특수목적적 지원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이 인정되며, 사업집행 과정에서의 중복수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갱생보호법인 및 공단에 대한 보조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적절히 구성하고 있으나, 사업자 유형에 따른 현행 2개 내역사업 구분에 추가하여 공단의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을 구분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규모의 증가율에 비해 지원규모 증가의 적정성이 확인되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추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지원규모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공단 운영비 증가에 비례해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간 교정시설 출소자 수 및 보호관찰 실시사건 규모 중 50%를 수혜자 규모로 산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수혜자 규모의 추정방식이 요구되며, 사업대상자 규모의 합리적 추정 및 지원비율의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규모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2026년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볼 때, 공단 인건비는 전년대비 4.9%인 1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단 사업비 중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는 전년대비 15.7%인 34.5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량적인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직접적인 갱생보호활동에 대한 지원비중이 적정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예산집행률이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월 및 불용, 집행부진 사유와 관련해 집행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최근 3년간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한 조치실적이 확인되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단기적 조치실적과 함께 향후 사업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지표의 설정이 적정한 편이며 이에 따른 목표대비 실적치의 달성정도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갱생보호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개선 및 성과관리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됨

○ 해당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의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그에 따른 사업성과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단일 내역사업으로서 공단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갱생보호대상자 규모의 합리적 추정을 통한 총량적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국가 기본 책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취약계층 법률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 - 다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자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의 개선이 일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간병비,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업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국가의 기본 책무 수행 및 국정과제 연계성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률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11.2%를 상회하는 등 성과지표 달성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그간의 재정 운용 및 사업 구조를 보다 효율화하여 피해자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됨

- '25년 간병비 지급액 인상(10→15만 원) 등 단가 현실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단순히 단가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혜 인원 확대 및 집행률 제고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특히 '26년 신설된 긴급생활안정비 등이 기존 제도와 과도하게 중복되어 예산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6년 국정과제인 '365스마일' 본격 시행에 따라 주말·야간·비대면 상담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시범 운영시 호응이 좋을 경우 전국 거점센터로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운용 로드맵 등이 마련될 필요

- '26년 경상운영비 절감(475백만 원) 등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긍정적이나, 인건비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는 바, 지출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서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됨 - 전년도 대비 11% 인상된 이유는 지난 10년간 거의 동결되었던 인건비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임. 따라서, 향후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이 필요한 경우, 연도별 점진적 인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100% 위탁 기관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역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 도입 가능성 및 성평등가족부의 해바라기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함으로써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임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진술조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진술조력인 퇴사의 주요 원인이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며, 차후에는 연도별 점진적 급여 인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진술조력인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소속인 '해바라기센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평등가족부의 해바라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의 대부분이 상근 진술조력인의 퇴사 및 결원으로 발생했으며, 주된 원인이 진술조력인의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부처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2023, 2024년도 실집행률이 80%에 미달되었으나 2025년도 집행률이 92%로 상향된 점을 우수하게 평가함. 상근 진술조력인의 퇴사 및 결원 발생 시 신규 고용을 신속히 수행한 부처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진술조력인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소속인 '해바라기센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평등가족부의 해바라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진술조력인 인력의 확충, 처우개선,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성과지표인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실적(건수)'는 본 사업의 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에는 목표 대비 80.7%로 부진했으나 2025년 실적이 반등한 점이 인정됨

○ 최근 2년간 실적이 성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치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법무부**
사 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선이 필요함 - '24년~'25년 예산 편성 시 산정된 지원 건수와 실제 실적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의 발생 사건 추이와 피해 유형별 조력 수요를 반영한 예측이 필요 -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분석 및 환류 노력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게 전담변호사를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라는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으로 실집행률이 88.9%에서 94.8%로 9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및 외부적 성과 미흡을 이유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았음

- 지원 실적 증감에 따라 지원 건별로 지급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불용액이 '24년 및 '25년 발생하였으며, '24년에 추가 지원 건수를 연 4,206건으로 산정하여 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함('24년: 1,865건, '25년: 2,354건). 이를 고려 시 최근의 발생 사건 추이와 피해 유형별 조력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예측을 실시하는 등 환류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분석 및 환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취업활동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국방부
사 업	전쟁기념사업회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은 전쟁자료 수집·보존과 교훈 확산, 공공외교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 대표 안보·역사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관람 수요와 자체 수익 한계를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구조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집행률 100%로 운영 안정성은 높으나, 인건비 및 경상비 비중 확대와 외부 용역의 반복 집행은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사례는 보조금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음. 또한 성과지표가 고객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질적 성과 반영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 기능을 고려한 예산 배분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와 성과 간 연계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행 기준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용역 계약의 단가 및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료 수집·연구·교육·공공외교 등 핵심 기능별 성과를 반영하는 다층적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부정수급(24년 휴직인력 인건비 지급 20,015,850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증빙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공공사업으로, 전쟁자료 보존·교육·공공외교 등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연 3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주요 공공문화공간으로서 국가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다만, 방문객 규모의 안정성 대비 자립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전략에 대한 수립의 필요성, 인건비·운영비 비중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노력의 필요성이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전쟁자료 수집·보존, 안보의식 및 미래세대 교육, 공공외교 등 사업목표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며, 관람객 증가 추세와 구체적인 사업 규모 제시는 타당함

-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를 유지하였고, 2026년 예산 증액(8.5%)도 수요 증가 및 운영 고도화 측면에서 설명 가능함

- 다만, 전시·교육·연구·공공외교 등 복합적 기능 간 예산 우선순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 기념행사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이 있음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간 이월·불용 없이 집행률 100%를 기록하여 높은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은 집행률과 성과지표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사업추진체계와 전달체계의 명료성이 있으나, 회의와 점검 및 개선절차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점검·환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 2024년 10월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 수의계약 사유 부적절 계약 및 일반수용비 사용 자산성 물품 구매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2025년 5월 22일 환수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과오지급금 19,523,950원이 국고로 반환되었음. 이에 추가적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됨. 이와함께, 외부용역과 계약 과정에서의 단가적정성 및 용역의 범위와 타당성에 대한 관리 고도화와 함께 연례적 반복집행 건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환류 및 개선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관람객 의견 수렴 등의 환류노력이 예산 및 정책반영에 연계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고객만족도(92.95점), 관람객 증가, 교육·전시·공공외교 활동 등에서 성과와 우수성이 확인됨

- 다만, 전쟁자료의 관리, 전쟁 교훈 확산, 전쟁 예방, 평화통일 기여 등의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평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방부
사 업	취업활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군 전역예정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및 사업구조 내실화 노력은 인정되나, 수혜규모 급감(△40.0%)과 예산규모 유지(△1.9%) 간 불일치가 확인되는바, 실제 인원 감소폭을 반영한 가변비 및 운영경비의 현실화(감액)가 요구됨 -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역량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단순 방문교육은 축소하고 간부 대상 심화 소집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 재설계 노력이 확인됨 - 다만, 수혜인원 급감(20.4만 명 → 12.2만 명)에도 불구하고 급식·교재비 등 인원 연동 가변비 절감분이 예산안에 적절히 환류되지 않아 단위당 지원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편성 단계의 추계 정밀도가 미흡함을 시사함 - 급식비(46%), 임차료(44%) 등 일부 운영 비목의 저조한 실집행률이 반복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거액의 낙찰차액 및 반납액 증가 추세('25년 7억 원 예정)를 고려할 때 실집행 단가에 기초한 예산 규모의 전향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 직접수행 방식 전환에 따른 일반용역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행정 효율화 성과를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의 인프라 공유 및 기능 연계를 통해 수혜인원 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정비 절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전역예정장병의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당위성은 명확하며, 외부평가 환류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 및 직접수행 방식 확대 등 자구 노력은 인정됨

- 군 특수성(계급정년, 조기 전역 등)에 따른 취업 지원의 국가 책무를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며,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간부 중심의 심화 교육으로 체질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노력 등 관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인정됨

○ 다만, 수혜인원의 급격한 감소(△40.0%)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투입 재원과 사업 규모 간의 정합성을 현저히 결여한 조치임

- 수혜대상이 20.4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축소되었음에도 가변비(급식비 등)의 환류가 미흡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노정함

- 특히 편성단계의 수요예측 실패를 집행과정에서의 대규모 현액 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관행이 확인되는바, 이는 예산 과다 확보에 따른 재정 사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보조→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구조의 불투명성과 유관 부처와의 기능 중복 해소 노력이 부족함

- 용역비 증액에 따른 행정효율화 성과가 미흡하며,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편성 단가가 시장 실거래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방증함

- 타 부처(보훈부 등)와의 협업이 정보공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프라 공동활용을 통한 고정비 절감 및 '원스톱 패키지' 강화 등 실질적인 재정 절감 성과는 제한적임

○ 종합하면, 성과지표 달성도는 양호하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예산 현실화 노력이 부재하므로, '감액' 조치를 통한 재정 운용의 정밀도 제고가 요구됨

- 축소된 수혜 규모를 엄밀히 반영하여 관행적 편성을 타파하고, '27년 예산 편성 규모를 실질 수요에 맞게 감액 조정해야 하며, 상기 일련의 사업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단순 교육인원 지표에서 벗어나 '장기고용 유지율' 등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보훈부와의 시설·전산망 통합운영을 통한 단위당 지원 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강력히 권고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행정안전부

지자체경쟁력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새마을운동지원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기록관리정책및교육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사업지원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재난안전산업활성화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지진대비인프라구축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재난구호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심리회복지원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마을기업육성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지자체경쟁력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특히 읍면동 중심의 복지와 안전 기능 강화 및 지역 맞춤형 공동체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은 사회적 고립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적 의의가 존재함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민 네트워크 운영, 컨설팅 및 공동체 기반 서비스 강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 일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과 기능상 유사·연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대면실사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는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청취하였음). - 최근 본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월 및 불용 규모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이후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집행잔액의 국고 반납 지연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와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 발굴과 민관협력 기반 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은 일정 수준의 정책적 의의가 존재함

- 다만,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성과의 현장 정착 및 전국 확산보다는 신규 모델 개발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은 측면이 존재함. 향후에는 신규 모델 발굴보다는 기존 우수사례의 확산과 지역 현장 안착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민 네트워크 운영, 컨설팅 및 공동체 기반 서비스 강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 일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과 기능상 유사·연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대면실사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식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청취하였으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에는 유사 기능 사업 간 역할 조정과 연계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최근 본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월 및 불용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이후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집행잔액의 국고 반납 지연은 재정운용의 비효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현재 성과지표는 협의체 수, 교육 인원 및 우편서비스 횟수 등 정량적 산출 중심 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고독사 예방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 예방 성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향후에는 고독사 감소율, 위기가구 발굴률, 지역 안전망 유지율 및 주민 체감도 등을 반영한 질적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됨 - 다만 최근 예산 편성은 사업 수요 및 집행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관성적 편성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과 2026년 예산 요구액이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수요 변화와 성과 분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선정 단체의 중도 포기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 수행역량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계평가 강화 및 NPAS 도입 등 관리체계 개선 노력은 인정되나,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회계 적정성과 절차적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사회적 편익 및 공익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지원 필요성과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 중복지원 검증 강화 및 수행단체 역량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됨

- 정부와 시장 기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공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은 본 사업의 정책적 의의가 분명함

- 최근 사업 운영은 예산 규모 축소 이후에도 지원 방식과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예산 요구액이 동일하게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사업 수요 및 집행성과를 반영한 재설계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공익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지원단체 수 및 평균 지원규모가 감소하고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성과 중심 재배분 체계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제한된 재원을 다양한 단체에 분산 지원하는 현재 구조는 사업별 정책효과 및 공익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성과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재정운용 필요성이 존재함

○ 일부 선정 단체의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해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선정 단계에서 수행역량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체의 회계역량,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서류심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심사체계 보완이 요구됨

○ 국회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NPAS 도입, 회계평가 강화 및 외부 회계검증 실시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관리체계는 회계 적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사회적 편익과 공익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 사업별 사회적 효과와 정책 기여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는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 측정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사업 특성상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간 차별성 및 중복성 검토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원 필요성과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 기반 재정배분 체계 강화, 수행단체 역량평가 고도화 및 사회적 편익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새마을운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일부)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대폭: 연수원리모델링예산)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수준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단, 대부분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국고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및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2026년 신규 요구된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단체 소유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공공성, 수익자 부담 원칙 및 민간자산 형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지원의 적정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본 사업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함 - 교육, 홍보, 연수 목적의 일부 사업은 수익자 부담 적용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적 자립 기반 형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자부담 확대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국고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성과지표는 교육 인원·행사 참여자 수 등 정량적 참여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효과와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MZ세대 참여 사업 역시 단순 행사 참여 중심이 아닌 청년층의 지속적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수준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됨. 현재 사업 구조는 민간경상보조 중심의 높은 국고 의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과 민간단체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26년 신규 요구된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단체 소유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공공성, 수익자 부담 원칙 및 민간자산 형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총사업비 약 150억원 중 약 12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구조는 국고지원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높음

- 정부 관련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연수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보다는 현실화된 사용료 체계와 자부담 확대를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 사업이 국고보조율 100%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적 자립 기반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

- 교육, 홍보, 연수 등 수익자 부담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사를 통한 교육 및 홍보 목적의 현행 사업 구조는 실질적 정책성과 대비 재정 효율성이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MZ세대 참여 확대 사업은 청년층 참여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재와 같은 행사·참여 실적 중심 운영 방식만으로는 청년층의 자발적·지속적 참여 기반 형성과 조직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성과지표는 교육 인원, 행사 참여자 수 및 마을가꾸기 실적 등 참여 규모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지역 현안 해결 실적, 공동체 유지 성과 및 청년층 지속 참여율 등 질적 성과지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별 자부담 확대와 성과 중심 예산체계를 병행하여 국고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전면 폐지보다는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중심의 감액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기존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자부담 확대 및 성과 중심 구조개편을 통해 국고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ODA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국제협력 측면의 의의는 인정됨. 특히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방식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존재함 - 최근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내역사업 통합 및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예산 항목과 세부 산출내역 간 차이가 존재하여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또한 초청연수 및 현지사업은 항공료, 환율 및 현지 정세 등에 따라 실제 집행 변동 가능성이 큰 구조이므로 사업 규모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협력관 운영, 모니터링 및 행사성 경비 등 간접성 비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현지 주민 수혜 중심의 사업 구조로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 집행 안정성과 실집행 수준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됨 - 아울러 현재 성과지표는 초청 인원 수 및 시범마을 수 등 투입대비 산출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주민 자립역량 강화와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민 소득 변화, 자립기금 조성 및 사업 유지율 등을 반영한 질적 성과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ODA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국제협력 측면의 의의는 인정됨

-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모델을 기반으로 단순 물적지원 중심의 ODA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정세 불안, 환율 변동, 항공료 상승 및 행정역량 부족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집행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 지연 및 집행 차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사업은 항공료와 체류비 등 실비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실제 집행 규모 변동 가능성이 큰 구조임

- 최근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내역사업의 통합 및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업 간 예산 구분과 세부 산출내역이 일부 상이하게 제시되어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특히 시범마을 운영 과정에서 협력관 운영, 모니터링 및 행사성 경비 등 간접성 비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주민 수혜 중심의 예산 구조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현재의 성과지표는 초청 인원 수, 시범마을 수 등 투입대비 산출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주민 소득 향상, 자립역량 강화 및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주민 자립기금 조성, 현지 정부 정책 반영, 사업 종료 이후 유지율 등 질적 성과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사업 규모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국가별 집행 가능성과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다 보수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조건 하에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일부 예산은 실집행 수준 및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여 조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DMZ평화둘레길 대장정' 내내역사업) - 본 보조사업과 타 부처·지자체의 유사 행사(평화·통일 관련 걷기 행사) 간 대상·내용 측면에서 차별성 크지 않은바 관련 사업 간 조정·감액이 필요함. 또한 행사성 내내역 사업만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사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인식 개선·가치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업구조 개편을 권함 - 예산 감액으로 직접 수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단가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간접적 외부효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부재한바, 지원 규모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감액·사업 폐지 등 소극적 환류를 넘어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 강화가 필요함 - 기존 성과지표인 '공동체 행복지킴이 봉사활동 실적'은 사업 구조 변화('공동체 행복지킴이 봉사단' 내내역 사업 폐지)에 부합하지 않고, 질적 성과 입증 근거도 부족한바, 성과달성도 수준이 미흡함. 향후 결과 중심 신규 지표 개발 및 정성 성과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국정과제(117번) 등 상위 정책과 정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공익성 강한 민간 활동으로서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필요성도 존재함

- 다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내내역 사업과 타 부처·지자체의 유사 행사(평화·통일 관련 걷기 행사) 간 차별성 크지 않은바 관련 사업 간 조정·감액이 필요함

○ 사업 목표 자체의 정책 정합성은 갖추고 있으나, 행사성 내내역 사업('DMZ 평화둘레길 대장정')만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예산 감액으로 직접 수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단가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간접적 외부효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부재한바, 지원규모 적정성 판단이 곤란함

- 인식 개선·가치 확산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일회성 행사 외에도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공개 공모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 내용 구성을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함

- 참여자 1인당 소요 예산 및 재정수요 대비 과다 산정 가능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과거 집행단가와의 비교, 유사 프로그램 단가와의 비교 등 관련 근거 보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집행 적정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은 양호한 편이나, 환류 및 개선노력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연장평가 및 국회·언론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 감액, 사업 폐지 등 형식적 환류만 작동할 뿐 사업 내용의 개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통제 강화, 지표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고도화 노력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기존 성과지표인 '공동체 행복지킴이 봉사활동 실적'은 사업 구조 변화('공동체 행복지킴이 봉사단' 내내역 사업 폐지)에 부합하지 않고, 질적 성과 입증 근거도 부족한바, 현재로서는 본 사업의 성과달성도 수준 미흡하다고 판단됨. 향후 결과 중심의 신규 지표 개발 및 정성 성과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노력이 필요함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사업 내용 차별성과 성과 입증이 불충분하고 지원 규모 적정성 판단을 위한 근거도 미흡한바, '감액'('DMZ평화둘레길 대장정' 내내역사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구조 개편 및 성과관리 보완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내내역사업 전반) - 교육·캠페인·행사 중심 사업구조('바르게 서로이음 사업', '바른문화확산 국민운동(범국민 걷기대회, 시민리더 교육)' 내내역사업)로 각 내내역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과성이 불분명함 - 예산 감액으로 직접 수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자 특정은 어렵고, 단가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재정수요 대비 지원 규모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환류 및 개선 노력이 예산 감액, 일부 유사 사업으로의 대체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참여자 만족도, 공동체 가치 이해도 등 사전·사후 설문 기반의 신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질적 성과 입증 근거가 부족한바, 성과달성도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됨. 향후 결과 중심 신규 지표 개발·선정과 더불어 정성 성과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바르게살기조직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국정과제(117번) 등 상위 정책과 정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공익성 강한 민간 활동으로서 사회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 필요성도 존재함

○ 사업 목표 자체의 정책 정합성은 갖추고 있으나, 교육·캠페인·행사 중심 내내역 사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단가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 적정성 판단에도 한계가 있음

- 직접 수혜자는 명확하지만 간접 수혜자 특정이 어렵고, 단가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참여자 1인당 소요 예산 및 재정수요 대비 과다 산정 가능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과거 집행단가와의 비교, 유사 프로그램 단가와의 비교 등 관련 근거 보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집행 적정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은 양호한 편이나, 환류 및 개선노력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연장평가 및 국회·언론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 감액, 일부 유사 사업으로의 대체 등 형식적 환류만 작동할 뿐 사업 내용의 개편, 성과관리 고도화 노력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참여자 만족도, 공동체 가치 이해도 등 사전·사후 설문 기반의 신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질적 성과 입증 근거가 부족한바, 현재로서는 본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미흡한 수준이라 판단됨. 향후 결과 중심의 신규 지표 개발·선정과 더불어 정성 성과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노력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사 중심의 사업 구조에 따른 목표 달성의 한계, 단가 산출 근거 부족에 따른 지원규모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형식적 환류에 머문 개선 노력, 성과지표의 미흡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구조 개편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내역사업 전반) - 구체적 재정수요 분석(참여 인원, 단가 산출 근거 등)이 미흡하여 지원규모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징후 22건, 부정·과오수급 의심 2건, 부정수급 적발 1건, 미반납 1건 등 반복 발생하였는바, 사전 예방 중심의 부정수급 등 관리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24년 연장평가 지적 사항('남북실향민문화육성사업' 내역사업 폐지 권고, 성과지표 개선 요구, 목적 외 사용 발생에 따른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필요) 관련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 -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하고 행사 개최, 형식적 만족도 조사 외 정성 성과자료도 미흡한바, 성과달성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분단과 실향이라는 국가 차원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성 강한 사업인바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적으로 실향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바 타 부처·지자체의 보조적 지원 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님

○ 사업목적의 방향성과 사업 내용 자체는 타당하나, 지원규모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님

- 이북도민 관련 행사·남북실향민문화육성사업 등은 실향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도민사회 활성화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에 부합함

- 다만, 직·간접 수혜자가 정의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참여 인원, 단가 산출 근거 등 정량적 재정수요 분석이 미흡하여 지원규모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부정수급 등 관리와 환류·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부정징후 22건 통보, 부정·과오수급 의심 2건 확인, 부정수급 적발 사례 1건, 행정 오류에 따른 미반납 사례 1건 등이 반복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현 관리 체계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적발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사전교육·점검 등 예방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되나 여전히 예방 관리 체계의 지속적 보완·강화가 요구됨

- '24년 연장평가의 성과지표 개선 요구 등 지적 사항 관련 대응 조치 및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하고, 행사 개최 및 형식적 만족도 조사 외 정량·정성 성과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목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바, 성과달성도는 미흡한 수준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보조사업은 재정수요 산정 근거 부실, 반복적 집행 오류 및 부정징후 발생, '24년 연장평가 지적사항 미반영 및 환류체계 미흡, 성과달성도 입증자료 미흡 등 사업 전반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재정 책임성 및 성과관리 강화 차원에서 '감액'으로 판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기록관리정책및교육**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3 및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기록유산 보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ICDH는 비영리 국제기구 성격상 자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국비 지원 필요성이 존재하며, 최근까지 센터 개관 및 조직 안정화 등 초기 운영 기반 구축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성과지표는 교육 인원, 행사 개최 실적 등 정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사회 기여도, 기록유산 보존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기록유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단순 시스템 운영 수준을 넘어 국제 기록유산 정보의 통합·활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향후에는 국제 표준화 기여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준 및 국제사회 파급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유네스코(UNESCO)와의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및 기록유산 보존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ICDH는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영리 국제기구 특성상 자체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최근까지 센터 개관 및 조직 운영 안정화 등 초기 기반 구축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행사 개최 건수, 교육 인원 등 정량 중심 성과지표 비중이 높아 국제적 영향력 및 실질적 정책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향후 국제 표준화 기여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록유산 보존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 파급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계기록유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기록유산 정보의 통합·활용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전략 및 활용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세부사업의 '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 보조사업은 유해 반입·보관에 관한 쟁점 사항 해소 후 사업 종료를 대비한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한 바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동 보조사업은 향후 전국 단위 위령시설이 완공되어('28년 하반기) 유해 이전이 완료되면 폐지될 사업인바, 후속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현행 성과지표로 실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바, 사업목표와 연계성 높은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만족도')는 동 보조사업 성과와 직접 연계된 지표가 아닌 포괄적 만족도 지표로 동 보조사업의 범위와 불일치함. 하여 달성도 자체가 양호하더라도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단순 만족도 지표가 아니라 보존·관리의 질, 명예회복 기여도 등 본 보조사업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규 성과지표 발굴 및 개발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세종시 임시유해안치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1-2-10)와 연계된 국가 책임 이행 성격의 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대체 수행이 부적절하며, 재정지원 중단 시 시설관리 공백 및 희생자·유족 권리구제 지연이 우려되는바 재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보조사업은 전국 단위 위령시설이 완공되어 이전 시까지 임시로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바, 향후 전국 단위 위령시설이 완공되어('28년 하반기) 유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폐지되어야 할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은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접 수혜자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25년 기준 유족 포함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민 통합에 따른 간접적 후생효과도 상당한바 사업내용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됨. 사업 공공성을 고려할 때 현행 보조율 100%는 타당함

○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의 집행 적정성,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자체적 개선 노력이 확인되지는 않는바 환류·개선노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 평균은 89.1%('25년 91.7%, '24년 81.7%, '23년 93.9%)으로 적정한 수준이고, 각종 사업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본적 관리 수준은 적정함

- 다만, 외부지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유해 반입·보관에 관한 쟁점 사항 해소 후 사업 종료를 고려한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현행 성과지표는 동 보조사업 성과와 직접 연계된 지표가 아닌 포괄적 만족도 지표로 지표 범위와 동 보조사업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실제 사업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음. 단순 만족도 지표가 아니라 보존·관리의 질, 명예회복 기여도 등 본 보조사업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규 성과지표 발굴·개발 노력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모두 양호한 수준이나, 사업 종료를 고려하여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성과지표와 실제 사업성과 간 연계성이 낮은바 지표 개선 노력이 요구됨. 이에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과거사관련사업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현행 지표로는 명확한 성과 달성도 확인이 어려우며 환류·개선노력도 미흡한 상황인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성과 책임 제고 측면에서 '감액'으로 판정함 - 성과지표 한계에 대한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도 중심 지표에 머물러 있으며, 해당 지표의 범위와 본 보조사업 범위가 불일치하여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상당한바, 결과 중심의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시급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과거사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지니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정과제(1-2-10) 등 상위 정책목표와도 정합성을 지님. 국가 차원의 책임 이행으로 지자체·민간의 자체 추진이 곤란하며 예산 외 정책 수단으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인바 재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간접 수혜자가 명확하고 간접적 후생효과도 상당한 수준이며, 국가의 책임 이행 성격이 강한바 현행 보조율 수준 등 지원규모도 적정함. 이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의 집행 적정성,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지표로서 미흡한 수준인바 환류·개선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대부분의 보조사업 집행률은 평균 90% 이상으로 양호함.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보조사업의 일시적 집행 부진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에 의한 것으로 ’25년 4월 준공 완료 후 해소·개선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24년, ’25년) 및 보조사업평가(’25년)에서 반복적으로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아,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만족도’ 지표를 도입하고 정성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결과지표로서 미흡한 수준임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꾸준히 목표치를 상회했으나 해당 지표의 범위와 각 보조사업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만족도, 행사 수·참석자 수 등 산출지표를 넘어, 사업목표와 연계된 질적 성과지표 개발이 시급함

○ 본 보조사업은 현행 지표로는 명확한 성과 달성도 확인이 곤란하며 환류·개선노력도 미흡한 상황인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성과 책임 제고 측면에서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반복적 집행 부진 및 환류·개선 노력 미흡, 현행 성과지표 한계 및 정량적 성과 입증 미흡 등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상당한바 '감액'으로 판정함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반복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바, 전년도 집행잔액을 고려한 감액 또는 실제 공정률을 고려한 연차별 재원 조정이 필요함.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의 경우 구체적 집행부진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반복 지적사항인 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이나 성과지표 개선 노력이 미흡함 - 현행 성과지표의 범위와 각 내역사업 범위가 불일치하여 정량적 지표 달성도가 실제 사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정량적 성과 입증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지니며, 「4·3사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정과제(10번) 등 상위 정책과도 높은 정합성을 보임.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 강조된 사업으로 예산 외 수단으로 대체가 곤란하고 지자체 자체 추진 시 재정 부담 한계가 있는바, 재정사업 필요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사업목표-추진전략-사업내용 간 정합성, 세부사업·내역사업 간 연계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됨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명확하고, 도민·방문객 등 간접 수혜자를 포함하면 사업에 따른 후생효과는 충분한 수준이며, 보조율 수준 또한 국가적 책임 이행 성격 및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적정함

○ 본 보조사업의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및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반복적 집행 부진으로 집행 적정성과 및 환류·개선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제주4·3 유적보존)’,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 평균이 각 81.7%, 44.6%로 부진한바, 개선이 필요함.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에 따른 미집행분이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집행 독려 이상의 전년도 집행잔액을 고려한 감액 편성, 연차별 재원 조정 등 투자계획과 집행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제주4·3 유적보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부진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바 보완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와 각 내역사업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정량적 지표 달성도로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사업목표와 연계된 결과지표 개발 노력이 시급함

○ 본 보조사업은 반복적 집행 부진 및 환류·개선 노력 미흡, 현행 성과지표 한계에 따른 정량적 성과 입증 미흡 등 재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상당한바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행정비용 비중이 50%를 상회함. 다만, 인건비·기본운영비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 성격을 가지며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감액보다는 행정비용의 효율적 관리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함 - 결과 중심 신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성과관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사업별 정량·정성 성과지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로서는 실질적 지표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			

□ 종합평가 의견

○ 「강제동원조사법」에 근거하여 유족복지, 추도, 조사·연구, 문화·학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10번)와 연계된 국가 책임 이행 성격의 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자체 수행이 어렵고 피해자·유족 고령화에 따른 시급성이 존재하는바, 정부개입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유사·중복 가능성도 크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10번) 및 상위 프로그램 목표와 연계되어 상위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의 고통 위로 및 국민 화합 유도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수혜자 규모 및 잠재적 후생효과도 충분하여 사업내용과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비용 비중이 50% 이상으로 적정성 점검이 필요함. 환류 및 개선 노력은 결과 중심 신규 성과지표(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행정비용 비중이 50%를 상회함. 다만, 인건비·기본운영비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 성격을 가지며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감액보다는 행정비용의 효율적 관리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함

- '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결과 중심 신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성과지표(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신규 지표 발굴·선정이 필요함

- 전국합동위령제·추도순례 등 행사 운영뿐 아니라 생존자 장수기념품, 장례지원, 유족복지지원금, 위패관 운영 등 피해자·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지표가 부재한바 신규 지표 발굴이 필요함. 이는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 사항이기도 함

- '25년 성과관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사업별 정량·정성 성과지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로서는 실질적 지표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

○ 본 보조사업은 국가 책임 이행 및 피해자·유족 고령화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단순 감액보다는 집행 구조 및 성과관리 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에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 책임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위로보상금 지급은 신청주의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신청 건수 감소와 심사 탈락 등으로 최근 지속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질적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한 민주화운동 보상사업과 비교할 때 보상금 산정체계 및 지원범위에 차이가 존재하여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고, 현재 계류 중인 법률 개정 논의를 포함하여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2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방식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발굴 및 지원체계의 적극성 제고가 요구됨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예산의 경우, 재단의 자부담 비율이 전체 보조금 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여, 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지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변경했으나, 만족도 조사 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 책임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사업의 상당 부분이 기관운영경비, 법정 의무지출 및 법령상 지원의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평가 및 재량적 구조조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특히 보상금 지급사업은 신청주의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최근 신청 감소 및 반복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집행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위원회 운영사업의 경우 최근 실집행 수준 대비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2026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1,850백만원이 요구되어 증가폭이 큰 수준이며, 주요사업비 및 운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 근거와 사업 효과 검증이 필요함

○ 향후에는 피해자 발굴 및 지원체계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재단사업 역시 단순 행사·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국민 체감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단 지원사업은 사업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폭의 증액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의 구체화 및 사업별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26년 민주주의 연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략 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짐.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민주화운동 유적 연구 등은 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 내용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수 과다 추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 조정을 통해 실질 수혜 규모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정확성을 제고하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임 - 실효적 내부통제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내·외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목 사용 부적정 및 증빙 미비' 사유로 지적이 반복되고, 여비 지급 규정·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준수 관련 지적도 존재하는바, 지속적 관리 강화 노력이 요구됨 - 결과 중심 성과지표 체계로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 내용의 공공성이 크고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관련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개입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중복 가능성도 크지 않음

○ 사업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내역사업 내 예산 배분과 중장기 전략 간 정합성이 부족함

- '26년 예산에서 전략·실행과제와 직접 연계된 '민주주의 연구' 예산이 전액 삭감('25년 517백만원→'26년 0원)되었는바, 사업목적 및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부정수급 등 관리 노력은 인정되나 내·외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목 사용 부적정 및 증빙 미비' 사유로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여비 지급 규정·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준수 관련 지적도 존재하는바, 지속적 관리 강화 노력이 요구됨. 또한 환류·개선노력이 미흡한바,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결과 중심 성과지표로의 지속적 전환 노력이 필요함

○ 산출 중심에서 결과 중심 성과지표 체계로 전환 노력이 진행 중이나 아직 미완인 상태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예산과 전략 체계 간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 등 관리 노력 강화, 환류·개선노력 강화, 결과 중심 지표체계로의 고도화 등의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수혜자 규모 과대 추계 우려, 집행 효율성 미흡 등을 종합할 때 '감액'이 필요함 - '기념사업회 및 재단지원' 내역사업 수혜자 규모 관련하여, 온라인 매체 특성상 동일인 중복 접속에 따른 과대 추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순 방문자 수 분석 및 중복접속 보정계수 등을 도입하여 산정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사 관련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반복, 기술적·행정적 인프라 공유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여지, 부정수급 등 관리 부실 등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민주화보상법」 등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교육·문화·학술연구 등을 지원함. 사업 특성상 수익 기반 운영이 불가능한바 지자체·민간의 자체 수행이 어렵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보상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개입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중복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직·간접 규모 산정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기념사업회 및 재단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6년 기준 기념·교육·학술·콘텐츠 분야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신규사업이 도입되고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사업 내용과는 대상 및 운영 방식의 차별성이 인정됨

- ‘기념사업회 및 재단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중복접속·복수 참여에 따른 과대 추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향후 순 방문자 수 분석과 중복접속 보정 계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보조사업의 경우 ’23년·’24년 연속 집행 부진을 보였는바, 공사 관련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유사 집행 부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기념사업회 및 재단지원’ 내역사업은 기술·행정적 인프라(예: SNS 운영 시스템, 영상 제작·편집, 플랫폼 관리) 공유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여지가 상당함. 반복적 부정수급 징후 발생, 징후 통보 후 점검 기간 미준수, 집행잔액 미반납 사례 발생 등 예방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미흡한 수준인바 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질적 성과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었고, 적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직·간접 수혜자 과대 추계 우려, 공사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반복, 공통 인프라 활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여지, 부정수급 등 관리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감액'이 필요함 - 향후 위원회 활동 종료를 고려한 잔여 사업 정리 전환이 필요함 - 수요 추계 및 업무 범위 중첩 등을 검토하여 사실조사단 운영비의 합리적 감액이 필요함 - 실적보고 지연, 정산 후 미반납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도 현장 점검 여부 확인되지 않는바, 보조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함 - 최근 3년간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 성과 실질적 환류 노력이 미흡함. 특히 현행 성과지표(여수 순천10 19실무위원회 심사 실적)의 목표 설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도전성이 떨어지며, 질적 성과 측정에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처리율 지표 도입과 더불어 질적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여순사건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책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비 대폭 축소 및 잔여 사업 정리·전환을 통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조정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 효율성 한계가 상당함

- 지원단·보고서작성기획단·사실조사단 간 업무 범위 검토하여 사실조사단 운영비의 합리적 감액이 필요함

- 실적보고 지연, 정산 후 미반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장 점검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는바,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집행 책임 강화가 시급함

- 처리율 저조, 성과지표 포괄성 한계 등 최근 3년간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 성과나 실질적 환류 노력 미흡함

○ 현행 성과지표(‘여수·순천10·19실무위원회 심사 실적’)의 목표 설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도전성이 떨어지며, 처리 건수 중심 단일 정량지표에 의존하여 사업의 질적성과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처리율 지표 도입과 더불어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감액이 필요함

- 향후 위원회 활동 종료를 고려한 잔여 사업 정리·전환, 수요 추계 및 업무 범위 중첩 검토를 통한 사실조사단 운영비의 합리적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난안전산업활성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보조사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 판로개척 지원사업(730백만원)과 목적이 중첩되고 유사 박람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사업 존치의 독자적 필요성 입증 곤란 · 참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배 이상 차이남에도 차등보조율 없이 일률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보조사업평가의 '감축' 권고, 재난안전사업 평가 3년 연속 '보통' 수준 성과지표 달성도의 목표치 도전성이 낮고,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검증 구조가 형성되지 못함 · 박람회 등 예산의 중첩 투입에도 산업 전반의 판로개척 기여도가 실증되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재난안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보조사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미흡함. 특히 한국건설안전박람회(고용노동부 후원),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소방청), 국제안전보건전시회(안전보건공단) 등 유사 안전분야 박람회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세부사업 내 '판로개척 지원사업'(730백만원)과도 목적·기능이 중첩됨. 부처가 유사 중복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점은 자체 점검의 엄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박람회는 국내외 판로개척 목적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수출상담회는 외국 바이어 매칭, 비즈니스포럼은 네트워크 형성으로 각각 수단의 차이는 인정하나 판로개척이라는 동일 목표를 향해 박람회·수출상담회·비즈니스포럼이 중첩 추진되는 구조에서 각 사업의 고유 기여도와 효과 귀속을 측정하는 체계가 부재함

- 중복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각 사업의 순 효과(net effect)를 입증하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함

○ 기준보조율 준수는 위법이 아님을 의미할 뿐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참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상황에서 동일 50% 보조율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유지됨. 2024년 보조사업평가의 '감축' 권고는 보조율 수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기준보조율 준수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움

○ (집행 효율성) 2023년 보조금 실집행률 92.2%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감액 및 성과지표 개편이 이행된 점은 인정되나,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러 사업 개선 동력이 부족함

○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가 3년 연속('22~'24년) 100점(만점)으로 목표치의 도전성이 현저히 낮음. 2025년부터 계약추진액 달성률(40%)을 추가한 복합지표로 개편한 것은 긍정적이나, 목표치가 전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수준에 그쳐 도전적 목표 설정이라 보기 어렵고, 3년 연속 만점 달성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부처 스스로 재정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분야 해외 수출기업 비중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수의 판로개척 지원 사업(박람회·수출상담회·비즈니스포럼)에 연간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업계 전반의 수출 기여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국민안전의식선진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개선 방안이 요구됨 - 23년에 21년, 22년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25년에도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확인되는 바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사업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 5대 안전분야(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를 통해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교육인원을 바탕으로 수혜자를 산출('25년 안전취약계층 교육인원: 17만 9천명)하고 있으며, 신청지역 및 신청액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원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23년 98.2%, '24년 97.3%, '25년 96.2%로 실집행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21년, '22년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환수 후 보조금 미지급 및 삭감을 조치하였으며('23.11.23), 운영지침서를 통해 부정사례를 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25년 부정수급이 다시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이 재발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5년은 일부 지자체의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등록(3개월 이내) 지연으로 부정수급 인식된 건으로, 향후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사업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성과지표 개선이 지적됨에 따라 안전교육 차시에서 안전교육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됨

○ 본 보조사업에서는 안전교육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당 지표는 안전체험교실 만족도를 50%,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만족도를 50%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만족도는 지난 3년간 4.66, 4.73, 4.68로 안전교육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하나 23년에 21년, 22년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25년에도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확인되는 바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사업개선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지역안전개선컨설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연구용역비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연구용역비 16% 불용에 대한 사업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지역안전지수 기반 안전진단을 통한 지역 안전수준 향상 지원

- 지역안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 최근 재난.사고 사례를 토대로 잠재적 위험 및 심화 위험인자 분석·발굴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국정과제 72-8,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에 해당됨
- 목표달성 시점은 안전사업지구 사업모델 개발('26.10월)로 되어 있음

○ 유사중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예산집행은 '24년 연구용역비 935백만원 중 151백만원인 약16% 낙찰차액으로 발생 및 불용되었으며, 연구용역비 비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사업 추진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하며, 1단계는 위험분석·발굴, 2단계는 사업화 기반 마련, 3단계는 경감사업 추진으로 지자체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음

○ 부정수급 등 관리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행하려는 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에 해당함

-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능력, 부정수급 등 검토결과를 실시하였음

○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현황은 '25년에 점검회의(8.12), 워크숍(12.16), 최종보고회(12.23) 등 3차례 실시하였음

- 다만,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제출은 '26.2월 예정임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성과목표 설정 등 수립 및 관리 철저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승강기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 및 승강기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지원

○ 또한, 국내 승강기 업계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에게 국내 승강기 산업 수준 홍보 등 산업진흥 도모

- 국제표준화회의(ISO) 및 해외승강기 엑스포 참가
- 해외 주요 국제승강기엑스포의 한국관 운영. 참가기업 지원
- 국내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승강기박람회 참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국정과제 72-8,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에 해당됨
-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반 확충

○ 유사중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예산집행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목적은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주관임

- 온라인 수출 상담회, 국제승강기엑스포 한국관 임차제작 등에 활용

○ 부정수급 등 관리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0조 및 제65조에 따라 자금 보조 가능 명시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전액 예산 집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주관하며,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관리, 집행 점검, 성과 관리 측면에서 체계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함

-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성과 평가 등도 명확히 하라고 하였음

○ 따라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운영하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및 실행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핵심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하락(80.4%→64.3%)하고 핵심 성과지표가 목표(60%) 대비 39.5%에 그치는 등 집행 효율성과 성과달성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확인됨 · 국회 결산 심의, 재난안전사업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등 복수의 외부 평가에서 일관된 부정적 판정이 반복되며, 개선 조치에도 불구 실집행률이 악화되어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 · 사업구조 개편의 방향성은 인정되나 효과 검증 없이 유사 규모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집행 역량에 기반한 예산 감액 조정이 불가피함			

□ 종합평가 의견

○ (집행 효율성 심각 저하)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80.4%에서 2025년 64.3%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핵심 성과지표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 추진율은 목표(60%) 대비 2023년 53.3%, 2024년 44.0%, 2025년 39.5%로 악화되어 왔음

- 토지확보 지연, 주민동의 미확보, BF인증 등 행정절차 장기화 등 구조적 집행장애 요인이 반복되고 있으나, 부처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매년 유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월이 반복됨

○ (국회 결산 시정요구 3년 연속 미이행) 국회는 2022~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지연 문제를 3년 연속 지적하고 보조금 관리 개선, 모니터링 강화, 대피시설 확충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 개선이 부진함

- '24년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훈련 예산이 소폭 감액된 점은 확인되나, 감축 판정의 핵심 취지인 사업구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집행률은 오히려 악화되어 환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 보조사업 편성의 적정성 문제) 2026년 신규 편성된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는 법적 근거에 의한 타당성은 인정됨. 다만 수혜자 8,700명은 2025년 2~3월 2개월 측정값에 기반한 추정 수치로, 피해 전 기간 대표성 및 실거주 인구 반영 여부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함

- 보조율 70%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임이 확인되나, 동일 세부사업 내 타 보조사업(30%) 대비 현저한 차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형평성 검토가 여전히 요구되며, 수혜 대상이 최종 확정된 규모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성과관리 구조 미흡) 교육이수율(95.3%)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사이버교육 중심의 형식적 이수에 그치고 있어 교육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실정임

- 만족도(6개 지자체 표본)는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질적 성과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품질심의 3단계 도입은 절차 개선이지 성과 측정 체계 개선이 아님. 사이버교육 만족도 수치(79~94.8%)는 지자체 간 편차도 상당하여 균질한 성과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음

- 법령에 따른 일률 배분 구조임은 인정되나, 이는 배분 방식 개선 불가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집행실적 연계 인센티브 구조 도입 등 재정 효율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12년간 185.5억원 투입 대비 졸업생 591명(1인당 3,140만원) 배출에 그쳐 정책 수요(부족 21,477명) 대비 기여가 미미하고, '24년 연장평가 권고('감축·방식변경')에도 중기계획이 오히려 35% 확대 편성되어 평가결과와 예산계획 간 정합성이 결여됨 · 결산집행률(98~99%)과 달리 80% 기준 이하의 실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업 고유 성과측정체계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12년간 총 185.5억원을 투입하여 약 5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그쳐, 졸업생 1인당 약 3,140만원의 비용 소요. 부처 제시 재난안전산업 종사자 부족 인원 21,477명('22년 기준) 대비 연간 약 140명 수준의 배출 규모는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 기여가 미미

- 보조율 70%의 타당성 근거가 취약하며, 사업 참여횟수에 따른 보조율 조정도 '24년에서야 도입

- 보조사업의 직접적 유사중복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교육부·국토부 등 타 부처의 유사 인력양성 보조사업과의 사업방식 비교를 통한 효율성 검증이 필요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71.1점으로 '일정수준 감축, 사업방식 변경' 평가를 받았음에도, 중기재정계획상 2025년 2,110백만원 → 2029년 2,850백만원으로 약 35% 확대 편성 됨으로서 평가결과와 예산계획의 정합성 결여

- 기존 석·박사 과정 지원 방식에서 학사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6년 대학 4개소 신규 공모를 예정하고 있음. 사업 지원 방식의 구조적 전환임이 인정됨. 다만, 기존 석·박사 과정의 졸업생 재난직무 배치율·취업률 등 핵심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체계를 학사과정으로 전환하는 타당성 근거가 미흡하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및 취득 경로와의 연계 구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학사과정 전환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다소 불분명함

- 수혜자 수가 연간 139~145명에 불과하여 국정과제('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제한적

○ 집행률(결산 기준)은 98~99%로 양호하나, 실집행률은 '24년 재난관리분야 79.2%(396/500백만원), 지진방재분야 76.7%(1,227/1,600백만원). '25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재난관리분야 27.3%(123/450백만원), 지진방재분야 37.0%(533/1,440백만원)로 저조

- 이는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실제 사업목적에 따른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보조금 집행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재난관리전문인력 학위취득율' 지표가 '25년 달성도 100%(목표 73% 대비 실적 75.8%)가 확인되나, 동 지표는 배출 단계의 산출(output) 지표에 불과하여 재난직무 배치·역량·현장기여를 입증하는 결과(outcome) 지표로서의 기능은 미흡함. 성과측정체계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지진대비인프라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24년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이 높은 자부담률(80%)로 인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인증비 지원' 중심의 소극적 사업으로 축소됨. 이로 인해 내진성능 미달(NG)이 예상되는 취약 건축물은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고, 이미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위주로 지원이 쏠리는 '역선택에 따른 정책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음. 단순 비용 보조(Direct Subsidy)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다각적 패키지 지원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요구됨 · 최근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80.5%('23) → 74.9%('24) → 57.9%('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 부족에 따른 불용 및 예산 감액이 반복적으로 발생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국가 책무 수행 및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안전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참여 유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현행 사업은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자부담 여력이 있는 건축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재난위험도 및 취약도 기반 우선지원 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 효과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 존재

- 2024년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이 높은 자부담률(80%)로 인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인증비 지원' 중심의 소극적 사업으로 축소됨. 이로 인해 내진성능 미달(NG)이 예상되는 취약 건축물은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고, 이미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위주로 지원이 쏠리는 '역선택에 따른 정책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음. 단순 비용 보조(Direct Subsidy)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다각적 패키지 지원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요구됨

○ 집행 효율성

- 최근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80.5%('23) → 74.9%('24) → 57.9%('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 부족에 따른 불용 및 예산 감액이 반복적으로 발생

- 수요 기반 사업구조로 인해 예산 대비 실제 집행 규모의 변동성이 크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재난 피해 저감 효과는 인정되나, 현재 성과는 지원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재난취약시설 안전성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법정 훈련사업으로서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보조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동일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예산 산정의 정밀성 및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또한 훈련사업 특성상 성과지표가 정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투입 대비 성과 검증 체계의 고도화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재난대응훈련 수행을 지원하는 법정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앙 주도의 훈련 기본계획 하에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하는 구조로 지역별 재난위험도, 인구규모, 재정여건 및 지역별 위험특성 반영 및 자율성 확보 수준은 제한적

○ 광역(410백만원), 기초(570백만원) 의 일률적인 지원 구조는 재정자립도·재난위험도·훈련성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정액 배분의 구조는 성과 및 수요 기반 예반 배분 체계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고, 지원규모가 과다편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지역별 재정여건과 재난 특성을 반영한 질적 전환이 요구됨

○ 보조사업은 훈련실시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훈련 결과가 실제 재난대응 역량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검증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 시도평가, 중앙평가 등 다층적 평가 구조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사업내용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설계는 미진함

- 2024년 보조금 연장평가 시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았으나, 보조사업 구조 명확화(행안부→시도 보조로 사업계획서 수정) 수준의 형식적 개선에 그침

○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최근 3년간 91~94% 수준으로 실집행률은 양호하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예산 산정의 정밀성 부족이 지적될 수 있음

○ 행안부→시도→시군구의 3단계 보조금 전달체계는 집행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정산 지연(245개 지자체 개별 정산)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단계 사업구조로 인하여 지자체별 수행 편차 가능성도 높아 효율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 훈련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훈련 실시 여부는 확인 가능하나, 훈련이 대응역량 향상, 피해저감으로 이어지는 결과(성과) 지표가 부재하며, 성과는 산출지표 수준에 머무름. '26년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중 매뉴얼 개선사항 환류 배점 확대(환류20점)로 연계성 보완 가능성 측면은 개선노력으로 참조함

○ 불시훈련 단계적 확대('26 시범→'27 150개→'28 전체)이행 기간 단축, 성과지표 전면 재설계, 홍보비 구조조정 이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개선 전환 검토 가능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집행률 지연 등 집행적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 -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 등 대책 마련 권고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있음

○ 1차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

-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능력, 부정수급 등 검토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임
- 자체관리 노력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3차례 점검하였으며, 외부 적발은 없었음

○ 지원규모 및 유사사례는 적절하나, 집행 적정성은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에 대해서 해결된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 중간에 지자체의 사정을 사유로 집행률 지연 등이 발생하면 안되며, 집행 적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자체의 상황을 조치 완료해야함

○ 또한, 성과목표로 90%를 성과 달성도로 잡는 것은 도전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기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 부진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해결해서 달성도를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난구호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최근 대형산불, 여객기 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사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국고보조금 지급 시기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재난 대응성과 및 이재민 체감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지자체 요청·검토·교부 절차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함 - 따라서 본 사업은 재난 대응의 필수성과 예비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신속 집행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과 현장 대응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됨.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와 사회재난의 복합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재난구호 지원체계 유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재난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집행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량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여객기 사고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와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만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긴급구호 재정지원 체계 유지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재해구호 물자 비축 및 필요 물품 사전 확보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수성이 인정됨

○ 최근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연말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일정 수준의 예비적 재원 확보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함

-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국고보조금 지급 시기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재난 대응성과 및 이재민 체감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이재민 지원 만족도, 현장 대응 속도, 임시주거 안정성 및 구호서비스 품질 등 실제 정책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 전달체계는 지자체 요청·검토·교부 절차를 거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및 사전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사업은 예산 규모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재난 유형별 지원 기준 정비, 신속 집행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 및 현장 대응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가입대상·목표가입률 검토를 통한 재정수요 재산정) - 미납보험료 보전 조치가 포함되어 예산 유지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재정 지속가능성 및 신규 가입 확대라는 본 보조사업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동결된바, 미납보험료에 따른 미수금 추정분과 신규 수요를 구분·반영한 재정수요 분석을 토대로, 가입대상 모수 및 목표가입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범위 내 감액이 필요함 - 환류·개선 노력 수준 양호하나, 적극적 환류 노력 차원에서 향후 가입 확대와 재정 부담 간 균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함 - 소상공인 가입률 하락 관련하여 제도 변경이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양적 확대 외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 효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발굴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73번) 및 상위정책과 정합성이 높으며 민간 보험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재해 영역에 대한 정책보험인바, 정부개입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미납보험료 보전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가입자 감소 추세 및 가입 대상 모수 변동을 반영한 목표치·예산 산정 근거 보완이 요구됨

- 과거 누적 미납보험료 보전 조치가 포함되어 예산 규모 유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신규 가입 확대라는 본래 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역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수요 산정 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미납보험료에 따른 미수금 추정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이를 신규 수요와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재정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가입대상 모수의 적정성 및 목표 가입률 설정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 적정성,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환류 및 개선 노력 수준 모두 양호함

- 다만, 가입 확대와 재정 부담 간 균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노력이 소극적 지시 대응을 넘어 적극적 환류 노력으로서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대부분의 양적지표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보상 효과도 확인되었으나, 소상공인 가입률 및 성과지표 다각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제도 변경이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양적 확대를 반영하는 현행 가입률 중심의 성과지표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재해취약지역·취약계층 보호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 발굴 및 도입이 필요함

○ 종합하면, 가입자 감소 추세, 미납보험료 보전 요인의 예산 반영, 목표 가입률 및 가입 모수 산정 근거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수요 산정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보조사업의 일부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난심리회복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재해구호법」에 근거한 법정사업으로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공적목적이 인정됨 - 최근 재난의 증가로 인한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초기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심리회복 지원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상담 건수 증가만을 근거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보다는 실제 심리회복 효과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함 -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일부 기능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난 특화 심리지원 사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상담 건수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 수준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상회복률 및 고위험군 회복률 등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법정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됨

-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이후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재난 초기 심리적 응급처치뿐 아니라 재난 이후 지속적인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 재난심리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최근 재난심리 상담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심리활동가 운영 및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상담 건수 증가만을 근거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보다는 과거 집행실적과 사업 성과에 대한 환류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일부 기능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에는 재난 특화 심리지원 사업으로서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사업은 재난 초기 피해자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및 재난 특화 심리회복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상담 건수 중심의 정량지표 비중이 높아 실제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 수준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향후에는 정상회복률, 고위험군 회복률 및 심리 안정도 변화 등 질적 성과지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재난심리회복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상담 이력 관리, 고위험군 사후관리 및 심리회복 효과 분석 기능 등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 부재로 사업 목표달성도의 정량적 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사업비 배분에서 재정자립도 역진성이 수치로 확인됨에도 보조사업평가 권고에 대한 실질적 환류 부재 · 보조사업 실집행율 일부개선에도 불구, 시도별 집행역량 격차가 현저하고 계약기간 불일치 구조 및 미반납액 증가, 정산보고서 지연제출이 반복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의 엄격성이 부족함 ·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판정으로 2026년 예산이 이미 9.2%(435백만원) 삭감 편성됨			

□ 종합평가 의견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은 시·도의 자치사무적 성격으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은 차등보조율 적용 불가의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부처가 직접 제출한 2026년 배분 현황에서 재정자립도 역진성이 수치로 확인됨. 이에 대해 부처는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평가 권고(2025년)가 있었음에도 2026년 예산요구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토중으로 사후 소명한 것은 실질적 검토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 간접집행사업(지자체 보조)의 실집행률이 2023년 85.9%에서 2024년 90.7%로 개선되었으나, 절대수준에서 상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도별 집행역량 차이가 현저함

- 대구, 광주의 이월이 위탁계약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원인이나, 인천(교부·집행 모두 0원)을 비롯한 다수 시도의 집행 부진은 계약기간 불일치로 설명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계약기간 불일치 구조 자체가 개선 대상이며, 이를 이월의 정당사유로 반복 활용하는 것은 사업 관리 개선 의지의 부재를 보여줌. 시도별 집행 역량 격차의 전반적 관리 강화가 요구됨

- 2025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분기별 집행계획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9.2%(435백만원) 감액 편성됨

- 보조사업 정산 후 미반납액이 누적 발생하고 있음(2023년 10백만원, 2024년 21백만원). 이자발생액 대비 실반납액이 미달하는 점은 정산관리의 엄격성이 부족함을 보여줌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정산보고서) 제출이 제출기한 대비 지연 제출되는 경향이 있음(2023년 보고서 제출 기한은 '24.3.15이었으나, 실 제출은 '24.2.16~9.30으로 일부 지자체 대폭 지연사례가 있음. 2024년 제출기한도 '25.2.28에서 실 제출 '25.2.3~5.2로 일부 지연됨)

○ 동 세부사업은 자체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해당없음')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지표(재난지원금 조기 지원율 등)만 참고되고 있으나, 이는 본 보조사업의 성과를 직접 반영하지 못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지원사업의 타당성 인정. 다만 사업관리에서 비용-효과성 제고와 결과지향적 성과창출 노력 강화 필요 - 성과지표별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하고 적극적 목표달성 노력 강화 - 특례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준 인원 표준적용(통합창원시 인력규모 축소)			

□ 종합평가 의견

○ 자원봉사는 민간부문의 자율적 영역이나, 기반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공공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UN의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지정 등 국제적 추세와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사업 내용에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구체적이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100% 국비 지원 및 지자체 50% 보조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각종 행사 및 교육 지출의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 사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2026년 신규 사업인 'K자원봉사단' 관련 경비(5억 원)는 기존 민간지원 사업과 통합을 권고함

○ 대부분 경상적 지출로 구성되어 매년 95%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최근 3년간 이월액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e나라도움, 1365시스템, 보탬e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와 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정지원 단체에 대한 매년 정기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부 적발이나 미반납액 등의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성과지표 관리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성과실적이 연도별로 불안정함. 특히 2022년 목표 달성도(77.5%)와 2024년 증가율(70%)이 낮아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요망됨

-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참여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이전 규모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음

- 수도권 중심의 자원봉사 운영 특성상 비수도권 사업비 집행 확대에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지특회계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간 형평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지원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초광역단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현실여건 기준에서 검토하여 인력운영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통합창원특례시의 경우 기존 통합이전 인원 규모를 계속 인정하는데, 일몰 한시 기한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른 특례시와 형평성있는 인력기준 조정이 요망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의 의무적 재정사업으로, 사업내용에서 가변성이 높은 현실적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과평가 체계의 관점에서 동 사업을 평가하는 실익은 제한적임 - 최근 3년동안 집행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 실집행기준으로 감액하여 예산효율성 제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목적에 의한 성장 지체를 보상하는 국가 의무지출 성격이 강해 정책 타당성이 명확함

○ 반환 토지 매입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정부의 의무수행 사업이며, 지자체 제안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추진체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최저 618억 원(2025년)에서 최고 1,115억 원(2023년)까지 큰 폭으로 변동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취약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보조율을 상향(95%)하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보조율(평균 68%)이 과소한 수준이었음이 인정된 사안임

-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총액 1식'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세부내역 확인 및 규모 적정성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 실집행률이 75.3% 수준으로 80% 미만에 정체되어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의 이월로 인해 예산 사장의 비효율성 쟁점이 존재함

- 최근 3년 실집행률이 75.3%로 낮은 수준이며, 80% 미만에서 정체되어 예산 사장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실집행률 기준으로 일정 수준 감액하여 예산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시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집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성과지표인 '지원사업 공정률'은 단순한 업무 관리에 해당하여, 결과지향성은 제한적임. 다만 본 재정사업의 특수 성격이 있고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에서 변화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성주사드기지 등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변지역내 갈등해소 등을 위해 다수의 신규사업들이 최근 관련 종합계획에 추가 반영되는 등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적인 특수성이 있음

- 다만,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사업별 집행 쟁점을 분석하여 실집행률을 대폭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관리 노력이 요망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포항지진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주민지원을 위한 보상적 재정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실집행률 기준으로 연차별 예산배분 필요 - 목표치가 낮으며 달성 수준이 미흡. 도전적 목표와 적극달성 노력 요망			

□ 종합평가 의견

○ 포항지진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및 「세월호참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보상적 성격의 재정사업임

- 참사 지역에 한정된 사업으로 일반적인 지역균형발전 지표 적용보다는 피해 지역 지원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함

○ 피해 주민의 심리·정서 회복 공간 마련 및 공동체 연대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트라우마 극복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타당성 조사와 주민 협의를 통해 내용이 결정된 점 또한 긍정적임

○ 안산 복합시설의 경우 설계 변경 및 현장 점검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등 공정 지연이 발생했음. 2025년 11월 기준 실집행률이 23.8%로 매우 저조하며,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의 불안정성이 확인됨

-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등 집행 관리의 적정성이 취약한 상태임

○ 사업의 성과지표인 '복합시설 공정률'과 관련하여 매년 목표치 설정이 낮고 2025년 기준 목표 달성도(포항 45.4%, 안산 78.8%)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현재 성과지표인 '복합시설 공정률'은 단순 투자액 기반의 관리 지표로, 결과지향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025년 목표치 대비 성과 달성도가 포항 45.4%, 안산 78.8% 수준으로 낮아 적극적인 목표 달성 노력이 요망됨

-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중 등의 균형발전 성과 지표는 본 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성과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 단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심리 회복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시설완공 이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설건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비 지원은 일정 기간에 한정하는 일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멸대응 정책수단으로 적정성 인정. 사업의 집행관리가 양호함. 사업의 목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정립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에서 중요도가 높은 재정사업으로,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근거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했으며, 쟁점 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재정사업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확보했던 노력과 성과가 부각됨

○ 연도별 상품권 발행계획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수요 및 재정여건 등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 기준보조율(33.3%~70%)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음

-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재정수요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특성별 기준보조율을 재정립한 제도개선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 실집행률이 2023년 81.0%, 2024년 92.7%로 연도별 차이가 있었음. 이용자단위 전산 관리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높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됨

○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경제 관련 정책목적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대응 정책수단으로 중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불안정한 사업환경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확보한 실적이 부각됨. 사업의 집행관리가 양호하여 특별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지원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일관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도별로 집행률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진흥을 위한 컨설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재해예방은 국가 기본 책임이며 국가계획에 기반한 사업 및 재정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됨 - 사업수행 이후 실제 재난예방효과에 대한 책임 관련 성과지표 및 목표관리			

□ 종합평가 의견

○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수적 정책 영역임

- 재난 예방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는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의 공공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침수, 붕괴 등 위험 요인별로 정비 대상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공학적 설계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 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기준보조율(50%)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차등 보조율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요망됨

○ 연도별 실집행률은 90% 정도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 2023년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지특회계로 전환되는 회계개편에서 발생한 제도요인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사안이었음. 이후 실집행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됐음

- 보상 협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안이지만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됨

○ 현재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실제 재난예방 요구 대비 다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어, 주민 체감도를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됨

- 사업 완료 이후 해당 지역에서 실제 재난 피해가 감소했는지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대한 사후 책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의 정책과 내용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사업비 규모가 매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내역사업들의 재정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역사업별로 예산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배분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지자체들간 재정 형평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해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정책 및 내용타당성 인정. 다만 실집행률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요망됨 - 시도별·연도별 실집행률의 안정적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강우로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재난예방 관점에서, 행안부의 우수관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관리(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유사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두 사업이 분리돼 있고 사업지구와 내용에서 차이가 명확하여 유사중복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법정계획인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하므로 내용 적정성에 대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재난관리 사업의 사각지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총액 한도내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고려한 최적보조율 수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실집행률의 안정성이 취약하였음. 실집행률은 2023년 72.9%에서 2024년 42.9%로 대폭 낮아졌는데, 다음 해인 2025년에는 전년대비 예산감액과 함께 실집행률 86.4%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음

- 집행지연 원인은 주로 민원 및 관련 절차이행 지연인데, 예산편성 및 국비교부 계획 수립시 사전에 대응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과 관련하여, 현행 지표인 '정비지역 재피해 예방률'은 최근 5년 100%를 달성했음. 성과지표가 적절하였으며 목표달성 수준도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대표적 재난관리 사업으로서 정책 타당성과 사업 내용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재정지원 방식과 실집행률 관리 그리고 사업운영체계의 적실성 진단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집행률의 연도별·시도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재난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대형 산불피해 발생 지역 지원사업으로 정책과 재정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과관리체계 정립과 실집행 기준 재원교부 필요 - 실집행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감액 예산편성. 다만, 재난복구사업 집행의 시급성과 주민생활 일상회복 시급성을 고려할 때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실집행률 상황을 재점검하여 예산편성 규모 및 감액 수준 조정			

□ 종합평가 의견

○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지구(안동 중마·추목, 영덕 대곡·수암, 의성 구계)의 이재민 주거 안정 및 기반 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함

- 재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적 영역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도로, 상·하수도, 사면 정비 등 마을 기반 조성과 커뮤니티 공간, 공원 등 공동체 복원 시설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됨

- 주민의견과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사업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국고 보조율이 80%로 높은 수준임. 하지만 피해 지역의 취약한 재정 여건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됨

○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음. 2025년 국비 100억원 중 실집행액은 7억 4,500만 원(7.5%)이며, 나머지 92억 5,500만 원은 차기연도로 이월됐음

- 자본보조 사업 특성상 첫해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낮은 실집행률이 이미 예상된 측면이 있음

○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등 일반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사업 기간 중 차질 없는 관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 사업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함

○ 정책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인정되지만 성과관리와 집행률에서 개선이 필요함

- 재정관리의 효율성 관점에서, 실제 소요되는 지출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보조금 예산을 감액교부하여 모두 집행될 수 있게 하고, 차기연도로 이월금은 최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당초 계획기준으로 3년내 사업을 완료하는 예정이지만 주민협의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사업추진 과정을 기준으로 실행계획기간을 조정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보조금 재원 교부시기를 조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실집행률 기준에서는 '감액' 판정되지만, 2027년 예산편성에서는 유연한 국비 배분 접근이 필요함. 재난복구사업 집행의 시급성과 주민생활 일상회복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시점에서 실집행률을 재점검하여 예산의 적정규모 결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마을기업 선정규모 축소) - 신청 수요 및 높은 생존률을 고려할 때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5년 대비 약 3배 수준의 급격한 예산 증액은 충분히 뒷받침되기 어려운바 지원 규모 및 확대 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 부정수급 징후·적발 사례, 실적보고 지연 등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현시점의 사업 성과 보여주는 상용 근로자 수 외에,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기존 지원기업의 생존율, 고용유지율, 매출 증가율 등 성과지표 보완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81번) 및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등 상위 정책과 정합성을 갖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마을기업의 공익적 성격과 초기 자립 기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는 지원 대상,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에서 차별성을 지님

○ 사업 내용 자체는 상위 목표나 전략과 연계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내역사업의 양적 확대 폭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관련하여 부정수급 등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적 노력이 필요함

- 정기점검, 수시점검, 중앙-지방 합동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반복적 부정수급 징후 및 적발 사례,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성과달성도는 정량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 및 균형발전 기여도 또한 인정되나, 지속 가능성 관점의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 현시점의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뿐 아니라 기존 지원기업의 생존율, 고용유지율, 매출 증가율 등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보완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보조사업은 '26년 양적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에도 보완이 요구되며, 사업성과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표 개발·보완 노력이 요구되는바, 지원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행정안전부
사 업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해위험지역정비에 대한 정책 및 재정타당성이 인정되며 적절히 집행관리됐음 - 세종계정 사업에서 분리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사업으로 회계이관하여 전국 사업으로 통합			

□ 종합평가 의견

○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 도시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특회계 세종계정사업으로 예산이 관리되며, 재해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국가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며, 세종시만 별도 회계(지특회계 세종계정)로 관리할 실익은 크지 않음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기반하여 전문가 심의와 주민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실시하므로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양호한 재정 여건과 국가·지자체의 공동 책무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임

-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대상 지구를 지정하고 매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명확히 설정됨. 다만, 실제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재원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세종시에 교부된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되어 실집행률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결산 과정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반납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성과 달성도 평가는 현재 유보된 상태임.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전국 단위 사업의 성과 체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세종시 사업만의 독립적인 성과관리 운영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국가 공적 책무가 강한 사업으로서 정책 타당성, 사업 내용, 재정 지원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되나 회계단위 적정성 검토와 관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행정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이 있는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회계이관하고, 세종시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예산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과 같이 회계를 분리하여 유지할 경우에는 세종시 사업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 중기재정계획상의 향후 예산 증액 계획과 최근 실제 예산 감소 추세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원 배분 기준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지방보훈회관건립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보훈문화조성
현충시설관리
기념관관리운영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보훈기념행사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참전기념사업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적 근거와 정책목적이 명확하고, 재정지원이 타당하나, 일부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고, 중장기적 합리성이 미흡하고, 재정지원과 예산 집행의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보훈단체들을 통한 선양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원 숫자가 줄어드는 현재의 개별 보훈단체들의 존립 연장 대신 통합 보훈단체의 설립을 포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사업의 답습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의 중장기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정책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내역사업의 경우, 보훈단체에게 허용되는 수익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수익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의 신설 및 예산 증가 등 국가부담으로 하기 보다는 수익사업 승인 취소, 단체에 대한 지원금 감액 등 제재를 통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지방보훈회관건립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훈회관 건립지원의 제도적 근거 및 사업 관리체계 개선 필요 - 보훈회관 건립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최근 3년 실집행률 평균이 75.2%이며(2023년 59.2%, 2024년 70.0%, 2025년 96.3%) 매년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단계별 공정·예산 관리 강화 필요 -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를 보완한 정책효과 중심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본 사업은 보훈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지역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동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단, 사업 추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은 보훈회관 신규 건립, 노후 회관 리모델링, 부지·건물 매입 등 지방 보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간 연계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함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 및 반복적인 이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공공건설사업 특성상 부지 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수준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가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현재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훈회관 건립지원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건립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보다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률, 이용자 수 증가율 등 사업 목적과 직접 연계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역 보훈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포함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추진 여건과 공정률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별 예산 교부 및 공정

중심의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립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 활용도, 이용률, 보훈대상자 이용 확대 등 정책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이라는 사업 목적은 명확하고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타당하나, 광주보훈병원의 반복적 집행 부진과 공정 지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보훈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적절하나 성과지표(공정률)의 달성도가 광주보훈병원에서 저조함 · 광주보훈병원의 성과지표 달성도가 2년 연속 60% 미만으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설계 지연 가능성 미반영) 또는 실제 공정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착공 후에는 물리적 공정률을 보완 지표로 활용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사업과 광부보훈병원 시설 확충으로 구성된 동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26년 4월 3일 기준) 단계와 당초 사업계획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여 착공 후 사업 지연이 예상됨을 감안, 감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정 - 중앙보훈병원 당초 계획상 2026년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20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과 실시설계 완료 후 부처 내부 및 중앙보훈병원 검토, 조달청 발주 및 계약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곤란함과 이로 인한 지연이 예상됨으로 지연된 수준만큼 `27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함 - 광주보훈병원은 현재(20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가 진행중임과 조달청 검토에 따른 공사기간이 18.5개월임을 고려할 때, 5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부처 내부 및 중앙보훈병원 검토, 조달청 발주 및 계약 등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감안, 당초 계획에 따른 2027년 준공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른 사업기간 연장이 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연에 따른 `27년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으로 법적 근거·정책적 타당성은 확보되어 있으며 유사중복 없음

○ 집행 적정성(광주 반복적 설계 지연), 성과 달성도(광주 공정률 저조)와 관련하여 부처는 대면평가에서 총사업비 변경 반영한 목표치 재설정 및 공정표 진행률·노력도 지표 추가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두 병원 모두 20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 미완료 상태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상당한 수준의 사업 지연이 존재함

- 중앙보훈병원: 2026년 9월 착공 예정이나 현재('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 미완료 상태로 설계 완료 후 부처 검토·조달청 발주·계약까지 8월 말 완료가 곤란하여 지연 분만큼 '27년 예산 감액이 적정함

- 광주보훈병원: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공사기간 18.5개월 감안 시 2027년 준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사업기간 연장 및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불용액 수준 만큼 '27년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사업과 광부보훈병원 시설 확충으로 구성된 동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26년 4월 3일 기준) 단계와 당초 사업계획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여 착공 후 사업 지연이 예상됨을 감안, 감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정

- 중앙보훈병원 당초 계획상 2026년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20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과 실시설계 완료 후 부처 내부 및 중앙보훈병원 검토, 조달청 발주 및 계약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곤란함과 이로 인한 지연이 예상됨으로 지연된 수준만큼 '27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함

- 광주보훈병원은 현재(2026년 4월 3일 기준) 실시설계가 진행 중임과 조달청 검토에 따른 공사기간이 18.5개월임을 고려할 때, 5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부처 내부 및 중앙보훈병원 검토, 조달청 발주 및 계약 등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 당초 계획에 따른 2027년 준공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른 사업기간 연장이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예상 불용액 만큼 '27년 예산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독립기념관 운영의 정상화 시점까지 사업개선 위한 노력 필요함 - 향후 감사 실시 및 처분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명시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독립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국고보조임

○ 공익성이 강하고 국가관 정립에 기여함

- 독립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독립기념관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공익성이 강함
-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계승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함

○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 재정립

- 독립기념관장은 개인적 인맥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의전을 맡기는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 및 운영 원칙을 훼손하였음. 또한 일반 관람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유물 수장고 관람을 특정 집단에 허용하는 등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 완료됨

○ 독립기념관 감사 실시 및 처분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추진에 대한 결과 자료 확인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보훈문화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훈테마활동과 보훈문화관건립 지원 사업이 보훈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보훈테마활동은 추천도가 낮고 체험교육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보훈테마활동 사업은 참가자가 의미있고 참가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접지역 사업과 통합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을 교차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보훈문화조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문화가 자리잡기 위한 기반으로서 큰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지원이 필요함

- 보훈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보훈에 대한 가치 인식과 관심이 국민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에 대한 높은 단계의 충성과 신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훈문화관건립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건립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
- 재정 추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문화관의 활용도와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보훈문화관 건립은 향후 사업 전개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보훈테마활동은 다수의 보조사업자에게 1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

- 체험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참여 학생 수 정도만으로 성과를 파악하고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도 알기 어려움

○ 보훈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참가와 보훈문화관 건립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보훈테마활동과 보훈문화관건립 지원 사업이 보훈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보훈테마활동은 추천도가 낮고 체험교육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보훈문화관은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올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현충시설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효과적인 시설 관리 계획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이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원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전체 약 2,300개 시설 중 330개 시설에 현충시설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에 따르면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함

-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이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관리 적정성 판단할 수 있어야함

-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하지 않으며, 지원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현충시설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씩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는 것이 효과성 높은 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음

○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부실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임

○ 효과적인 시설 관리 계획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이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원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전체 약 2,300개 시설 중 330개 시설에 현충시설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기념관관리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단계적 폐지('26년 말, 민간위탁 전환) 사업임 -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현 사업회에 지정 위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법률 제정 필요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제정 진행 중임('26년)			

□ 종합평가 의견

○ 애국심 함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함

- 기념관관리운영을 통해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는 기념관은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총 6개소임

○ 부정징후 통보 내역 및 처리 결과 확인함

< 2021년 ~ 2023년 e나라도움 부정징후 통보내역 조치실적(요약) >

부정징후 통보횟수	점검기한 미준수 건수	시스템 미등록 건수	부정확인 건수
32	0	0	0

○ 단계적 폐지('26년 말, 민간위탁 전환) 사업임

-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현 사업회에 지정 위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법률 제정 필요함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진행 중임('26년)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구조 개선 필요함 - 법적근거가 부족한 행사성 사업보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대원 및 유족지원에 집중하고 경상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사업

- 6·25전쟁 혼란 속에서 울릉도 거주 6·25 상이참전용사 및 주민들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독도를 수호하고자 총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특별히 희생· 공헌한 대원 및 유족에게 국가가 예우 및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임

○ 기념사업회 경상경비 축소 필요

- 1차 보조사업자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경상경비(4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가 내역사업 43.0%달하여 개선 필요함

- 사업비 중 대원·유족 예우 지원 예산은 20% 이하 수준이고, 기념사업과 법인관리 예산이 대부분임

- 현재의 사업구조는 직원 4인의 지속적인 승진(현재 직원의 최저 직급이 과장)으로 월급과 직책급의 인상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수의 감소에 따라 사업 본연의 대원 및 유족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로 적정하지 않으므로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법인관리 예산과 행사성 경비 축소 필요

- 직원의 지속적인 승진으로 월급 및 직책급 등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근거가 부족한 행사성 사업보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대원 및 유족지원에 집중하고 경상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구조 개선 필요함

- 법적근거가 부족한 행사성 사업보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대원 및 유족지원에 집중하고 경상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보훈기념행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개선이 필요함 - 민간단체의 자부담율 20%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소수의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함

- 국가보훈부의 별도 보조사업인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에서도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음

○ 자부담 없이 사업비 배정함

- 보조율은 80%이지만 정부기념일 등 관련 계기 행사 지원에 참여하는 소수의 민간단체는 자부담율이 전혀 없이 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어 적정하지 않음

○ 공모 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변경함

- 2021년까지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국가보훈부의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 보훈관서에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서를 재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개선함

○ 자체적발 및 외부적발에 의한 부정수급이 확인됨

< 부정수급 적발노력 >

연도	구분	이력	적발기관	내용	조치결과
2023년	자체적발	1건	국가보훈부 감사실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국고보조금 환수 절차 진행 중
	외부적발	1건	내부관계자 형사 고발	보조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환수 처리 완료
	전체	2건	-	-	-

○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함

- 민간단체의 자부담율 20%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민간단체 자부담율 사업개선 필요함 - 민간단체의 자부담율 20%를 확보하지 않고 있고 개선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민간 주관 사업에 국가 지원 필요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국내 독립운동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훈문화 확산 및 국민통합에 기여

- '개별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행사, 3·1독립만세운동 및 청산리 대첩 등 의미가 큰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사업은 '개별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행사, 3·1독립만세운동 및 청산리 대첩 등 의미가 큰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 각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 집행부진 사유 계속 발생

- 2023년 기념행사 규모 축소 및 취소, 부정수급 의혹단체 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333백만원 불용

- 2024년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사업에서 '보훈기념행사' 사업으로 28백만원 전용 및 69백만원 내역변경

- 2025년 '광복80주년기념사업' 사업 '독립운동관련사업지원' 사업으로 400백만원 전용

○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함

- 민간단체의 자부담율 20%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민간 학술연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은 법적 근거와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동사업은 전년대비 9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5년 교육부의 학술대회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16.8백만원(690백만원/41건) 대비 8.7백만원(113백만원/13건) 수준으로 증액된 `26년의 경우에도 12.8백만원(205백만원/16건) 교육부 사업보다 단가가 낮아 `26년 증액은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함 ·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97.5%, 2024~2025년 100%로 양호한 수준 ·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본 사업은 92백만원 증액소요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는 점과 집행률도 양호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선으로 판단함(사업개선 요소 : `25년 변경된 성과지표가 투입(input) 성격에 치우쳐 있어, 향후 사업의 성과(결과)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를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독립·호국·민주화 역사를 재조명하는 민간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11-4(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와 성과계획서 전략목표에 사업목적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유사중복 사업은 과거 평가를 통해 이미 통합 완료된 상태로 최근 3년간 유사중복 지적 이력이 없음

○ '26년 보조비목 예산이 113백만원에서 205백만원으로 81.4% 증액되었으나, '25년 교육부 학술대회 지원사업 건당 단가 16.8백만원(690백만원/41건)과 비교할 때 '25년 8.7백만원(113백만원/13건), 증액된 '26년에도 12.8백만원(205백만원/16건)으로 교육부 사업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증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2024년 보조사업연장평가의 '사업방식 변경' 지적에 따라 지원한도 상향(국내 1,000→1,500만원, 국제 1,500→2,000만원)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 가점 반영 등 구체적 제도개선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 보조비목 한정 실집행률은 2023년 97.5%, 2024~2025년 100%로 양호하며,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없음.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모제 운영, e-나라도움 상시 점검, 소속기관 종합감사 등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정산 후 이자 발생액도 전액 반납 완료됨

○ 성과지표가 '학술회의 만족도'에서 '25년 '신진연구인력 참여 노력도'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지표는 신진연구인력 참여 비율을 점수화한 것으로 투입(input) 성격에 치우쳐 있음. 2020~2025년 누적으로 학술회의 91건, 문헌발간 30건을 지원하여 민간 연구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고, 연구 결과물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사업의 성과(결과)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추가를 권고함

○ 종합의견 : 동 보조사업은 92백만원 증액소요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는 점과 집행률도 양호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선으로 판단함(사업개선 요소 : '25년 변경된 성과지표가 투입(input) 성격에 치우쳐 있어, 향후 사업의 성과(결과)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를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업, NGO 등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역량 확대 필요함 - 기업, NGO 등의 참여를 통해 예산 부담 감소 추진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보훈외교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임

- 국제보훈사업은 단순히 참전국에 대한 감사·위로의 기본가치를 넘어 외교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
-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 참전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보훈외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큼

○ 기업, NGO 등 참여 활성화 필요함

- 지금까지의 국제보훈사업은 정부 주도로 정책을 수행되었다면 일부 시행되고 있는 국민, 기업, NGO 참여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개선 필요함
- 국제보훈사업을 둘러싼 국민, 기업, NGO 등 다양한 참여로 이들이 함께 하여 공공외교로서의 보훈외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의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함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확대하고 보조금 비율의 축소가 필요함

- 미래평화학술회의는 기존에 비영리단체에서 회비(기부금)로 운영하던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비율과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이전에는 보조사업자인 한미동맹재단의 재원으로 사업의 운영이 충분했던 사업이며, 보조금사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재단 기존의 한미동맹 컨텐츠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이고 있음

○ 기업, NGO 등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역량 확대 필요함

- 기업, NGO 등의 참여를 통해 예산 부담 감소 추진 필요함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인상을 통해 예산 부담 감소 추진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2~2024년 3년 연속 집행률 80% 미만(65.5%→61.3%→68.5%)으로 예산 과다 편성 이력이 존재하며, '25년 지원단가 160원으로 조정 이후 집행률 93.8%로 개선되었음에도 6억원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구조적 불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 · 수시 실태조사 노력에도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수혜자 부당사용 회수율이 '23년 97.0%→'25년 74.7%로 하락하여 미회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수요예측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대면평가 시에도 제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감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상이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연료비(LPG세금인상분·친환경 충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신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타 부처·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례가 없고, '24년 연장평가 지적에 따라 LPG·친환경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후속조치가 이행되었음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리터당 지원단가가 감소하였음에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매년 불용액이 발생('24년 40억원, '25년 6억원)하고 있음. '25년부터 지원단가를 16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수요예측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대면평가 시에도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지는 못하였음

○ 복지카드 기반 자동 차감·정산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효율적이며, 보조사업자(신한카드) 단계의 부정수급은 전산 구조상 원천 차단되어 최근 3년간 0건임

- 다만, 실수혜자(상이국가유공자)의 부당사용 회수율이 '23년 97.0%→'24년 89.7%→'25년 74.7%로 지속 하락하여 미회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하락에 대한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당초에 부당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적 마련(실시간 정보 연계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적정 지급률")는 과오급금 방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단일 지표로는 친환경 정책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보훈부가 대면평가 시 제시한 '27년도 성과지표(월평균 친환경차량 연료비 지원대수) 도입은 적정하며, 동 성과지표는 친환경 관련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수시 실태조사 노력에도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수혜자 부당사용 회수율이 '23년 97.0%→'25년 74.7%로 하락하여 미회수금이 누적되고 있음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방향이 대면평가 시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음을 고려하여 감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여가활동지원 300백만원)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정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정액 교부되어 16개 지역캠퍼스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임 · 보훈기금법 제5조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동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음 · 보조비목 실집행률이 3개년 연속 100% 수준으로 집행이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없고, 정산·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 수료자 만족도가 4개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사업 성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 · '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사업운영개선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관련 후속조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3차 심의 시 확인되었음 · 위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감액으로 인한 실익이 사업개선으로 인한 실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개선으로 판단하며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동 보조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보훈기금법 등 7개 보훈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정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정과제 11-2(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 특성이 반영된 유일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서 타 부처 일반 노인여가사업과 대상자·목적이 상이하여 유사중복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전국 16개 지부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해질 수 있어 재정지원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됨

○ 보훈복지문화대학은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특별활동 등 4개 학부의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보조금 규모는 16개 지부 × 18,750천원(정액)으로 최소 수준의 운영비에 해당하며, 상이군경회가 약 66.9%를 자체 부담하고 있어 지원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비목 실집행률이 '25년 기준 100% 수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관리, 연 1회 부정징후모니터링, 반기별 정산보고서 적기 제출 등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없음

- 20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사업운영개선' 판정을 받아 '노년기 보훈대상자의 사업참여 확대 및 사업효과의 장기 지속을 위한 추진방식·체계 개선'이 권고되어, '26년 사업부터 지부별 동아리를 개설하여 졸업생 후속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운영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대면평가 결과 확인됨

○ 보훈복지문화대학 수료자 만족도가 '22년 91.1점, '23년 91.0점, '24년 91.4점, '25년 91.8점으로 4개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음.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고독사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판단 : 위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감액으로 인한 실익이 사업개선으로 인한 실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개선으로 판단하며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보훈부**
사 업	**참전기념사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 개선 필요함 -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참전기념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 낮음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재원으로 사업 추진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법적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업을 할 책무가 있고 국가보훈부는 그 일환으로 동 법 제12조 2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는 민간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매년 집행 부진 사례 발생

- 2023년 행사 주관단체 회원 등 주최측 고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 2024년 행사 주관단체 회원 등 주최측 고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 2025년 행사 주관단체 회원 등 주최측 고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 성과 달성도 미흡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사전 설정 근거자료
참전·제대군인 단체 주관 참전기념행사 적극 추천점수 (점)	목표	47.8	48	49	51.4	(폐지)	-	-	-
	실적	57.3	59.4	58	46	-			
	달성도	119.9	123.8	118.4	89.49	-			

- 2024년 성과목표인 적극 추천점수는 51.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나마 실적이 46점으로 목표 미달임

○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 개선 필요함

-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참전기념사업 예산 개선 필요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재원으로 사업 추진 필요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활동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종교문화시설건립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게임산업육성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이야기산업활성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방송 지원
광고산업 활성화
출판산업 활성화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ODA)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예술의전당 지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함께누리 지원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미술진흥기반구축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박물관문화재단지원
국가이미지 홍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국제문화정책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국민문화활동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관광자원 기반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지역 의료관광활성화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국민체력인증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종목 보급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우수선수양성지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주최단체지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전국(소년)체전 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국제체육교류 지원
도핑방지활동지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태권도 진흥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한스타일 육성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공예문화산업육성
예술창작 지원
예술인력 육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의 관광자원화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문화예술향유 지원
지역신문발전 지원
뉴스정보 유통활성화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국내관광 역량 강화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광고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MICE산업육성지원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영화 창제작 지원
영화유통 지원
영화정책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종교문화활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간 통합 조정, 다수 사업수 조정, 부정수급 관리, 실집행률 제고 필요성에 근거하여 감액이 필요함 - 내역사업(종교문화행사지원 사업과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사업)의 통합과 내용 조정이 필요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23년, '24년, '25년 계속되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 과거 평가에서 지적된 성과지표 개선, 다수사업의 개선, 예산집행 모니터링, 불용액 및 실집행률 저조 등에 대해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감축 조치 외에 다른 조치가 미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종교간 화합과 국제 종교교류사업 추진으로, 종교계의 사회통합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역사업 국제종교 교류 협력 사업, 종교의 사회적 통합 기능 강화 사업, 공직자 종교 차별예방시책 사업, 그리고 종교문화행사지원 등이 포함됨

○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지원사업이 사회적 통합적 가치창출 의미를 확대한다는 취지와 내역사업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사업의 차별성 확보와 통합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두 개 내역사업을 종교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통합할 필요있음

○ 본 사업의 직접 및 간접 수혜자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지원을 위한 규모산정의 근거나 행사 지원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 사업을 조정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이 매년 적발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과거 평가에서 포괄적인 성과지표 설정, 소규모 예산수행 사업 다수와 예산집행 모니터링 체계, 불용액 및 실집행률 저조 및 성과지표 발굴 노력, 보조사업 추진체계 복잡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성과지표는 추가 보완되었으나 부정수급과 다수의 사업건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음

- 성과지표는 참여자수 산정에서 종교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로 변경했으나, 변경된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함
- 예산집행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정수급 건수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함
- 소규모 예산수행 사업이 다수이고 보조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음

○ 성과지표는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천명)와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인식 향상도(점)로 평가되는데, 내역사업 중 종교문화행사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내역사업도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자부담 비율 조정, 실집행률 개선, 성과지표 개선 등의 사업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 전통사찰의 자부담률 20%로 조정안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나 국회('23년, '25년)에서 지적된 바,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의 약간의 개선은 있었으나 전통건축물의 특수성의 제한으로 80% 미만인 점은 사업개선을 통해 변화가 요구됨 - 성과지표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률 산정방식이 지원사찰 대비 구축 완료 사찰 비율로 제시되어 있어, 전체 전통사찰 대비 구축률이나 보수정비 실태 파악에는 적절치 않으며, 전체 세부 사업의 결과 중심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은 법적근거 및 국정과제 등의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문화적 자산의 유실이나 훼손 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전통사찰 보존과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등 목적성이 명확하고 타당한 사업임

○ '전통사찰보존 사업'에서 전통사찰의 자부담 비율이 20%이지만, 추경 등 국회심의과정에서 자부담 완화분(10% 자부담)에 대해 국비 증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지원' 내역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 동일한 내역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국비 증액시킨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년 이를 추경으로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으로 전통사찰의 자부담 비율을 20%로 정해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필요있음

○ 본 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2차 집행 실집행률이 '23년 77.8%, '24년 69.1%, '25년 73.0%로 나타났으며,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나 국회('23년, '25년)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80%미만인 실집행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성과지표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률(%)'의 측정방법이 본 사업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며, 세부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률의 측정방법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찰 대비 구축완료 사찰 비율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률만 나타내는 지표임

- 본 보조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실제 전체 전통사찰(총 989개소) 대비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나 보수정비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개선하고, 다른 내역 사업의 성과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종교문화시설건립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일몰과 지자체 이관, 성과지표의 개선 등의 근거로 감액이 필요함 - 내역사업 10.27법난기념관 건립은 특별법에 근거하나 사업종료시점(2029년)이 명확하며, 37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자체 매칭으로 30% 보조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이관될 필요성 있음 - 매년 예산불용액 발생과 2차집행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종교문화시설 건립 공정률(%) 성과지표 이외에 본 사업의 목표달성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25년 목표치 37%는 너무 낮음)			

□ 종합평가 의견

○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나 2029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종교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성 있음

○ 37개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지자체 매칭(60% 이하)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보조율 30%)이지만, 지역별 특수성 및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함

○ 본 사업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립의 근거만 제시하고 있고 별도로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가단위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1차 지원대상은 해당지자체 및 종교단체이나, 매년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수가 상이하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24년 33,487백만원, '25년 38,914백만원, '26년 40,704백만원 등 매년 예산지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근거는 미흡함

○ 매년 보조율 배분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하여 종교단체와 함께 건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매년 예산 집행 불용과 집행 부진, 2차집행 실집행률 저조 이슈가 발생하는데, 전체 건립 예산의 지원은 증가하는 상황은 부적절함

- '23년 2,836백만원 불용(지방비 미확보 등), '24년 1,000백만원 불용(사업포기), '25년 669백만원 불용(사업포기 및 실집행 부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의 2차집행 실집행률은 '25년 72.3%였으며, 37개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의 2차집행 실집행률이 1% 수준도 있음

○ 불용액 발생과 2차집행 실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 건립신청 요건 강화, 현장점검, 사업추진 독려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으며, 지자체가 불용과 집행부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공정률(%)(예산집행률)인데, 건립공정률과 예산집행률을 측정하는 지표의 목표치('25년 37%)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효과성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목표와 실제 사업내용 간 괴리,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부재, 정책연구 성과 활용도 측정 체계 미비로 사업 효과 검증이 어려운 만큼, 3개 내역사업별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의 경우 연구 전문성이 취약한 기관의 기초조사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요 현안에 대한 기여가 통상의 정책연구사업에 비해 취약하다고 판단함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사업은 콘텐츠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산업정보 서비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으로 기본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연구가 연구 전문성이 취약한 기관의 기초조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성과지표 부재 속에서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목표('콘텐츠산업 창작기반 강화')와 실제 사업내용(행정지원·정보제공·분쟁해결) 간 괴리가 존재하며,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2026년 계획액이 2,137→3,044백만원(+42.4%)으로 상향되었으나 근거가 불충분함. 사업목표를 실제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증액 산출근거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연장평가(77.0점)에서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필요'가 지적되었으나, 2025년 신규 설정된 2개 지표는 전체 사업비의 4.9%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만 대표하고, 예산 비중이 큰 정보포털(22.4%)·공정상생(33.0%)에는 성과지표가 부재함. 3개 내역사업 각각에 결과 중심 지표(정책반영률, 이용자 만족도, 실질 피해구제율 등)를 설정하고, 정책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측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정책연구 내역사업 중 '분기별 동향분석'은 매년 이월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내 완료 가능하도록 사업기간을 재설계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콘텐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 활성화라는 사업 목표에 비추어볼 때, 대출로 연계되는 정책수단이 주가 되는 사업 설계가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감축 및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치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 · 성과관리 체계 미흡: 단일 지표(투·융자 유치지원 실적)만 존재하여 사업 효과성 입증이 불가하므로 직접 성과지표 신설 등 성과관리 구조 개편이 필요함 · 이차보전 수요 예측 모델의 지속적 개선 및 검토 중인 기업당 한도 단계적 확대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콘텐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 활성화라는 사업 목표에 비추어볼 때, 대출로 연계되는 정책수단이 주가 되는 사업 설계가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감축 및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가 “투·융자 유치지원 실적”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예산 규모의 78.1%를 차지하는 보증 출연의 성과 파악이 어려움

○ 사업구조 개선

- 콘텐츠 가치 평가 관련,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장성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와 콘텐츠 기업이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 또는 경제적 잠재력과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시행기관(기보 및 신보)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

- 성과목표 도전성 제고를 위해 직전 3년 평균 실적 기반 목표 설정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CKL기업지원센터 운영비(8,399백만원)가 인프라 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자부담 체계가 부재하여, 임대료 분담 구조 도입을 통한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 · 기업육성 지원 5개 내역사업이 생애주기별 설계 취지와 달리 단계 간 졸업 기준·연계 실적 없이 독립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을 통한 구조 간소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기업매출 증가율, 교육생 만족도로 사업 결과를 종합하는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업육성 지원의 경우 지원기업 생존율, 고용증가율 등 정책기여도 입증 지표를 인재양성의 경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현업 적용도, 콘텐츠산업 진출 비율 등 질적 성과 지표를 보완하고, 지원기업 추적관리 시스템(3년간 생존율, 매출변화 등) 구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입주기업 성과(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매출액 13,319백만원, 신규채용 160명('22.11월 기준))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지원에 의한 순효과(net effect)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교집단(미지원 기업) 대비 효과성 분석이 수행되지 않아, 재정투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인프라 운영이 전체 예산의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CKL기업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8,399백만원)가 과다한 비중을 점하고 있어, 입주기업 자부담(임대료 일부 등)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중기적으로 20~30% 수준의 감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육성 지원 내역사업(5개)이 성장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단계 간 연계·졸업 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수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내역사업 통폐합을 통한 관리효율화와 함께 명확한 졸업 기준 및 연계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기업매출 증가율, 교육생 만족도로 사업 결과를 종합하는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업육성 지원의 경우 지원기업 생존율, 고용증가율 등 정책기여도 입증 지표를 인재양성의 경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현업 적용도, 콘텐츠산업 진출 비율 등 질적 성과 지표를 보완하고, 지원기업 추적관리 시스템(3년간 생존율, 매출변화 등) 구축이 필요함

○ 콘텐츠 인재캠퍼스의 가동률이 '19년 48.2%에서 '22년 43.0%로 하락하고 이용자 수도 약 67% 감소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어, 운영비 축소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21년 및 '2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되었음에도 근본적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가 요구됨

○ 연도 간 예산 변동폭이 과대하여(기업육성: ±30~40%) 안정적 사업 운영이 저해되고 있으며, 유사사업(창업진흥원 글로벌 기업 협업 등)과의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화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0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종합적 효과성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인재양성 교육이수자의 취업률·콘텐츠산업 진출 비율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영상콘텐츠산업육성' 세부사업은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만화산업, 캐릭터산업 등 K-Z콘텐츠의 글로벌 도약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육성을 통해 한류 연관산업의 글로벌 도약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주 독립영화의 집, 영상산업 허브,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사업을 통해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내역사업은 수요자층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의 성과지표로 수혜기업의 만족도라는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해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성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이 세부사업은, ‘영상산업육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만화산업육성’, ‘캐릭터산업육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K-콘텐츠·플랫폼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지원, K-콘텐츠와 한류 연관 산업의 글로벌 도약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역 간 영상문화 향유·영상산업 불균형을 해소,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에 한계 극복,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콘텐츠산업 발전에 참여할 역량 확보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영상산업 육성’, ‘만화산업 육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캐릭터산업 육성’ 내역사업에 아래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영상산업)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애니메이션산업) 청장년층·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제작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자의 높은 경쟁률 이외에도 제작물의 실수요자층인 관람객의 호응도 등 관람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선이 필요함

- (만화산업)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사업에 160개 기업의 지원을 예정함으로써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캐릭터산업)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12개 기업에 기업당 331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사업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점검되고 있음. 다만 ’23년부터 ’25년까지 9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고, 그 중 ’25년도의 부정수급 사례 5건은 부정수급 확인액(502,021,300원, 401,636,860원) 자체도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여 보조금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 중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의 만족도를, 만화산업의 경우에는 콘텐츠 지원작 수량을 성과달성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수혜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표 보완을 통해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성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내역사업별로 장르 특성에 맞는 사업이 구성되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다만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의 예산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악산업에서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원로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내내역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산업이 갖는 차별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 현장접근성을 고려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이 세부사업은, ‘음악산업 육성’, ‘대중문화예술 진흥’, ‘패션디자이너 육성지원’ 내역사업으로 세분되며,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유통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패션디자이너 창작 집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이 사업 중 ‘음악산업 육성’ 내역사업은「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 진흥’, ‘패션디자이너 육성지원’ 내역사업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문은 없음. ‘패션디자이너 육성지원’ 내역사업도 다른 부처에서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부처의 사업은 소재, 제조, 공급망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인 반면, 이 내역사업은 디자이너 창작 및 브랜드 육성 중심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하므로 특화된 성격을 고려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업은 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인 음악 등 대중문화예술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음악산업의 경우 실집행률(’23년 84.4%, ’24년 88%, ’25년 85.5%)이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패션디자이너 육성 지원’ 내역사업 또한 실집행률이 낮은 점은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 진흥’ 내역사업 중 원로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선정 기준이나 규모, 활동 형태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실연자 중심, 공연 경력 15년 이상 및 만 60세 이상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비율 15% 이상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로대중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의 경우 콘텐츠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목적에 맞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의 구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산업이 갖는 차별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 현장접근성을 고려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게임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게임산업 육성' 세부사업은 게임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게임산업 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산업 환경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세부사업은 실집행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출 기관 등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실집행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3년부터 '25년 사이에 6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고, 1건의 미정산 사업의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엄격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함 · 이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과 수출액의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이 세부사업은, ‘게임기업 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타 게임정책 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게임개발사의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기반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여전히 영세한 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이스포츠는, 당장의 수익성이 낮고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아마추어 선수를 양성하고,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아카이브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게임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게임산업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생태계 조성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세부사업은 게임업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사업(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과의 유사성이나 중복 지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게임 콘텐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관 부처 고유 목적의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세부사업 전체의 실집행률은 ’23년 96%, ’24년 95.3%, ’25년 86.2%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게임기업 육성’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은 ’24년 95.0%, ’25년 86.6% 전체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므로 집행 시기의 조정 등 사업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및 쇼케이스 개최 지원’의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고, ‘기타운영비’ 800백만원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게임기획과 게임상용화 제작 지원을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과 상용화를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24년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은 약 23조 8,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수출액은 85억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23년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약 63% 차지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액이 필요함 - (사업 구조 세분화 지양 및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2026년 신설된 AI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제작지원 사업(총 4,000백만 원)은 장르별 시범 운영 취지는 이해되나, 기존 실증 제작지원 사업 내 트랙 구분 등 통합적 개선을 통해 행정비용 중복 지출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공정 정상화에 따른 과다 이월액의 상반기 우선 집행 및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2026년 2월 본공사 착공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점은 긍정적이나, 2025년 이월액(7,804.5백만 원)이 2026년 요구액(7,800백만 원)과 맞먹는 대규모 수준인 만큼, 재정 당국은 상반기 내 이월금의 우선 집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가용 재원 대비 집행 가능성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예측 재고 필요) 2026년 투입 가능한 총 재원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약 156억 원에 달하나, 과거 3년간의 저조한 실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연내에 해당 금액이 전액 실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실제 집행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예산 확보를 지양하고, 재정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공정 분석과 예산 규모의 조정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K-컬처 300조 원 시장' 달성 및 'AI 3강 도약'이라는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감형 콘텐츠에서 AI 기반 콘텐츠로 사업의 중심을 이동한 전략적 방향성은 매우 타당함

○ 다만, 2026년 신설된 AI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제작지원 사업(각 1,000백만 원, 3,000백만 원)은 장르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범적 취지는 이해되나, 기존 실증 제작지원 사업 내 트랙 구분 등 통합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행정 비용 중복 지출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입주기관 이전 협의 및 인허가 지연(계획 4개월 → 실제 10개월 소요)으로 인해 2025년 실집행률이 11.4%에 머무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저해되었음

- 하지만 2026년 1월 철거 잔금 집행 완료 및 2월 본공사 착공 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집행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 2025년 이월액(7,804.5백만 원)이 2026년 신규 요구액(7,800백만 원)과 맞먹는 대규모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집행 추이를 고려하면 약 156억 원의 총 가용 재원이 연내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상반기 내 이월금 우선 집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대규모 인프라 건립 시 행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예산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정 관리 체계 가동이 필수적임

○ 성과지표의 질적 개선 이행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우수함

- 과거 '지원 과제 수'라는 투입 중심 지표에서, 2026년부터는 '지원액 대비 매출액 성과'라는 결과 지표로 개선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임

- 광화문 프로젝트(K-컬처 스퀘어)의 성과 미흡 지적에 대해 브랜드명 변경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내역사업 중 사업비의 경우, 실집행률이 '23년 81.0%, '24년 80.4%, '25년 76.4%로 3년 연속 하향 추세 - 불용액도 계속 발생 -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 사업개선 - 국회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노력 필요 - 고객만족도 대체 지표 검토 및 결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과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됨.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세부사업 재정지원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은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구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직간접 수혜자를 고려한다면 재정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사업비의 경우, 실집행률이 '23년 81.0%, '24년 80.4%, '25년 76.4%로 3년 연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이월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은 일응 이해는 되지만, 보조사업평가 및 경영평가 등 외부 평가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집행률 저조 및 계속되는 불용액 발생 현상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됨

○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3년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25년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됨

○ '25년도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 성과지표의 임계치 여부에 대한 점검과 대체 지표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과 도전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법정 책무 이행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표 대비 일부 사업내용은 각 추진전략이 구체적 성과 창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직·간접 수혜자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지원규모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의 고도화가 요구됨 - 사업 기능별 성과와 비용을 분리해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 및 전략적 자원 배분이 제한됨 - 인건비·운영비 중심의 포괄적 지원 구조로 인해 세부 내역별 성과와 비용의 직접적 연계성이 낮아 보조금 집행의 실질적 성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수장고 포화·인프라 노후·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단년도 예산 조정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지표가 산출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목표치가 임계치 도달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결과·영향 중심 지표로의 전환 및 도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영상자료원지원 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 이행 사업으로서 영상문화유산의 수집·보존·복원이라는 핵심 기능은 민간 대체가 곤란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장기적 투자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수익 창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상 시장이나 민간 부문을 통한 자발적 공급이 구조적으로 곤란함

○ 사업은 동일한 사업목적·지원대상·기능을 수행하는 타 재정사업이나 지자체 고유 사업과의 직접적인 중복은 확인되지 않고 근·현대 영상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복원·활용한다는 사업 방향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문화 접근성 제고, 공공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중·장기 문화정책 목표와 정합성을 가짐

- 다만 사업목표 대비 일부 사업내용에서 각 추진전략이 구체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는 설명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직·간접 수혜자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지원규모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의 고도화가 요구됨

○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은 99% 수준으로 양호해 보이나 정보화 관련 사업은 연차별 집행 계획의 변경과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집행 계획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요구됨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이 단일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만,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내용에서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 기능과 정책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 확대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

○ 단일 보조기관에 대한 정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은 편이고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중심의 포괄적 지원 구조로 인해 세부 내역별 성과와 비용의 직접적 연계성이 낮아 보조금 집행의 실질적 성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국회 및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도적·예산적 조치가 일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특히 비목 조정,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등은 단기적 개선 노력으로 인정되지만, 수장고 포화, 인프라 노후,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단년도 예산 조정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최근 5개년 성과지표·목표 실적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차별 실적 또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로 산출물 중심의 지표로 정책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성과지표 목표 수준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되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세부사업은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등급분류 대상이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물의 감독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사후관리 등 업무수행 방식 조정 등 규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대상이 감소에도, 사후관리나 숏폼 등 새로운 유형의 영상콘텐츠에 대한 대응 등 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바, 개별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예,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증대하는 규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세부사업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부여를 통해 영상물 이용자의 선택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공연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법적 직무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상영)등급분류는 파급력이 높은 영상 콘텐츠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해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공적 영역에서 사회규범과 어긋나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영상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체계와 영상물에 관한 재산권, 이용자 보호라는 공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업은 파급력이 큰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 대한 검열이 아닌 등급분류를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사회적 가치체계를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가 확대되는 등 규제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의 자율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의 자체등급 분류 이후에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새로운 환경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숏폼 등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의 등장과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전제로 현행 수준의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중 등급분류회의운영과 관련한 예산 중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직무수행경비(155백만원), 소위원회 등 회의 운영 경비(1,721백만원), 회의실 등 회의 운영지원비(204백만원)은 구체적인 운영을 효율화하여 새로운 유형의 등급분류 대상의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수행에 개선 여지가 있음

○ ’25년부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사업 수행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개별 등급 판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체감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고객만족도’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개선이 있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23년 약 5억원, 24년 약 5.5억원, 25년 약 1억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규모 산출 근거 제시 필요 · 사업개선 - 등급수수료 인상 검토 필요 - 국회 지적사항 개선조치 미완료 존재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정과제, 상위계획 등과의 연관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의 내역사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됨. 이 중 사업비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완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구축 운영,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물 사업 관리,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등과 관련된 내내역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구성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광범위한 직간접 수혜자들을 고려한다면 예산 규모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또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은 모두 95% 이상임. 다만, 사업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23년 약 5억원, '24년 약 5.5억원, '25년 약 1억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 세부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비공모사업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례도 없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방식 등을 적절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조치 완료가 안 된 '24년과 '25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불법게임제공 업소단속지원 성공률'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고객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지표 모두 '25년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내역사업인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25년 예산 기준 약 48.7억원)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내내역사업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이야기산업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핵심 교육 기능 축소 및 시설 위주 사업 재편 지양 필요)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축되는 과정에서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시설 운영 위주로 사업이 재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적 인프라 확대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수혜 범위 축소에 따른 사업 구조 효율화 요구)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해 수혜 대상이 2026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한 사업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재단 및 플랫폼의 역량을 활용하며 공공 데이터·표준 계약 체계 마련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 거점 기능에 집중하도록 사업 구조의 정예화 및 효율화가 요구됨 - (성과지표의 질적 고도화 및 결과 중심 관리 필요) 현재의 '콘텐츠 지원 작품 수'는 단순 집계 방식의 산출지표로서 지원의 질적 수준이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정과제 103(K-콘텐츠 플랫폼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지원)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장르 결정 이전의 '원천 스토리' 발굴 및 고도화에 집중함으로써 타 장르별 제작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과거 국회 및 자체 평가에서 지적된 집행률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기간을 18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행정비용을 1%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다만,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5.7%(2,344백만 원) 대폭 감축됨에 따라, '신규 IP 발굴'이라는 사업 목표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야기창작발전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 운영 위주로 사업을 재편한 것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적 인프라 확대라는 당초 목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2024년 2.4만 명에서 2026년 0.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단순한 사업 축소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 거점 기능(공공 데이터, 표준 계약 체계 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있음

○ 현재의 '콘텐츠 지원 작품 수' 지표는 단순 집계 방식의 산출지표로서 지원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질적 수준이 반영된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예산 감액과 연동된 기계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성과지표 목표 설정 근거의 합리성과 목표치의 도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세부사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등록·정책 연구 등 고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며,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2~'26)」 5대 전략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또한, 「저작권법」 등에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가 존재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은 인건비, 경상비, 고유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율 100%인 보조사업임. 고유사업비의 경우, 제도연구 및 정책지원, 저작재산권의 법적보호 기반이 되는 저작권 등록,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조정·감정,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기여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3개 내역사업별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은 최소 92% 이상이므로 집행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세부사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법정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추진 체계의 효율성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됨.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점검 노력을 적절히 추진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고객만족도와 온라인서비스 이용률로 선정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목표치 산출 근거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치의 도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저작권문화기반조성' 세부사업은 목표치 조정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저작권정책개발및문화분야통상협상역량강화' 내역사업의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부처 소명을 통해 실수혜자 범위 확대 노력이 확인됨 '저작권공정거래환경조성' 내역사업의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2,241명, '24년 2,350명, '25년 2,419명 등으로 부처 소명을 통해 실수혜자 범위 확대 노력이 확인됨 - (목표치 조정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치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목표 달성도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평균 82.4점, 134.8만회, 1,993명 수준).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치 조정 등의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함 - (제언)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등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저작권문화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청소년, 창작자, 산업계 종사자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저작권박물관 운영, 법률상담·지원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저작권정책개발및문화분야통상협상역량강화’, ‘저작권교육및홍보’, ‘저작권공정거래환경조성’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저작권정책개발및문화분야통상협상역량강화’ 내역사업은 부처 직접수행, ‘저작권교육및홍보’, ‘저작권공정거래환경조성’ 등 2개 내역사업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직·간접 수혜자는 창작자, 청소년 등 일반국민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음. ‘저작권정책개발및문화분야통상협상역량강화’ 내역사업의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수혜자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공정거래환경조성’ 내역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창작자이며,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2,241명, ’24년 2,350명, ’25년 2,419명 등으로 부처 소명을 통해 실수혜자 범위 확대 노력이 확인됨

○ 세부사업은 ‘청소년저작권인식도(점)’, ‘저작권교육횟수(만 회)’, ‘저작권공정거래컨설팅이용자수(명)’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목표치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목표 달성도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목표치 조정 등의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저작권인식도(점)’ 성과지표의 최근 3개년 목표치는 ’23년 82.6점, ’24년 82.8점, ’25년 81.7점이며, ‘저작권교육횟수(만 회)’는 ’23년 114.1만 회, ’24년 134.8만 회, ’25년 155.5만 회이며, ‘저작권공정거래컨설팅이용자수(명)’는 ’23년 1,919명, ’24년 2,000명, ’25년 2,060명

-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치 조정 등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제언)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등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세부사업은 실집행률 제고, 성과지표 개발 및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성과지표 개발 및 체계적 성과관리) '국내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조치건수(천건)'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25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499천 건, 목표 달성 실적은 834천 건으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함.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등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다만, 해당 성과지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대응 실적을 반영한 신규 성과지표로서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가능하며, 추후 '온라인 불법 저작물 침해대응 건수'로 변경하겠다는 부처 소명이 있었음 - (제언) 향후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세부사업은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 ‘국내저작권보호활동’, ‘해외저작권보호·협력’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 내역사업은 부처 직접수행 사업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 ‘국내저작권보호활동’, ‘해외저작권보호·협력’ 등 3개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당 법령은 사업 추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타 재정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세부사업의 집행률은 ’23년 99.1%, ’24년 99.4%, ’25년 99.5%임. 다만 직접수행으로 지원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 내역사업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3개 내역사업의 ’23년~’24년 실집행률은 90% 이하이나, 부처 소명을 통해 저작권보호 종합서비스 구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은 있음

○ 세부사업은 ‘국내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조치건수(천건)’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신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함

- 신규 성과지표이므로 ’25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499천 건, 목표 달성 실적은 834천 건으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거나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등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다만, 해당 성과지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대응 실적을 반영한 지표로서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가능하며, 추후 ‘온라인 불법 저작물 침해대응 건수’로 변경하겠다는 부처 소명이 있었음

○ (제언) 향후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액이 필요함 - (외부평가 지적에 대한 대응 부족) 기술업체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유료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이라는 외부 평가 지적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유사·중복 사업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 '국내 신기술 동향분석'(190백만 원)과 '해외 생태계 조사'(198백만 원)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의 중복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글로벌 통합 조사'로의 단일화 및 관리 효율화가 필요함 -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매년 약 7천만~9천만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 과다 산정 또는 사업계획 정밀도 부족 가능성이 있음 - (성과지표의 정체 및 결과지표 전환 필요) 성과지표가 최근 5년간 '성능평가 수행건수 25건'이라는 단순 정량적 수치에 고정되어 있어 정책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도입과 도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저작권법」 제10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명시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성능평가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공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94%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기록하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자체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안)을 마련하고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하는 등 행정적 관리 및 제도 개선 노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다만, 2026년 예산이 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15.0%(176백만 원) 감액되어 10억 원 미만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한 '저작권 신기술 및 국내산업 동향분석(190백만 원)'과 '해외 저작권 기술 생태계 조사 및 분석(198백만 원)'을 국내외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한 것은 글로벌 저작권 환경의 통합적 분석을 저해하고 중복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내역사업 내 '저작권 신기술 및 국내산업 동향분석(190백만 원)'과 '해외 저작권 기술 생태계 조사 및 분석(2026년 기준 198백만 원)'은 기능 및 목적 측면에서 유사함

- 글로벌 저작권 환경에서 국내외 기술 동향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하여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의 중복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글로벌 저작권 기술 동향 통합 조사'로 단일화하여 조사 표본의 정합성을 높이고 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성능평가 수행건수' 지표는 최근 5년간 목표치가 25건으로 고정된 단순 정량 지표로서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는 시스템 고도화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성능평가 통과 기술의 시장 적용률'이나 '불법 유통량 차단 기여도' 등 실질적인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예산 감액과 연동된 소극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저작권유통지원및이용활성화' 세부사업은 성과지표 검토 및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구축' 내역사업의 직·간접 수혜자는 저작물 이용 사업자, 창작자, SW 개발기업, 저작권관리단체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음.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구축' 내역사업의 실수혜자 규모는 부처 소명을 통해 확인되며,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내역사업의 '24년 직접 수혜자 감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됨 - (성과지표 검토 및 체계적 성과관리) 동 사업은 '저작권 권리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건)',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 '오픈소스SW 이용건수'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당초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부처 소명을 통해 일부 성과관리 개선이 확인됨 - (제언)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체계적 성과관리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저작권유통지원및이용활성화’ 세부사업은 저작권 유통시장의 편의성·투명성 제고,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시스템 등 거래체계 운영,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오픈소스SW 관련 컨설팅·교육 지원,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구축’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타당하며, 프로그램(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 및 단위사업(저작권이용및유통환경조성)과 연관성이 있어 정책적 재정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동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법령은 사업 추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직·간접 수혜자는 저작물 이용 사업자, 창작자, SW 개발기업, 저작권관리단체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음. 다만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구축’ 내역사업의 실수혜자 규모는 부처 소명을 통해 확인되며,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내역사업의 ’24년 직접 수혜자 감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구축’ 내역사업의 간접 수혜자는 부처 소명을 통해 실수혜자 규모가 확인됨.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24년의 직접 수혜자 감소했으나 부처 소명을 통해 외부 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됨

○ 동 사업은 ‘저작권 권리정보 신규 구축 건수(천건)’,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 ‘오픈소스SW 이용건수’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목표치 수준이나 달성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부처 소명을 통해 일부 성과관리 개선이 확인됨

- ‘저작권이용정보수집체계’ 내역사업은 실제 이용되는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상시 운영형 인프라 사업으로 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가 있음. 부처 소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운영관리 및 단계별 추진실적 중심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성과관리 개선이 확인됨

○ (제언)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체계적 성과관리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가디지털식별체계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무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정비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UCI 운영 및 활성화와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내역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 표준 인프라 구축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K-콘텐츠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가지원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영 방식의 효율화가 요구됨

- 「저작권법」 등에 명시된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보급·확산 의무를 수행하며, 콘텐츠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기관 설립 이후 장기간 지속된 계속사업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 구조를 띠고 있는 만큼 효율화를 위한 검토와 더불어 현행 보조사업 형식을 업무 위탁 근거에 맞도록 전환하는 예산 구조 정비가 필요함

○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이 우수하고 집행 실적이 양호하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한 예산 감액 반영 및 수혜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상호 보완성은 높으나, '국제식별체계 연계' 사업의 일부 완료에 따라 반영된 예산 감액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사업 구조의 재정렬이 필요함

- 3개년 집행률 100%로 양호하며 이미 2026년 예산에 감액이 반영된바, 정보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수행되어야 함

○ 3개년 집행률 100%로 양호하며 이미 2026년 예산에 감액이 반영되었으나 정보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밀한 예산 편성 및 환류 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과 분할 교부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없으며, 회계검사를 포함한 정산 절차를 기한 내 엄격히 준수함

- 연장평가 지적에 따라 2027년 민간위탁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순 평가 대응을 넘어 자체 성과 분석이 예산 편성에 선순환되는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핵심 지표인 UCI 적용 건수는 목표를 매년 상회 달성하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표의 다변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성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체계 개선 - 시스템 예산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내역사업이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 디지털 문화 서비스 구축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따른 국가지원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집행 관리 및 운영 방식의 효율화가 요구됨

- 「저작권법」 등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며, 등록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 사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매년 발생하는 저작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 영역의 사업에 해당함

○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이 우수하고 집행 실적 역시 양호하며, 3년간 부정수급이나 집행 부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23~2025년까지 높은 실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에 따라 현재 문체부 운영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정보화 인프라 및 보안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별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관리 실효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년간 만족도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2025년 경우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음. 목표 설정의 타당성 제고 및 시스템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액이 필요함 - (조사 데이터 신뢰도 문제와 조사방법 개선) 일부 매체 표본 편향으로 데이터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책지표 산출에 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것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2026년 계획에서도 조사 방법론 개선 없이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조사 설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됨 - (행정비용 분산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유사사업 통합) 내역사업별로 사업관리비가 분산 편성되어 예산 운용 효율성이 낮아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고, 만족도 조사와 데이터 조사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조사 연계·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요구됨 - (지원 대상 범위 한계) 등록 잡지 5,919종 대비 지원 대상이 132종(약 2.2%)에 불과해 지원 규모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예산 확대 외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우려) 미디어시장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61.2% 삭감되어, 전문 데이터 확보 등 고도화된 연구 수행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성과지표 개선 미흡과 대표성 부족) 보조사업평가에서 배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배포수혜자 만족도'는 정서적 지표 성격이 강해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및 '잡지산업 자생력 확보' 목적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 매체 지원과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2025년 핵심 성과지표인 '우수콘텐츠잡지 배포수혜자 만족도'가 목표(91.3점) 대비 92.1점을 기록하여 100.9%의 달성도를 보이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잡지산업 실태조사 결과 연 매출액이 2021년 대비 21.1% 감소하고 종사자 수도 4.3% 하락하는 등 산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잡지산업 전반의 시장위축 아래,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예: 디지털 전환 집중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콘텐츠 보급 내 '만족도 조사(10백만 원)'와 미디어시장조사의 '데이터 조사'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나, 잡지 산업 실태 파악 측면에서 조사 대상을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스스로 종이신문과 라디오방송의 이용률 급락 및 표본 편중으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2026년 계획에서 기존의 단순 이용량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 부족해 보임

○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잡지는 5,919개에 달하나, 선정되는 우수콘텐츠 잡지는 132종(약 2.2%)에 불과하고, 보고서에서도 전체 등록 종수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함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인 '배포수혜자 만족도'는 수혜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나,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및 '잡지산업 자생력 확보' 성과를 종합적으로 대변하기에는 다소 국한된 측면이 있음

- 향후 잡지 산업의 질적 성장이나 자생력 강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업 진흥 관련 지표를 추가로 발굴하여 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세부사업은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실집행률 제고, 부정수급 관리,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으로 판정함 - (실수혜자 규모 확대) 직접 수혜자가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으며,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집행률 제고)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은 '23년 88.0%, '24년 64.5%, '25년 87.1%로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수급 관리) 최근 3개년 간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이 확인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관리가 필요함. 다만 부처 소명에서 '23년 부정수급 1건, '23년~'24년 과오수급 2건이 모니터링 되었으며 부정수급 의심이 해제되었다고 확인함 -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드라마등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건)' 1개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실집행률 제고, 부정수급의 관리체계 점검,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세부사업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방송 신한류 지속을 목적으로 국내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유기적 연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지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유통지원’, ‘방송영상콘텐츠산업기반조성’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타 재정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직접 수혜자는 국내 중소제작사,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방송산업관계자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지원’ 내역사업의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200개사, ’24년 203개사, ’25년 173개사 등이며,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내역사업의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136개사, ’24년 120개사, ’25년 119개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방송영상콘텐츠유통지원’ 내역사업의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147개사, ’24년 135개사, ’25년 135개사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실수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부사업의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은 ’23년 88.0%, ’24년 64.5%, ’25년 87.1%로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24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매우 낮으며,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모두 90% 이하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매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 간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이 확인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관리가 필요함

- 당초 ‘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지원’ 내역사업은 부정수급 3건,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내역사업은 부정수급 6건과 단순 과오수급 3건 등이 확인됨. 다만 부처 소명에서 ’23년 부정수급 1건, ’23년~’24년 과오수급 2건이 모니터링 되었으며 부정수급 의심이 해제되었다고 확인함

○ ‘드라마등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건)’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실집행률 제고, 부정수급의 관리체계 점검,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제방송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제방송지원' 세부사업은 내역사업 개선,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내역사업 개선) '국제방송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내내역사업인 '인건비' 비중이 예산 대비 96.7%로 행정비용 과다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인건비(금융비용 포함), 방송영상콘텐츠해외배급·교류지원, 글로벌네트워크활용, 방송콘텐츠제작(신규), 한국관광홍보(신규) 등 5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중 인건비 비중이 90% 이상임('25년 기준 전체 예산 12,364백만원 대비 96.7%인 11,964백만원). 다만, 인건비 등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향후 내역사업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개선) '방송정보화시스템 통합운영·유지관리 서비스 SLA 평가지수(점)'과 '아리랑국제방송 채널만족도(점)' 등 2개 성과지표를 설정함. 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가 구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언) 내역사업 개선,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이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국제방송지원’ 세부사업은 국제방송 운영을 통해 K-콘텐츠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하며, K-컬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해외홍보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제방송활성화’와 ‘국제방송기반조성’ 등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국제방송 운영을 통해 국제 공공정보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아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제방송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내내역사업인 ‘인건비’ 비중이 예산 대비 96.7%로 행정비용 과다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다만, 인건비 등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향후 내역사업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내역사업은 인건비(금융비용 포함), 방송영상콘텐츠해외배급·교류지원, 글로벌네트워크활용, 방송콘텐츠제작(신규), 한국관광 홍보(신규) 등 5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중 인건비 비중이 90% 이상임(’25년 기준 전체 예산 12,364백만원 대비 96.7%인 11,964백만원)

- 다만, 인건비 등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향후 내역사업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방송정보화시스템 통합운영·유지관리 서비스 SLA 평가지수(점)’과 ‘아리랑 국제방송 채널만족도(점)’ 등 2개 성과지표를 설정함. 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가 구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2개의 성과지표가 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가 아니므로 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방송정보화시스템통합운영·유지관리서비스SLA평가지수(점)’ 성과지표는 적정한 목표치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리랑국제방송채널만족도(점)’ 성과지표는 해외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로 산출되는 수치임

○ (제언) 내역사업 개선,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광고산업 활성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광고분야 특화성은 인정되나 차별화 지속 필요) 범용 디지털 교육과 달리 광고 창작·제작 중심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 도메인 고유성은 인정되나, 타 부처 디지털 훈련과의 경계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광고산업 특화 수요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 분산 운영에 따른 사업개선)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과 '디지털광고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 내용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임차료·홍보비 등 행정 운영 경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어, 통합 사무국 설치 및 공간 공유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계속 사업임에도 성과지표가 단순 '수료율' 위주로 설계되어 실질적 가치 증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료 후 실제 산업계 안착을 확인할 수 있는 '업계 안착률'이나 '고용 유지 상태' 등 도전적인 보조지표 발굴을 통해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97% 이상을 상회하며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KOBACO, 한국광고총연합회 등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비즈매칭 성과(중소광고주 16편 제작 지원 등)를 도모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의 수료율이 목표치인 84%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2025년 89.9%)하고 있으며, 실제 수료생들의 창업 및 외부 공모전 수상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해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전무하며, 정산 잔액을 철저히 반납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이 높게 관리되고 있음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통한 취업 추적 조사를 도입하고 저작권 특강을 신설하는 등 환류 노력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과 ‘디지털광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교육 내용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임차료·홍보비 등 행정 운영 경비가 사업별로 분리 편성되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통합 운영 사무국 설치 및 공간 공유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신설되는 청소년 광고창작 경연대회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어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수행 주체(한국광고총연합회) 내 기존 대학생 지원 사업 조직과의 행정 인력 공유 및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확대해야 함

○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계속 사업임에도 성과지표가 단순 ‘수료율’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교육 수료 이후 수혜자들이 실제 산업계에 안착하여 활동하는 ‘업계 안착률’이나 ‘고용 유지 상태’ 등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전적인 보조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출판산업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출판산업활성화' 세부사업은 실집행률 제고, 성과지표 개선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실집행률 제고) 실집행률은 '24년 77.4%, '25년 83.1%이며,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 집행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다만, 부처 소명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24년은 사업완료 시 93%, '25년은 사업완료 시 90% 이상의 실집행률이 예상된다는 부처의 소명이 있음 - (성과지표 개선과 체계적 성과관리) 동 사업은 '출판산업수출지원업체수(개사)'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내역사업별 별도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 (제언) 실집행률 제고 방안, 성과지표 개선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출판산업활성화’ 세부사업은 출판·인쇄산업의 육성과 출판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등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판산업 제작·유통·기반조성·수출 과정 단계별 맞춤형 진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우수출판콘텐츠 육성’, ‘출판산업유통지원’, ‘출판산업기반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법령은 사업 추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타 재정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4년 77.4%, ’25년 83.1%이며,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 집행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24과 ’25년 실집행률이 모두 90% 이하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부처 소명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24년은 사업완료 시 93%, ’25년은 사업완료 시 90% 이상의 실집행률이 예상된다는 부처의 소명이 있음

○ 동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4건, 단순 과오수급 5건(중복제외), 환수완료 4건이 확인됨. 부처 관리 기준에 따라 부정징후 모니터링, 자체점검, 환수·제재조치, 후속관리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관리가 진행했다는 부처의 소명이 인정됨

○ 세부사업은 ‘출판산업수출지원업체수(개사)’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4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내역사업별 별도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출판산업수출지원업체수(개사)’ 성과지표는 ‘출판산업유통지원’ 내역사업 중심의 지표이며, 나머지 3개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가 필요함

○ (제언) 실집행률 제고 방안, 성과지표 개선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여가친화기업등 선정·지원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사업으로 '26년까지 보조사업 폐지 대상 사업이며, 사무국 운영비 감액과 효과성분석 연구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행정비용 감소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여가친화기업등 선정·지원 사업은 '24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국가사무로 인정되어 '27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중임 - '25년 기준 행정비용이 20%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26년 예산부터 사무국운영비용 삭제 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은 존재함 - '24년부터 여가친화기업공모신청 기업·기관수(개사)를 대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고, 성과지표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추가 지표 선정이 있었으나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미비 문제가 지적됨. 이에 대해 '26년 예산에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표체계를 위한 계획이 반영됨을 확인함

□ 종합평가 의견

○ 여가친화기업등 선정·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내 7개 내역 사업 중 하나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 제16조에 근거하여 여가친화기업 및 기관 선정·지원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근로자에게 여가 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여가친화인증 기업은 인증 공모 접수 기업과 기관이 직접 수혜자가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함

○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지원은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국가수행 사무로 판단되어 '27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편성 예정임

○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지원은 1차 보조사업자인 지역문화진흥원에 지정교부하고 있으며, 인증위원회 운영 및 누리집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 등의 행정비용이 보조금 대비 2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26년부터 사무국운영비를 삭제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24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보조사업의 민간위탁 비목 전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27년에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함

○ '24년부터 여가친화기업공모신청 기업·기관수(개사)를 대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투입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증사들의 변화에 대한 결과 지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화될 필요 있음

○ 이에 대해 '26년 예산에 여가친화기업인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지표 산정을 하려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내역사업의 재구조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등에 근거해 사업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전국민 인문향유 활성화 지원의 내내역 사업을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과 특정대상 인문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재조정이 필요함 - 사업목적과 예산투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은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자발적 참여활동 지원, 국민생활 속 나눔과 배려의 인문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인문정신문화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 사회문제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운영, 인문정신문화 확산기반 구축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내역사업 전국민 인문향유 활성화 지원의 내내역 사업을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과 특정대상 인문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재조정이 필요함. 사업추진과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내내역사업을 재조정할 필요 있음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과 내내역사업(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의 통합, 내역사업명 변경(사회문제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운영→전국민 인문향유 활성화 지원) 등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으나, 시설중심 프로그램과 대상 중심 프로그램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음

○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에서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질 제고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로 변경 조치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성과나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지표마련이 제안됨

○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나 사업 수혜 대상자들이 매년 바뀌는 상황에서 만족도 점수가 매년 상승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성과 목표치의 근거가 현실적이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사업의 사업관리 개선 및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사업개선이 요구됨 - 불용액 발생 및 성과 미흡으로 지적된 국외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 내역사업 폐지 조치함 - 내역사업 특수언어진흥기반조성 사업(전체 사업비의 3.5%)의 2차 집행 실집행률은 '23년 65.4%, '24년 79.2%, '25년 71.6%인 점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등 사업관리 개선이 요구됨 - 과거 평가에서의 지적에도 '세종학당 수료생수'와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향상 교육 참여자수' 성과지표이외 결과중심의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개발의 노력이 미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한국어 해외보급 및 한국가치 국내외 전파 등을 통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바른 언어문화 및 국어·특수언어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역량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며,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상위 단위사업이나 상위 정책목표와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세종학당 운영지원,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공공언어 개선 지원,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한글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한글문화 예술행사 지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5년 보조금 연장평가에서 '국외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사업의 불용액 지속 발생 및 사업효과 미비 지적에 대해 '26년부터 해당 내역사업을 폐지하여 조치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특수언어진흥기반조성' 사업의 2차 집행 실집행률이 계속 80% 미만으로 나타난 사유가 사업대상자의 특수성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등 사업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월별 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상 부정수급이 '25년 2건(부정수급 의심 1건, 과오수급 의심 1건) 적발되었으나, 현장점검은 기 실시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미 개최된 상황임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세종학당 수료생수와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향상 교육 참여자수로 산정되는데,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이 한국어 해외보급 및 한국가치 국내외 전파 등을 통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바른 언어문화 및 국어·특수언어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역량 강화로 볼 때 위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25년 보조금 연장평가에서도 성과지표 개선이 제안되었으나, 조치가 미흡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행정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방법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되나,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인력을 적극 활용하거나 시스템 구축 및 AI 기반 기술 활용을 통해 점차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제안됨 - 과거 평가 지적에 대해 성과지표 발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있으나 '25년 기준 성과지표는 여전히 '국학자료 DB열람건수'이며, 이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사업은 훼손·멸실 위기에 놓인 민간 소장 국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하여 민족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국가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공성이 크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가짐

○ 본 보조사업은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는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전통기록유산을 비롯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 및 연구·활용에 중점을 둠

- 내역사업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은 국역 및 국학전문인력 양성, 국학자료 DB구축 및 콘텐츠개발, 전통문화 활용 및 보급,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번역시스템구축 및 운영, AI 인문데이터셋 구축, 국학진흥협의체 운영 등 국학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의 직접 및 간접 수혜자 범위는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2002년 이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국학자료의 수집의 양과 이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규모 설정이 없이 매년 예산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에 포함된 행정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20% 수준으로 다소 높은 점은 국학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전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인정되나, 4개 기관의 정규직 인력을 적극 활용하거나 향후 시스템 구축과 AI 기반 기술 등의 지원방식을 통해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있음

○ 성과지표 발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컨설팅 시행 및 성과지표 개발('25년), 성과평가시스템 가동('26년)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으며, '25년 하반기 4개 국학기관의 협의체를 통해 '국학자료 활용·디지털 전환 종합지수' 등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함

○ 그러나 '25년 기준 성과지표는 여전히 '국학자료 DB열람건수'이며, 이 지표의 사업성과는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므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건립사업의 실집행률의 저조, 2개 내역사업의 건립완공 이후 일몰 해당,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등에 근거해 감액이 필요함 - 내역사업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24년 실집행률이 21%로 매우 낮음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28년)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27년)의 공정률 관리와 완공이후에는 사업 일몰로 예산 감액이 필요함 - 공원 방문자수와 공모사업 지원건수의 성과지표 외에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대 민족운동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가치(민주, 평등, 인권 사상)를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됨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20년~'28년)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21년~'27년) 사업은 목표년한이 정해져 있는바 해당년도까지 공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있음

○ 내역사업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24년 실집행률이 21%이었는데, 이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이월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임

○ 본 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자수(명)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공모사업 지원건수(건)인데, 사업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및 발전과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인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동학정신혁명 계승이나 유족 명예회복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보완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성과지표 개선 및 목표치 조정 등의 사업개선이 필요함 - 재정규모 산출 시 할머니들의 활동 중단과 포기 등의 문제('25년 국고보조사업 평가 지적사항)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함 - 내역사업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9.5%)과 전통나눔 할아버지(21%)의 행정비용(20%)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확인함 - 현장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과 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양성교육시간 조정('23년 일자리 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방법 마련과 1일 교육시간 및 교육일수 조정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됨 - 성과지표 개선의 노력은 있으나, '25년 기준 적용 지표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 지표의 목표치의 임계치가 도달한 상황에서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사업은 어르신의 지식과 연륜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에 바른 가치 전승과 인성 배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25년 시범운영)

○ 본 보조사업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 전승을 통한 미래 세대 인성교육 사업으로, 미래세대 인성 교육에 대한 효과성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며, 타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 내역사업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국비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매년 조정해 왔음

- 2019년부터 5년간 국비보조율을 70%로 유지하다가 '25년 60%로 하향 조정, '26년부터는 50%의 보조율을 정하고 있음

○ 재정규모 산출 시 할머니들의 활동 중단과 포기 등의 문제에 대해 중간 포기자에 대한 예측과 실태 파악을 통해 예산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함

○ 내역사업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9.5%)과 전통나눔 할아버지(21%)의 행정비용(20% 수준)의 대부분은 교육 및 재교육 관련 교육비 부담으로, 예산항목 조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내역사업의 목적과 예산투입 대비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적절한 성과지표 마련이 제안되어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25년 기준 적용된 성과지표는 이야기할머니 사업 수요자 만족도(점)이며, 이 지표의 목표치의 임계치가 도달한 상황에서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과거 평가에서 지적된 지자체 보조율 조정은 반영되었고, 현장수요 반영과 양성교육시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식적으로 수요반영을 위한 방법 마련과 1일 양성교육시간은 줄이고 교육일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제안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75.7% 증가(24,483백만원)하면서 신규 내역사업 5개가 동시에 추가되고 시설투자 비중이 36.6%에 달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시설투자(체험·전시관 건립 8,850백만원, 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에 대해 건립 후 운영비 조달계획 및 자체수입 전망이 미흡하고, 오늘전통창업랩(2,000백만원)은 공간 규모·위치 등 세부 산출근거 공개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창업기업 3년 생존율, 초기창업기업 매출액 증가율 등 결과 중심 일부 지표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며,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 유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가 미흡하므로 결과 중심 지표 개발 및 유사사업 간 역할 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전통문화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타당하나, '26년 예산에서 전년 대비 75.7% 증가(10,550백만원)한 24,483백만원 반영되면서 신규사업 5개를 동시에 추가하고, 시설투자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36.6%에 달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26년 기존 내내역사업 2개 축소 후 신규 내내역사업 5개(4,650백만원)가 동시에 추가되면서 내내역사업이 기존 13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으므로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5~'29)에 따라 사업 수가 늘었음을 감안하여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투자(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8,850백만원)가 전체 요구액(24,483백만원)의 36.6%를 차지하나 건립 후 운영비 조달계획 및 자체수입 전망이 미흡하므로, 공사 진행 상황 대비 예산의 적정 배분 여부를 점검하고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사업(체험전시관 건립,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전반에 대해 개관 후 이용자 수, 운영비 자체충당 비율 등 운영 성과 지표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오늘전통창업랩 조성(2,000백만원)은 1개소×2,000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간 규모, 위치, 조성 내역 등 구체적 산출근거가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창업기업 3년 생존율, 초기창업기업 매출액 증가율 등 결과 중심 일부 지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전통문화산업 매출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국민 인지도 변화, 지원기업 생존율 등 결과 중심 지표를 사업 전반에 걸쳐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프로모션, 해외거점 행사,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한류축제)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해외 홍보사업,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사업 등 유관기관 사업 간 중복성 검토가 부족하므로, 유관기관의 유사사업과 연계·조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전통문화 특화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실집행률, 부정 수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개선 필요성이 있음 - 2025년 기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64.1% 임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비중을 증가시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되어 부정수급 방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역량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비중을 높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직장인문화예술클럽, 예술누림 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만약 지속적 실시가 필요할 경우 사업의 차별적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간접집행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 집행관리 개선 필요성이 있음

-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64.1%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간접집행사업이 다수를 차지해 사업 추진 체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 또한 이와 같은 사업추진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어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92.2점으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지만 사업 유사성, 보조사업 부정수급 의심 사례, 낮은 실집행률 등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교육(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이 일괄 인상된 부분과 사업 만족도, 성과 지표 등과 관련하여 사업개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유형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시범적 운영 후에 인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혜자 사업만족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87.31→ 86.56→ 82.83)하여 개선 필요 - 성과지표가 주관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ODA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개발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자원, 기술, 경험에 기반하여 수원국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수원국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K-컬처의 국제사회 확산과 기여라는 국정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사업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다만,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5년 ODA가 종료되었는데, 2026년 새로운 ODA로 재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ODA 혜택을 보다 많은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ODA 수혜를 받은 국가보다 ODA 수혜를 받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사업 규모와 비교해 볼 때, 2026년 사업 예산이 국가별로 75% 일괄 증가됨. 기존 사업 유형과 달리 2026년은 정책컨설팅 형태로 새롭게 추진되는 ODA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일괄적으로 증액시키기보다 시범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증감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95% 내외를 보여 예산 집행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체계나 부정수급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은 2025년 외교부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역량강화 대상인 예술가와 현지 교사의 현업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해, 이들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참여자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두 지표 성과 사이의 차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 교사 및 예술가 현업 활용도: 95.51점(2023), 96.95점(2024), 97.10점(2025)

- 일반인 만족도: 87.31점(2023), 86.56점(2024), 82.83점(2025)

○ 현재의 성과지표는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ODA 사업의 성과가 수혜자의 주관적 만족도뿐 아니라 수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11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일부 내역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으로 감액이 요구됨 - 2차집행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2개 내역사업에 대해 관리 강화가 요구됨 - 월별 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상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나, 확인 결과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조치함 -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표로 미흡하며, 목표치도 3년간 동일하게 제시되는 등 지표개선이 시급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국립오페라단 등 11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 및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국가 주도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적절함

○ 각 단체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26년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나, 서울예술단 운영('25년 6,402백만원→'26년 7,688백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25년 1,019백만원→'26년 1,030백만원), 국악방송 지원('25년 10,549백만원→'26년 16,094백만원) 등 3개 단체 지원은 지원규모가 증가했으며 그 증가분에 대해 기관별로 사유가 제시됨

○ 지난 3년간 2차집행 실집행률이 80%이하인 내역사업은 '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79%), '25년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관리(73%)이며, 이러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 인건비 잔액, 계약낙찰차액,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23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일부단체(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악방송)의 인건비와 경상비 비중이 높고 공연단체들간의 인건비와 경상비 지중 차이의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지적된 바에 대해 일부 반영하려는 노력은 확인함

○ 월별 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상 부정수급은 '24년 3건(서울예술단 운영, 2023년 국립극단 운영)이 적발되었으나, 부정수급이 아님을 확인하여 조치함

○ 성과지표는 국립예술단체 정기공연 관객 객석점유율(%)이며 '23~'25년까지 목표치는 동일하게 84%로, 본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의전당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술의전당 지원' 세부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 비중이 대관공연 대비 낮아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 콘텐츠 확대와 대관 중심 운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예술사업 재정수요의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적정 재정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환류 및 개선노력 등 관리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국회 및 외부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이 일부 인정되나, 수익성 및 재정자립도 제고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선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예술의전당 관람객 수'는 단순 방문객 집계에 기반하여 사업의 질적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의전당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7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술의전당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초예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예술의전당 운영이라는 정책목표와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 비중이 대관공연 대비 낮아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 콘텐츠 확대와 대관 중심 운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예술사업 재정수요의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적정 재정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보조사업은 환류 및 개선노력 등 관리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국회 및 외부 평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인정되나, 수익성 및 재정자립도 제고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선은 미흡함

○ 성과지표인 ‘예술의전당 관람객 수’는 단순 방문객 집계에 기반하여 사업의 질적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기획공연 유료 관객 비중, 작품 만족도 등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동 사업은 예술의 전당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예술의 전당'을 리모델링 사업임.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내역사업이 '26년(11,264백만원)에 종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당 예산만큼 '27년에 감액이 요구됨 - '노후시설물 개보수'는 공사 건수 중심이 아닌 노후도·안전성·기능성에 기반한 우선순위와 성과지표를 반영한 체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은 개관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대표 복합문화시설의 노후 설비 개선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및 관람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따른 법적 근거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예술의전당 단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노후 기반설비 및 공연, 전시 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후시설물 개보수’ 내역사업은 공사 건수 중심의 산출지표에 머물러 상위 정책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설비시설의 노후도, 안전성, 기능성 기반 우선순위 체계와 운영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은 81.5% 수준으로 공정 시차에 따른 일시적 편차를 감안할 경우에 전반적 집행은 안정적으로 판단되며 e나라도움 기반 전산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체계도 작동 중임. 다만 향후 공정률과 예산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집행 관리의 정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가의 대표 문화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26년에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11,264백만원)’이 종료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27년에는 해당 내역사업을 반영한 자연감액이 필요함

○ 시설 개보수 실적 중심의 성과 제시는 인정되나 관람객 만족도, 시설 가동률 등 결과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효과를 정책성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량화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동 사업은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공정 단계별 집행 가능 범위를 근거로 연차 조정 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공사 건수 중심의 산출지표에서 벗어나 노후도·안전성·기능성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안전사고 감소율, 관람객 만족도, 재방문율, 시설 가동률 등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됨

○ 향후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노후설비 개선과 리모델링 성과가 이용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리모델링 이후에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의 향상도 고려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창작지원·안전관리·해외진출·시설유지 등 이질적 내역사업이 혼재되어 사업구조 정합성이 미흡하고 상위 목표와의 논리적 연계가 불분명함 · 개별 사업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성과지표가 일부 내역사업의 투입·산출 지표에 편중되어 14개 내역사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공연 관객 수·창작 공연 편수·국민 만족도 등 결과 중심 지표를 신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인프라 확충, 유통 생태계 구축,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구조 정합성 부족이 관찰되므로 내역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함. 창작지원(공연연습공간)·안전관리·해외진출(K-뮤지컬)·시설유지(윤이상 하우스) 등 이질적 성격의 사업이 혼재되어 상위 목표('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와의 논리적 연계가 불분명함. 소액 다건형 내역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가 통합전산망 이용건수·공연연습공간 이용률 등 일부 내역사업의 투입·산출 지표에 편중되어, 14개 내역사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며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공연 관객 수 증가율·창작 공연 편수·공연예술 종사자 고용 안정성·국민 만족도 등 결과 중심 지표를 신규 개발하고, 목표치는 과거 실적 대비 적정 상향 설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통공연예술 창제작 거점 지원에서 우수 공연·전시의 지역 유통 지원으로 실질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 명칭 변경 및 내역사업 구조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편 구조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를 병행 정비하여야 함 · 전체 예산의 96.6%를 차지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에 대한 독립적 대표 성과지표가 부재하고, 기존 지표 목표치는 4년 연속 실적 대비 70~120% 초과 달성될 만큼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결과 중심 지표 신설 및 목표치 도전성 강화가 필요함 · 2024년 실집행률이 80.4%로 저조하였으나 2025년부터 조기공모 실시 등을 통해 집행이 개선(12월 기준 실집행률 90%, 불용액 0원)되고 있는바, 하반기 편중 완화를 위한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및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유관기관 간 역할 구분이 일부 확인되나 협의 체계 명문화와 중복 방지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며, 민간 자부담 비율 확대 및 단계적 자생력 강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고 의존도를 완화하여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내역사업의 급격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짐. 이는 전통공연예술 창제작 거점 지원 중심에서 우수 공연·전시의 지역 유통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반영한 사업 명칭 변경 및 내역사업 구조 개편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선 방향을 제언함

○ 사업구조 개선

- 사업의 실질적 성격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명칭 및 내역사업 구조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편 구조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를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함
-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대표 성과지표를 신설하고, 내역사업별 보조지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유관기관 간 지원 분야 및 기능별 역할 구분이 일부 확인되나, 협의 체계 명문화 및 중복 방지 기준 구체화가 필요함
- 민간 자부담 비율을 전체 사업에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단계적 자생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부분

-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2024년 실집행률이 80.4%로 저조하였으나 2025년부터 조기 공모 실시 등으로 집행이 개선(12월 기준 실집행률 90%, 불용액 0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편중 완화를 위한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단계 전달체계의 간소화를 검토하고, 보조사업자 공모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여야 함

○ 성과관리 강화

-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에 대한 결과 중심 성과지표(지역 공연시장 규모 증가율, 지역 예술단체 자체 수입 증가율 등)를 개발하고,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도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 목표치가 4년 연속 실적 대비 70~120% 초과 달성되고 있어 도전성 없는 목표 설정이 지속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통계 및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국립한국문학관 개관 후 운영계획 불명확 등으로 시설투자 편중(81.4%)을 개선하고, 감액과 동시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함 · 4개 내역사업 중 1개만 측정하는 단일 지표로 전체 효과 파악 불가하고 2024년 실적 8,916건 대비 2025년 목표 5,100건으로 하향 설정되어 있어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 성과지표 선정 및 결과중심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문학관 건립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고민할 필요 · 외부평가 연속 미흡 판정 및 지적사항 미개선이 부각되므로 지적사항별 구체적 조치계획 제시 및 구조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해결하려는 문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정책효과 발현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사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명확성 부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 있음
- 성과지표가 일부 내역사업에만 국한되어 전체 사업 효과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의 연계성(예: 국립한국문학관의 목적이 국민의 문학창작인지 단순 향유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치 설정이 도전적인지 등이 평가 필요
- 현 시점의 사업계획은 시설에 상당 부분이 편중되어 있어 사업개선과 동시에 일정 부분 예산 감액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움

○ 4개 내역사업 중 국립한국문학관 설립(26,519백만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외부사정으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26년 8월 완공 예정), 공사 진행률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을 일정 수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20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조치계획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반복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추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모호성(복지/창작지원 혼재), 유사 사회안전망과의 중복, 수혜자 책무성 부재, 환경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어 사업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복지정책과 창작지원정책이 혼재되어 사업 설계·집행·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용정산 없는 현금보조 방식으로 수혜자 책무성 확보가 어려움 · 소득인정기준을 조정하고, 타 사회안전망 수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수혜 횟수를 제한하여 신진예술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모호성(복지/창작지원 혼재), 유사 사회안전망과의 중복, 수혜자 책무성 부재, 환경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어 사업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예산 규모가 코로나 이전(2019년 31,319백만원) 대비 약 2.6배 수준으로 유지·증가하고 있어 긴급지원 수준의 예산을 상시화한 근거가 불충분함. 다만 같은 기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 2019년 말 68,564명에서 2025년 말 201,434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정책 대상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정책 대상 증가와 상시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자체 생계지원 등 다수 사업과 수혜대상이 중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사회안전망 수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수혜 횟수를 제한하여 신진예술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투입 중심 성과지표(수혜자 수)와 소극적 목표 설정, 비수혜자 대비 객관적 성과비교 부재 등 성과관리 체계가 형식적임. 결과 중심 지표(예술활동 발표 건수, 예술소득 변화율 등)로 전환하고 수혜자 자립 성과를 추적하는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심층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관리할 것을 촉구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함께누리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함께누리 지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 지원(5,460백만원)이 공모 없이 지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경쟁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모 기반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역사업 간 기능적 차별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지원건수 등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전체 예산의 54.8%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객 수 증가율·창작물 유통 실적 등 결과 중심 지표로 개편하고 정기적 만족도·체감도 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함께누리 지원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 지원(5,460백만원)이 공모 없이 지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모 기반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역사업 간 유사 사업 통합 및 기능적 차별성 명확화를 통해 사업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재단은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 지원의 평가체계 구축 연구를 '25년에 추진 및 2026년부터 시범도입 예정이며 향후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 환류를 통해 효율성 등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소명

○ 성과지표가 투입지표(지원건수) 위주로 구성되어 전체 예산의 54.8%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지표(장애예술인 활동 지속률, 관객 수 증가율, 창작물 유통 실적 등)로 성과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별 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환류하며, 아울러 사업 수혜자 대상 정기적 만족도·체감도 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의 산업화 추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이 2018~2022년 약 11.3배 급증한 반면 집행률은 하락하고 불용·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6년 신규 요구된 「AI 활용 K-아트 혁신 지원」(4,000백만원) 역시 'AI 활용'이라는 기술적 수단 자체를 재정개입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 시장실패에 기반한 정책적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기업지원·시설건립·기관운영비 등 이질적 내역사업이 혼재되어 정책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소규모 내역사업(투자활성화·부가상품 유통 등)은 유사 기능의 타 세부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가 투입·산출(교육 만족도, 지원 기업 수 등) 중심에 머물러 '산업화'라는 정책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결과 중심 핵심성과지표(매출성장률, 고용창출, 민간투자 유치율, 기업 생존율 등)를 개발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종료 후 3~5년간 사후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개선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은 예술분야의 산업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집행 효율성과 성과달성도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심층평가에서 지적된 타겟팅 비효율, 유사사업 중복, 성과입증 미흡 등의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업 내 이질적 내역사업(인력양성, 기업지원, 시설건립, 기관운영비)이 혼재되어 정책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

○ AI 관련 사업의 경우 AI의 예술 활용 양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지원 방식 검토가 필요

○ 아트코리아랩 등 중장기 운영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연차별 예산에 대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반영할 필요

○ 예술기업 지원의 타겟팅 효율성, 일반 창업지원 대비 차별적 성과가 불분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과정 등 타 부처·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상존하여 예술기업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간 대상·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

○ 투입·산출 중심의 현행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지원기업 매출성장률, 고용창출, 민간투자 유치율, 기업 생존율 등)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정책목표인 ‘산업화’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종료 후 3~5년간 경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10.)에서 권고한 ▲타겟팅 효율성 제고, ▲장르별 분산지원 통합, ▲민간 부문 역량 중심의 정책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한국문학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있지만 하기 사유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은 개념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사업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일부 내역사업은 핵심 목표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정책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특정은 제한적임 - 매년 소액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 조정·감액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수의 세부 공모 사업이 병행 운영되면서 추진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 간 중복적 행정 절차가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남 - 모니터링 방식이 주로 사후 서류 검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출판 여부·실제 유통·판매 실적 등 실질적인 사업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 설정 고도화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됨 - 산출 지표 대신 '결과' 중심의 지표 도입이 요구되며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라는 단순 기계적 산식 대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및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정 지원사업으로 정책 목표와 정합적으로 연계되며 사업 구조는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확산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함

○ 본 사업은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한국문학 번역·출판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행체계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유일하며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타 재정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해외 한국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원, 재외공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교류·홍보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적 중첩 가능성은 일부 존재함

○ 사업은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과 전문 번역인력 양성은 단기 성과 중심의 콘텐츠 수출 정책을 보완하는 중·장기 문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각 구성요소 간 성과 연계 및 상호 작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세부사업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일부 내역사업은 핵심 목표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수혜자 범위는 비교적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만,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정책 효과의 정량적 특정에 한계가 있음

○ 사업은 이월·전용·추경 편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등 형식적·행정적 집행 관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소액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 조정·감액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 추진 주체와 집행 책임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기능 유사 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방식이 주로 사후 서류 검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출판 여부·실제 유통·판매 실적 등 실질적인 사업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 설정 고도화 등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에서 환류 성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번역출판 동시지원 건수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100% 내외 또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차별 목표치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성과 개선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일부 내역사업의 2차집행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한 근거로 감액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2차집행 실집행률은 '23년 96.1%, '24년 92.8%, '25년 79.0%이며, 내역사업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의 집행률은 3년간 계속 90% 이하이고 내역사업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 사업의 '25년 실집행률은 52.2%로 매우 저조함 -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을 결정할 때 신규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나 폐지사업의 사유 등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음 - 세부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

□ 종합평가 의견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사업은 법적 근거 및 국정과제의 근거를 통해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단,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미흡함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준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별로 지원규모 적정성, 집행 적정성, 성과지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함

- 내역사업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 사업은 매년 신규사업과 사업 폐지 등으로 지원액의 변화폭이 크며, 신규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나 폐지사업의 폐지 근거 사유 등이 불분명함

-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의 집행률이 3년간 계속 90% 이하인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집행률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공간 및 건축문화진흥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내내역 사업별 지원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원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며, 2차집행 실집행률 저조(’25년)에 대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국립디자인박물관개관준비사업의 재정지원의 성과 평가에 근거한 지원 목표 년한이 제시될 필요있음

○ 사업종료에 따른 새로운 성과지표 설계가 필요하며, 목표치 조정 및 적절한 성과달성도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미술진흥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의 이관, 실집행률 제고, 부정수급 관리, 성과지표 개선 등의 사업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및 부처 역점 추진과제로 정책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됨 - 전체 사업비('25년 46,860백만원) 중 내역사업 공예진흥사업('25년 5,274백만원)을 세부사업 공예문화산업육성으로 이관 및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내역사업 공예진흥사업 이관 및 통합에 따라 추진체계의 변화도 요구됨 - 내역사업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의 2차집행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조치 강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 '시간예술진흥사업 예산액 대비 관람객수(명)' 이외에 결과중심의 사업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미술진흥기반구축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부처 역점추진과제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미술분야가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며 창작-유통-향유로 확산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예진흥' 사업이 세부사업 '공예문화산업육성'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됨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 한국공예의 세계화,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어 공간 등 3개 내내역 사업을 공예문화산업육성사업내 내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예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공예진흥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과 통합, 이관을 조정할 필요있음

○ 내역사업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 '25년 기준 문화창작공간조성의 실집행률은 49.1%로 나타났으며, 실집행률 부진은 건축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시됨

○ 월별 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상 부정수급은 '23년 3건(과오수급 2건, 부정수급 의심 1건). '25년 2건(부정수급 의심) 등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성과지표인 '시간예술진흥사업 예산액 대비 관람객수(명)' 이외에 DB 구축의 성과나 인력배치 성과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비 절감 필요) 동일 세부사업 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이 3개 내역사업으로 분산 편성되어 업체별 고정 관리비 중복 지출 등 비효율이 존재함. 가상화 인프라 도입 명시에도 불구하고 자원 공유가 미흡한 바, 차기 연도 통합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분절적 예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정과제 104-2 및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명시된 핵심 과제들을 사업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국가의 공공 책무성을 이행하는 필수적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 최근 3개년 집행률이 97%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과거 평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보조율을 하향 조정(70%→50%)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긍정적임

○ 다만, 동일 세부사업 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이 3개 내역사업으로 분산 편성되어 업체별 고정 관리비 중복 지출 등 비효율이 존재함

- 가상화 인프라 도입 명시에도 불구하고 자원 공유가 미흡한바, 차기 연도 통합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분절적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수원국 내부 사정(홍수, 선거,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비함 · 예산의 83% 이상이 신축공사에 편중되어 있고 완공 후 운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기조성 도서관 135개관의 사후 운영 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종료 기준 및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차기 수원국 발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 몽골 사업 완공분까지만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고 신규 건립사업 추진 전 사업 전반의 효과성 분석(단순 집계수치 비교 또는 만족도 기반이 아닌 준실험적 방법론 기반)을 선행할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도서관 건립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증진이라는 정책적 의의가 인정되나, 최근 수년간 극히 저조한 집행률, 시설투자 편중(83%), 결과 중심 성과지표 부재, 수원국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DA는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지 않으나, 앞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시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

○ 해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당해 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실집행률이 일정 기준(예: 50%) 미달 시 차년도 예산을 자동 감액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예산의 83% 이상이 신축공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완공 후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부재함. 시설투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사업(현지 사서 역량강화, 한국 문화 콘텐츠 보급, 도서관 운영 컨설팅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조성 도서관 135개관에 대한 사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이 부실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을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성과지표가 투입지표(건립 공정률)에 불과하며, 도서관 이용률이나 문화교류 효과 등 결과 지표가 미설정되어 있음. 결과 중심 지표(도서관 이용률,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율, 현지 주민 만족도 등)를 개발·도입하고, 기조성 도서관의 사후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원국 내부 사정(홍수, 선거,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비함. 현재 진행 중인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중앙도서관 조성사업의 '26년 완공분(993백만원)까지만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되, 차기 신규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선행할 것을 권고함

○ 사업 종료 기준 및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차기 수원국 발굴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종료 조건과 단계적 축소 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기 사유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목표가 본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임 - 간접 수혜자 경우 사업별·내역사업별로 실질적인 수혜 범위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여 수혜자 규모에 비례한 지원규모 산정이 충분히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97~101%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내역사업별 실집행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협회 중심 전달체계는 행정적 안정성은 있으나 다층적 구조로 인해 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함 - 본 사업은 외부 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제도화된 구조 개선으로의 환류는 제한적임 - 제출된 성과지표·목표 실적표를 통해 연도별 목표 달성률을 관리하고 있으나, 핵심 지표의 달성률이 급락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지역문화 격차 완화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정책 목표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소장 문화유산의 DB화 및 보존 처리는 국가 유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예산 지원의 정당성이 있고, 지방 소재 사립관의 인건비 지원은 운영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공익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기반시설 진흥사업으로 법·제도상으로는 타 재정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목적이나 지원대상을 갖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목표가 본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며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주로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외형상 개선되었고 내역사업별 실집행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으나, '25년 기준 주요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95% 이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 문화기반시설 정책개발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2년 25.5%, 2024년 40.6%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었으나, 2025년 111.9%로 크게 개선됨. 다만 연도별 편차가 크므로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외부 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제도화된 구조 개선으로의 환류는 제한적임

○ 본 사업은 제출된 성과지표·목표 실적표를 통해 연도별 목표 달성률을 관리하고 있으나, 핵심 지표의 달성률이 급락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산출지표 중심 성과관리로 인해 정책적 영향력 평가 한계 존재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성과지표 및 목표 개선 필요 - 정책 효과성 및 타당성 개선 - 사업 목표 기반 관리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보조) 내역사업이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 표준 인프라 구축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영 방식의 효율화가 요구됨

-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명시된 지역문화 정보의 수집·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의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타 부처 및 민간 시장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여 중복 가능성은 낮으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문화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국민 편익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음”이라고 설명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함

○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이 우수하고 집행 실적이 양호하나, 사업 목적과 성과 관리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자산취득 위주의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수행기관의 정규직 인건비와 경상비를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목표 및 사업 설계에 있어 담당자 만족도를 넘어 실제 정책적 가치 창출 및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단일 내역사업 구조에 따른 투명성 저해 요인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 잔액 및낙찰 잔액을 제외하고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나 시스템 교육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 이용률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및 성과 개선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재의 만족도 중심 지표는 투자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기여도 및 지역 격차 해소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와 '시스템 교육 만족도'를 넘어 사업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박물관문화재단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박물관문화재단 지원(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각 사업 기능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점검이 전제되어야 함. '27년 예산 편성 시에는 K-컬처 확산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6년 신규 반영된 '전통문화 IP확보 및 상품 발굴 확대(2,000백만원)', '박물관상품 뮷즈 해외홍보 추진(760백만원)', '박물관 편의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사업(500백만원)에 대해 정책효과 검증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국립박물관 상품·공연·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적 활용과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공연법」에 근거한 국립박물관 문화서비스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갖춤. 또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문화자원 활용 확대·서비스 강화 방향과의 정합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은 상품관 운영, '뮷즈' 개발·보급, 극장 '용' 운영, 지방관 무료 문화행사, 편의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목적과 내용 간 연계성은 확보됨. 전통문화 IP·상품 발굴 및 해외홍보 등 연구개발, 공연, 예술지원, 안전 등 공익 서비스 영역의 재정투자 필요성은 인정되며 향후 수익 창출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함. 동일 세부사업 내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재정지원의 목적과 시장기능 간 경계가 불명확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업 내 기능별 목적의 명확화 및 기능별 관리가 필요함

○ 집행 적정성은 국립중앙박물관 교부 - 재단 수행의 단일 전달체계로 책임·역할 구분도 비교적 명확하며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99% 이상으로 집행 안정성이 높음. 다만 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비중 확대 및 단년도 예산 급증('25→'26) 상황에서 신규사업과 투자성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내 경상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성과 측면에서 '박물관 상품 구매객 수', '극장 용 평균 객석점유율' 등 서비스 제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설정되어 향상된 성과가 확인되나 신규 확대된 전통문화 IP 건수 등의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향후 콘텐츠이용과 상품 영역은 참여율·판매율·재구매율·해외 진출성과 등 이용성과 중심 지표를 개발하고 안전, 시설이용, 안전관리 환경 유관사업은 혼잡도·사고·민원 감소 등 결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실집행률 99% 이상으로 집행 효율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집행 부진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6년 예산은 '25년 3,471백만원 대비 7,016백만원으로 (102.1%)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며 증액 요인은 '전통문화 IP확보 및 상품 발굴 확대(2,000백만원)', '박물관상품 뮷즈 해외홍보 추진(760백만원)', '박물관 편의서비스 안전관리 강화(500백만원)' 등 신규사업과 투자성 사업에 기인함. 전통문화 IP 개발 등 개발사업은 효용성이나 부가가치를 검증한 이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후 편의시설 개선 및 일회성 경비는 '27년부터는 재정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가이미지 홍보**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이미지홍보' 세부사업은 내역사업 통폐합,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으로 판정함 - (내역사업 통폐합) 동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내역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개 내역사업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부처에서는 '27년 예산 편성부터 내역사업 분리, 신설할 예정임을 소명함. '한국문화소개행사개최및지원' 내역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한국문화소개행사개최및지원' 내역사업의 2개 내내역사업(주한외국인활용K-컬쳐글로벌홍보, K-컬쳐확산지원 등)은 '해외홍보콘텐츠제작'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이관 및 통폐합 예정임 -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개선) '코리아넷유튜브채널구독자수(천명)' 성과지표는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조정 등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내역사업 통폐합,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이미지홍보’ 세부사업은 한국문화의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한국문화소개행사개최및지원’, ‘해외주요인사초청’, ‘국가이미지조사’, ‘해외홍보콘텐츠제작’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한국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타당하며, 프로그램(국제문화홍보) 및 단위사업(글로벌중추국가홍보)와 연관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재정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동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내역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개 내역사업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부처에서는 ’27년 예산 편성부터 내역사업 분리, 신설할 예정임을 소명함. ‘한국문화소개행사개최및지원’ 내역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해외주요인사초청’ 내역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이관, ‘주한외국인활용K-컬처글로벌홍보’ 내내역사업은 ‘해외홍보콘텐츠제작’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이관 및 통합 예정(2개 내내내역 통합), ‘지자체협력, K-컬처확산지원’ 내내내역사업은 신규 세부사업 ‘한국문화소개행사개최및지원’ 사업으로 이관 예정임

○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사업의 예산 집행률, 보조사업 보조율 등을 고려할 때 보조율, 사업방식, 사업추진주체 등은 적절하지만,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방식 변경이나 내역사업 간 통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코리아넷유튜브채널구독자수(천 명)’ 성과지표는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조정 등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25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666천 명이며, 목표 달성 실적은 674천 명임. 목표치는 단순 구독자수 수치이며 적정하게 설정되지 않아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 (제언) 내역사업의 통폐합,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상당부분 감축을 검토하고, 기존 센터의 성과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동향 조사 등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데이터·인덱스·대시보드 관련 사업은 과학적 타당성과 실제 활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함 · 성과지표 목표치가 3년 연속 동일(9.9건/개)하게 설정되어 달성도가 169.7%에 달하는 등 성과관리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 결과지표 도입 및 목표치 상향이 필요함 · 5개 보조사업자를 통한 3단계 전달체계로 행정비용이 과다(6,842백만원, 7.4%)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고,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기부 해외거점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급증 대비 집행률 저하, 성과지표의 소극적 설정, 부정수급 사례 발생,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어 '사업운영개선' 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상당부분 감축을 검토하고, 기존 센터의 성과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진출 정책지원(포상·시상, 1,378백만원, 수혜자 연 9건)은 건당 단가 과다로 대폭 감축 또는 타 내역사업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동향 조사 등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산출근거가 불투명하여 지원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빅데이터·인덱스·대시보드 관련 사업은 자료구축 비용이 과다한 반면 결과물의 과학적 타당성과 실제 활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임. 기존 마이크로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및 외부 연구자 개방 등을 통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함

○ 성과지표 목표치가 3년 연속 동일(9.9건)하게 설정되어 달성도 169.7%에 달하는 등 성과관리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평가 3년 연속 '보통' 등급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체감도 조사도 미실시되고 있음

→ 현행 단일 지표를 폐지하고 내역사업별 결과지표(수출 계약 성사율, 수혜기업 수출액 증감률 등)를 도입하되,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실적의 105~110% 수준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5개 보조사업자를 통한 3단계 전달체계로 행정비용이 6,842백만원(예산 대비 7.4%)에 달하며 기관 간 중복·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코리아스타트업센터와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해외진출-전문분야 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는 부처 간 해외거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콘텐츠 특화 거점과 일반 창업 거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경상비 지원 외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사업과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은 2025년 종료되어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은 신규 내역 사업인 'K-브랜드 글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이관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은 예산 실집행률이 낮아 집행률 제고와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은 기존에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사업 대상과 분야, 내용이 다르므로 기존 사업 운영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심층적 검토 위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류 융합 확산 사업은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추진 - 2026년 전 사업이 신규 재편되어 재외문화원 운영 성과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개발 필요성이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외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핵심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K- 컬처 세계 확산, 문화외교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이 되는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내역 사업은 전년 불용액이 58백만원으로 불용 규모가 크지 않고, 재외한국문화원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지원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은 시작 시기가 예산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사업 시작 및 운영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지원은 주로 재외한국문화원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체계가 단순 명확하고 비효율성이 없음. 다만,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국제문화정책 사업의 성격이 있어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 및 정산 보고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에 반영되어 있음

○ 성과지표로 제시된 투어링 케이아츠 순회건수는 투입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며,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음

- 특히, 2026년 사업에는 케이아츠 순회 사업이 타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이동하여 신규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 보조사업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또한 주요사업비가 운영 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함

○ 2026년에는 사업들이 모두 신규사업으로 재편되므로 사업 성과를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제문화정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 연계성이 높거나 행정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있음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이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지원은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의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과 연계성이 높음 - 미래혁신 문화교류지원은 성과가 불분명하고 행정비용 과다하여 예산 재검토와 사업개선 여지가 있음 ·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수교기념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 지표는 단위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 제고 등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동 사업은 K-컬처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국정방향을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일부 내역사업에 있어 타 사업과 유사성이 나타나거나, 사업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이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개최'는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 중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과 연계성이 높음

- 내역 사업인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이나 민간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내용상 세부 사업인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포럼 개최, 문화교류 페스티벌 개최, 교류/협력 채널 운영 등 사업의 목표와 지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성과 또한 불분명함

○ 예산 집행률을 기반해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체계는 적절해 보이나,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행정비용이 18% 정도 되어 사업추진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사업(2025): 예산 1,000백만원, 행정비용 180백만원)

-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체류 지원비(37백만원), 국외 여비(90백만원) 등이 내역 변경 및 전용 사용된 사례가 나타나 예산 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내역 사업 중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사업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1건 확인되었으나 심의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됨

○ 사업 성과 관련하여, 국제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다만,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 아래 다양한 내역 사업이 실시되는 데 비해, 성과지표가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이해도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하여, 이러한 사업들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와 같이 경상비, 인건비 중심의 내역사업만 존재할 경우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동 세부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타 내역 사업들이 개발, 배치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에 대한 경상비, 인건비 지원이며,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은 90% 이상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비 지원 사업임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이전 2개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도전적인 설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 제고 및 문화적 위상 강화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예산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비, 인건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은, 이 사업과 별개 사업인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이 사업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성격을 가지므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타 내역사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2025년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98.3%로 나타나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리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에 대한 경상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체계가 단순하고 명확하여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아 부정수급 관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이 경상비, 사업비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는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함. 다만, 동 사업이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바, 두 사업 통합 후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동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에 대한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 또한 산정기준에 기반하여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평가됨(인건비 증액은 신규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 사업 중 한국형 관광 ODA 구축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개선 필요 · 사업의 주 내용은 방한 초청 연수로, 찾아가는 연수는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사업'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사업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ODA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 수원국의 관광발전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하여 초청연수생, 현지 관광산업 업계 종사자, 관광부처 공무원 등에 대한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동 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K-컬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내용이 적정함. 다만, 찾아가는 연수는 방한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 사업'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내역 사업 중 한국형 관광 ODA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과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예산 집행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사업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정기적 모니터링(상하반기 각 1회), 수시 대면조사 및 현장 방문 수행 등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새로운 성과지표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지적됨. 이에 따라 2025년 예산 2천만원 감축과 성과지표 내용 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연수를 통하여 획득한 지식, 정보를 현업에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성취를 보이지는 못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ODA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초청 연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및 성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세부사업은 국민 다수에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다만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후보 발굴의 개방성, 수상 사례의 확산성, 대국민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 필요 · 성과지표로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참여 만족도'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나 '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효과성 지표'로 개선 노력을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세부사업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즉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양성평등 인식제고,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음

○ 양성평등의 가치는 헌법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문화 분야에서의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필요함

○ (사업방식 개선) 이 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문화생태계 전반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친화적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후보 발굴의 개방성, 수상사례의 확산성, 대국민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 필요함

○ ‘양성평등 인식제고’ 사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사업은 여성문화네트워크 등 간접보조사업자가 주관하는데, 문화계의 일원에 의해 수상작과 수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일단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 인식제고’ 사업의 경우 14백만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수행방식과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관리 비용의 지출로 판단됨

○ (성과지표 개선) ’23년부터 ’25년까지 사용된 성과지표인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참여 만족도’는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한 해당 분야의 인식 개선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국민 대상 양성평등 인식 확산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었으나 ’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효과성’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목표 기반 사업 개선 필요 - 예산 관리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내역사업이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고유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은 담보하고 있으나, 계속사업화에 따른 구조적 경직성 및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에 대한 예산 효율화 검토가 필요함

-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나, 장기 지속에 따른 인건비·경상비 위주의 경직적 예산 구조 고착화가 우려됨

- 전담기관 고유 사무로 민간 중복의 가능성은 낮으나, '문화PD 운영' 등 특정 사업은 타 공공기관과 기능적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 설립 이후 지속된 계속사업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구조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은 확보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일반 사업화되고 있어 지원 규모 및 사업 범위의 재설정이 필요함

- 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성격과 다른 일자리 창출, 콘텐츠 진흥 등에 관한 사업은 기관 정체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 정보화 전담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접근성 제고에 관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을 고려한 예산 설계 및 내역사업 간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을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매우 높으나, 대다수 지표를 100% 이상 달성했으나,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등 보수적 목표 설정으로 인해 예산 투입의 당위성 증명에 있어 그 적정성에는 한계가 있음

- 과도한 목표 상회나 고정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실질적 정책 효과와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로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성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예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성과 목표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다음 본 사업은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전담기관 지원 내역사업이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가 사이버 보안 법령에 근거한 필수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으며, 118개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수행하며, 법적·경제적 근거가 명확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보안 관제 서비스로 타 부처(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전담기관을 통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구성됨

- 주요 보안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가 완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 예산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이 우수하며 높은 집행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기획 및 관리 개선 고도화를 통해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2개 내역사업(직접수행, 전담기관 지원) 간 상호 보완성이 높고, 최근 3년간 실집행률도 우수함

- '23년-'25년 발생한 불용액은 위탁운영사업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판단되며, 2024년 보조사업평가 권고에 따른 사업 통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 최적화를 도모할 계획임

○ 높은 실집행률과 정산 절차를 통해 재정 관리의 건전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민간경상보조의 실집행률이 높은 수준((최근 3년 95%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회계 검증 등 현재까지 부정수급이나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 단순 집행 관리를 넘어, 보안 관제 효율성 향상이 실제 예산 절감이나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제안·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핵심 지표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률 등 주요 목표를 100% 달성 중이나, 목표치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체감도 및 보안 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예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사업 목적 기반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내역사업이 보조비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 디지털 문화 서비스 구축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따른 국가지원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집행 관리 및 운영 방식의 효율화가 요구됨

- 「문화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 없는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문화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로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향후 유사 보조사업과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예산 구조 정비가 필요함

○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이 우수하고 집행 실적이 양호하나, 이월 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 반영 및 성과지표의 도전성 강화가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상호 보완성은 인정되나, 2025년 추경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 등 집행 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 구조의 재정렬이 필요함
- 실집행 과정의 한계가 확인된바, 정보화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수행되어야 함
-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의 종료 및 추경 예산의 이월 발생 등 집행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 효율화가 필요함
- 내역사업 간의 실질적인 상승효과 및 체계성이 담보되어 있는 지 사업체계에 관한 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감액 편성이 추진 중인 바,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엄밀한 관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공모 및 입찰 절차,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 검증 등 정산 절차를 준수하며, 현재까지 부정수급이나 외부기관의 지적 사항은 발생하지 않음
- 단순 운영 관리를 넘어 자체 성과 분석이 실질적인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핵심 지표인 큐레이팅봇 응답률 및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를 상회 달성하고 있으나, 보수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고, 데이터 활용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세부사업의 최근 3개년 평균 실집행율('23년 58.8%에서 '24년 54.9%, '25년 44.3%)은 약 52.7% 수준임. 실집행률 70%이하 사업은 높은 수준의 감액이 필요함. 최근 3개년 결산 결과는 특히 자본보조 내역사업에서 불용·이월이 발생하고 있음('25년 교부예산현액 18,254백만원 중 10,156백만원 차년도 이월). 이는 '26년과 같이 인프라 순증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에서 재정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함 - 따라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4,500백만원), 'AI기반 창의복합문화공간 조성'(900백만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500백만원),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200백만원) 등 신규·확대 내역사업은 일정 수준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기 투자형 정책사업에 해당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자체 보조사업 중심 구조에서 국비 의존도가 높고 지자체 매칭 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이월구조가 반복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 일부 미디어 관련 내역 사업과 지자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그램’, ‘ACE Fair’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양성 중심의 경상보조 사업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26년 이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5,481백만원)’,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4,500백만원)’ 등 시설건립 사업이 신규 반영되면서 사업 구조가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하드웨어 투자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사업 운영성과 관리와 신규시설 공정관리 및 설립 타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 간 간접집행 실집행률은 ’23년 58.8%, ’24년 54.9%, ’25년 4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보조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설계 지연, 지방비 미매칭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월이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5년 교부예산현액 18,254백만원 중 10,156백만원이 차년도 이월되는 등 사업의 지연 및 변경이 잦아 예산 편성 및 단계별 집행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는 콘텐츠 전문인력 취·창업 인원 등 일부 성과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시설건립 중심 사업의 경우에 투자 대비 정책효과 검증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향후에는 방문객 유입 규모, 연계 콘텐츠 제작 건수, 문화산업 고용 창출 등 도시 육성 차원의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관리와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강화된 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3개년 평균 실집행률이 약 52.7% 수준에 머무르고 자본보조 사업에서 반복적인 불용·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시설건립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한 감액 및 연차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 계획 기반 사전검증 및 성과연동형 사업관리 구조등 사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사업개선)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보조)'사업에서 재단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별도로 콘텐츠 유통·사업화 기능 수행기관으로서 별도 성과지표(콘텐츠 유통지수, 사업수입 등)를 구축함으로써 전당-재단 간 역할 분담 및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 재단은 콘텐츠 유통·사업화 수행기관으로서 '콘텐츠 유통지수', '사업수입', '콘텐츠 확산', '유통 채널 확대' 등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당과 성과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26년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16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27년 예산 편성 시에는 증액분에 대해 성과 및 실 집행률 검증을 전제로 예산 증액이 가능함. 우선 재단의 주요 기능을 IP 기반의 유통 및 사업화로 명확히 한 후에 성과 점검을 통해 단계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평가 의견

○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보조)’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전당 창·제작 콘텐츠의 유통·보급·대중화 및 편의·상품화 등 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재단의 역할은 전당의 직접 운영 기능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사업화 중심의 수행기관 기능에 있으므로, 정책목표는 ‘방문객 확대’가 아니라 유통 성과·수익·도달 등 재단 고유 기능에 맞춰 설정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전당사업과 역할 분장이 필수적임

○ 재단은 콘텐츠 유통, 어린이문화원 운영, 편의시설 위탁관리, 문화상품 개발·유통 등으로 구성되어 전당의 창·제작 기능과 역할 분담 구조 자체는 타당함. 다만 전당 프로그램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기능과 재단의 유통과 대중화 기능 사이에서 정책대상 및 운영 방식이 중첩될 소지가 존재하므로 재단은 전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통 및 사업화 기능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사업 목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재단 지원)의 최근 3개년(’22~’24) 실 집행률은 89.8%, 97.1%, 96.9%로 전반적 집행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다만 ’26년 증액된 규모 하에서 교부 이후 2차 집행(재단 내부 집행) 관리, 분기별 집행점검 및 집행계획-성과지표 연계 강화를 통해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재단 사업의 성과를 ‘연간 방문객 수’ 등 전당 이용량 지표로 측정할 경우 성과 과다측정·귀속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단 고유 기능을 반영하는 별도 성과지표 체계가 필요함. 즉 재단은 콘텐츠 유통·사업화 수행기관으로서 ‘콘텐츠 유통지수’, ‘사업수입’, ‘확산’, ‘유통 채널 확대’ 등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설정하고, 전당과 지표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26년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16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27년 예산 편성 시에는 증액분에 대해 성과 및 실집행률 검증을 전제로 예산 증액이 가능함. 우선 재단의 주요 기능을 IP 기반의 유통 및 사업화로 명확히 한 후에 성과점검을 통해 단계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동시에 전당과 재단 간 역할을 구분하여 전당은 창·제작과 시설운영에 집중하고 재단은 유통 및 수익 사업화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의 요인을 최소화함. 재단의 독립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환류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난 3년 간 부정수급이 꾸준히 발생(22건)하고 있으어 관리체계 강화 및 감액 필요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권고된 성과지표 개선, 편익 분석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명확 · 내역사업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목표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목적에의 기여 및 연관성 정도에 따라 지원 분야 간 조정 검토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지역 콘텐츠 창작창업 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의 개발, 지역기반 게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및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심의 절차 진행하는 한편, 부정수급방지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교육, 관계자간 협의회 개최, 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일반적 수준의 관리 노력 인정됨

- 다만 지난 3년 간 부정수급이 꾸준히 발생(22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13건이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에서 발생하는 등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되므로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 감액 필요

○ 지역인프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세부 내역사업별로도 다양한 산출물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나, 현행 성과 평가 방식 하에서는 여러 내역사업들 간 비교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내역사업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목표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목적에의 기여 및 연관성 정도에 따라 지원 분야 간 조정 고려할 필요

- 또한 콘텐츠 산업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가 주요 사업 배경의 하나인 만큼 지역 간 격차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관리가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민문화활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난 3년 간 부정수급 발생한 바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 및 감액 고려 · 지역 격차 완화는 사업 목적의 큰 축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화된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전국 단위 캠페인인 문화가 있는 날 관련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주축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기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지난 3년간 e나라도움 시스템상 부정 징후 통보내역은 106건이며 이 중 2건은 점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3건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조치완료

- 부정수급의 철저한 관리 및 감액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참여율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사업의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참여시설 수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만족도 등으로 성과지표를 개선

○ 지역 격차 완화는 사업 목적의 큰 축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화된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특히 현 지표상으로 신규참여자와 재참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수혜자에게 문화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수혜자에게 문화 경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사업내 컨설팅 지원 등으로 2025년 실집행률(25.7%)이 저조하므로 향후 집행 계획에 따른 감액편성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컨설팅 지원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컨설팅 대상인 지역자치단체 만족도 등 성과측정과 관리가 필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내역사업 자율계정 이관 이후 남은 내역사업은 중앙차원 관리사업으로 지역균형특별회계로의 지원 타당성이 낮아 일반회계로의 이관 고려			

□ 종합평가 의견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근거해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뚜렷하고 공공성이 인정됨

○ 평가 대상 내역사업은 문화도시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컨설팅 전략 실행 등 홍보를 지원하는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사업이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보조 사업으로의 지원이 타당

- 사업내용은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문화도시 브랜딩, 인지도 조사 및 통합홍보 등 대부분 중앙 차원의 접근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중앙을 통한 지원구조가 적절

- 평가 대상 내역사업인 문화도시 관련 홍보·교류·성과확산 등은 전담기관 담당이 적절하며 현재 사업을 전담하는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지정된 기관으로 사업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내역사업이 자율계정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내역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관리 및 홍보)은 비수도권 집행비중 계산 근거가 없고 지역균형회계로의 지원 타당성이 낮아 일반회계로 이관(지역균형특별회계 감액 조정)

○ 2025년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사업 실집행률은 25.7%로 저조해 향후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자문범위 및 위원 확대, 추진상황 정기 점검, 예산 분할 교부, 집행 계획에 따른 일부 감액편성 검토 등)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컨설팅 지원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컨설팅 대상인 지역자치단체 만족도 등 성과측정과 관리가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들은 개선 및 감액 필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일부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반복되는 경우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및 감액 통한 집행률 제고 등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상향 조정 고려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의 주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한 지표 추가로 발굴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 등 법적 근거가 뚜렷하고 국가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취약 지역 중심으로의 중앙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법적 근거 및 다양한 내역사업의 특징에 맞추어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 수준의 부정수급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음

○ 내역사업들은 관광자원 기반조성과 관련한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개선 필요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2029년까지 큰 규모의 증액이 예상되므로 예산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성이 큼

- 특히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는 데 대한 체계적 관리·감액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 성과지표로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방문자수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목표를 상회

- 다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하므로 시간에 따라 목표치를 일부 상향 조정

-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의 주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 지역의 관광산업 매출, 인구이동, 관광지 고용 등의 지표를 성과평가시 추가적으로 검토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전통문화체험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사 사업에서의 보조비율(50%)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국비 분담 비중(90% 또는 정액지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순차적 보조비율 조정 검토 및 이를 통한 감액 필요 · 템플스테이 연내 집행률이 낮아(최근 2개년 80% 이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일부 부정수급 내역 확인된 만큼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사업 특성상 불교·유교문화 중심으로 지원 대상 구성되어 균형 발전취지와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성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유교문화 관련 체험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정과제 방향에 일치

- 2004년 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된 내역사업으로 기존에 갖춰온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전통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어 공공지원 지속할 필요

○ 사업내용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 주가 되고 있으며 전통문화 유지, 국가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며 지원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뚜렷함

○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확인됨

○ 대부분 내역사업은 실집행률 90% 이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템플스테이 사업은 연내 실집행률이 최근 2년간 80%를 하회하는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집행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본 사업은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육성으로 볼 수 있으나 전통문화라는 고유성격을 고려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의 사업번호 122를 적용하고 내역사업별로 90%까지 보조하거나 정액보조

- 다만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되는 71(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72(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확충) 등의 보조비율(50%)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국비분담 비중 높은 수준이므로 순차적 보조비율 조정 및 이를 통한 감액 필요

○ 전통문화체험 1건, 울산태화문화체험관 건립 1건 등 부정수급 확인되었으며 부정수급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 전통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불교문화 또는 유교문화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비수도권에 대한 별도 고려가 어려워 균형발전사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음

- 더욱이 비수도권 사업비 비중이 70.4%로 낮아 사업 취지 고려시 지역균형특별회계 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지역 의료관광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웰니스·의료관광 시장 성장세에 부합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과 실제 수단인 일회성 페스타·체험 프로그램 간 괴리가 존재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의 자체 유치 활동과 사업 성과를 분리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의 순효과 검증이 불충분하므로, 비교집단 설정·기여도 분석 등 평가 방법론을 도입하고 결과 중심 성과지표(1인당 지출액·재방문율·고용창출 등)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종료 후 자체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출구전략이 부재하여 국비 의존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가 산업 기반 마련 중심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비·지방비 예산 투입의 기준을 마련하며, 지자체별 사업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사·축제 관련 경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웰니스·의료관광이라는 고부가가치 관광시장의 성장세에 부합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과 정책효과 귀속의 불명확성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과 실제 사업 수단인 일회성 페스타·체험 프로그램 간 괴리가 존재하고 효과발현경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클러스터의 정의와 성과기준을 재정립하여 단순 행사 개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조성(의료기관·웰니스시설·관광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 마케팅 체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핵심 사업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의 자체적 유치 활동과 본 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의 순 효과(net impact) 검증이 불충분한바, 본 사업의 순효과를 분리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비교집단 설정, 기여도 분석 등)을 도입하여 국비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투입·산출 지표(환자 수, 관광객 수)에 편중되어 있고 결과 중심의 지표가 부재한바,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재방문율, 클러스터 내 사업체 매출 증가율, 고용 창출 효과 등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종료 후 자체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출구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국비 의존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가 산업기반 마련 중심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비·지방비 예산 투입의 기준을 마련하며, 지자체별 사업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행사·축제 관련 경비(출연료, 행사 대행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집행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하고 있으며 집행독려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사업 진행 속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감액 배정이 필요 · 지방 이양 이전에 국비 지원 편성된 계속사업에만 국비가 교부되고 있으므로 향후 단계적 종료에 따른 폐지 계획 명확히 수립할 필요 · 비수도권 사업비 비중 61.9%로 낮은 편이며, 비수도권 집중 지원 및 성과공유 방안 없어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등 체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근거가 뚜렷하며 사업전달체계, 부정수급 관리, 보조금 지원 비율 등도 적절

- 체육시설 설치가 진행되는 지역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 우려 낮고 사업체계도 효율적

- 보조금 지원비율(30%)은 유사 사업에 비추어 적절히 설정

○ 다만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44~65% 수준에 머무는 구조적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지자체 사업 진행 속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감액 배정이 필요

- 관계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 자체가 본 사업의 주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집행률은 사업성과의 부진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독려, 실집행률 정기 점검, 신속집행을 위한 점검 및 평가회의 진행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사업특성상 집행독려만으로 집행률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과정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분석하고 지자체 사업 진행 속도와 진행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감액 배정 필요

○ 지방 이양 이전에 국비 지원 편성된 계속사업에만 국비가 교부되고 있으므로 향후 단계적 종료 일정과 폐지 계획 명확히 수립할 필요

○ 비수도권 사업비 비중이 61.9%로 낮고 비수도권 집중 지원 방안 및 성과공유 방안이 없어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세부사업 내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 적합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함 -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사업의 원로체육인 지원은 본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행사성·일회성 경비 성격이 강함 - '피크골프 표준모델 연구용역' 사업은 '26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예산은 순감이 요구됨 · 동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환류 및 개선 노력, 성과관리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총 23건(약 7,872백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을 감액하였음. 다만, 향후 부정수급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국회 및 외부 평가 등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감축 노력은 인정되나, 성과지표 정비 등 질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106번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취지에 부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육성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일부 내역사업의 정합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사업의 원로체육인 지원은 본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행사성·일회성 경비 성격이 강함. 이러한 사업은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함

- ‘파크골프 표준모델 연구 용역’ 사업은 ’26년 종료 예정되어 있어, 해당 예산은 순감이 요구됨

○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최근 3년간 총 23건(약 7,872백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있어 보조사업 관리의 취약 가능성이 확인되므로, 참여기관·참여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과 집행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정산·환수 절차를 엄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한○○○○○협회·대한△△△△△협회·□□광역시○○○○○협회 등에서 부적절 집행이 확인되어 환수·제재가 진행 중인바, 재발 방지를 위해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e나라도움 부정징후 기반 상시 점검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국회 및 외부 평가 등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감축 노력은 인정되나, 성과지표 정비 등 본질적인 체질 개선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성과지표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증진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성과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관리의 보완이 필요함

- 단순 참여율 중심의 지표 체계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참여 지속성·신규 참여자 유입 등 질적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민체력인증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지자체 보건소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어, 전문 체력인증 기능을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국민체력인증 기반구축'은 신규 증액분의 비용·효과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고도화 완료 이후에는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전반적인 집행 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보조금 관리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사업개선이 요구됨 - '23년 경산체력인증센터에서 보조사업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예산 규모 대비 35.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체력인증 참여인원'은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의 도전성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민체력인증’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 중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지자체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과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사업과의 차별화 요소(전문 체력인증 서비스 등)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국민체력인증 기반구축’은 전년 대비 64.2% 증액 편성된 바 있음. 다만, 내역사업의 증액 사유인 디지털화 도입 비용(682백만 원)은 단가, 물량,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도입 완료 이후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 설치 예산 대비 유지보수 예산은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전반적인 집행 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보조금 관리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23년 경산체력인증센터에서 보조사업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로 3,955,400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보조사업은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예산 규모 대비 35.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체력인증 참여인원’은 참여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사업의 실질적 건강증진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체력개선율’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관행은 지양하여 목표의 도전성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세부사업은 정책 수요보다 기금 수익 규모에 연동되어 예산이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고, 소액다건의 다수 내내역사업으로 국성된 현재 구조는 정책 집중도를 저해하므로 기능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100% 국고 보조 구조에 대해서는 민간 자생력이 확보된 영역(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보조율 조정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및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연도별 실집행률은 양호하나, 일부 내역사업의 실집행 부진 사업의 실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 조정 및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함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다단계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심판양성 및 지원 등 총 7건(93.4백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는바, 부정징후 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대학운동부 지원 수혜수', '만족도'는 내역사업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및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 중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의 일부 사업은 타 기관 사업과의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는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 간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요보다 기금 수익 규모에 연동되어 예산이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고, 소액다건의 다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 구조는 정책 집중도를 저해하므로 기능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전문인력 양성 등 모든 내역사업이 국고 보조율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자생력이 확보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격과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자부담 매칭(10~20%)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및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2025년 ‘전문인력양성’ 및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사업은 70%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 조정 및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함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다단계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외부 적발 내용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심판양성 및 지원(1건),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3건), 전문인력 양성 및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3건) 등 총 7건(93.4백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는바, 부정징후 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대학운동부 지원 수혜수’, ‘만족도’)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는바, 결과 중심 지표로의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심판 판정 공정성 관련 지표 등 내역사업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인센티브 제공), 적립 포인트를 스포츠·건강 분야에 재소비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25년 2차집행(실집행) 기준으로 내역사업 간 실집행 편차가 커 집행 안정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원시스템 구축은 실집행률 31%('25.12), 차년이월 540백만원으로 확인되어(운영 83%, 지원금 88%) 구조적 집행부진 우려가 제기됨 · 2026년 예산 요구안이 전년 대비 +19.5% 증액(5,654→6,758백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있으나, 최근 시스템 구축 분야의 집행 지연과 일부 예산 이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집행·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는 지원인원·인증시설 등 '개소/규모' 중심으로 제시되고(예: 인증시설 목표 확대, 지원인원 8만→9만 등), 결과 중심 성과(지속참여율, 활동량 증가, 만족도, 순증 참여자 등)를 통해 사업의 실질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대표 성과지표(지속참여율, 재참여율, 활동량 변화 등)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2026년 정부안 기준 약 56억 원 규모로 편성된 재정사업이나, 시스템 구축 분야의 집행 지연이 확인되어 집행·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를 최종 결과지표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기준 시스템 구축 분야의 실집행률이 31% 수준에 머물고, 일부 예산이 차기로 이월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통제 및 일정관리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달청장 공석에 따른 혁신제품 선정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였고 '26.3월 기준 실집행률 73%로 회복되었으나, 외부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차년도에는 19.5% 내외의 증액 요구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앞서 집행역량과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간편결제기관/민간 전환 기관으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음.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성과, 책임소재(민원, 부정수급, 정산) 명확화 및 통합관리체계 지속 점검이 필요함

○ 전액보조(100%) 구조 개선을 위해 전환기관 수수료 일부 분담, 전년도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 실적에 따라 차년도 교부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성과연동형 위탁(성과 미달 시 감액) 등 검토 필요

- 데이터 플랫폼(앱/웨어러블/API) 활용계획(활용처·지표·보안)을 구체화하여 "빅데이터 생성" 효과를 검증 가능하게 설계 필요

- 시스템 구축은 일정·납품·검수·유지보수까지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월 발생 시 차년도 예산 자동 조정 등 통제장치 마련 필요

- 참여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참여율, 활동량 변화, 만족도, 건강지표(가능 범위), 정책기여도(순증 추정) 등 결과지표를 내역사업별로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세부사업 내 일부 신규·증액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 산정의 객관적 근거 보완이 요구되어 사업개선이 필요함 -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중 스포츠 안전교육 활성화 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800% 증액된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동일 수준의 예산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안전매뉴얼' 사업은 산출 근거가 제시된 측면이 있으나, 매뉴얼 고도화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이 필요함 · 국회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노력은 인정되나,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 환류 및 개선노력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행정적 독려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입력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데이터 입력·갱신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재 등 관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 안전교육 참가자 수'는 사고 예방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안전관리 이행 수준 등 결과 중심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스포츠기본법」 제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2에 근거하여 스포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참여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일부 보조사업은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인정되나,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지원 규모 산정의 객관적 근거 보완이 요구되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스포츠안전매뉴얼’ 사업은 산출 근거가 제시된 측면이 있으나, 매뉴얼 고도화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스포츠 안전교육 연구 활성화’ 예산 증액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동일 수준의 예산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한편, 보조사업은 국회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노력은 일부 확인되나, 구축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환류 및 개선노력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특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안전사고 데이터 입력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 대상 교육·안내를 강화하였으나, 행정적 독려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입력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데이터 입력·갱신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재 등 관리 수단을 병행하는 등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체육시설 안전교육 참가자 수’는 기본적인 안전지식 확보 및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지표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 단순 이수자 수 중심의 산출지표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발생률 변화, 안전관리 이행 수준 등 결과 중심 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목표 설정의 도전성과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포츠 종목 보급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스포츠 종목보급'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지원 방식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의 정합성 보완이 요구되므로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스포츠 종목보급' 내 국제바둑연수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완료 후 감액이 필요함. 또한, 전통무예 진흥 사업과 레저스포츠 보급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고려할 때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재정수요로 보기 어려움 - '스포츠 종목보급' 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00% 지원이 타당하나, 일반 동호인 대상 사업은 자부담을 통해 참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전통무예 진흥 사업과 레저스포츠 보급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이 각각 68.6%, 79.4%에 그쳐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통무예 진흥' 등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 및 시설 건립 중단 등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환류·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종목보급사업 참가인원'은 참여자 수 합계 중심의 산출지표로서 사업의 질적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스포츠 종목보급’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씨름진흥법」 제8조,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 「바둑진흥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종목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통 스포츠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 중 ‘레저스포츠 보급’의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문체부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 세부사업과 관련 사무를 통합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높고 사업내용도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지원 방식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의 정합성 보완이 요구되므로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스포츠 종목보급’ 내 국제바둑연수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완료 후 감액이 필요함. 또한, 전통무예 진흥 사업과 레저스포츠 보급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고려할 때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재정수요로 보기 어려움

- ‘스포츠 종목보급’ 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00% 지원이 타당하나, 일반 동호인 대상 사업은 자부담을 통해 참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스포츠 종목보급’ 세부사업은 집행 적정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미흡하며, 특히 전통무예 진흥 사업과 레저스포츠 보급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이 각각 68.6%, 79.4%에 그침. 따라서 실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이 필요함

- 또한, ‘전통무예 진흥’ 등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 및 시설 건립 중단 등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환류·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인 ‘종목보급사업 참가인원’은 참여자 수 합계 중심의 산출지표로서 사업의 질적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신규 등록 동호인, 프로그램 재참여율, 만족도 등 사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관행은 지양하여 목표의 도전성과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실집행률('23년 41.4%, '24년 39.4%, '25년 34.2%) 최근 3개년 연속 저조. 또한, 3개년 연속 하향세 - 실집행률 제고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조함 · 사업개선 - 목표치 설정 근거의 합리성과 목표치의 도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공약사업인 생활비 절감 대책 중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국정과제 중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4~'28)」과 연관성 및 정합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책적 타당성과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과 사업운영비는 공공스포츠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시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 공약사항, 국정과제, 상위계획 등과 충분한 정합성을 가지므로 사업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세부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와 사업으로 인한 후생효과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규모는 적정하다고 평가됨

○ 본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3개년 연속 저조한 수준이며, 또한 3개년 연속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23년 41.4%, '24년 39.4%, '25년 34.2%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3개년 연속 하향하고 있음. 사업운영비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23년 89.5%, '24년 81.3%, '25년 74.0%로 최근 3개년 연속 하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5년 국회에서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의 추진 및 전달체계는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며, 부정 수급 등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두 성과지표(시설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의 '25년도 최종 실적치는 목표치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두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노후 개선, 안전시설 강화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최근 실집행률이 79.0%('23) → 67.1%('24) → 61.7%('25.12)로 지속 하락하고, 차년이월액('24년 24,973백만원, '25년 32,282백만원) 및 불용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 집행부진이 우려됨 · 집행부진 사유로 지방비 미확보 및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이 매년 반복 제시되고 있어,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제시되어('23년 260개소→'25년 147개소→'26년 194개소) 결과 중심 성과(안전사고 감소, 이용률 증가 등)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실집행률 하락 및 이월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어, 집행·성과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4.7% 증액(65,853→95,277백만원)되었으나, 실집행률은 79.0%→67.1%→61.7%로 하락하여 증액 타당성 검토 필요함
- 결산 집행률은 99% 수준이나 실집행률이 60%대에 머물러, 예산투입 대비 실질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장기화 등 집행부진 사유가 매년 반복 제시되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제시되어 결과 중심의 정책효과(안전·접근성·이용률 등) 파악이 어려우므로 대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집행률 하락 및 이월 누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집행준비도 기반의 배분체계 마련, 실집행률 목표 설정 및 미달 시 환류 강화 등 성과 연계형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비 미확보가 반복되는 만큼, 지자체 매칭 확보를 담보하는 사전확약 강화, 미확보 지자체 패널티, 집행역량 기반 배분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긴급·안전” 지원의 객관적 기준(위험도·등급·사고이력 등)과 우선순위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월 최소화를 위해 공모·선정 단계에서 사업기간·설계·인허가 준비 수준을 반영하고, 집행 준비도 기반의 공모·선정 체계 강화

○ 만족도 중심 지표 외에 안전사고 감소, 이용률 증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내역사업 성격에 맞게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울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사업인바, 매년 운영비 예산 중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불용액의 절대적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 과다한 운영비 보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전제로 한 운영비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세부사업은 대한체육회의 운영비(사업비 포함) 보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나 기관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수혜자(체육인 및 일반국민)의 체감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고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종합평가 의견

○ 이 세부사업은, 가맹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의 진흥을 총괄·집행하는 법정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 이 세부사업은 대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제공하여 체육행정의 안정성·전문성·연속성·자율성 확보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국가 체육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지속적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 소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역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내용이 적정함

- (과도한 선거비용) '24년도의 경우 선거운영비로 409백만원 상당이 지출되었는바, 목적 사업의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선거 관련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예산 절감이 불가능한 중앙선관위 위탁비용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법률지원비, 선거일 행사비, 홍보비 등은 예산 절감을 통해 간소하고 차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상승 자제) '인건비'는 대한체육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며, 매년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의 별도 승인을 통해 산정되고 있으나 매년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총액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운용을 최대한 효율화함으로써 인건비 총액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용액 과다) '24년 지출 전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운영비 1,000백만원이 예산집행계획 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는 등 '24년~'25년 절대액 기준으로 상당한 불용액('23년 89,659,707원, '24년 409,901,743원, '25년 742,910,377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집행 단계 이전의 수립 과정에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 개선/보완 필요) 이 사업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체육진흥 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는 개별 산출물이 아닌 기관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수혜자(체육인 및 일반국민)의 체감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격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구축 완료('26년) 이후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년도 재정지원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요구되므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가족 간 거래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특수관계인 거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위반 단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대한체육회 운영 포털 이용자 수'는 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 등 정책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체육단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체육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체육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격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26년 신규 반영된 구축비(9.2억 원)가 구축 완료 이후 유지보수비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구축비 소멸분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므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단계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24년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점검 결과, 가족 간 거래에 따른 부정수급 1건(25백만 원)이 적발된 바 있는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단체에 대한 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대한체육회 운영 포털 이용자 수’는 이용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 등 정책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지방체육회 재정자립도 향상률’ 등 사업의 핵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우수선수양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보조사업은 단년도 종료 예정 사업을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예산 조정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국가대표 훈련 지원' 내 MRI 장비는 '26년 도입 완료가 예정되어 해당 지출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함 - 또한, '선수촌 운영' 중 관광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 목적과 정합성이 낮아 전액 감액이 요구됨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요구되는바,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설 건립 등에서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월 발생이 확인되는바, 실집행 소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강화가 요구됨 - 2023~2024년 내역사업(국가대표 훈련지원, 선수촌 운영, 청소년대표 육성,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등)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부정수급 확인이 어려운바 정산 절차의 신속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경기력향상도'와 '후보선수의 경기력 향상률'은 2025년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세부사업 성과지표가 미달된 상황으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내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우수선수 양성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문체육 선수 육성과 국제대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대표 및 지도자 지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선수촌 운용’ 관광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 목적과 정합성이 낮아 전액 감액이 요구됨
- ‘선수촌 운영’ 중 급식센터 지원 등은 국제대회 개최 주기와 연계하여 대회 미개최 연도 소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대표 훈련지원’ 내 MRI 장비 도입비(12억 원)는 2026년 구축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본 지출분만큼의 예산 감액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요구되는바,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설 건립 등에서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월 발생이 확인되는바, 실집행 소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강화가 요구됨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2023~2024년 내역사업(국가대표 훈련지원, 선수촌 운영, 청소년대표 육성,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등)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부정수급 확인이 어려운바 정산 절차의 신속화가 필요함
- 부정수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시 환수·제재 등 후속조치를 엄정히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에서 60억원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확인되는바 실집행 소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강화가 요구됨

○ 성과지표인 ‘경기력향상도’와 ‘후보선수의 경기력 향상률’은 2025년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세부사업 성과지표가 미달된 상황으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내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26년에는 개관 준비를 위한 일시적이고 일회성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됨. 개관 이후에는 성과지표 설정 등의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내역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보존(보조)’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체육 유산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스포츠 유물의 공공재적 성격과 전문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시설이나 기능적 중복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전시콘텐츠 개발, 유물수집 및 관리 등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이후 필수 운영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정합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26년 예산에 포함된 ‘수장고 설비 구축’, ‘도서관 시스템 구축’, ‘개관식 및 초기 집기 도입’ 등은 ’27년 이후에는 시설 운영 중심의 사업구조와 예산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93%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 운영준비 단계의 예산 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단일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기본적인 효율성도 확보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관리체계를 통해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과 달성도는 개관 이전 단계의 특성상 건립 진척도 중심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향후 운영단계 진입 이후 정책성과 검증을 위한 관람객 수, 전시 운영 가동률,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스포츠 유물 DB화율 및 관람객 만족도 등 운영성과 중심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26년 예산은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한 초기 운영기반 구축비가 집중 반영된 특수년도 편성으로 판단됨. 개관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27년부터는 ‘도서관 운영(287백만원)’, ‘유물수집 및 관리(수장고 설비 구축 일부)’, ‘박물관 운영(개관식 260백만원)’, ‘박물관 운영(초기 집기 217백만원)’ 등 개관 초기 구축성 지출을 사업과 운영예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개관 이후에는 관람객 수 등 단순 이용 지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전시 운영 가동률,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관람객 만족도 등 운영성과 지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주최단체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수익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해당함 · 이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실집행률의 편차가 있으므로 내역사업 간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을 통해 프로스포츠 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심판 판정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심률이 감소하며 판정의 공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프로야구장 시각장애인 음성중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종합평가 의견

○ 이 세부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아마추어스포츠 저변 확대, 비발행 종목 지원,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 수행 등 전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사업인바, 모두가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성장한 전문체육인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해당함

○ 이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원 근거를 전제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유소년·아마추어 육성→프로스포츠 활성화→국제체육 진흥' 등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지방체육, 장애인체육, 전문인력양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음

○ 이 사업의 '23년~'25년 내역사업 실집행률은 최저 68.5%('25년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사업')에서 최대 96.3%('24년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사업') 사이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 사업이 80% 초반의 실집행률이 반복되므로 내역사업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특정 종목(배구, 농구 등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프로리그가 운영되는 종목)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차년도 상반기까지인 경우가 있어 당해 회계연도 말 기준 실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사업비 집행 방식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평가를 반영하여 동계 시즌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있음. 보조사업자 예산 현액 대비 회계연도말 기준 실집행률이 '23년 83.8%에서 '24년 88.6%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사업비의 절대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집행률의 제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성과지표 개선 필요) 이 사업에는 다수의 내역사업이 존재하나 현재 '프로스포츠 관람객 수'를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어 세부사업 전체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업수행 결과, 심판 오심률 감소로 판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IT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스마트경기장이 구축되어 관람 편의성 및 활용성이 증대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음성중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은 평가할 만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스포츠 윤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체육계 인권,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 규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낮은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감액이 이루어져 사업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지원’,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체육계 인권·비리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세부사업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인권감시관 사업 중단에 따른 불용액 발생(’23년), 이의신청제도 신설 운영을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25년)한 경우가 있었고, ’24년과 ’25년의 실집행률이 각각 90.2%, 88..7%로 저조하였음

- 다만 ’23년~’25년에 집행잔액의 절대액(’23년, 423,816,220원, ’24년 619,912,643원, ’25년 1,064,291,027원)이 계속 증가하여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예산불용이 되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등 개선이 필요함

○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내역사업 중 ‘법정시스템 운영’ 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신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인바, 체육인 징계 관련 정보, 신고사건 자료 등 개인·민감정보를 다루고 있어 운영 안정성 제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상시 점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한 집행 현황 점검 등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부정수급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음

○ 이 세부사업은 당해 연도 신고 접수 사건 중 처리(종결) 건수를 당해 연도 신고 접수 건수로 나눈 값을 ‘신고사건 처리율’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150일로 정해진 법정 사건처리 기간을 고려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나,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이 세부사업의 전체 내용을 고려한다면, 신고 접수 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기관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독립 또는 보조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전국(소년)체전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및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요구되는바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전국체전 시설건립'은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45.3%에 그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5년 '전국체전 지원' 내역사업에서 2건(총 3,180,000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있는바, 관리·감독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경기력 성취율'은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로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 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또한, 재정수요의 적정성을 판단할 일정 수준의 근거가 제시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요구되는바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전국체전 시설건립’은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45.3%에 그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또한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5년 ‘전국체전 지원’ 내역사업에서 2건(3.18백만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있는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교육 및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단계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인 ‘경기력 성취율’은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로 보완하여 성과관리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체육인복지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체육인 복지 지원'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중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과 '대학원 교육지원금'은 교육부의 '교육급여', '꿈사다리 장학금' 등과 수혜대상 및 지원 성격이 유사할 소지가 있는바,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 수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체육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은 '26년 말 3차 연도 구축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바, 유지보수·운영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력성과포상금'은 '26년 동계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일시적 증액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27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 변수를 반영한 실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추계 방식의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제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개선이 필요함 - '국가대표 보험지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68.3%에 그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0%를 자진 감액한 조치는 적절함. 다만, 실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정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수혜자 수'는 수혜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다양한 내역 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체육인 복지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체육인 복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대표·지도자 등 공공적 역할 수행 주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내역사업 중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과 ‘대학원 교육지원금’은 교육부의 ‘교육급여’, ‘꿈사다리 장학금’ 등과 수혜대상 및 지원 성격이 유사할 소지가 있는바,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 수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체육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은 ’26년 말 3차 연도 구축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바, ’27년 예산은 구축비 소요를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감액)하고 유지보수·운영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력성과포상금’은 ’26년 동계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일시적 증액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27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 변수를 반영한 실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추계 방식의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제고 및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국가대표 보험지원금’은 집행률이 저조(50~70%대)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 요구시 전년 대비 30%(3억원)을 감액한 조치는 적절함. 다만, 실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정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으나, 바우처 사업의 목적 외 사용 위험이 있음. 현재 연 2회 실시 중인 부정징후 의심 사업 자체점검 및 전수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함

○ 성과지표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수혜자 수’는 수혜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다양한 내역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의 설정 및 성과관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단순 수혜자 수·만족도 중심의 산출지표에서 벗어나 각 내역사업별 정책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포츠과학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스포츠 과학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 산출 근거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운영 내역사업의 현행 국고 보조율(90%)은 지역체육회의 재정 분담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이 필요함 - '24년 측정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400백만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계약 및 조달 관리 측면에서 집행 관리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 향후 조달 계획 수립의 정밀도를 제고하여 계약 지연에 따른 집행 차질을 예방하고,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 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경기력 향상도' 및 '구입기자재 활용도'는 '종목별 경기력 개선율' 등 질적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의 정합성과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스포츠과학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8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국가대표 및 지역 엘리트 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 기반을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데이터 기반 지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 산출 근거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지역스포츠정책과학거점 운영 내역사업의 현행 국고 보조율(90%)은 지자체의 재정 분담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구축은 ’26년 설계비(500백만 원)부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사비 산출 근거를 구체화하고 중장기 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24년 측정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400백만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계약 및 조달 관리 측면에서 집행 관리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조달 계획 수립의 정밀도를 제고하여 계약 지연에 따른 집행 차질을 예방하고, 집행 잔액 및 이월의 반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 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입 위주의 성과관리가 확인되는바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나,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경기력 향상도’ 및 ‘구입기자재 활용도’는 운영·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표 보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질적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확대하여 장비 활용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 설정의 도전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의 정합성과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이 요구됨 -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내역사업 증액의 주요 요인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생활체육 지원 성격이 강해 산업혁신 목적과의 부합성이 낮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스마트기술활용 종목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이 낮고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며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강화, 환류 및 개선노력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지역스포츠산업지원(에어돔 설치)'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36.3%로 저조한바,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교부 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등 집행 관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총 33건(819.7백만 원)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e나라도움 기반 상시 모니터링 등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강소 스포츠기업 비율'은 산업 내 비중을 산출하는 특성상 사업의 순 정책효과를 대표 지표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스포츠산업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및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스포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내 스포츠기업의 다수가 매출 10억 원 미만인 영세한 산업 구조(94.6%)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 의견을 제시함

-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내역사업 예산 증액(+10.1%)의 주요 요인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2016년부터 조성된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반영된 것임. 다만, 해당 사업은 생활체육 지원 성격이 강하여 본 세부사업의 산업혁신 목적과의 부합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예산 감액이 필요함

- 또한, 스마트기술활용 종목활성화 지원 사업은 본 세부사업의 목적과의 정합성이 낮고 최종 수혜자가 동계설상종목 전문체육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예산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예산 감액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강화, 환류 및 개선노력의 내실화 등을 위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지역스포츠산업지원(에어돔 설치)’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36.3%로 집행 부진이 지속되는바,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교부 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교부 보류 등 집행 관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총 33건(819.7백만 원)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e나라도움 기반 상시 모니터링 등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3년 국회와 ’24년 보조사업평가의 지적사항인 ‘지역스포츠산업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이 여전히 확인되는바, 실집행 소요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강화가 요구됨

○ 성과지표인 ‘강소 스포츠기업 비율’은 산업 내 비중을 산출하는 특성상 사업의 순 정책효과를 대표 지표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목표치 또한 과거 실적 대비 보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피수혜기업의 매출·고용 등 정책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수’ 등 반복적으로 목표를 상회하는 지표는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제체육교류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최근 3년간 모든 내역 사업에서 보조 사업의 예산 차년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여 예산 감액 필요성 있음 - 2025년 예산 실집행률: 청소년스포츠 교류 80.3%, 국제체육교류 81.3% · 사업추진체계, 성과 지표 등 측면에서 사업개선 필요성 있음 -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체계 개편 필요 -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주요 국제기구 임원수는 국제체육교류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로 보이지만, 국제기구 임원 출마와 국내기구 임원 임기 등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방안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제체육교류 지원은 「스포츠기본법」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간 체육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관계자 역량 제고, 국제 체육분야에서의 위상 강화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국가 간 교류를 내용으로 하거나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들로 구성되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가 그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제체육교류 지원은 체육분야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대회 체육경기에 참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사업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스포츠 교류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91.8%, 58.3%, 48.5%)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가 있다면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모든 내역 사업의 보조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차년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을 40.8% 증액하여 신청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차년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23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집행률 제고 및 성과향상 노력을 기울일 것이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주요 국제기구 임원 수는 국제체육교류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로 보이지만, 기초조사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듯이 국제기구 임원 출마와 국내기구 임원 임기 등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지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주요 국제기구 임원 수 목표치를 매년 상향할 수도 없다는 점 감안)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도핑방지활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선수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경기 결과의 왜곡,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 국제적 신뢰도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적 문제인 도핑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높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국제적 수준의 도핑검사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 교체 및 구입의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단순 집행만이 아닌 필수장비 구매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집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도핑방지활동지원’ 세부사업은, 선수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경기 결과의 왜곡,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 국제적 신뢰도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적 문제인 도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 ‘도핑방지 활동지원’,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업의 최근 3개년 집행률은 ’23년 98.9%, ’24년 98.7%, ’25년 99.5%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핑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재원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 방식과 전달체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 세부사업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국내 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선수 및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의 회원인 모든 선수 및 관계자(지도자, 감독, 코치, 학부모 등), 경륜・경정 선수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선수뿐만 아니라 잠재적 선수 및 생활체육인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호,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확립에 기여함

○ 이 세부사업은 도핑방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으로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운영 및 도핑방지사업을 명시한「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있는데, 매년 동일 수준의 예산으로 도핑분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분석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주어진 예산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도핑 검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도핑방지 인지도 조사’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인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금지약물검색 서비스 이용건수’는 ’23년 이전까지는 높은 실적 달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4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임

○ 이 세부사업은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바, 사업수행주체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교육・홍보, 도핑검사・제재 등 사업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율이 사안별로 결정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국비 지원을 기대한 안이한 대회 유치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관리의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개선의 여지가 있고, 낮은 실집행률, 대회 개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세부사업은,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라는「스포츠기본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률에서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세부사업의 중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에서는 일정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회개최와 지원 규모가 지자체 자체 필요성이나 지역 여론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자부담을 높이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은 ’23년 59.9%, ’24년 68.0%, ‘25년 79.8%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기재부 등 유관기관 협의기간 소요(’23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4년의 경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사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24년 및 ’25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학경기대회)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한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이 필요함

- 올림픽, 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단위 국제대회와 같이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는 국제대회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더라도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고,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특정 관심 대회나 종목에 대회 개최가 편중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국제스포츠 교류의 수단으로서 이 세부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내역사업과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 내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공모 심사 항목에 재무안정성, 자부담능력, 사업추진능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문체부는「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 ‘국내개최 국제대회 참가선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사업수행 성과(경제적 효과, 국민 만족도, 사회통합 정도 등)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속가능한 국제대회 유치 역량을 개발·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태권도 진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저조, 과다 인상, 사회적 문제와의 연계성 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태권도 교육연구 사업은 낮은 실집행률 등의 이유로 예산 재검토가 필요함. 라키비움 사업은 무주 태권도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사업으로 이관 필요 -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되어, 성과를 살펴보며 단계적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			

□ 종합평가 의견

○ 태권도 진흥 사업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기로서의 태권도의 국제사회 위상과 국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업은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에서 제시한 '태권도 변화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가상 스포츠 공간 구축, 라키비움 등과 같은 사업들은 타 기관과의 역할 구분, 최근 변화된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이관,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교육·연구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집행률도 매우 낮아 감액과 함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태권도 교육·연구 사업은 최근 3개년 동안 예산 실집행률이 28%~75%대에 머뭄). 라키비움 사업은 태권도원 내에 운영되는 사업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 추진 필요

- 또한 특정 태권도 대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예산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태권도 교육/연구는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75.2%(2023), 45.5%(2024), 28.2%(2025)로 낮아 예산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지적된 내용은 주로 실집행률 부진과 지출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2025년 실집행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개선 노력에 보다 철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됨

○ 태권도 세계화 사업을 통해 태권도가 해외 공교육 정규수업 과목으로 채택(조지아, 라트비아, 미얀마, UAE, 르완다, 온두라스, 포르투갈 등) 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와 사업비에 있어서 예산 재검토와 사업 개선 필요성이 있음 - 태권도원 상설공연단 운영단가가 165.3%로 단기적으로 과다 인상되어 성과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등 교육 기능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기원과의 조율,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사업이 주로 태권도원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태권도 일반의 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인 태권도를 진흥하기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태권도를 진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태권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태권도진흥재단은 법률에 기반하여 볼 때는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국기원과 유사 중복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에서의 국기원과의 유사, 중복 문제가 나타남

○ 지원 규모는 전년 기준 대비, 적절한 규모로 산정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일부 내역사업에 있어 예산 증가폭이 과다한 경우가 있음(내역 사업인 태권도 진흥기반 조성의 내 내역 사업인 태권도원 콘텐츠 사업에서 상설공연단 운영 단가가 전년 대비 165.3% 과다 인상됨)

○ 간접진행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점검 결과 최근 3개년에 걸쳐 차년 이월과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례 점검에서 부정 수급 의심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부정 수급과 관련된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023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성과지표 개선과 자체수입 제고 방안 마련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목표 대비 실적이 2024년 91.3%에서 2025년 96.2%로 향상됨. 다만, 이러한 수치는 2023년 목표 달성률(131.4%)이나 매출 실적(5,256,575백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태권도진흥재단의 활동으로 태권도원 방문자수가 2024년 298천명에서 2025년 343천명으로 15.1% 증가하였고, 태권도원 외부로 보급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동기간 4,925명에서 5,582명으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신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기원과의 기능, 역할 유사 중복 문제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과 기관 설립 취지와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체육분야 국제지원사업이 ODA 사업 기준상 ODA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내내역 사업은 타 사업으로의 이관이 필요함 - 지도자, 행정가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드림 프로그램 등은 일방적 지원 방식(ODA)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 내내역사업인 태권도 초청 연수 사업은 태권도 진흥 사업으로 이관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체육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으로는 체육분야에서의 국제교류 협력이나 교류뿐 아니라 수원국을 지원하는 ODA적 특성이 강한데 비해, 통계상 체육행사, 전문 체육인 방문 등은 ODA로 인정되지 않아 2021년부터 일반교류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동 사업이 통계 분류 상 ODA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체육 지도자, 체육행정가, 청소년 등을 초청하는 사업은 재정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인 '국제체육교류 지원'이나 '태권도 진흥'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높음

- 내역 사업인 선수초청 합동훈련이나 지도자나 행정가 교육,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등은 스포츠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내역 사업 가운데 태권도 초청 연수 및 용품 지원 사업은 별도 사업인 '태권도 진흥'이나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과 중복됨

○ 2025년 예산 실집행률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신청은 각 내역 사업별 예산을 2025년 대비 감액한 금액으로 제출하여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 현재의 사업추진체계는 보조사업자가 다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이 통계 분류 상 ODA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내역 사업 전반적으로는 '국제체육교류 지원'이나 '태권도 진흥' 사업과도 유사 중복성이 높아,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책무 수행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은 확보되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지표는 보완 필요 있음 - 재정수요 산출 근거가 단위비용 분석 없이 전년도 실적 및 처우개선율 단순 적용 그쳐 지원규모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특정 내역사업에서 교부 후 집행 효율성 저하 및 반납 미완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단계별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재원 대비 행정비용 비율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됨 -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이 서면 점검과 정산 중심의 사후 관리에 편중되어 있어 예방적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국회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일부 확인되지만,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임 - 핵심 성과지표 달성률의 연도별 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실적이 소폭 상승에 그쳐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경기력 향상, 사회통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책무 수행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 장애인체육단체는 자생적 수익창출 구조가 취약하며, 후원 및 스폰서십 기반이 일반 체육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를 보여 공공부분의 지원이 필수적임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지원은 일반체육 종목단체 지원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체육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사업은 종목단체 운영지원, 행정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 사업구조는 명확함. 다만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은 확보되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지표는 보완 필요 있음

○ 본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시도지회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직·간접 수혜자 범위는 제도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재정수요 산출 근거가 단위비용 분석 없이 전년도 실적 및 처우개선율 단순 적용에 그치고 있어 지원규모가 현재 및 중·장기 재정수요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률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 내역사업에서는 교부 이후 집행 지연, 소규모 이월 또는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며 예산 집행의 형식적 적정성과 실질적 재원 전달 효율성 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고 e나라도움을 통한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 중으로 관리 체계의 기본 요건은 충족됨

- 다만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이 서면 점검과 정산 중심의 사후 관리에 편중되어 있어 예방적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핵심 성과지표인 '고객만족'의 실적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목표치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만족도 등급이 점진적 상향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독보적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확고하지만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세부사업 간 역할 분담과 기능 구분이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간 성과 중심의 인과 구조는 미흡함 -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정투입 대비 실질적 정책 체감 대상의 명확성이 다소 제한적이며 지원 단가 증액 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다단계 전달 구조로 인해 행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일부 행정비용이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 징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상시적·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체계는 정착이 필요함 - 사업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설계에 환류하는 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 목표치 산출 공식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치 영향을 받아 이후 연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법정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하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권 보장과 국제대회 출전 지원은 국가의 공공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며, 민간 대체 가능성이 낮은 대표적 공공재 성격 사업임

- 장애인 선수의 전문적 훈련 환경 조성 및 국제대회 참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외부 효과를 창출하고 장애인 전문체육은 후원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며 선수단 운영·국제대회 파견·훈련비 등 고정비 성격 지출이 높아 재정지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음

○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가맹단체 및 시도지회 지원, 선수촌 운영, 국제대회 및 종목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전문체육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세부사업 간 역할 분담과 기능 구분이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목표 - 추진전략 - 세부사업 간 성과 중심의 인과 구조는 미흡함

○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형적인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실집행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의 질적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하며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 장애인 실업팀 육성, 전임지도자 배치, 스포츠등급분류 지원 등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데 기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관성적 편성·집행 구조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절차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형식적·절차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으나, 사후 점검 중심의 관리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 확인되었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 징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상시적·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체계는 정착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지속 추진되어 왔으나, 외부 지적사항이나 사업 운영상 문제를 제도적·구조적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성과지표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이고 자의성이 높아 지표 실적의 추세 분석이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불법 및 합법 사행산업으로 초래되는 국민 폐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로서 그 존재 의미가 있어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전체 예산의 일부만이 집행되고 있고, 그 대부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운영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세부사업은 ‘도박문제 예방홍보’, ‘도박중독 치유재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정 지역과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에 차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국 15개 지역센터가 운영되어 치유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매체(TV/라디오) 캠페인 및 뉴미디어(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도박문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 홍보매체 선정에 있어서도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구력의 비중별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 (부진한 집행률 개선 필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매년 전체 예산의 일부만을 집행(’23년 92%, ’24년 94%, ’25년 92%)하여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특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집행부진의 사정이 반영되어 ’26년 예산이 일부 감액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이 사업을 위탁받았으므로 전문기관인 예방치유원이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법령과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 매년 e나라도움 상시 집행점검 시행하고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전직원 대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회계검증과 별도로 지역센터 집행점검을 통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스타일 육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전통문화 포털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목표달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사업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전통문화 포털 운영 및 활성화 사업(2억)은 사업 성격과 대외 관계적 측면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전환을 제안함 - '25년 보조사업평가시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 '26년 사업예산에서 사업내용 차별화와 관련 예산 이관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짐 - '24년 부정수급 적발건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환수 처분 등이 완료됨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목표달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인 한복, 한지, 한식 등을 지원하여 일반국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한류의 지속과 확산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고급 브랜드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한스타일 육성지원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전통문화 대표 분야 육성지원 사업이 있으며, 내내역 사업으로 한복분야 육성지원, 한지분야 육성지원, 한식분야 육성지원,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포함함

○ 한복, 한지, 한식 등 전통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산업의 영세성과 고령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지만,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 사업(2억)은 새로운 콘텐츠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올바른 전통문화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사업내용에 근거할 때 국가사무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24년 부정징후 하반기 모니터링(11.27.)에서 규정 미숙지로 가족간 거래 및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정수급액(82,052,118원) 환수('25. 9월), 제재부가금 환수처분('25.12) 등의 후속조치가 완료됨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목표 달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 지표 보완이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인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한지)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수(명)와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육성사업 고객 만족도(점)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지표가 필요함

- '26년 전통문화 체감도(점)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성과지표로 보완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사업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결과중심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 해외교류**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내역사업을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사업으로 존치하려면 타 세부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인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수혜 대상에 있어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됨 - 내역 사업인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지원 또한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의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부정 수급, 예산 실집행률, 성과지표 등과 관련하여 사업개선 필요성이 있음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 등 내용의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문화예술해외교류는 국가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세부 내역 사업은 한중일 문화교류와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일 문화교류나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지원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국가 단위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한중일간 정상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됨

○ 다만, 내역 사업이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과 연계성이 높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으로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은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등과 연계성이 높음

-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지원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동해서 추진할 수 있음

○ 지원규모 적정성과 관련하여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은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과 연계성이 높아 이동하여 감액 필요성이 있음

○ 간접집행사업 중 한중일문화교류 예산 실집행률이 88.2%로 나타나 예산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이 90% 아래인 사업이 있어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이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동 사업을 국제문화정책 지원 사업으로 이동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또한 사업 이동 후 새로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공예문화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있으며, 일부 내내역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지자체 이관, 지역간 협조체계 구축,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선 등에 근거해 감액이 필요함 - 세부사업 미술진흥기반구축의 내역사업 공예진흥 사업 내용과 유사중복 문제 검토를 통해 본 사업으로 이관 및 내용적 통합이 요구됨 - '25년 평가에서 지적된 내내역사업 '공예문화산업 조사연구'의 민간위탁 전환, '공예창작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없음 - 성과목표 합리성 제고를 위해 '25년 공예트렌드페어 총매출액(백만원)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으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전문인력양성과정의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마련이 제안됨			

□ 종합평가 의견

○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은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이라는 단일 내역사업 내 공예문화산업 조사연구, 공예트렌드페어, 우수공예품 지정제 운영, 공예유통망 기반 조성, 공예문화의 확산,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예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됨

○ 공예산업과 진흥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 보조사업인 공예문화산업육성 사업으로 통합 검토되는 건에 대해,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함

- 미술진흥기반구축의 내역사업 ‘공예진흥’ 사업의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한국공예의 세계화, 산단 청년공예 오픈 스튜디오 공간 등의 사업은 본 사업의 내역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예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음

○ 일부 내내역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 지자체 이관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공예문화산업 조사연구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추후 조사주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있음

-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을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공예문화산업 조사연구 내내역사업 비목전환, 재정투입 효과성 제시 미흡, 일부 내내역사업 간 사업 차별화 필요 등이 지적된 바, 이에 대해 예산지출구조조정과 사업간 연계운영 조치만 제시됨

○ 성과목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개선한 바 있으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인력양성 관련 성과지표(인력양성의 결과 중심 성과나 교육과정 이후 현장 인력으로 투입된 인력 등의 사후관리 지표 등)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제안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창작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의 사업기간 조정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개선이 요구됨 - 세부사업 문화예술창제작거점조성의 내역사업 전통공연예술창작거점조성과 본 보조사업인 예술창작지원의 내역사업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의 유사·중복성 지적('25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지적)에 대해 전통예술공연 장르 선정단체의 예산지원 비율 축소 조치 및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는 세부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의 내역사업인 '한중일 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지원의 문제가 지적('25년 보조금 사업 평가)된 바에 대해서는, 산하 유관기관 간 기능조정에 따라 예산감축 조치를 완료하였고, 차년도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계획을 확인함 - 내역사업 지역예술도약지원은 광역문화재단 지원과 중복성 문제와 지역문화재단 역할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차년도에 사업 폐지 계획을 확인함 - 내역사업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차년도 1월까지)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함 -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24년 감사원의 집행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적발이 있어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기초예술 분야의 역량강화와 기초예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 접근과 정책적 지원은 타당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등 법적 근거에 의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평가됨

○ 내역사업 지역예술도약지원은 '26년부터 일정 금액에 대한 매칭(작가 1인당 3백만원씩)을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현재 지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사업폐지에 대한 계획을 확인함

○ '25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세부사업 문화예술창제작거점조성의 내역사업 전통공연예술창작거점조성과 본 보조사업인 예술창작지원의 내역사업인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적('25년 보조금 사업 평가)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전통예술공연 장르 선정단체의 예산지원 비율 축소 조치를 하였으며, 차년도 예산계획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계획을 확인함

○ '25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는 세부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의 내역사업인 '한중일 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지원의 문제가 지적되어,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간 기능조정에 따라 예산을 감축 완료 조치하였고, 차년도 사업계획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계획을 확인함

○ 월별 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상 부정수급이 지난 3년간 계속 적발되었으며, '24년 감사원에서 집행 잔액 미반납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조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부정수급 관리와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부정수급의 건수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비율) 이며, 이는 세부사업 지원 작품의 자체 유통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예술작품이 창작 후 예술시장 내 지속 유통·확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중심의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인력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의 조정, 운영비 재선,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 사업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 역점 추진과제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음 - 내내역사업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사업이 광역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 유사성이 높으므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함 - 예술인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위해 예비예술인(현장경험과 최초발표 지원)-청년예술인(성장과 신규 일자리 진입)-현장예술인력(직업전환이나 일자리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통합플랫폼 운영) 등 대상에 따른 지원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사업운영인력을 지원하는 상용임금을 포함한 운영비 비중을 조정할 필요있음 - '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성과관리체계 정합성 확보에 대해 개선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인력육성은 예술가와 현장 전문인력의 육성(재교육)과 일자리 지원으로 기초예술 분야 창작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차세대예술인력육성과 현장예술인력육성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예술인력육성은 문화예술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국정과제나 상위 기본계획 등과 부합된 것으로 평가됨

○ 문화예술의 공공재원 특성과 불확실성으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예술인력육성 사업의 내역사업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과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의 지원목적과 정책대상,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이 타당함

- 이런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작품발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입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작품활동을 통해 예술적 역량이 입증된 예술가를 지원하는 본 사업과 차별적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내역사업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에는 발표이력이 없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현장 진입을 유도하여 최초발표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음

- 특히 내역사업 차세대예술인력육성의 내내역사업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사업이 최초발표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복되므로 사업내용을 차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2개의 내역사업내 내내역사업이 지원대상과 예술분야가 혼재되어 다소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술인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위해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현장예술인력 등의 대상에 따른 지원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사업운영인력을 지원하는 상용임금(차세대인력육성 485백만원, 현장예술인력육성 300백만원)을 포함한 운영비 비중을 조정할 필요있음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가 단일 내내역 사업의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투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긴급복지지원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별도 융자 프로그램의 정책적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정책대상 유사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상환율·만족도 등 현행 성과지표가 운영·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 효과 측정이 미흡하므로, 예술인 자생력 및 창작활동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결과 중심 지표를 개발하고 사고율 추이·구상채권 회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비(보조금)의 구성 및 집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심층평가 제언을 참고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과의 연계 속에서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일반 사회안전망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완과 일부 정책사업과의 지원 대상 유사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긴급복지지원 확대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 별도 융자 프로그램의 정책적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지원 방식 및 제도 성격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부 정책대상 유사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심층평가 제언을 참고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과의 연계 속에서 동 사업의 정책적 역할 및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운영비)은 인건비·콜센터·시스템 유지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접수, 심사, 융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비에 해당함

○ 상환율·만족도 등 성과지표가 운영 및 관리 중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 예술인 자생력 및 창작활동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결과 중심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하여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상환율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일정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고율 추이·구상채권 회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환율 목표치는 융자 상환 스케줄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운영비(보조금) 중 사업 운영 경비의 구성 및 집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의 관광자원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내역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필요, 결과중심형 성과지표 개발, 성과 목표치 수정 필요 등에 근거하여 감액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집행률은 '23년 97.0%, '24년 88.5%, '25년 94.9%로 원활하게 진행됨 - 1차 보조사업자에 지정교부되며,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전통공연예술 해외조사는 국가사무로 파악되어 민간위탁 전환이 제안됨 -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과중심형 성과지표 개발과 보완이 미비함 -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가 임계치에 도달한 것에 대한 과거 평가의 지적에도, '25년 관객만족도(점)의 목표치가 90.6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예술의관광자원화 사업은 전통예술, 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 도모를 통한 전통예술 및 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전통공연예술활성화와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운영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16조(기금의 설치 등),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및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등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국정과제 105(자유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와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B2B마켓의 사업성과와,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한국 공연예술 인지도 제고 등 공공지원 파급효과가 큰 영역으로 평가됨

○ 단, 내역사업 전통공연예술활성화의 내내역사업 전통공연예술 해외조사 실태조사('25년 278백만원)는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사업으로 국가사무로 파악되어 보조금 지급 형태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됨

- 전통공연예술 해외활동 실태조사 사업은 '23년 재정사업심층평가과정에서 유사사업 지적에 따라 기존의 전통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 사업을 '25년부터 변경한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은 1차 보조사업자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정 교부되며,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객석점유율, 관람객 고객만족도, 참여예술인 만족도 지표 외 재정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과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 참여예술인만족도 추가하여 가중치 반영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성과지표 개발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25년 자율평가에서도 성과지표의 만족도 수치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보완적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25년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객만족도(점)의 목표치가 90.6점으로 계속 임계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 객석 점유율(비율)과 관객만족도(점)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이 전통예술, 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 도모를 통한 전통예술 및 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인 점을 감안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로 나타난 관광자원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보완이 필요함

- 서울아트마켓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나 해외진출과 유통 성과 등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대해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보완 등의 근거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가치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내내역사업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높음 -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임 - 성과지표 '민관협력기부프로그램'(건수)의 측정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미흡하며, 그 외에도 포괄적이고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사업은 문화예술가치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대국민 예술지원 공감대를 조성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역할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여 정부개입이 타당하다고 평가됨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사업은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보조),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은 '23년 97.9%, '24년 96.6%, '25년 99.0%로 양호한 수준임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내내역사업 공연예술조사의 비목전환('26년 319백만원), 재정투입 대비 성과 관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에 대해 대부분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음

-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2025년 기업 문화력 지수 개발 및 실증 연구' 추진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성과지표 '민관협력기부프로그램'(건수)이외에 4개의 내역사업을 포괄하고 결과중심의 새로운 성과지표가 보완, 추가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예술향유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을 경감하고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 사업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자에 의한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인 '발급자 수'는 집행률 중심의 단순 산출지표에 해당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한 지표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을 경감하고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개소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가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화 소통하는 K-컬쳐의 국정과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급 책무는 국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현재의 보조사업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의 수익성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보편적 문화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23년 85.7%, 24년 90.8%, 25년 93.6%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현장수요가 입증되었다고 평가됨

○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자에 의한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사망자 명의의 카드 사용 및 수혜자 해외 체류 기간 중 국내 사용 등 정형화된 부정 징후 패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은 시스템적 필터링 기능이 미비함을 시사함. 또한 부정 징후 통보 이후, 점검을 하지 않거나 사후 점검 기한 미준수 사례는 부정수급 대응 체계의 시급성과 책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인 '발급자 수'는 집행률 중심의 단순 산출지표에 해당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한 지표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 대상 각각에 대한 수혜자 변화(개선, 삶의 질 향상 등) 효과 분석 내용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지역신문발전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세부사업은 실수혜자 규모 확대, 성과관리 개선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실수혜자 규모 확대)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82개사, '24년 68개사, '25년 67개사 등으로 감소 추세로 실수혜자 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함. 다만, '26년은 우선지원대상자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전년대비 10% 증가된 74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자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향후에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실수혜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음 - (성과관리 개선) 세부사업은 '저널리즘 품질향상도(점)', '지역기사 생산건수(건)',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점)',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등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함. 4개 성과지표는 목표치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목표 달성도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목표치 조정 등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실수혜자 규모 확대,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지역신문발전지원’ 세부사업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역신문역량지원’, ‘지역공헌활동지원’ 등 2개 내역사업(보조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조성하여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국정과제 103(K-컬처시대를위한콘텐츠의국가전략산업화추진) 등 주요 정책과제와의 연관성이 높아 재정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법령은 사업 추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신문법」에 따른 우선대상자(지역신문사)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실수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만, 사업자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 최근 3개년 직접 수혜자 규모는 ’23년 82개사, ’24년 68개사, ’25년 67개사 등으로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실수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만, ’26년은 우선지원대상자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전년대비 10% 증가된 74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자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처의 소명이 확인됨

- 향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실수혜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음

○ 세부사업은 ‘저널리즘 품질향상도(점)’, ‘지역기사 생산건수(건)’,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점)’,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등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목표치 수준이 적정하지 않아 목표 달성도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목표치 조정 등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점)’ 성과지표의 최근 3개년 목표치는 ’23년 57.2점, ’24년 60.2점, ’25년 60.2점으로 목표치 수준이 적정하지 않음. 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높여 효율적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함

○ (제언) 실수혜자 규모 확대, 체계적 성과관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뉴스정보 유통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뉴스정보유통활성화' 세부사업은 사업 개선,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신규 성과지표 개발 및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함.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으로 판정함 - (사업 개선) '공배센터운영지원', '신문수송및우송지원' 내내역사업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정보접근권 확대에 기여하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국제언론교류지원' 내내역사업은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실수혜자 규모 확대) '25년 기준으로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가 감소하여(24년 75,505,565명 → 25년 69,736,672명) 실수혜자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개선) '예산대비수송부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내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신규 성과지표 개발 및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개선,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뉴스정보유통활성화’ 세부사업은 공동배달 및 공동수송 등을 활용한 뉴스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화, 한계지역의 신문 보급 확대로 지역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세부사업은 ‘정보접근권향상지원’ 1개 내역사업(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보접근권향상지원’ 내역사업은 공배센터운영지원, 신문수송및우송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국제언론교류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내내역사업 중심의 사업 내용은 세부사업의 목적(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 등)과 부합하지 않음. ‘공배센터운영지원’, ‘신문수송및우송지원’ 내내역사업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정보접근권 확대에 기여하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또한 ‘국제언론교류지원’ 내내역사업은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동 사업의 ‘국제언론인교류지원’ 내내역사업은 타 재정사업의 내역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처 소명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1개 내역사업의 구성요소가 사업 목표, 추진전략, 사업내용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내내역사업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신문사, 공동배달센터 근무자, 소외계층, 언론인 등으로 수혜자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25년 기준으로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 규모가 감소하여(24년 75,505,565명 → 25년 69,736,672명) 실수혜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예산대비수송부수(부)’ 1개의 성과지표는 예산 대비 신문 발송부수를 산출한 수치임. 다만, 해당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내내역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신규 성과지표 개발 및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신문수송및우송지원’ 내내역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이므로, 내내역사업별로 별도의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함

○ (제언)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개선, 실수혜자 규모 확대, 신규 성과지표 개발과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유사 사업 중복 가능성) 문체부 '미디어교육사업'과 방통위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사업이 전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을 표방하고 있어 사업 대상과 내용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차별성 및 구조 정합성 미흡) '온누리 미디어교육'은 소외계층 지원을 강조하나 예산 산출이 단순 연령별 시수 나열에 그쳐 교육의 질적 차별성이 부족하며, 2026년 콘텐츠 개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계획된 특화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집행 정밀도 및 성과지표 한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산출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활동량 중심인 '자율심의 건수' 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언론 신뢰도 향상'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결과지표로서의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신문법」에 근거한 언론진흥기금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수적인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와 자율심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2024년 결산 기준 96.2%에 달하는 높은 실집행률과 최근 3년간 외부 기관의 지적이나 부정수급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은 사업의 관리 체계가 매우 안정적임을 보임

-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년층과 어르신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환류 노력과 전국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임

○ 다만, 문체부의 '미디어교육사업'과 방통위의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사업이 전 생애주기 대상 맞춤형 교육을 공통으로 표방하고 있어, 사업 대상 및 내용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체계적인 기능 조정이 필요함

○ '온누리 미디어교육'은 소외계층 지원을 강조하나 예산 산출이 단순 연령별 시수 나열에 그쳐 교육의 질적 차별성이 부족하며, 2026년 콘텐츠 개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계획된 특화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산출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활동량 중심인 '자율심의 건수' 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언론 신뢰도 향상'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결과지표로서의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 로드맵 수립 및 성과지표 고도화 필요) 신문, 잡지 등 수혜 매체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로드맵보다는 보편적인 인프라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성과 측정 역시 단순 페이지뷰(PV)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다각적인 혁신 성과를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보완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백엔드 인프라 통합 관리 및 발주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필요) 하드웨어 자원의 클라우드 통합 노력은 긍정적이나, 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감리 절차가 내내역 사업별로 분산 수행되어 행정력 낭비가 관찰되므로, 시행 주체의 동일성을 활용한 통합 발주 및 백엔드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기술적 중복성 제거를 통한 예산 구조 재편 및 운영 로드맵 마련 필요) 신설된 미디어AI 플랫폼 위탁운영비 등은 기존 빅카인즈나 통합 CMS 운영 체계와 기술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 영역을 플랫폼 단위로 통합하여 공통 기술 인력을 최적화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명확한 정책적 타당성 및 국정과제와의 높은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AI 기술 확산에 따른 언론 산업의 위기와 낮은 언론 신뢰도(OECD 46개국 중 40위)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디지털 혁신 유도'와 '뉴스 품질 제고'라는 타당한 목적을 설정함

○ 안정적인 예산 집행 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노력 우수함

- 최근 2년간 98% 내외(2024년 98.6%, 2025년 99.1%)의 높은 실집행률을 유지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가 매우 안정적임

○ 핵심 지표인 '빅카인즈 연간 페이지뷰'가 2025년 목표(31,500천 건) 대비 114.5%를 기록하는 등 대국민 뉴스 활용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우수함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 로드맵 수립 및 성과지표 고도화 필요

- 신문, 잡지 등 수혜 매체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로드맵보다는 보편적인 인프라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성과 측정 역시 단순 페이지뷰(PV)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다각적인 혁신 성과를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보완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백엔드 인프라 통합 관리 및 발주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필요

- 하드웨어 자원의 클라우드 통합 노력은 긍정적이나, 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감리 절차가 내내역 사업별로 분산 수행되어 행정력 낭비가 관찰되므로, 시행 주체의 동일성을 활용한 통합 발주 및 백엔드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기술적 중복성 제거를 통한 예산 구조 재편 및 운영 로드맵 마련 필요

- 신설된 미디어AI 플랫폼 위탁운영비 등은 기존 빅카인즈나 통합 CMS 운영 체계와 기술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 영역을 플랫폼 단위로 통합하여 공통 기술 인력을 최적화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한국 고유의 지역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조비목(9개 내역사업, 민간경상·지자체경상·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에 재검토가 필요함 -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의 실집행률이 2023년 80.4%, 2024년 80.1%로 2년 연속 80%대에 머물렀으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는 2023년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지자체 사업비 이월로 낮은 집행율이었으나 2024년 79.8%로 80% 미만으로 실집행율 관심 필요함 - 성과지표(코리아둘레길 인증건수) 달성도가 215~220%에 달하는 등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한국 고유의 지역 관광자원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국정과제 및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와 부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2009년 사업 개시 이후 17년간 지속되면서 9개 내역사업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신규 2개 사업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구조로 사업 체계 정비가 요구됨

- 내역사업 간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화' 등 공통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이종산업 협업기반 관광 활성화 내 크루즈관광 지원은 융합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과 기능적 중복 가능성이 있어 통합 운영 또는 역할 조정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이종산업 협업기반 관광 활성화가 58.6%(30억원) 증액되었으나 첫해 실집행률이 89.0% 수준이며, 핫스팟 가이드(10억원)는 신규 편성되어 기존 공급자 중심 사업과 달리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관광수요 분석 기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만, 증액 규모 대비 사업 효과성과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DMZ 접경지역의 실집행률이 2년 연속 80%대, 반려동물 동반여행이 2년 연속 80% 미만, 인천공항 K-컬처존이 2024년 52.9%로 매우 낮아 예산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걷기여행 활성화 내역사업에서 (사)마을키움네트워크의 부정수급 2건이 확인되어 현재 부정수급자 확정 처리가 아닌 추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 다만,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반려동물 약 5개월, 인천공항 약 6개월)이 반복되고 미반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정산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코리아둘레길 인증건수)의 달성도가 2023년 215.5%, 2024년 220.3%에 이르는 등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이 심각하여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됨

- 2025년 목표 설정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24.8% 초과 달성되어 근본적인 지표 재설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접경지역 방문자수와 크루즈관광객 유치실적은 2025년에야 목표치가 설정되어 과거 추이 분석이 불가능하며, 9개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3개 지표로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역사업별 차별화된 결과지표 도입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 내역사업이 100% 국고보조(관광진흥개발기금)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자체 재원 분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함 · 보조사업자(비비비코리아)에서 `25년 이전에 과오수급 조치된 이력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20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일정수준 감축' 판정을 받았으나 구체적 이행이 미흡함 · 보조사업 고유의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함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본 보조사업은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는 편중 구조에서 AI·챗봇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관광안내소 운영과 외국인언어불편해소지원 사업이 운영방식과 제공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모두 외래관광객 대상 안내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스톱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운영 또는 연계 운영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전체 집행률은 양호하나 관광안내소 운영의 실집행률이 일부 연도에서 80% 미만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음

○ 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별 고유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관광안내서비스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임

- 외래관광객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가 최근 4년간 달성도 107~113%로 지속 초과 달성되어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1330 안내건수 등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 보고에 그치고 있어 비용 대비 서비스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 중심의 결과지표 도입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지역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나,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58.8% 급증하면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의 100% 증액 및 예비 글로벌 축제 신규 편성에 대한 예산증액 산출근거가 불충분함 -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의 실집행률이 74.6~80.4%로 부진하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는 36.9~65.4%로 집행 부진인 상황에서 대폭 증액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았으나 오히려 58.8% 증액하여 환류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축제 자립화 유도 미흡 및 국고의존 구조 지속이 지적됨 - 성과지표 달성도가 최근 3년간 106~119%로 지속 초과달성되어 관대화 현상이 우려되며, 글로벌 축제의 핵심 성과(외국인 유치 효과 등)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축제 자립화 유도 미흡 및 국고 의존 구조 지속'이 지적된 상황에서 58.8% 증액 편성된 점은 증액 편성의 타당성과 환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민간후원 유치 등 자립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관리와 연계한 자립화 전략 마련 및 국고 의존 구조 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이 기존 3개 축제에서 6개 축제로 확대되면서 100% 증액되었으며, 기존 축제의 외국인 유치 효과 등 핵심 성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

- 다만, 예비 글로벌 축제 신규 편성과 동시 추진은 사업 관리의 효과성 저하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중기재정계획상 2027년 이후 글로벌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될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어 일시적 대규모 투자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의 실집행률이 74.6~80.4% 수준으로 부진하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는 36.9~65.4%로 집행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 이는 각각 1월 글로벌 축제(화천산천어축제) 개최 및 문화관광축제법 연구용역 예산 이월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집행 관리와 사업 일정 관리 강화가 요구됨

- 집행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폭 증액된 점은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며, 현재까지 부정수급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보조 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별 고유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축제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임

- 성과지표(문화관광축제 평균 관람객 수)의 달성도가 최근 3년간 106~119%로 지속 초과 달성되어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글로벌 축제 육성이 사업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반영한 질적 성장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국내관광 역량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의는 인정되나, 실집행률 부진 및 내역사업 간 기능적 가능성 검토 필요함 - 국민관광 지원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80% 미만(최저 56.6%)으로 예산 과다 편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다수 하위사업의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숙박할인권·근로자휴가지원·지역사랑휴가지원·디지털관광주민증 등이 모두 '국내여행 경비 지원'이라는 동일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업의 목적이 구분되나 유사 프로그램 간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화 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산출지표 1개에 불과하여 사업의 실질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지표 개발 및 도전적 목표 재설정이 시급함 -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이용률 급감(3.1%)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숙박할인권·근로자휴가·지역사랑휴가·디지털관광주민증 등 유사 목적의 경비지원형 보조사업이 분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 간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화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청소년관광(+900백만원, 150%↑), 시니어관광(+700백만원, 78%↑), 열린관광(+2,900백만원, 36%↑) 등 다수 하위사업에서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수혜자 확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2026년 사업 종료 이후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또한 국민관광 지원 내역사업에 9개 이상 하위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관리 체계의 정비 및 구조적 단순화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국민관광 지원 보조비목의 실집행률이 최근 3년 연속 80% 미만(최저 56.6%)으로 나타나 예산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자치단체자본보조(열린관광·무장애관광)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컨설팅, 실시설계, 시공, 준공 등 다단계 절차로 추진되며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변경, 겨울철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이 당해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일정관리 및 월별 공정회의 운영 등 집행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가 '열린관광지 조성 개소수'라는 단일 산출지표에 한정되어 있어 보조사업 전반의 정책 성과를 대표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국내관광 캠페인, 근로자 휴가지원 등 주요 보조사업의 정책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사업별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스마트관광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신규 AI 과업의 정책적 타당성 인정 및 성과 입증 체계 마련) 소명을 통해 합성데이터 및 AI 여정 서비스 등 신규 과업의 기술적 차별성과 관광산업 AX 전환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선제적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 예산 대비 공공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환류 노력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재정 운영의 최적화 필요) 서비스 지향점에 따른 사업별 독립성은 인정되나 동일 시행주체(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말 집행 집중 및 연중 균등 집행 관리 필요) 정량적 집행률은 우수하나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바,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실집행이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 관리가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ICT와 관광을 융복합함으로써 디지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매우 뚜렷하며, 특히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비전문가에게도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매년 98%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기록하며 계획된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전무한 점은 보조사업자(한국관광공사)의 안정적인 사업 관리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

○ 과거 평가 결과 및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지출 구조를 재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회 및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스마트관광 인프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모빌리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QR코드 배포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한 조치는 적절한 환류 사례로 판단됨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내역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유사 기능이 AI 고도화 명목으로 이전되며 데이터 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83.7%)된 것은 실질적인 구조개선 효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민관협업 데이터구축 내 신규 활동인 협의체 구성 및 표준체계 연구 또한 기존 플랫폼 운영과의 차별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단순 기능 확장을 넘어선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일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관광 데이터 구축'과 '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보안,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비가 개별적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음

- 콘텐츠 생산 및 데이터 운영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인프라를 분절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리비 중복 지출을 야기하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절감 요소를 발굴하여 확보된 재원을 데이터 품질 고도화 등 핵심 과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정량적인 집행률은 매년 98%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연도별 이월 최소화 및 집행 시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말 집중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채널을 상시화하고 행정 절차 지연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실무 현장의 집행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균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세부사업 내 '운영비' 내역사업은 전담인력 운영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유지 등 기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집행 적정성 측면에서도 재점검이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동 보조사업 운영비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적정 재정 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융자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은 단순 자금 공급 실적을 넘어 수혜기업의 실질적 성장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 - 동 지표는 '25년 실적이 23.0%로, 당초 목표치(5.92%)를 크게 상회하여 운영 성과가 일부 확인되는바, 향후 수혜기업의 성장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 업체와 미지원 유사 업체 간 매출액 증가율, 생존율, 고용 유지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순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 융자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각 내역사업들(관광산업 융자, 이차보전 운영지원, 운영비)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상위 정책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운영비’ 내역사업은 전담인력 운영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유지 등 기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동 보조사업 운영비는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적정 재정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 협회-은행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인 ‘융자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은 단순 자금 공급 실적을 넘어 수혜기업의 실질적 성장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

- 동 지표는 ’25년 실적이 23.0%로 ’25년 목표치(5.92%)를 상회하여 운영 관리 성과가 일부 확인되나, 향후 수혜기업의 성장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 업체와 미지원 유사 업체 간 매출액 증가율, 생존율, 고용 유지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순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보조비목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관대화 현상이 있음 · 외래관광객 체험콘텐츠 다변화 내역사업이 '25년 신규 편성 이후 104→112억원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성과 검증 전 예산 확대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K-관광 로드쇼·외래관광객 체험콘텐츠 다변화 등 내역사업 간 '해외 마케팅' 기능이 분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통합 운영 또는 기능 조정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2026년 보조비목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574→483억원, △15.7%)되는 기조이나, 외래관광객 체험콘텐츠 다변화 내역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 이후 104→112억원(+7.3%)으로 증액됨

-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성과 검증 이전 단계에서 예산 확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또한 교육여행 활성화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체험 관련 내역사업 간 차별화 유지 및 사업 간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2023년 과오수급 관련 사항은 당시 과오수급 카테고리가 없어 가족 인건비 집행으로 분류되었으나, e나라도움 시스템에 특근매식비 오집행 41,900원이 과오수급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가족 인건비 집행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의 달성도가 2022년 293.3%, 2023년 188.1%, 2024년 171.9%로 최근 3년 연속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방한관광객 3,000만명 목표에 부합하는 도전적 목표치 재설정이 요구됨

- 또한 관광의 질적 성장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1인당 관광지출액, 평균 체류일수, 지역 분산도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보완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한국관광 해외광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2026년 예산이 전년(23,372백만원) 대비 47.7% 증가한 34,53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미지광고 내역사업의 81.6% 증액(16,446→29,875백만원)에 대한 성과 기반 근거가 불충분함 - 2개 내역사업(글로벌네트워크, K-브랜드)이 2026년 순감 처리되면서 이미지광고 내역사업에 기능이 통합되었으나, 통합에 따른 효율화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부적절함 - 성과지표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 수'의 달성도가 최근 3년간 100~293%로 관대화 현상이 뚜렷하며, 해외광고 사업 고유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 의존적 지표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예방활동이 '없음'으로 보고되어 있어 보조금 규모를 고려한 적극적 점검 체계 보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국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으로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 근거한 국정과제 연계 사업이므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자연발생적 관광수요 증가분과 국가광고 사업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가광고 사업의 기여도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성과 귀속 분석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이미지광고 내역사업이 광고 제작 편수 확대, 대상국 확대, K-브랜드 연계 신규 사업 편성 등에 따라 81.6% 증액되었으나

- 전체 예산이 47.7% 증가한 점은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1차 집행률이 최근 3년간 100%이며 실집행률도 대부분 97~99% 수준으로 양호함

- 다만,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의 경우 일부 연도에서 실집행률이 9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례가 있으며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예방 활동이나 점검 체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규모를 고려한 사전 점검 및 관리체계 보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 수'의 최근 3년간 달성도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여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해당 지표는 환율, K-콘텐츠 확산, 국제관광 회복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지표로서 해외광고 사업 자체의 정책 효과를 직접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광고 노출 효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 광고 연계 방문 전환율 등 해외홍보 사업 고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완 지표 개발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관광 수용태세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사업의 증액사유 불충분, 실집행률 부진 및 성과지표 관대화 현상으로 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함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314.6%↑) 및 관광 편의성 제고(111.3%↑) 내역사업 증액관련 부처가 제시한 내역사업의 증액 산출근거 자료가 있으나 정량적 기대성과 연계한 검토 필요함 - 국회·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DRT 관련성, 코리아투어카드 중복성, 만족도 조사 미흡 등)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환류체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단순 만족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내역사업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사전적 유사중복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사후적 사업 종료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며, 일부 사업의 증액 근거가 불충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코리아투어카드 사업이 민간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으로 종료된 사례에서 보듯이 보조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평가체계 구축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지자체보조) 314.6%↑, 관광 편의성 제고 111.3%↑ 등 일부 보조사업에서 대폭 증액이 편성되었으나

- 2023년 실집행률이 79.9%로 집행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며

- 중기재정계획상 관광특구 사업 예산이 최대 507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계획이므로 재정 확대의 적정성 및 단계적 예산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2023년 실집행률이 79.9%로 80% 미만이었으며 2024년 91.1%로 개선되었으나 안정적 집행 수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까지 부정수급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보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보조금 관리 및 점검체계의 지속적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가 단순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사전적 유사중복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사후적 사업 종료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 강화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의 타당성 있으나, 일부사업 예산 합리성 검토 필요함 -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의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25년 기준 65% 미만임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베니키아) 사업은 국회에서 민간이양이 반복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이 지연되어 관성적 계상 측면이 강함 -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서 직계존비속 거래 등 3건의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함 - 관광두레 PD의 성과지표 등을 개선하는 등 사업 추진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필요하며, 성과지표의 대표성·도전성 제고를 위한 지표 재설계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며, 일부 사업의 증액 근거가 불충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관광두레·안전민박·안전캠핑 등 민간 자율 추진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관광호텔 체인화(베니키아) 보조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민간이양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민간이양 등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 보조사업은 연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해 분석이 완료되는 통계조사의 특성상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25년 기준 65% 미만 수준임

- 향후 연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2023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실집행률 5.1%로 종료된 사례를 고려할 때 사업 집행역량 제고 및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주요 보조사업 간 실집행률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관광두레 사업은 92.6~95.4% 수준으로 안정적인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 보조사업은 64~87%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조사업 간 집행 편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부정수급 사례인 문행당 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는 규정 미숙에 따른 과오수급으로 판단되어 봉화군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초기·성장단계 진입비율'의 달성도가 2023년 200.3%에서 2024년 152.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관광두레 중심의 단일 지표가 8개 보조사업 전체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전적 목표치 재설정과 함께 보조사업 전반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결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지표의 관대화 현상이 뚜렷함 -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인 포털 운영이 83.3%(6억→11억) 증액되었으나, 증액에 상응하는 구체적 성과 연계 근거가 미흡함 - 성과지표(교육만족도)의 목표치가 4.1점으로 실적(4.78점) 대비 달성도 117.5%에 이르는 관대화 현상이 있으며, 산출지표 성격의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움 - 국고보조율이 전 내역사업 100%(정액)로 설정되어 보조사업자별 재무안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 개별 상황을 감안하여 수혜 단체의 자부담이 확대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원 역량 강화, 일자리 활성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등 관광산업 성장기반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국정과제 및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과 부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2002년 사업 개시 이후 24년간 지속되면서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 범위가 다양화되었으나, 국고보조율이 전 내역사업 100%(정액) 구조로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별 재무 안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한 자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4.2% 소폭 증액되었으나 내역사업별 증감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인 포털 운영이 83.3%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또한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사업비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구조의 불균형 해소 및 사업 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86.5% 수준으로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 10개 이상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부정수급 점검 이력이 부족하여 보조금 관리 및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됨

- 아울러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축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어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교육만족도(5점 만점)의 목표치가 4.1점으로 설정되어 실적(4.7~4.78점) 대비 달성도 117.5%에 이르는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교육만족도는 산출지표 성격으로 관광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취업률, 일자리 매칭 건수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지표 보완이 요구되며, 5개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나, 성과지표의 관대화 현상이 있음 - 성과지표(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 증감률)의 목표치가 3%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관대화 현상이 뚜렷하며, 실적 대비 도전적 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특화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의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되었으나,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적 재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며, 일부 사업의 증액 근거가 불충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2012년 사업 개시 이후 14년간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면서 수혜기업의 보조금 의존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단계별 자부담 비율 조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국회 예결위에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유사사업 통폐합이 지적됨에 따라 차기년도에 해당 사업을 통폐합한 바 있음

- 다만 각 내역사업이 목적에 적합한 지원수단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내역사업 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중복 여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의 2026년 예산이 2.8% 증액됨

- 이에 따라 수혜기업당 지원 단가 및 지원 규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신규 편성된 오픈이노베이션 특화프로그램(30억)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사업 모델과 기대효과를 검증한 바 있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성과지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4~98%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함

- 다만 매년 10억~17억 원 규모의 집행잔액 및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됨

- 또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된 중복수급 1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이 반복되고 있어 정산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매출액 증감률의 목표치가 3%로 설정되어 실적(11.3~28.9%) 대비 달성도가 376.7%에 이르는 등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단계 진입, 투자유치 성과 등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 보완이 시급함

- 아울러 도전적 목표치 재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MICE산업육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47.1%)와 컨벤션 유치·개최지원 활성화(+42.8%) 등 주요 보조사업의 대폭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증 등 요구됨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내용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서 지방비 미편성으로 인한 불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보조사업 수요의 적정성 재검토가 요구 됨 · 보조사업 대표 성과지표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불충분함 · 보조사업자(한국마이스협회)에서 과오수급 징후(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 3,300,000원)가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됨 · 보조사업 고유의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불충분함 - 종합적으로,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방한 지원 대상 확대(20만→30만명)와 컨벤션 개최 지원 대상 확대(103→170건)의 경우 방한객 규모가 컸던 2019년 수준(308,850명) 회복을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수요 전망과 사업 확대의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재정규모 양적 확대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6개 내역사업 중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과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이 각각 40% 이상 대폭 증액됨

-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서 지방비 미편성으로 인한 불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보조사업자(한국마이스협회)에서 과오수급 징후(3,300,000원)가 확인되었으나 부정수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은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처리 후 잔액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외에도 분기별 사업수행 검토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보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관리·감독체계의 지속적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MICE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MICE 외국인 참가자 수'라는 대표 성과지표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보조금 투입 대비 MICE산업 육성의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내역사업들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개최지원 MICE행사 참가자 수의 달성도가 2023~2024년 300~318% 수준으로 나타나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외래참가자 유치 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소비 유발 효과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지표 도입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테마별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나, 8개 내 일부 내역사업의 증액 근거 미흡, 사업 구조의 개선 및 성과지표의 목표치 도전적 재설정이 요구됨

- 음식관광 활성화(195.3% 증액)와 고급관광 육성(77.3% 증액)의 신규사업은 수요 분석 및 기대효과 검증이 미흡하여 정량적 성과관리 요구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분기별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이 상시 관심 요구됨
- 성과지표(의료관광객 수) 달성도 453%는 목표치 설정의 형해화를 의미하며, 내역사업별 차별화된 성과지표 설정과 도전적 목표 재설정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한류·음식·의료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2000년 사업 개시 이후 26년간 지속되면서 8개 내역사업으로 확대되어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구조에 대한 사업 체계 재정비 검토가 요구됨

- 한국관광공사 내 테마관광팀, 관광산업전략팀(음식관광), 의료웰니스팀 등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지사 30개를 활용할 수 있어 전문성과 사업 수행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한국관광공사를 보조사업자로 활용하는 현 집행 구조는 사업 수행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음식관광 활성화 내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25억, 신규)이 지역 내 음식거리 지정, 상설 문화예술축제 운영, 청년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관광콘텐츠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됨

- 이에 따라 기존 음식관광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 목적 및 추진모델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됨

- 또한 8개 내역사업이 해외 홍보·마케팅·상품화 등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단위별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 구축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7%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다만, 2024년 보조사업 정산 이후 미반납액이 약 10.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가 매년 1~3개월 지연 제출되고 있어 정산관리 및 보고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됨

- 또한 한류관광 활성화 내역사업(제30회 드림콘서트)에서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 및 부가가치세 부당공제에 따른 부정수급(약 2,973만원)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 여부 검토 과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임(3.20 예정)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인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의 달성도가 목표 대비 453%에 이르는 등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K-POP·한류 방문 비율 목표 증가분이 연 0.6%p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전적 목표치 재설정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8개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3개 지표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결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영화 창제작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중예산 부진이 일시적 충격인지 구조적 수요 이동인지에 대한 진단 없이 시장실패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전제되어야 현재의 지원방향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임 · 공적 자금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지, 또는 일부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재정지원의 순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3년 연속 성과관리 지적 미반영, 결과지표 부재, 사업 종료 기준 미설정 등 등 관리체계와 관련된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확대 여부는 관련 개선사항의 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을 102.4% 급증 편성하면서도 집행 능력 및 성과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 없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예산의 46.1%를 차지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10,000백만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중예산 부진이 일시적 충격인지 구조적 수요 이동인지에 대한 진단 없이 시장실패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전제되어야 현재의 지원방향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공적 자금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지, 또는 일부 대체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재정지원의 순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년도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가 없는 신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것은 사후 재정효과 평가가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초기 집행 실적 및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집행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직접 연동하는 환류 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부족과 낮은 목표치 설정,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적사항 미반영 등으로 성과관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신규사업 시행 초기부터 적용하고 기획개발지원-제작지원 간 연계성과 추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종료 기준, 민간 역할 분담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 예산 운용계획과 재정지원 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운용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영화유통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내외 영화제 육성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20→30개처)에 따른 증액이 예정되어 있으나, 성과지표 미개선 상태에서 지원 숫자·규모·대상 결정에 정교한 정책논리와 정량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예산 확대의 타당성과 효과성 점검이 필요함 · 독립예술영화 관련 전용관 운영지원·개봉지원·신규 상영지원 간 기능 중복과 역할 분담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통합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접근성 향상과 지역 수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됨 · 성과지표가 단일 투입지표에 머무르고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 운영에 환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정책평가방법론 도입과 평가 결과 연계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예산 합리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2026년 17,501백만원 요구(전년 대비 +11.1%)로 대규모 증액이 예정되어 있으나,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및 3년 연속 외부 지적 미개선, 신규사업 추가의 타당성 불충분 등 복합적 문제가 존재하여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신규 상영지원 1,800백만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107.4% 증액하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국민참여를 통해 기획된 사업이더라도 충분한 수요 및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사업은 소규모 사업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1의 정책목표가 아닐지라도, 독립영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많은 지역의 정책 수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한된 정책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 전용관 운영지원·개봉지원·신규 상영지원 간 기능 중복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여 재정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유사 기능 사업 간 통합 또는 역할 재정립 또는 사업 간 연계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개봉 편수' 단일 투입지표에 머무르고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3년 연속 동일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15,754백만원 규모 사업의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성과지표 체계 개편 이전까지는 국내외 영화제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20→30개처)에 따른 28.7% 증액분을 포함한 예산 확대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의 숫자와 규모, 대상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당위성을 넘어 정교한 정책논리와 정량적인 증거가 핵심 증거가 될 필요가 있음. 일정 부분 평가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선에 활용되는지가 불분명함. 여러 영화제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정책평가방법론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 운영에 연계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관성적 사업 지속 가능성이 존재함. 사업 종료 또는 지원 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영화정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들은 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됨 · 본 보조사업이 외부 환경 변화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정형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자생력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당초의 지정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부의 다양한 지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투입·산출지표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지원, 장애인 영화제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가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시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야 함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화 소통하는 K-컬처의 국정과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민간의 수익성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보편적 문화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의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급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가변적 비용'으로 취급되어 정책의 형평성 및 보편적 문화복지 구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은 외부 환경 변화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지정위탁방식으로 사업이 20년 이상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형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자생력 부족으로 인해 자부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당 단체가 아니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당초의 지정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엄격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린카드 의무화, 상시 현장점검,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집행 및 보조사업자 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외부 회계감사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지적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환류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투입·산출지표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음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중심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Ⅰ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